

■ 연구진

연구책임자	이아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진	안 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진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제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박소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선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류정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제출문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귀부와 용역계약(2022. 5. 18.)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10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이 태 수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4
제2장 추진실적 평가 개요	7
제1절 2021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9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및 평가지표	19
제3장 2021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27
제1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29
제2절 전문기관 평가 결과	31
제3절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36
제4절 우수과제와 미흡과제	62
제4장 기본계획 중간성과점검 및 추진과제별 중간평가	75
제1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중간성과점검	77
제2절 세부 과제 목표 중간점검	103
제5장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개선방안	123
제1절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제도	125
제2절 유사 평가사례	127
제3절 추진실적 평가 개선방안	136
참고문헌	141
부록	143
[부록 1]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143

표 목차

〈표 1-1〉 추진실적 평가 세부기준	5
〈표 2-1〉 부처별 과제 현황	15
〈표 2-2〉 2021년 추진실적 예산 현황	15
〈표 3-1〉 자체평가 결과 -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29
〈표 3-2〉 자체평가 결과 - 고용·교육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30
〈표 3-3〉 자체평가 결과 - 소득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30
〈표 3-4〉 자체평가 결과 - 건강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30
〈표 3-5〉 자체평가 결과 -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30
〈표 3-6〉 자체평가 결과 - 추진기반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30
〈표 3-7〉 핵심분야별 평가등급 결과	31
〈표 3-8〉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영역 평가결과(종합)	36
〈표 3-9〉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36
〈표 3-10〉 교육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과제의 주요 성과	37
〈표 3-11〉 과기정통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및 혁신인재 양성' 과제 주요성과	39
〈표 3-1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영역 평가결과(종합)	39
〈표 3-13〉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40
〈표 3-14〉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과제의 주요 성과 :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일반 중소기업 취업청년 근속현황	41
〈표 3-15〉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영역 평가결과(종합)	42
〈표 3-16〉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42
〈표 3-17〉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과제의 주요 성과	43
〈표 3-18〉 여가부의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과제의 주요 성과	44
〈표 3-19〉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영역 평가결과(종합)	44
〈표 3-20〉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45
〈표 3-21〉 '근로연령층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영역 평가결과(종합)	46
〈표 3-22〉 '근로연령층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46
〈표 3-23〉 기재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과제의 주요 성과	47
〈표 3-24〉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과제의 주요 성과	48
〈표 3-2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영역 평가결과(종합)	49
〈표 3-2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49
〈표 3-27〉 복지부의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 과제의 주요 성과: 제도화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현황	49
〈표 3-28〉 '필수의료 보장' 영역 평가결과(종합)	50
〈표 3-29〉 '필수의료 보장'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50
〈표 3-30〉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영역 평가결과(종합)	52
〈표 3-31〉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52
〈표 3-32〉 복지부의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시·도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과제의 주요 성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시범사업 참여 시도	53
〈표 3-33〉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영역 평가결과(종합)	54



〈표 3-34〉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54
〈표 3-35〉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영역 평가결과(종합)	57
〈표 3-36〉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57
〈표 3-37〉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영역 평가결과(종합)	58
〈표 3-38〉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58
〈표 3-39〉 복지부의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과제의 주요 성과	59
〈표 3-40〉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강화’ 과제의 주요 성과	59
〈표 3-41〉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과제의 주요 성과	59
〈표 3-42〉 ‘사회투자 확대’ 영역 평가결과(종합)	61
〈표 3-43〉 ‘사회투자 확대’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61
〈표 3-44〉 보건복지부·행안부의 ‘지역사회서비스 종합안내를 위한 읍면동 기능강화’ 과제의 주요성과	61
〈표 3-45〉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등급 과제	62
〈표 3-46〉 세부 과제별 선정 사유	63
〈표 3-47〉 개선필요 과제	66
〈표 3-48〉 컨설팅 방법	67
〈표 3-4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67
〈표 3-50〉 출산급여 산설을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69
〈표 3-51〉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 세부지표별 등급	70
〈표 3-52〉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71
〈표 3-53〉 장애인건강 주치의 도입,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71
〈표 3-54〉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73
〈표 4-1〉 2019-2021 고용·교육 분야 과제별 평가결과	80
〈표 4-2〉 2019-2021 소득 분야 과제별 평가결과	82
〈표 4-3〉 2019-2021 건강 분야 과제별 평가결과	83
〈표 4-4〉 2019-2021 사회서비스 및 추진기반 분야 과제별 평가결과	84
〈표 4-5〉 고용·교육 보장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85
〈표 4-6〉 소득 보장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86
〈표 4-7〉 건강 보장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87
〈표 4-8〉 사회서비스 및 추진기반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87
〈표 4-9〉 중장기 목표 및 지표	88
〈표 4-10〉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	89
〈표 4-11〉 고용·교육 보장 분야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91
〈표 4-12〉 고용·교육 보장 분야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92
〈표 4-13〉 고용·교육 보장 분야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93
〈표 4-14〉 소득 보장 분야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94
〈표 4-15〉 소득 보장 분야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95
〈표 4-16〉 건강 보장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보장’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97



〈표 4-17〉 건강 보장 분야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98
〈표 4-18〉 사회서비스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100
〈표 4-19〉 추진기반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102
〈표 4-20〉 5년간 분야별 추진 일정: 달성가능성 중간점검	103
〈표 4-21〉 5년간 분야별 추진 목표 : 고용·교육 분야	104
〈표 4-22〉 고용·교육 분야: 고교 무상교육 실현	104
〈표 4-23〉 고용·교육 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CT 등 혁신인재 양성	105
〈표 4-24〉 고용·교육 분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105
〈표 4-25〉 고용·교육 분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관련 성과지표	106
〈표 4-26〉 고용·교육 분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106
〈표 4-27〉 고용·교육 분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 수	107
〈표 4-28〉 고용·교육 분야: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40% 확충 관련 성과지표	107
〈표 4-29〉 고용·교육 분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관련 성과지표	108
〈표 4-30〉 5년간 분야별 추진 목표 : 소득 분야	109
〈표 4-31〉 소득 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 조정 통한 포괄범위 확대	110
〈표 4-32〉 소득 분야: EITC 지급 규모	111
〈표 4-33〉 소득 분야: 장애인 및 노인 기초 연금 월 최대 30만원 단계적 확대	111
〈표 4-34〉 소득 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수	112
〈표 4-35〉 5년간 분야별 추진 목표: 건강 분야	113
〈표 4-36〉 건강 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비급여 본인부담	113
〈표 4-37〉 건강 분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누적)	114
〈표 4-38〉 건강 분야: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른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114
〈표 4-39〉 건강 분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115
〈표 4-40〉 건강 분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115
〈표 4-41〉 건강 분야: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116
〈표 4-42〉 5년간 분야별 추진 목표: 사회서비스 분야	117
〈표 4-43〉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인프라	118
〈표 4-44〉 사회서비스 분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현황	119
〈표 4-45〉 사회서비스 분야: 공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관련 성과지표	120
〈표 4-46〉 사회서비스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121
〈표 4-47〉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만호 공급	121
〈표 4-48〉 사회서비스 분야: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122
〈표 5-1〉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항목	128
〈표 5-2〉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20~’24) 중앙정부 평가지표 및 연차별 배점(안)	134
〈표 5-3〉 타 평가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134
〈표 5-4〉 타 평가사례: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135
〈표 5-5〉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항목 및 기준	138

그림 목차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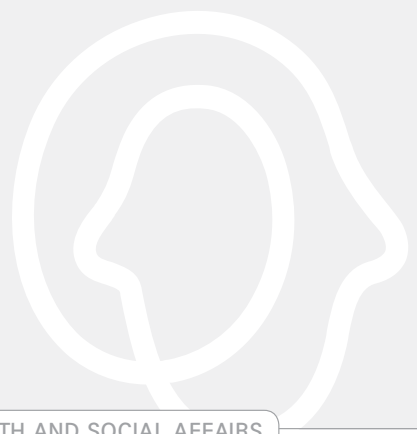


[그림 3-1] 핵심분야별 평가등급 결과	31
[그림 3-2] 12대 중점 추진과제별 평가결과	32
[그림 3-3] 세부과제별 평가등급 비율	33
[그림 3-4] 예산별 평가등급 결과	33
[그림 3-5] 평가부문(지표)별 결과	34
[그림 3-6] 전년 대비 평가결과	35
[그림 3-7] 여가부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과제 주요성과	38
[그림 3-8] 고용노동부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과제의 주요 성과	41
[그림 3-9] 복지부의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사업의 주요 성과	47
[그림 3-10] 전체 및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	78
[그림 4-1] 제2차(2019-2023) 사회보장기본계획 목표 계층도	79
[그림 4-2] 제2차(2019-2023) 사회보장기본계획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계층도	81
[그림 4-3] 중장기 성과지표: 삶의 만족도 지수	89
[그림 4-4] 고용·교육 보장 분야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목표 성과지표	90
[그림 4-5] 고용·교육 보장 분야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목표 성과지표 달성	91
[그림 4-6] 고용·교육 보장 분야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목표 성과지표 달성	92
[그림 4-7] 소득 보장 분야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목표 성과지표 달성	93
[그림 4-8] 소득 보장 분야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목표 성과지표 달성	95
[그림 4-9] 건강 보장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보장' 목표 성과지표 달성	96
[그림 4-10] 건강 보장 분야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목표 성과지표 달성	98
[그림 4-11] 사회서비스 분야 목표 성과지표 달성	99
[그림 4-12] 추진기반 분야 목표 성과지표 달성	101
[그림 4-13] 과학기술·ICT 인재양성(누적)	105
[그림 4-14] 소득 분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110
[그림 4-15] 사회서비스 분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현황	119
[그림 5-1] 사회보장위원회의 평가제도	124
[그림 5-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130
[그림 5-3]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현황 및 개선 평가절차	130
[그림 5-4]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변경 안	138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기본 이념 구현을 위해 사회보장 정책 비전과 정책 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5개년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됨.
- 사회보장기본계획에는 국내외 사회보장환경의 변화와 전망, 사회보장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사회보장 관련 자금 운용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그 밖에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의 한계점을 반영하여 정책영역별 성과목표를 제시하고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 이를 중심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회보장을 통한 국민의 복지 체감도 및 효과성 제고
-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 제18조

제1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 사회보장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의 설계 및 구축, 국민의 다양한 수요·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정책 수행을 위한 사회보장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활용한 실적제고를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 목적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에 제시된 추진과제에 대한 실적 평가와 기본 계획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부처의 자체적인 관리능력 향상 및 추진 사업 내실화에 기여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과제목표 중간점검 및 기본계획 추진성과 평가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체계 개선방안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추진실적 평가
 - **(평가근거)**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조
 - **(평가대상)** '21년도 시행계획 93개 과제 추진실적
 - 고용·교육 32개, 소득 13개, 건강 24개, 사회서비스 24개
 - ※ 다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별 평가 (총 101개)
 - **(평가 방법)** 계획, 집행, 성과 등 3개 평가 부문을 대상으로 5개의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추진 실적을 평가
 - 전문가(평가위원)에서 부처 자체평가를 평가항목별로 적정성을 점검하고, 과제별 주요 성과, 문제점, 개선방향 등에 대한 평가의견을 작성하여 종합평가 후 3개 등급으로 평가
 - 자체평가는 평가지표별 '정상추진', '개선필요'로 구분·평가하고, 전문가 확인·점검 시에 '우수', '정상추진', '개선필요'의 3개 등급으로 종합평가 실시
 - 개선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전문가 컨설팅

〈표 1-1〉 추진실적 평가 세부기준

구분	평가지표	세부 평가사항	평가등급	비고
계획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 사업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판단	정상추진, 개선필요	공통지표
집행	집행계획이행 수준	- 추진일정 및 예산계획 적정 이행 여부	정상추진, 개선필요	공통지표
	사업관리의 적정성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협업 및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정상추진, 개선필요	공통지표
성과	성과지표 달성수준	- 성과지표의 적정성 및 성과목표치 달성 여부	정상추진, 개선필요	공통지표
	사업 우수성	- 사업효과의 질적인 우수성	-	평가전문기관 정성평가지표
종합평가			우수, 정상추진, 개선필요	평가전문기관 최종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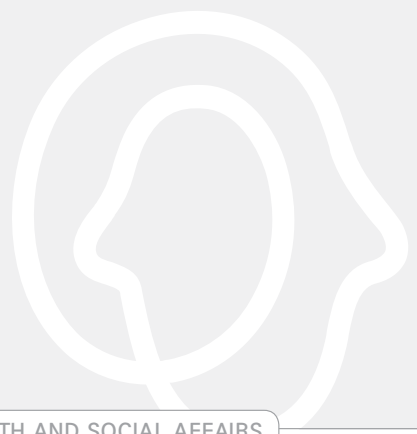
- **(평가진행방식)** 평가는 2회 실시하며, 1차 평가와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보완(2차) 평가로 진행
 - 1차 평가는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추진실적평가자료 및 자체평가결과와 2021년 시행계획 자료를 토대로 평가
 -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사업부서에 통보한 후, 사업부서가 제출하는 1차 평가 결과에 대한 추가보완 자료를 토대로 평가
- **(활용방안)**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는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하며 평가결과가 기본계획의 목표달성 및 제도개선에 환류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공, 성과개선을 위한 조치 등 추진
 - (우수과제)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 게시·홍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개선필요과제) 과제별 컨설팅

□ 추진실적 종합분석·평가

- 세부과제별 추진실적을 다양한 관점에서 입체적으로 종합분석·평가하고, 추진사업을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평가 결과를 평가부문별, 정책목표별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 분석·평가
 - 총점 및 개별항목별 평가 점수의 분포, 사업 영역별 점수의 분포 및 특징, 정성평가의 함의
- 평가 결과에 대한 전문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의견 수렴
- (개선필요 과제 지원) 실적이 부진하거나 정책 효과성이 낮은 과제를 대상으로 세부 분석을 통한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업목적, 사업내용, 추진체계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제시

6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 (우수사례 발굴)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사례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수사례 발굴
 - 우수사례는 사회보장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장관 표창 시행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에 대한 중간점검 및 기본계획 추진성과 평가
 - **(과제목표 중간점검)** 각 과제의 과제목표 달성 여부를 파악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도출
 - 3년간('19~'21) 시행계획 추진결과에 따른 주요목표의 달성현황 분석
 - 2023년까지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목표는 원인분석 및 목표달성을 위한 방향 제시
 - **(지표 기반 기본계획 성과점검)** 지표 변화 중심으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성과점검
 - 핵심 분야별 목표(4개)와 핵심 추진과제 목표(12개)의 성과점검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의 주요 목표뿐 아니라 정책성과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3년간의 성과점검 수행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개선방안
 -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세부과제 내실화를 위한 현행 추진실적 점검·평가 방식의 보완사항 제언
 - 현행 추진실적 점검·평가 방식의 개선방안



제2장

추진실적 평가 개요

제1절 2021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및 평가지표

제2장 추진실적 평가 개요

제1절 2021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주요 특징

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개요¹⁾

□ 사회보장기본법(제16조)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19년부터 적용할 5개년 계획 수립

□ 사회보장의 장기비전

- 국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포용사회
 - 모든 국민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사회
 -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사회
 - 내일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사회

□ 사회보장정책의 추진원칙 및 전략

- 사회보장체계의 포용성 강화
 - (포괄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취약계층부터 단계적으로 해소하여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보편성) 소득·자산조사가 아닌 개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한 보편적 수당과 사회서비스 도입 및 강화로 보편적 서비스 이용 확대
 - (공정성) 고용·교육·성별 격차 해소를 통해 공평한 기회를 보장
-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 강화
 - (제도) 영역별·대상별로 분절 또는 중복되어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계 및 조정체계 강화로 사회보장제도의 효과성·효율성 향상
 - 노후소득보장: 공적연금, 퇴직연금, 기초연금 및 생계급여(기초생활보장) 등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간의 연계성 제고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고용보험, EITC, 자활급여(기초생활보장) 등의 연계 및 역할 정립
 - 건강보장: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건강보장 패러다임 재정립, 방문의료 등 지역사회

1) 보건복지부, (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의 내용을 일부 발췌

회 기반 건강보장체계 강화

- 사회서비스: 복지·보건의료·돌봄·주거서비스 간의 통합성 제고
- (추진체계) 부처 간 사업 조정·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강화
- 사회보장위원회의 부처 간 정책조정기능 강화, 지자체의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중앙-지방 협업체계 강화, 사회보장 종합 평가체계 고도화

○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 공급자 관점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보장 이용체계를 수요자 욕구 중심으로 연계된 통합적 이용체계로 재정립 필요
- ⇒ 자기가 살던 곳에서 개개인이 필요한 복지, 돌봄, 요양·보건의료, 주거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커뮤니티케어)로 패러다임 재정립
- 돌봄 서비스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돌봄경제(Care Economy)를 활성화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 포용과 혁신(국가와 개인)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 (포용과 혁신의 관계) 포용적 사회보장정책으로 사회의 혁신 기반 제공
- (포용적 사회보장)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으로 기술혁신에 따른 구조조정 등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한 경제·사회적 안전망 제공
- (혁신능력 제고)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기반 위에서 개인은 창의성을 발휘하여 저성장·고위험 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
- (포용과 혁신의 선순환) 혁신을 통한 성장은 포용적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혁신적 포용사회 구축에 기여
- (국가와 개인의 관계) 사회통합·혁신에 상호보완 및 협력
- 사회통합의 기반으로서 포용적 사회보장체계의 역할
- (기본생활 보장) 삶의 핵심영역(소득, 고용, 건강, 돌봄)에서 발생 가능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한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 (공정한 기회부여) 건강 및 교육기회의 보장을 통하여 격차를 완화하고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 혁신의 주체로서 개인의 역할: 개인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능력을 발휘하여 자활·자립을 위해 노력, 포용사회 실현을 위한 환경 조성에 협력·노력

□ 사회보장정책의 목표 및 방향

중장기 목표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삶의 만족도 지수* 향상: 28위('17)→20위('23)→10위('40) * OECD Better Life Index 中 Life Satisfaction

4대 핵심분야 목표

고용	저임금근로자 비중(%) 22.3%(17) → 18.0%(23) → 15.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형태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 평생학습체계 구축 민 인적자원 역량 제고
소득	상대빈곤율 완화 17.4%(17) → 15.5%(23) → 11.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조 역할 강화 및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1인 1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
건강	건강수명 연장 73세(16) → 75세(23) → 78세(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이용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사회서비스	GDP대비 투자비율 확대 5.7%(15) → 7.4%(23) → 10.7%(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에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완성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

12대 중점 추진과제

고용·교육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적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2.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3.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소득보장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5.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6.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건강보장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7.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8. 필수의료 보장 9.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분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11.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12. 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제2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비전 및 전략 체계도

비전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포용사회			
추진 원칙 및 전략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		사회보장 제도의 연계·조정 강화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포용과 혁신의 상호보완체계 구축	
증장기 목표	국민 삶의 질 향상 : OECD 28위('17) → 20위('23) → 10위('40)			
4대 핵심 분야별 목표 및 증장기 방향 ('40)	<div><div>고용</div><div>저임금 근로자 비중 축소 22.3 ('17) ▶ 15.0% ('40)</div><div>◆ 노동형태 다양화, 노동이동 증가에 대응하는 일자리 안전망 확충 ◆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역량 제고</div></div>			
	<div><div>소득</div><div>상대빈곤율 완화 17.4% ('17) ▶ 11.3% ('40)</div><div>◆ 공공부조 역할 강화 및 청년층·장년층 등 근로연령층의 소득보장 확대 ◆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1인 1연금 및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확충</div></div>			
	<div><div>건강</div><div>건강수명 연장 73세 ('16) ▶ 78세 ('40)</div><div>◆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이용체계의 효율화로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div></div>			
	<div><div>사회서비스</div><div>GDP대비 사회서비스 투자 비율 확대 5.7% ('15) ▶ 10.7% ('40)</div><div>◆ 생애주기별·대상별 다양한 사회서비스 확충 ◆ 지역사회에서 주거·돌봄·의료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완성 및 질 높은 사회서비스 인력 양성</div></div>			
핵심 추진 과제 ('23)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1.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3.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2. 근로연령층 소득보장 확대 3.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2. 필수의료 보장 3.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1.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3.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기반	· 사회투자 확대 ·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 강화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 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0 고등학생의 수업료 부담이 없어집니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75세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생활합니다.



1/3

병원비 부담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급여 의료비 1/3로 경감

10만명 근로자의
직업 능력개발이 쉬워집니다.
- 비정규직 등 내일배움카드 10만명까지 확대



1,800시간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과 생활의균형을 찾습니다.
- 연간 노동시간 2,014→1,800시간대로 단축



2,000개
병원에서 퇴원후의 삶까지 계획 합니다.
- 병원에 설치된 지역연계실에서 퇴원계획을
세우고, 지역 내 돌봄 자원과의 연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57만명 특수고용,
예술인 등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보험 혜택 157만명 확대



20위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 OECD 삶의질 지수 20위 달성



30만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걱정이 줄어듭니다.
- 기초연금 30만원으로 인상



더 많은 어르신들의 돌봄을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수급자 58만→117만명으로 확대

117만명



기본적인 생활은 국가가 책임집니다.
-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로
추가 지원



42만명

334만가구



일하는 사람의 어깨가
가벼워 집니다.
- 근로장려세제 160만→334만
가구로 지원확대

40%
아이를 더 안심하고 키울 수 있게 됩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취원율
25%→40%까지 확대



229개소



자기가 살던 곳에서 원하는 돌봄, 건강,
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양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229개 신규설치

□ 향후 5년간 분야별 추진 일정

	2019	2020	2021	2022	2023
고용·교육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40%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고교 무상교육 실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CT 등 혁신인재 양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20.5월 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아동수당 지급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완화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장애인 및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지원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노인 일자리 확대				
건강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추진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감염병예방법개정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른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본 사업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선도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사회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인프라 확대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서비스 기준 마련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공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자료: 관계부처 합동, (202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p.17

2. 2021년도 시행계획 개관

□ (과제) 2021년 시행계획은 총 93개 과제로 구성

※ 다부처 사업의 경우 부처별 평가(총 101개)

○ 4대 핵심분야별로는 고용·교육 32개, 소득 13개, 건강 24개, 사회서비스 20개 과제로 구성되며, 추진기반 분야는 4개 과제로 구성

○ 소관 부처별로는 복지부 46개, 고용부 18개, 교육부 5개, 여가부 3개, 국토부 2개, 다부처 11개, 기타 8개 등 총 15개 부처에서 과제 추진

〈표 2-1〉 부처별 과제 현황

(단위: 개, %)

구분	합계	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국토부	산자부	공동추진	기타
과제수(개)	101	48	21	9	7	2	2	4	8
비중(%)	100	47.5	20.8	8.9	6.9	2.0	2.0	4.0	7.9

주 1) 부처 공동 추진 4개(복지부·행안부 2개, 복지부·금융위 1개, 복지부·질병청 1개)

2) 공동추진과제 제외 시 과제가 1개인 부처 8개(과기정통부, 금융위, 기재부, 농식품부, 문체부, 보훈처, 질병청, 환경부)

□ (예산) 2021년 시행계획의 총예산 규모는 79조 6,716억 원이며, 이 중 집행액은 76조 2,839억 원으로 집행률은 95.7%(20년 91.9%)

〈표 2-2〉 2021년 추진실적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정책분야	합계			국비(추경포함)			지방비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예산	결산	집행률
전체	796,716	762,839	95.7	699,055	666,406	95.3	97,662	96,433	98.7
I. 고용·교육 보장 분야	297,084	286,738	96.5	270,358	260,076	96.2	26,726	26,662	99.8
II. 소득 보장 분야	243,740	243,693	100.0	185,459	185,452	100.0	58,281	58,241	99.9
III. 건강 보장 분야	11,496	10,366	90.2	7,868	7,663	97.4	3,628	2,703	74.5
IV.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243,568	221,404	90.9	234,591	212,627	90.6	8,976	8,777	97.8
V. 추진기반 분야	828	638	77.0	778	588	75.5	50	50	100.0

3. 2021년 시행계획 분야별 주요 내용

□ 고용·교육 보장 분야

○ 인적자원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 (교육의 공적책임 강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21.3) 및 두드림학교(5,000개교) 운영 등 기초학력 향상, 온종일돌봄 확대(45.9만명 돌봄지원(학교돌봄터 +750실, 초등돌봄교실 +700실 등))

- (교육비 경감 및 격차 해소)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전 학년, 1인당 연간 약 160만원 ↓), 원격교육기본법 제정 추진, 특수교육 지원 확대(특수학교 +5, 학급 +250)
- (인적자원 역량제고) 고교학점제(732→1,400교), ICT 인재양성(연 8.5천명)

○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고용 안전망 강화) 예술인·특고 고용보험* 적용 안착, 특고 산재보험 직종(운송, 돌봄분야등) 확대, 고용유지지원금('21. 14.5조원) 1분기 40만명(50%) 조기 지원
* 프리랜서 예술인('20.12월~), 특수형태근로종사자('21.7월~), 플랫폼종사자·자영업자('22년 이후)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1), 일자리 예산(30.5조원) 신속 집행**, 지역맞춤형 상생형 일자리 추가 발굴(2+α)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단여성 등)에 취업·생계 결합 지원(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서비스)
** 직접일자리 사업 조기추진으로 고용취약계층(104.2만명)의 80%(83만명) 이상 채용(1분기)

○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 (최저임금 및 정규직화) 영세사업장 일자리 안정자금(185만명, 1.3조원) 지원으로 최저임금 현장 안착, 정규직 전환 미결정 기관별 맞춤형 지원(컨설팅 등)
- (여성 경제활동 참여 및 출산·육아기 지원)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법 개정('21.6), 돌봄공동체·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지역돌봄 확대
- (일하는 방식 개선) 주 최대 52시간제 시행('21.7~), 5~49인 사업장)으로 노동시간 단축, 육아휴직제도 개편(3개월+3백만원 부모 육아휴직제 도입) 등 일-돌봄 양립지원

□ 소득 분야

○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 (기초생활보장 대상 확대) 노인·한부모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2. 전면 폐지), 비수급 빈곤층 생계급여 신규 지원('21. 15만 가구)
-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자활근로 확대(내일키움일자리 2개월 연장) 및 자활급여 인상(최저임금의 75~85% 수준 목표) 등 효과성 제고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기초급여액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 ('20) 기초수급자+차상위(총 20만명) → ('21) 전체수급자(총 28만명)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 (맞춤형 지원) 청년의 일 경험과 훈련 기회의 제공*, 취약유형별 맞춤형 지원방안
** 마련·추진 및 저소득자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 국민취업제도 청년특례(23만명), 청년 디지털 일자리(5만명), 청년 추가고용장려금(9만명) 등

** 고졸취업 활성화 방안 마련, 대학일자리센터 기능확대, 구직포기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등

- (청·장년 일하는 여건 조성) 취약계층 탈수급·빈곤 예방을 위한 자산형성사업 개편(5단계→2단계), 상병수당 도입 검토

○ 노후 소득보장체계 확충

- (기초연금·국민연금 보장강화)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확대*, 출산크레딧 및 유족연금 보장수준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검토 및 법 개정 추진 등 국민연금 보장강화

* ('20) 소득하위 40%(332만명) → ('21) 소득하위 70%(598만명)

-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퇴직연금 적립금 수익률 제고*,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 도입 등 주택연금 활성화, 저소득 농업인 대상 농지연금 우대상품 도입 검토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추진

- (노인일자리 확충) 노인일자리 확대(76→80만개) 및 취업알선형, 시니어 인턴쉽 등 노인일자리사업 내 민간형 사업 비중('19년 17.5%→'21년 18.8%) 단계적 확대

□ 건강 보장 분야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건강보험 보장성·지속가능성) 흉부(유방·폐) 초음파 및 심장·척추 질환 관련 건강보험 확대, 동네 의원 중심 '일차 의료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실시(시범사업 참여의원 30% 이상(24백개) 목표)

○ 필수의료 보장

-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공공병원 중심 책임의료기관 추가지정(권역 3개소, 지역 6개소) 및 지역책임병원(10개 시범사업) 육성
- (감염병 예방 대응체계 강화) 지방의료원 신축(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확충 지원, 3개소) 및 병상 확충(11개 병원, 1,700병상), 공공병원 전공의 배치 확대 및 지역간호대학 정원확대 등 대응체계 강화
- (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고도화)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 확충(+83병상), 권역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지정(3개→4개소)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
-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 분만취약지 지원(40개소 → 52개소),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장애인화검진기관 시설·인력 기준 개선

○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주민건강센터 확충(120개소 → 156개소), 비대면(AI·IoT 기반)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24개 → 80개 보건소)
- (건강 위해요인 관리) 위기 청소년·장애인·여성 등 금연지원 확대, 취약계층 생활

환경 유해인자 진단·컨설팅(1,750가구) 등 추진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전문인력(+205명), '안심버스'(1대→13대), 청년 조기중재센터 확충(7개→12개 시도) 등 국민의 심리 안정 지원

□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 (노인) 공립치매요양시설(+10개소), 치매전문병동(+6개소) 확충, 치매안심병원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시범사업 등 치매 국가책임 강화
- (장애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4천→9천명) 및 방과후활동서비스(7천→1만명) 대상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 (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8천명), 보호 프로세스 표준화 및 예방대책 마련, 즉각분리제도 시행('21.3) 등 아동 보호체계 내실화
- * (인프라) 아동보호전문기관(+10개소)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29개소) 확충
- * (인력) 아동학대전담공무원(+374명) 및 보호전담요원(+190명) 시군구 배치
-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단가인상(동절기 10.7→10.9만원),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확대 지원

○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 (통합돌봄 모델 및 인프라 구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개발 및 법(지역사회통합돌봄법) 제정('21.12월), 종합재가센터 확충(25개소→36개소)
- (의료·돌봄서비스 연계) 의료·돌봄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일상생활·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 서비스 통합 제공체계** 구축
- * 급성기병원(권역심뇌혈관센터 등) 및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대상 지역사회연계 수가 시범적용 등
- ** 일차의료 한의 왕진 시범사업(300여개) 및 3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지역(+27개) 확대 등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소득·고용보장방안 마련(수급자 확대 등) 및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수립·발표('21.상)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 (돌봄시설 및 주거지원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550개소), 공공임대주택(+14.5만호) 보급, 20대 미혼청년(부모와 주거 분리) 주거급여 지원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사회서비스원 확충(11개→14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6.3만개)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종사자 5~49인 시설 교대인력 채용) 등 품질 개선

제2절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운영 방향 및 평가지표

1. 추진실적 평가 개요

- **(의의 및 목적)**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행되는 법정 평가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202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과제별 추진성과 점검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
 - 부처별 자체평가를 통해 주요 성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한 자가진단을 강화하고,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
- **(평가체계)** 202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한 부처별 자체평가 및 전문가 평가(보사연과 외부 전문가)의 종합평가 후,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 (부처 자체평가) 세부 과제별로 추진실적 작성, 평가지표에 따라 추진상황 자체평가, 개선사항 차년도 시행계획 환류
 - (외부 전문가 평가) 부처에서 제출한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자체평가 결과에 대하여 적정성 확인 및 종합평가, 개선방안 제시 등 정성적 검토
 - (평가결과 보고 및 환류)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및 차차년도 시행계획 반영
- **(평가대상 및 시기)** 2021년도 시행계획 세부과제에 대한 평가과정은 약 9개월간 진행
 - 평가대상: 15개 부처 101개 과제
 - 평가시기
 - 부처 자체평가: 2022.1월
 - 전문가 종합평가: 2022. 6월~2022. 9월
 - 세부 일정

외부 평가위원단 확정	'22. 6월
평가위원회 사전 설명회(1차, 2차)	'22. 6월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1차, 2차)	'22. 7월~8월
평가결과 종합분석	'22. 9월
우수사례 발굴	'22. 9월
개선필요 과제 전문가 컨설팅	'22. 10월
기본계획 성과 및 과제목표 점검	'22. 10월

□ (평가방법) 2020년도 평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우수’, ‘정상추진’, ‘개선필요’ 3등급 분류

○ 자체평가는 평가지표별로 ‘정상추진’, ‘개선필요’를 구분·평가하고, 전문가 확인·점검 시에 ‘우수’, ‘정상추진’, ‘개선필요’ 종합평가 실시

○ (평가지표) 3개 분야 5개 평가지표로 구성(〈표 1-1〉 참조), 아래 세부기준 제시

- 2020년에 이어 202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코로나19로 인한 정책환경 변화를 감안한 평가가 이루어짐.

〈I. 과제 계획〉

평가지표	1. 과제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지표정의	□ 기본계획의 목표와 과제의 내용을 명확하게 구성하였는지 평가
측정방법	<p>□ 과제목표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목표와 기본계획의 연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목표가 기본계획 내용과 연계되고,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에 기여하는 경우 ○ 과제목표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목표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한 경우 - 연도별 이행계획이 기본계획의 과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한 경우 <p>□ 과제내용의 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근거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의 과제내용과 부합한 사업근거(법률, 계획 등)가 명확한지 여부 ○ 추진경과, 사업기간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간의 사업 진행과정, 사업 시행시기, 사업기간 등이 알 수 있도록 기술되었는지 여부 ○ 사업 대상의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계획의 과제목표와 일치되도록 대상이 명확한지 여부 ○ 시행주체, 시행방법의 명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와 시행방법이 명확히 기술되었는지 여부 ○ 사업내용의 목적과의 연계성과 구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이 기본계획의 과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등급기준	<p>㉠ ‘정상추진’ 판단 기준 (모두 충족)</p> <p>가. 과제목표 및 과제내용이 기본계획과 연계성 높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목표 및 연도별 이행계획, 과제내용이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제시된 경우 <p>나. 과제목표 및 과제내용의 명확성 및 구체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목표(5년간 과제목표, 연도별 이행계획)를 명확히 작성 ○ 과제내용(사업근거, 사업기간, 사업대상, 시행주체, 시행방법, 주요내용)을 누락없이 명확히 작성 <p>㉡ ‘개선필요’ 판단 기준</p> <p>가. “㉠ ‘정상추진’ 판단 기준”을 1개라도 충족되지 않을 때</p>

〈II. 집행〉

평가지표	2-1 집행계획 이행수준
지표정의	□ 시행계획에 제시된 추진내용·일정,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지 점검
측정방법	<p>□ ‘이행’ 판단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 추진실적 : 사업이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 지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예산집행 실적 : 예산 집행률이 97% 이상 완료한 경우 <p>□ ‘미이행’ 판단 기준</p> <p>① 세부 추진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지연이 발생한 경우 - 사업이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계획에 따르지 않아 지연 및 추진되지 않은 경우 <p>② 예산집행 실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사유 없이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 - 예산 집행률이 97% 미만인 경우
등급기준	<p>Ⅰ ‘정상추진’ 판단 기준</p> <p>가. 세부추진계획 및 예산집행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지연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p> <p>나. 세부추진계획 및 예산집행을 모두 ‘이행’하였으나 외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지연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나 외부의 불가피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후속 조치가 일부 지연된 경우 <p>* 불가피성 : 자연재해, 시공업체 부도, 주민반대, 법률안 미통과 등 사유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 근거 필수 제시</p> <p>예시) 주민반대 : 주민설득을 위한 공청회 개최 법률지연 : 언론 및 대국민 홍보, 국회 방문, 전문가 간담회 개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일부 집행이 이월*된 경우 <p>*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이월 근거 제시 필수</p> <p>※ 법률 재개정, 제도개선 과제 등 비예산 과제는 세부추진일정 준수 여부만을 가지고 등급 부여</p> <p>Ⅱ ‘개선필요’ 판단 기준</p> <p>가. 세부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실적 중 불가피한 사정없이 ‘미이행’이 발생한 경우</p> <p>※ 법률 재개정, 제도개선 과제 등 비예산 과제는 세부추진일정 준수 여부만을 가지고 등급 부여</p>

평가지표	2-2. 사업관리의 적정성
지표정의	<input type="checkbox"/>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과제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지표
측정방법	<p><input type="checkbox"/> 이해 관계자 의견수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정책수혜자, 관계부처, 민간기관, 민간단체, 입법기관 등)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갈등을 해결하거나 사업개선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활동 진행하고, 정책개선 및 갈등해소 등의 결과물을 도출했는지 여부 <p><input type="checkbox"/> 모니터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달성 및 산출의 질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통해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인지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였는지 여부 <p><input type="checkbox"/> 협업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또는 유관협력 기관 간의 협업조정 체계 구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 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협업 추진을 위한 유기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부과제 중 부처 공동추진 과제의 경우 협업체계 실적 필수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추진주체의 구체적 명시 및 협업기관 간 역할배분과 의사소통 할 수 있는 회의체, 협의체, 업무협약 등 공식적인 채널을 구축운영 여부 * 단순 업무공유나 의견수렴으로는 협업체계 실적으로 미인정 <p><input type="checkbox"/> 외부 지적 대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지적을 사업관리에 적극 반영한 경우(선택적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내·외부 감사,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타 평가 지적에 대응한 개선방안 마련 또는 비판적 언론보도 등에 적극적으로 해명하거나 개선방안 마련하는 등 과제 관리에 노력한 실적 제시
등급기준	<p>㉠ '정상추진' 판단 기준</p> <p>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추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사업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결과를 제시한 경우</p> <p>※ 다부처 협업 과제의 경우 협업체계 실적을 포함하여 작성할 경우 정상추진으로 인정</p> <p>나. 시행계획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협업체계 추진 항목별로 2개 이상 계획을 작성하고 항목별로 1개 이상 실시한 경우</p> <p>※ 사업관리를 항목별로 다양하게 여러 차례 실시한 경우 전문기관 확인·점검 시 사업우수성 평가에 활용</p> <p>㉡ '개선필요' 판단 기준</p> <p>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모두 추진하지 않은 경우</p> <p>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중 어느 한가지만 추진한 경우</p> <p>다.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모두 추진하였으나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문제점 파악 및 개선사항이 미흡한 경우</p> <p>라. 협업과제임에도 협업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경우</p>

〈Ⅲ. 사업성과〉

평가지표	3-1. 성과달성 수준
지표정의	□ 시행계획 수립 시 설정한 성과지표 달성 수준에 대한 평가
측정방법	<p>□ 성과지표의 대표성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성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포괄하고 직접 연관성이 있어 대표적이고 구체적인지 여부 <p>□ 목표치의 적극성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3년간 실적이 있는 수치화된 성과지표의 경우, 과거 실적치 추세를 감안하여 평균 증감률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실적이 한계치에 이르러 목표치 설정을 평균증감률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성과지표를 변경하거나 보완지표 추가 설정 ※ 성과지표 목표치가 평균 증감률 이상이 아닐 경우 과거 실적 및 향후 목표치 추세를 기반한 합리적 설정 근거 제시 필요 - 성과지표가 기본계획상 세부과제의 최종목표를 타겟으로 '23년까지 연차별로 과제 추진일정에 따라 계획적으로 설정한 경우 목표치 설정이 평균증감률 이상이 아니어도 무관함 ○ 신규 성과지표의 경우, 유사 사업의 실적 기준을 인용으로 목표치를 상향 설정한 경우 ○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첨예한 사안에 대한 법률안 국회 제출, 법령 제개정 등 목표 달성이 어려운 지표를 목표로 설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치 적극성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p>□ 목표치 달성 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 수립 시 설정한 정량적 성과지표가 목표치 대비 실적이 100%이상 달성한 경우 ○ 성과지표가 정량적 수치가 아닌 '법률 제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수치가 아닌 경우, 국무회의 의결, 법률 통과 등의 공식적 절차를 통해 목표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급기준	<p>① '정상추진' 판단 기준</p> <p>가.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가 대표성이 있으며, 목표치가 적극적으로 설정되어 목표를 달성한 경우</p> <p>※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지 않더라도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 확인·점검 시 성과지표의 적극성 및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도 등을 검토하여 정상 판단</p> <p>② '개선필요' 판단 기준</p> <p>가.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달성하지 못한 경우 나. 성과지표나 목표치를 임의로 변경 또는 누락하여 성과 달성여부를 판단한 경우</p>
평가지표	3-2. 사업 우수성(전문기관용 평가지표) ※ 사업부서에서는 작성 불필요
평가방법	<p>□ 주요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 위주로 작성하며, 시행계획 과제에 국한되지 않고 기본 계획 과제 자체와 연관된 사항을 기술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관련 통계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통계를 활용, 통계 출처는 반드시 병기할 것 ○ 주요 법령 제개정, 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 과제의 추진실적에 따른 정책성과 및 효과와 기존 문제를 해결한 결과 등을 기술하되, 구체적·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 ○ 정책 성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의도한 변화가 초래된 정도를 기술

	<p>* 산출물, 국민여론, 국회 평가, 정책담당자 자평, 언론보도결과, 사회지표 등을 종합 검토</p> <p><input type="checkbox"/> 사업관리의 적극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관리 계획(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 협업체계 추진)을 다각적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한 경우 ○ 시행계획 수립에 사업관리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더라도 사업 환경 변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 및 이해관계자 조정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경우 <p><input type="checkbox"/> 외부 지적에 대한 환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관리의 적정성 중 외부 지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경우 * 국회, 내외부 감사, 외부 평가, 언론 등의 지적에 대책 마련 및 추진 <p><input type="checkbox"/> 성과지표의 결과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 목표지 설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목표지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	--

등급기준	<input type="checkbox"/> '정상추진', '개선필요'로 구분하지 않고, 우수성에 해당되는 사항 나열하여 작성
-------------	--

〈V. 종합점검 : 전문기관 확인·점검의 최종 등급 평가에 활용〉

평가지표	최종 등급 평가(전문기관용 평가지표) ※ 사업부서에서는 작성 불필요
세부설명	<input type="checkbox"/>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사업의 우수성을 종합한 과제 등급 제시

등급기준	<p>㉠ '우수' 기준 : 필수조건 및 사업 우수성이 2개 이상 인정된 경우</p> <p>가. 필수조건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 수준 지표 모두가 '정상'인 경우</p> <p>나. 사업우수성</p> <p>① 주요 성과 인정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 위주로 작성하며, 시행계획 과제에 국한되지 않고 기본계획 과제 자체와 연관된 사항을 기술한 경우 - 주요 법령 제·개정, 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 과제의 추진실적에 따른 정책성과 및 효과와 기존 문제를 해결한 결과 등을 기술하되, 구체적·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 - 정책 성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의도한 변화가 초래된 정도를 기술 <p>② 사업관리의 적극성이 인정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업점검, 협업체계 구축·운영 등 다각적 사업관리를 통해 과제 추진의 적극성을 확인되는 경우 - 사업 환경 변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 및 이해관계자 조정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경우 <p>③ 외부 지적에 대한 조치가 적극적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내외부 감사, 외부 평가, 언론 등의 지적에 대책 마련 및 추진 <p>④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과성, 도전성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성) △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성 △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적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인지 여부 △ 정책내용과 성과지표가 직접 연관성 여부
-------------	--

- (결과성)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 (도전성) 성과 목표치가 해당 부처의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는지를 점검
- * 목표치 설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목표치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 사업기간에 따른 적정 목표치 기준 〉

1. 기존사업 : 과거 3개년 성과목표치 평균 상회여부 : 3년 평균 목표치가 없을 경우 2년치 평균이나 전년도 목표치 고려
2. 신규사업: 객관적·합리적으로 목표치 설정 기준을 제시하고, 유사한 정책(사업)과 비교기준에 비해 상향목표치인지 여부 판단

㉒ '정상추진' 판단 기준

- 가.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 수준 지표 모두가 '정상'인 경우
- 나.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 수준 지표 중 1개가 개선이지만 사업우수성이 1개 이상 인정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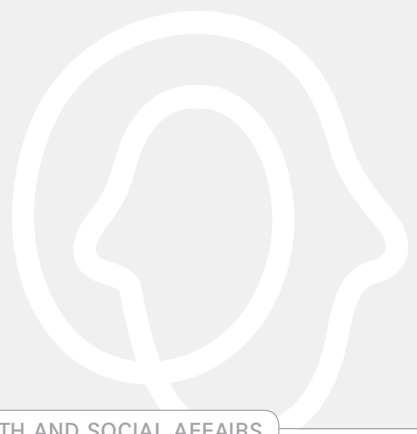
㉓ '개선필요' 판단 기준

- 가.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 수준 지표 중 1개 이상이 개선인 경우
- ※ 개선과제 성과개선 계획서는 평가지표 중 2개 이상 개선등급을 받은 과제를 대상으로 작성

2. 평가 위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평가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평가위원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부와 외부로 구성

구분	소속	직위	성명	주요 경력
내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아영	· (중장년, 노인) 고용 분야
내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고제이	· (아동) 교육, 사회서비스보장 분야
내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임완섭	· 소득보장 분야
내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남희	· (노인) 소득보장, 사회서비스보장 분야
내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전진아	· 건강보장 분야 (예방적 건강보장)
내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김수진	· 건강보장 분야 (건강보험)
내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상정	· (아동·청소년) 교육, 사회서비스보장 분야
내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함선유	· (청년) 고용, 사회서비스보장 분야
내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소은	· 고용 분야
외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연구위원	홍광표	· 교육 분야
외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숙	· (여성) 고용·교육 분야
외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승호	· 사회서비스보장, 추진체계 분야
외부	전주대학교	교수	최복천	· (장애인) 사회서비스보장 분야
외부	울산의대	교수	조민우	· 건강보장 분야 (필수의료)



제3장

2021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1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제2절 전문기관 평가 결과

제3절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

제4절 우수과제와 미흡과제

제3장

2021년도 사회보장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제1절 부처의 자체평가 결과

□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에 대해 부처는 평가지표별로 '정상추진', '개선필요'로 소관 사업에 대해 자체평가

□ 부처의 2021년 추진실적 자체평가 결과

- 대부분 과제가 정상추진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 '집행계획 이행수준', '성과지표 달성수준'의 정상추진 등급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집행계획 이행수준' 5%, '성과지표 달성수준' 4%가 개선필요 등급을 받음.

* 2020년 추진실적 자체평가 평가지표별 '정상추진' 등급 비율(%):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98.1%, (집행 계획 이행수준) 96.1%, (사업관리의 적정성) 98.1%, (성과지표 달성수준) 89.3%

〈표 3-1〉 자체평가 결과 -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단위: %)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지표 달성수준
정상추진	100.0	91.0	99.0	95.0
개선필요	0.0	5.0	1.0	4.0
등급 미부여	0.0	4.0	0.0	1.0

주: 1) 동일과제로 묶여 있으나 개별적으로 평가받는 다부처 사업은 동일과제임에도 부처별 자체평가 결과가 상이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다부처 사업을 개별 평가한 과제수 101개를 기준으로 산정

2) 등급미부여: 비해당 또는 세부사업별 평가등급 상이

- 정책분야별 평가지표 등급 분석 결과, 건강 보장 분야의 '집행계획 이행수준', '성과지표 달성수준'이 다른 분야에 비하여 정상추진 등급 비율이 낮음.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건강 보장 분야의 사업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률 및 성과달성률 저조와 대면서비스 중심 과제의 사업추진 어려움에 기인한 결과

* 2020년 추진실적 자체평가 분야별 '정상추진' 등급 비율(%): (고용·교육) 98.2, (소득) 92.9, (건강) 91.7, (사회서비스) 95.0, (추진기반) 100.0

30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표 3-2〉 자체평가 결과 - 고용·교육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단위: %)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지표 달성수준
정상추진	100.0	92.5	100.0	97.5
개선필요	0.0	2.5	0.0	2.5
등급 미부여	0.0	5.0	0.0	0.0

〈표 3-3〉 자체평가 결과 - 소득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단위: %)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지표 달성수준
정상추진	100.0	100.0	100.0	100.0
개선필요	0.0	0.0	0.0	0.0
등급 미부여	0.0	0.0	0.0	0.0

〈표 3-4〉 자체평가 결과 - 건강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단위: %)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지표 달성수준
정상추진	100.0	79.2	95.8	83.3
개선필요	0.0	12.5	4.2	12.5
등급 미부여	0.0	8.3	0.0	4.2

〈표 3-5〉 자체평가 결과 -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단위: %)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지표 달성수준
정상추진	100.0	95.0	100.0	100.0
개선필요	0.0	5.0	0.0	0.0
등급 미부여	0.0	0.0	0.0	0.0

〈표 3-6〉 자체평가 결과 - 추진기반 보장 분야 평가지표별 등급 비중

(단위: %)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지표 달성수준
정상추진	100.0	100.0	100.0	100.0
개선필요	0.0	0.0	0.0	0.0
등급 미부여	0.0	0.0	0.0	0.0

제2절 전문기관 평가 결과

□ (총평)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최종등급 기준 94.1%(우수+정상추진 등급 사업 비중)의 사업이 시행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2020년 추진실적 평가와 비교하여 2.8%p('20년 우수+정상추진 등급 사업 비중 91.3%) 상승

□ 정책분야 및 과제별 분석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의 4대 핵심분야 12대 중점 추진과제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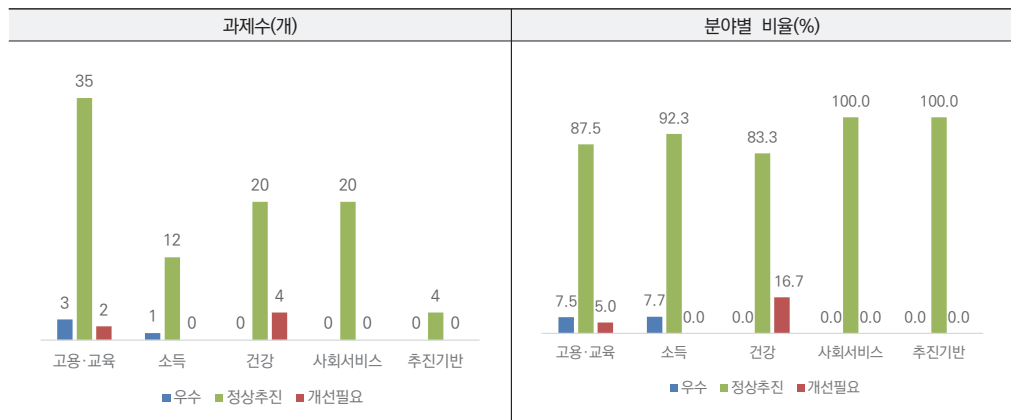
- (4대 핵심분야) 소득 보장 분야와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과제의 100%가 정상추진 이상의 등급을 받았으며, 건강 보장 분야, 고용·교육 보장 분야 순으로 개선필요 과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 핵심분야별 평가등급 결과

(단위: 개, %)

구분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추진기반	전체
합계	40 (100.0)	13 (100.0)	24 (100.0)	20 (100.0)	4 (100.0)	101 (100.0)
우수	3 (7.5)	1 (7.7)	-	-	-	4 (4.0)
정상추진	35 (87.5)	12 (92.3)	20 (83.3)	20 (100.0)	4 (100.0)	91 (90.1)
개선필요	2 (5.0)	-	4 (16.7)	-	-	6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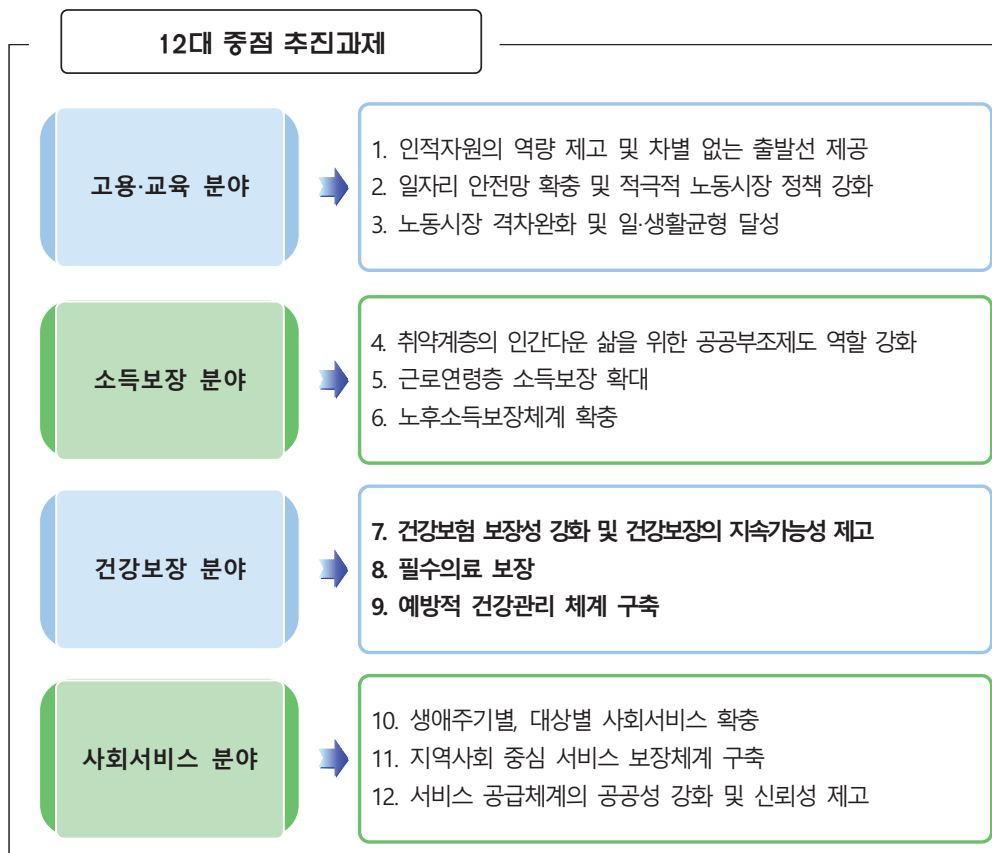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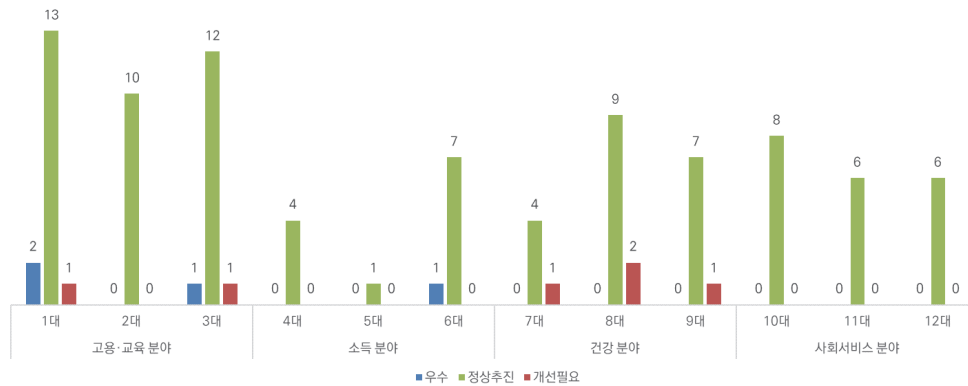
[그림 3-1] 핵심분야별 평가등급 결과



- (12대 중점 추진과제별) 평가결과 건강분야에서 과제수 대비 개선필요 평가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2] 12대 중점 추진과제별 평가결과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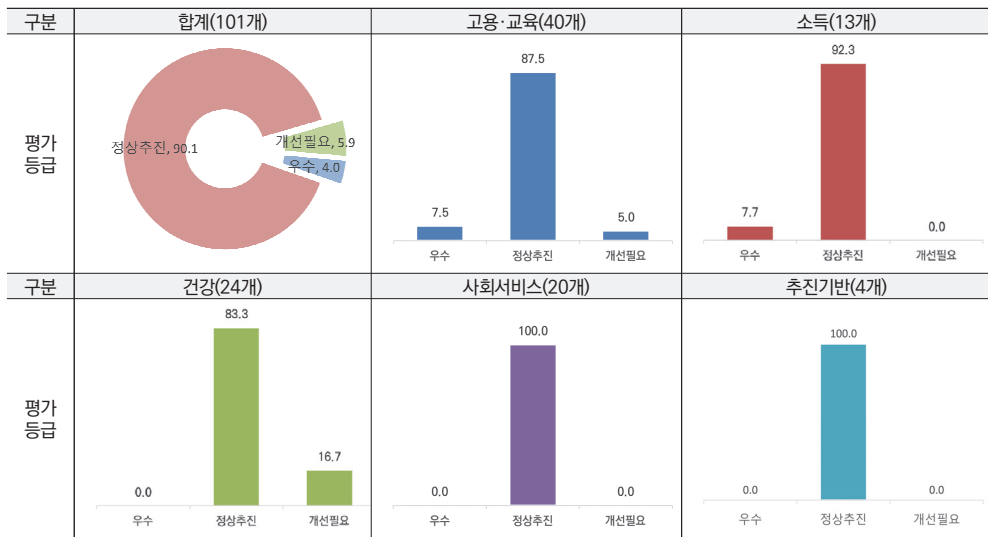


○ (세부과제별) 평가대상 101개 과제 중 우수 4개(4%), 정상추진 91개(90.1%), 개선필요 6개(5.9%)

- 개선필요 과제는 '집행계획이행 수준', '성과지표 달성수준' 등 평가지표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3-3] 세부과제별 평가등급 비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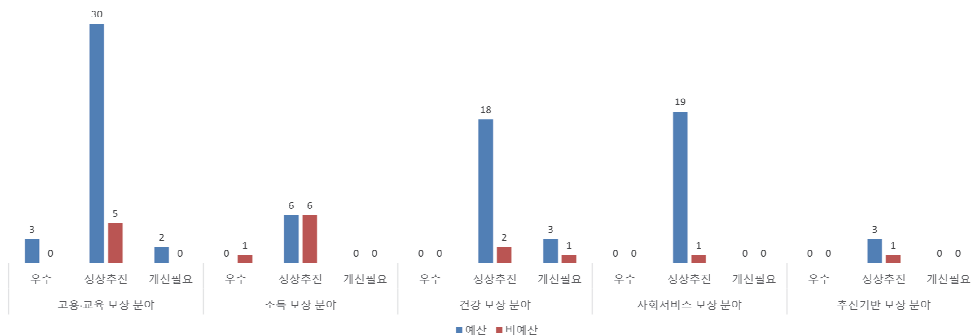


○ (예산·비예산 사업별) 예산사업은 84개, 비예산사업은 17개로 구성

- 우수등급사업은 총 4개로 예산사업 3개, 비예산사업 1개로 분포
- 개선필요사업은 총 6개로 예산사업 5개, 비예산사업 1개로 분포

[그림 3-4] 예산별 평가등급 결과

(단위: 개)



□ 평가부문(지표)별 분석

○ 202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3개 분야 5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 ① 계획단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② 집행단계 '집행계획이행 수준', ③ 집행단계 '사업관리의 적정성', ④ 성과단계 '성과지표 달성수준', ⑤ 성과단계 '사업 우수성'

○ 평가지표별 101개 과제에 대한 정상추진 분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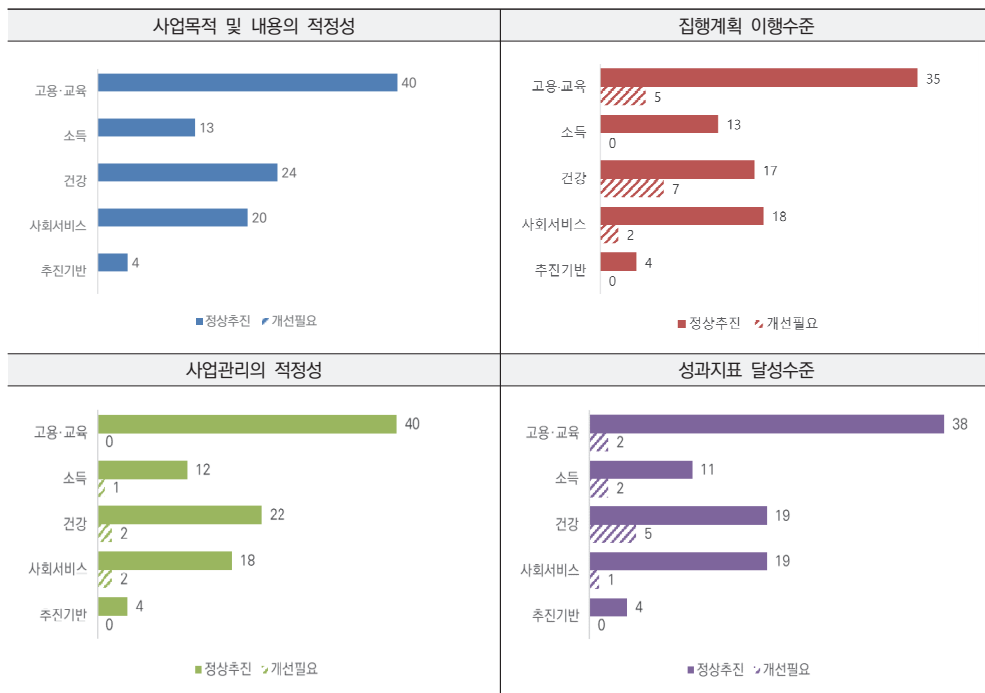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101개(100%), '사업관리의 적정성' 96개(95%), '성과지표 달성수준' 91개(90.1%), '집행계획 이행수준' 87개(86.1%) 순으로 평가

* 평가등급을 부여하지 않는 '사업 우수성' 지표 제외

- '집행계획 이행수준'은 전체 과제 중 13.9%, '성과지표 달성수준'은 9.9%가 개선필요 등급을 받아 예산 집행 제고, 성과 달성 관리 및 적정 성과지표 설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됨.
- 코로나19 영향으로 예산집행 실적과 성과목표 달성 부분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20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예산집행 실적과 성과목표 달성 부분에서의 개선필요 평가비율이 높아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그림 3-5] 평가부문(지표)별 결과

(단위: 개)



□ 전년 대비 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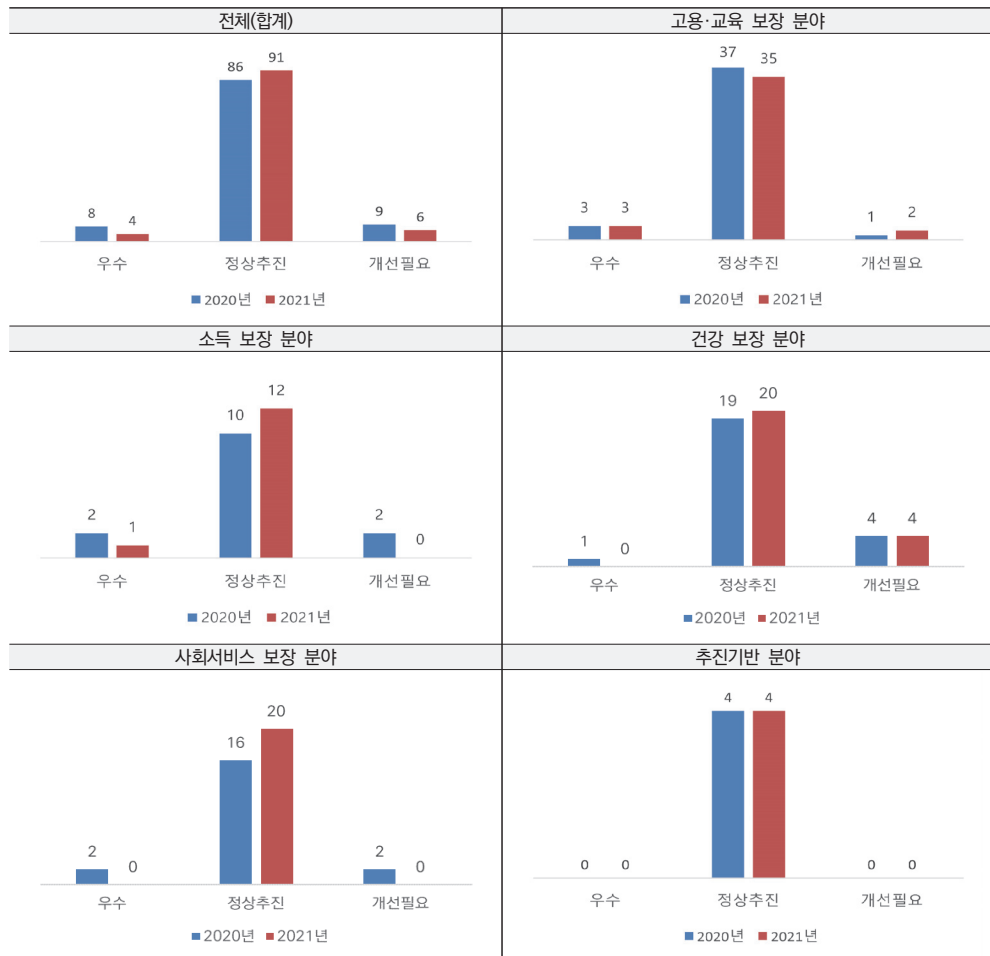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예산집행 실적과 성과목표 달성 부분에서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전년 대비 개선필요 과제 다소 감소('20년 9개 → '21년 6개)

* 정상추진 이상 '20년 94개(91.3%) → '21년 95개(94.1%)로 2.8%p 증가

-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건강 보장 분야 사업 지연으로 예산 집행률 및 성과 달성률 저조, 이 외 대면서비스 중심 과제의 사업추진 어려움
- 그럼에도 사업추진 부처의 노력(대면→비대면 등 사업추진 방향 변경 등)으로 '20년도에 비해 정상추진 이상 과제 증가

[그림 3-6] 전년 대비 평가결과

(단위: 개)



제3절 정책목표별 평가 결과 및 주요 성과²⁾

1. 고용·교육 보장 분야

가.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 **(과제구성)** 교육의 공적 책임 강화,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등 교육격차 해소,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 투자 확대로 인적자원 역량 제고, 평생학습 체계 구축 등에 관한 1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 **(평가결과)** 총 16개 과제 중 최종등급 ‘우수’ 2개, ‘정상추진’ 13개, ‘개선필요’ 1개 과제로 평가

○ 2개 과제에서 2개의 세부항목이 개선필요로 평가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산 집행을 저조, 수요에 대응한 적극적 사업 추진(공간 확보 문제 및 이해관계자 간 이견 대립 등) 어려움으로 인한 예산집행 실적 저조

〈표 3-8〉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영역 평가결과(종합)

(단위: 개)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정상추진	16	14	16	16
개선필요	0	2	0	0

〈표 3-9〉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 없는 출발선 제공’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부처	등급
1-1-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교육부	정상추진
1-1-2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 보육, 교육투자 확대	복지부	정상추진
1-2	기초학력 보장	교육부	정상추진
1-3-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초등돌봄교실 및 마을돌봄)	교육부	개선필요
1-3-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다함께돌봄·지역아동센터)	복지부	정상추진
1-3-3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여가부	정상추진
1-4	고교 무상교육 실시	교육부	정상추진
1-5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교육부	우수
1-6-1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교육지원)	교육부	정상추진
1-6-2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여가부	우수
1-7	고교학점제 도입	교육부	정상추진
1-8-1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및 혁신인재 양성(국립대학 육성사업)	교육부	정상추진
1-8-2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및 혁신인재 양성(과학기술·ICT 인재성장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상추진
1-9	평생학습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	교육부	정상추진
1-10	신종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강화	고용부	정상추진
1-11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지원	고용부	정상추진

2) 본문에 활용된 성과정보는 각 부처에서 제출한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주요성과

○ 교육의 공적 책임 강화

-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가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제고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021년 성과목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31% 달성, 목표치 40%에 미달하였으나, '20년 29.8% 대비 1.2%p 상승('17년 24.8% 대비 6.2%p 제고)

〈표 3-10〉 교육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과제의 주요 성과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25.4	28.5	29.8	31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2022.5). 교육통계연보.

- '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매년 500학급 이상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21년 목표 대비 2배 이상을 상회하는 총 1,030학급 확충
-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위한 보육교사의 업무경감 및 휴게시간 이용 지원을 위한 지속적인 보조·연장교사 배치 확대
 - (보조·연장 보육교사) '19년 4만명 → '20년 5.2만명 → '21년 5.8만명 → '22년 6.1만명. 보조·연장교사 배치율 목표(24.5%) 대비 초과달성(26.4%)
-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 및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 체제 강화
 -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21.3)
 - (협력수업) 1수업 2교사제 등 보조인력(교사, 예비교원, 강사 등)을 활용한 협력수업·지도 모델 발굴을 위해 선도·시범학교 확대('20. 75교→'21. 92교)
 - (두드림학교) 두드림학교 확대·운영('20. 4,801교→'21. 5,193교)을 통해 복합적 지원에 대한 학교 간 격차 최소화 추진
 - (학습종합클리닉) 교육지원청 단위의 센터를 확대·배치('20. 130개소→ '21. 142개소)하여 전문적인 학습·정서 집중지원 및 학교단위 지원의 한계 극복
 -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튜터 배치(튜터 4,000명)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 초등돌봄교실과 마을돌봄기관 지속 확충에 더하여,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학교 협력 모델(학교돌봄터) 신규 도입
 -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를 제도화하여 지속적 인프라 확충 및 긴급, 방과후 돌봄 공백 예방
 - '21년 다함께돌봄센터 634개소 설치·운영(+210개소), 15,900명 아동에 방과후 돌봄 제공('18) 17 → ('19) 173 → ('20) 424 → ('21.11월) 634개소)

- 방과후아카데미 확충('20) 304개소 12,341명 → ('21) 332개소 13,145명

[그림 3-7] 여가부의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과제 주요성과



자료: 여성가족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취약계층 등 교육격차 해소

- (교육비 경감)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고1~3학년, 124만명),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원(3년간 480만원) 고교 학비 경감
- 대학생 100.9만명에 33,441억원(1인 평균 331.3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 총재학생 대비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386만원) 이상 지원(재학생 대비): ('18) 30.6% → ('19) 31.5% → ('20) 32.1% → ('21) 32.1
- (사각지대 해소)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8.2천명에게 국가장학금 II유형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추가지원)
 - '21.1학기 8,210명, 1인 평균 49만원/ 2학기 6,665명, 1인 평균 41만원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1.85%→1.7%)
- (위기아동·청소년) 특수학교 5교 신설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381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 비율 감소('20) 11.7% → ('21) 10.7%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확대('20년 219개소 → '21년 220개소) 및 전용공간 조성('20년 20개소 → '21년 34개소)

○ 창의적 인재육성 및 고등교육 투자확대로 인적자원 역량 제고

- (고교학점제) '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및 '22년~'24년 단계적 이행계획 수립, 「초·중등교육법」의 근거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완성
 - 연구·선도학교 확대('20) 732교→('21) 1,457교
- (인재양성) '국립대학 육성사업' 재정지원 확충('18. 800억원 → '21. 1,500억원), 4차 산업혁명 대응 인재양성(+14,940명)

〈표 3-11〉 과기정통부의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및 혁신인재 양성' 과제 주요성과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과학기술·ICT 인재양성	8,514	9,868	10,116	14,940

자료: 과기정통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평생학습 체계 구축

- (평생학습)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예산 및 대상 전년대비 2배 확대, 4차 산업혁명, 직업교육, AI 등 다양한 분야의 K-MOOC 신규강좌 개발 확대(누적 745개→990여개), K-MOOC 수강신청 건수 : ('20년) 52.2만 건 → ('21년) 56.8만 건, 시도문해교육센터 특성화 사업 신규 추진 및 민·관 협력 강화 등 문해교육 협력체계 내실화를 통한 지원규모 확대(6.9만명→7.6만명) 등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 (중장년 재취업 지원) 생애경력설계서비스 확대 '20년 23,334명→'21년 37,984명
- (중소기업 지원) 중소기업의 자체훈련이 축소되고 있으나,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중소기업훈련지원센터)을 통한 중소기업 자체 훈련 참여 확대
 - 자체훈련 중 현장맞춤형체계적훈련 비율: '19년 6%→'20년 22%→'21년 38%

나.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과제구성)**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및 고용유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청년의 구직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10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 **(평가결과)** 10개 과제 모두 최종등급 '정상추진'으로 평가

○ 적절한 사업관리로 10개 과제의 모든 세부항목 정상추진

〈표 3-1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영역 평가결과(종합)

(단위: 개)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정상추진	10	10	10	10
개선필요	0	0	0	0

〈표 3-13〉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부처	등급
1-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부	정상추진
1-13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보장성 강화	고용부	정상추진
1-14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지급기간 확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단계적 도입	고용부	정상추진
1-15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고용부	정상추진
1-16	고용센터 취업지원기능 강화	고용부	정상추진
1-17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고용부	정상추진
1-1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고용부	정상추진
1-19-1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고용부	정상추진
1-19-2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	산자부	정상추진
1-20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고용부	정상추진

□ 주요성과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 (고용보험 확대) 예술인 시행 1년 만에 10.7만명 가입, 특고 12개 직종은 시행 6개월만에 57.7만명 가입으로 성공적 안착
- (산재보험 확대) 특고 적용직종 확대 (기준)보험설계사 등 14개 직종 →(개선)15개 직종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직종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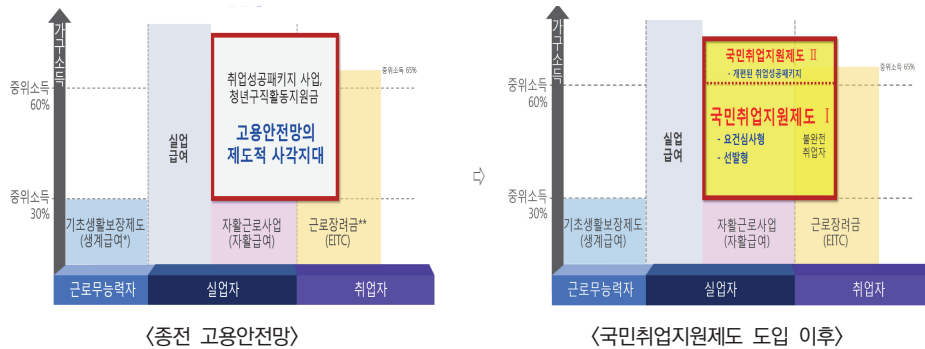
○ 실업급여 보장성 확대 및 고용유지를 통한 고용 안전망 강화

-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수급자 174만명의 생계안정
 -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 수(천명,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9년) 1,148 (7.6) → (‘20년) 1,372 (19.5) → (‘21년) 1,289 (△6.1)
실업급여 수급자 수(천명,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9년) 1,526 (9.7) → (‘20년) 1,783 (16.9) → (‘21년) 1,866 (4.5)
실업급여 지급액 (억원,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9년) 83,820 (25.4) → (‘20년) 121,769 (45.3) → 125,053 (2.7)
- 평균임금의 50→60%, 지급기간 30일 연장, 지급수준 1인 123일 · 611만원 → 159일 · 927만원
-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도 ‘19.12월 25.8%에서 ‘21.12월 26.9%로 향상

○ 취약계층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고용보험 등 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이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고용안전망의 보호대상으로 편입

[그림 3-8] 고용노동부의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과제의 주요 성과



자료: 고용노동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고용센터 확대(101→174개소)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고용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화상상담플랫폼 구축을 통한 비대면 프로그램 확대
- '21년 1,097천명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1,054천명에게 훈련 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통하여 훈련 기회 확대 및 취 창업 지원 등 정책효과 달성

○ 청년의 구직 어려움 해소

- (청년지원)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통해 '21년 3.0만개 기업 8.5만명에 청년 추가고용지원
 - 연도별 지원실적 : ('17) 292명 → ('18년) 128,275명 → ('19년) 141,566명 → ('20년) 105,584명 → ('21년) 84,833명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16.7월부터 누적 50.7만명의 청년과 116천개소 기업이 공동으로 청년공제 가입, 그 중 133,065명이 만기금 수령.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청년공제 가입자의 1, 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아 장기근속 유도 효과

〈표 3-14〉 고용노동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과제의 주요 성과:

청년내일채움공제 및 일반 중소기업 취업청년 근속현황

(단위: %)

구 분	1년 이상	2년 이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46.6 (476,155/1,021,389)	33.0 (336,817/1,020,447)
청년공제 가입 청년	78.6 (77,213/98,271)	67.3 (70,984/105,651)

자료: 고용노동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상생형 지역 일자리) 상생형 일자리로 6곳(광주, 강원 횡성, 경남 밀양, 전북 군산, 부산, 구미) 선정, 선정된 6개 지역에서 약 9,081억 원의 투자 및 1,305명 정규직 일자리 창출
- (편의성 강화)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 개편 일자리·금융·주거 등 중앙부처-지자체에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 통합 제공, 전문 상담 도입 통한 개인별 맞춤형 고용

서비스 제공

다.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 **(과제구성)** 최저임금 현장안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및 출산·육아기 지원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등에 관한 1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 **(평가결과)** 14개 과제 중 최종등급 ‘우수’ 1개, ‘정상추진’ 12개, ‘개선필요’ 1개 과제로 평가

○ 2개 과제에서 3개의 세부항목이 개선필요로 평가

- 사업 환경 변화로 인한 예산집행실적 저조 및 성과목표 미달성(수혜대상 규모 추정 및 예산 조정 등을 통한 사업설계에 대한 점검 필요)

〈표 3-15〉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영역 평가결과(종합)

(단위: 개)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정상추진	14	13	14	12
개선필요	0	1	0	2

〈표 3-16〉 ‘노동시장 격차완화 및 일·생활균형 달성’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부처	등급
1-21	최저임금 현장안착	고용부	정상추진
1-2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부	정상추진
1-23	출산급여 신설을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	개선필요
1-24-1	여성 경력단절 예방(여성 및 기업 대상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지원)	여가부	정상추진
1-24-2	여성 경력단절 예방(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고용부	정상추진
1-25	남녀 공동 육아참여 기반 구축	고용부	정상추진
1-2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확대 검토	고용부	정상추진
1-28-1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새로 일하고 싶은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 및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	고용부	정상추진
1-28-2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새일센터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가부	정상추진
1-29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여가부	정상추진
1-30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여가부	정상추진
1-31	아동수당 확대	복지부	우수
1-32	연간 노동시간 단축	고용부	정상추진
1-33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고용부	정상추진

□ 주요성과

○ 최저임금 현장안착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 (최저임금) 최저임금 홍보 및 현장안착을 위한 정책캠페인(생활매체 및 전광판, 눈 등) 전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지원, 소규모·취약사업장 중심 노무관리지도 실시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21년) 상담 18,678건, 권리구제 지원 582건, 교육 724회(40,220명), 「청소년 근로조건 알리미」('21년 117명)들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정책안내·제도 실시(169,864개소)
 - '21년 총 11,061개소 노무관리지도 실시
- (정규직 전환) '21.12월말 기준, 20.3만명 정규직 전환으로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기여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지원 및 출산·육아기 지원 강화

- (경단여성 지원) 경단예방 서비스 기관 15개소 신규 선정, 예방팀 신설·인력보강* 등을 통한 재직여성·고용기업의 고용안정 지원 강화**
 - * ('20) 60개소 → ('21) 75개소(예방전담팀 7개소 신규 지정 및 전담인력 3명 배치)
 - ** 인사노무심리·경력개발상담, 직장적응 지원,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등 서비스 수혜자 증가 : ('20.11월) 1,415개사 4.1만명 → ('21.11월) 1,821개사 5.7만명
- 코로나19 상황에서 전국 159개소 새일센터의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17만명('21.11월 기준)이 취업에 성공
 - 취업인원 : ('20.11) 16.5만명 → ('21.11) 17.1만명
- (법개정) '21.11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임신근로자 보호 강화 및 육아휴직 활성화 도모
-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신속한 코로나19 방역지침 개정시행을 통해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으로 양육공백해소

〈표 3-17〉 여가부의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과제의 주요 성과

(단위: 명, %)

구 분	2019	2020	2021
아이돌보미 수	24,677	24,469	25,712('21.11월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률	84.7	89.5	91.0('21.11월 기준 예측치)

자료: 여성가족부 내부자료(아이돌봄서비스 통합업무관리시스템 통계)

- (지역돌봄 확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44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표 3-18〉 여가부의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과제의 주요 성과

(단위: 개소)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개소 수	78	119	142	205	279	332	391

자료: 여성가족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아동수당 확대)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247만명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만 7세→만 8세 미만 아동)를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12월)

○ 일하는 방식 개선

- (노동시간 단축) 주52시간제 시행 이후 “연간 근로시간”이 감소하고,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비율”도 크게 감소
 - 연간근로시간(5인 이상,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7) 2,014시간 → ('18) 1,986시간 → ('19) 1,976시간 → ('20) 1,952시간
 - 주52시간 초과 임금근로자 비율(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7) 15.1% → ('18) 11.9% → ('19) 9.7% → ('20) 7.9%
- (근무혁신)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택근무·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가 새로운 일하는 방식으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 재택근무 활용 비율(2021 경찰부가조사): ('20) 17.4% → ('21) 32.3%

2. 소득 보장 분야

가.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 **(과제구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범위 확대,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등에 관한 4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 **(평가결과)** 총 4개 과제 모두 최종등급 '정상추진'으로 평가

○ 2개 과제에서 2개의 세부항목이 개선필요로 평가

- 성과목표 미달성(코로나19 상황 고려하더라도 낮은 성과달성률) 및 성과달성률 미제시

〈표 3-19〉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영역 평가결과(종합)

(단위: 개)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정상추진	4	4	4	2
개선필요	0	0	0	2

〈표 3-20〉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 제도 역할 강화'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부처	등급
2-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복지부	정상추진
2-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 및 보장성 강화	복지부	정상추진
2-3	자활성공 보상 강화	복지부	정상추진
2-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확대	복지부	정상추진

□ 주요성과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범위 확대

- (부양의무자 폐지)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년1월), 전체 수급(권)자 가구 대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완결로 '21년에 비수급빈곤층 약 18.4만명 신규 지원('21년 12월)
- (생계급여 지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21년1월~)으로 기초생활보장 총 수급자 수가 지속 증가하여 '21.12월 기준 약 236만 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00년) 이후 최다 지원
 - ('18) 174만 → ('19) 188만 → ('20) 213만명 → ('21.12월) 236만명
 -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8) 123만 명→ ('20) 130만 명→ ('21.12월) 148만 명으로 증가
- (기초생활보장 산출기준 변경) 기준중위소득 산출 기반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로 통계원 변경 및 지급액 단계적 인상(기존 기준중위소득 값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값 간의 격차 단계적 해소)

○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 (자활근로 확대) 자활급여 최대 1.5% 인상(최저임금 인상률 반영), 코로나19로 인한 수급자 증가 및 저소득층의 자활수요 반영 '21년 1,2차 추경으로 자활정원 확대('21년 본예산 5.8만명→추경 6.3만명)로 저소득층 자립 기반 마련 및 생계보장 지원
-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대상을 전체수급자까지 확대
 - 기초급여 단계적 인상(25→30만원): ('19.4.)생계·의료급여 수급자→('20.1.)교육·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총 19.5만명)→('21.1.) 전체수급자(총 27.6만명)

나. 근로연령층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 **(과제구성)** 청장년의 생활안정 및 일하는 여건 조성,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노인일자리 확대 등 9개 세부과제로 구성

□ **(평가결과)** 총 9개 과제 중 최종등급 '우수' 1개, '정상추진' 8개로 평가

○ 1개 과제에서 1개의 세부항목이 개선필요로 평가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관련 통상 업무 외 사업관리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개선 필요

〈표 3-21〉 '근로연령층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영역 평가결과(종합)

(단위: 개)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정상추진	9	9	8	9
개선필요	0	0	1	0

〈표 3-22〉 '근로연령층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부처	등급
2-5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기재부	정상추진
2-7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복지부	정상추진
2-8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소득보장	복지부	정상추진
2-10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	복지부	정상추진
2-11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 대화 지원	복지부	정상추진
2-12	퇴직연금의 기능강화	고용부	우수
2-13	주택연금 활성화	금융위	정상추진
2-14	농업인 노후소득보장강화	농식품부	정상추진
2-15	노인 일자리 확대	복지부	정상추진

□ 주요성과

○ 청장년의 생활안정 및 일하는 여건 조성

-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지급대상자 및 지급금액 인상

- ('19년 지급) 최대 지급액 인상(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등), 재산요건 완화(1.4억원→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제도 신설 등 근로장려금 확대·재설계 추진
- ('20년 지급) 점증기간*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3만원→10만원), 홀별이가구 범위 확대(7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 (단독)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홀별이)700만원 미만 (맞벌이)800만원 미만

- ('21년 지급) 과세관청의 근로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15일 이내로 단축

〈표 3-23〉 기재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과제의 주요 성과

구 분	'19년 ('18 귀속)	'20년 ('19 귀속)	'21년 ('20 귀속)
지급액 (조원)	4.50	4.47	4.52
지급인원 (만 가구)	410	432	433

자료: 기획재정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 (기초연금 인상) 소득하위 7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을 통한 생활안정 기여
 - ('19.4.) 소득하위 20% 30만원→('20.1.) 소득하위 40% 30만원→('21) 소득하위 70% 30만원

[그림 3-9] 복지부의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 사업의 주요 성과



자료: 보건복지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강화

- (국민연금 개선) 유족연금 중복지급률(현행 30%) 확대를 위한 법률 개정안 논의, 연기연금 신청 횟수 제한 폐지 및 소재불명자 지급정지 근거 마련 등 법률 개정을 통한 급여제도 개선, 출산크레딧 확대 등 급여제도 개선을 위한 발의 등에 대응
- (국민연금 수익률 제고) 기금운용체계 개선 등을 통한 장기 수익률 등 제고를 위한 인프라 구축
 - 해외·대체투자 확대 등을 담은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안) 마련, 장기자산배분 시범 구성(안) 보고

○ 다층노후소득보장 체계 구축 및 노인일자리 확대

- (협의체 운영) 각 제도 별 역할 정립, 연계 등을 위해 다층노후소득보장 협의체 구성·운영
 - 기초·국민연금, 퇴직연금, 주택·농지연금을 포함한 실무협의체 개최('21.9.)

- (퇴직연금) 공적퇴직연금 서비스(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제공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10년 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21.4.13)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 후 노후를 폭넓게 보장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 (주택연금) 신탁방식 주택연금 출시 및 압류방지전용계좌 출시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 노력으로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수가 전년대비 약 1.1만건 증가한 9.2만건 달성(목표달성률 101.1%), 노후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의 소득대안 역할을 적절히 수행
- (농지연금) 저소득층(생계급여대상자) 및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에 대한 우대 상품 도입('22. 1)으로 보유자산 및 소득이 부족한 저소득층, 농업·농촌에 기여도가 높은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우대하여 지원 가능
- (노인일자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에 대비하여 전문역량, 경험 등을 활용하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신설('19) 및 지속적인 확대('19) 2만명 → ('20) 3.7만명 → ('21) 5.5만명), 민간형 일자리 비중 지속적 확대 추진('19년 17.5%→'21년 18.8% →'22년 19.8% 목표)

〈표 3-24〉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 과제의 주요 성과

(단위: %, 만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전체 노인일자리 사업 내 민간형 일자리 비중(%)	17.5	-	18.8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만 명)	2	3.7	5.5

3. 건강 보장 분야

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 **(과제구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등에 관한 5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 **(평가결과)** 총 5개 과제 중 최종등급 '정상추진' 4개, '개선필요' 1개로 평가
 - 2개 과제에서 2개의 세부항목이 '개선필요'로 평가
 - 외부지적 관련 대응 및 개선조치 필요, 성과지표의 연관성 및 대표성 보안을 위한 지표 개선

〈표 3-25〉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영역 평가결과(종합)

(단위: 개)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정상추진	5	5	4	4
개선필요	0	0	1	1

〈표 3-2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부처	등급
3-1	치료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 및 관리강화	복지부	정상추진
3-2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	복지부	정상추진
3-3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	복지부/금융위	정상추진
3-4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	복지부	개선필요
3-5	일차의료의 기능강화	복지부	정상추진

□ 주요성과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비급여의 단계적 급여화

- (건강보험 적용 확대)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21.4.), 심장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21.9.) 등 국민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로 지원건수 및 지원금액 20% 이상 증가 추세

〈표 3-27〉 복지부의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 과제의 주요 성과: 제도화 이후 재난적 의료비 지원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지원건수	11,142	13,476	16,913
지원금액	25,912	34,076	44,644
1인당 평균 지원금액	2.3	2.5	2.6

자료: 보건복지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특히 취약계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고, 지원한도를 확대(11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
 - 전체 지원금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국민에게 81.7% 지원('21.12월 기준)

○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 (신포괄수가 개선) 신포괄수가제의 지불제도로써의 타당성을 높이고, 확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방향으로 모형 개선
- (만성질환관리)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만성질환자에 대한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확대

- 전년도 대비 참여지역 1.5배(75→109개), 환자등록의료기관 1.6배(1552→2,459개), 참여 환자수 2.0배(22만→44만명) 확대

나. 필수의료 보장

□ **(과제구성)**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및 필수 중증의료 제공 강화,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체계 강화, 신종감염병 의료대응체계 고도화,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등에 관한 11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 **(평가결과)** 총 11개 과제 중 최종등급 ‘정상추진’ 9개, ‘개선필요’ 2개로 평가

○ 5개 과제의 7개 세부항목이 개선필요로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중단, 세부추진 미이행 및 공모저조 등의 사유로 인한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성과목표 미달성

〈표 3-28〉 ‘필수의료 보장’ 영역 평가결과(종합)

(단위: 개)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정상추진	11	7	10	9
개선필요	0	4	1	2

〈표 3-29〉 ‘필수의료 보장’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부처	등급
3-6	권역·지역 책임의료체계 마련	복지부	정상추진
3-7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	복지부	개선필요
3-8	지역별 응급이송 체계 구축	복지부	정상추진
3-9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복지부	정상추진
3-10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복지부	정상추진
3-11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	복지부	정상추진
3-12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른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복지부/질병청	정상추진
3-13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 구축	질병청	정상추진
3-14	분만취약지 지원강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	복지부	정상추진
3-15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 장애인화 검진기관 확대	복지부	개선필요
3-16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보훈처	정상추진

□ 주요성과

○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및 필수 중증의료 제공 강화

- (책임의료기관 확대)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연계 강화를 위해 책임의료기관 확대

(권역 +3개, 지역 +6개)하여 공공의료 협력체계 구축

- ('20) 권역 12개소/4억, 지역 29개소/24억→('21)권역 15개소/5.3억, 지역 35개소/3.7억
- (지역외상체계 구축) 지역외상체계 구축 시범사업 정책연구 추진
 - 강원 2차년도 완료('21.6)→3차년도 착수('21.7.), 인천 및 제주 1차년도 완료('21.6.)→2차년도 착수('21.7.)
 - 병원전단계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21.12.10)
- (외상진료의 질 향상) '21년 권역외상센터 평가 결과: 내원환자 진료개시 평균 소요시간 단축('19년 8.6분→'20년 6.9분→'21년 6.7분), 대량수혈 개시 소요시간 단축('19년 26분→'20년 23분→'21년 22분, 중앙값)
- (지역 심뇌혈관센터) 119구급대, 책임의료기관 등 지역 내 의료 인프라간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한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추진 모형 개발('21.12.),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

○ 빈틈없는 감염병 예방·감시·대응체계 강화

- (공공병원 확충) 신종감염병 환자 발생 대비 독립된 감염병 전문병동 건립, 공중보건위기상황 대비를 위해 권역 감염병전문병원('21년 4개소) 확대 구축
 - ('17) 1개소→('20) 2개소→('21) 1개소
- (역학조사관 교육) 중앙 및 지자체 역학조사관 확충에 따른 교육 과정 증설 운영 및 이수 인원 확대
 - (교육과정) '20년 13회→'21년 18회, (이수인원) '20년 416명→'21년 668명

○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 (의료불균형 해소) 분만취약지 지원(40→49개소), 소아청소년과 의료취약지 지원(8→9개소),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지원(5개소) 등 의료불균형 해소 추진, 중증 소아 단기돌봄센터 1개소 설치 관련 부지 매입 및 설계 등 제반절차 추진으로 돌봄기능 강화
- (장애인화 의료서비스) 공급자·수요자 인센티브 제고 개선사항을 포함한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 시행('21.9.), 장애인화 검진기관 '21년 3개소 지정
- (국가유공자 지원) 재활센터 확충(광주·부산 완공, 대구 설계, 대전 착공), 심리재활서비스 운영(실인원 1,564명, 프로그램 8,533건 제공)

다.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 **(과제구성)**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건강 위험요인 관리,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등에 관한 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 **(평가결과)** 8개 과제 중 '정상추진' 7개, '개선필요' 1개로 평가

○ 4개 과제의 5개 세부항목에서 개선필요로 평가

- 예산 미확보 및 추진기관 미선정, 이행 미흡 등에 따른 예산집행 저조와 성과목표 미달성

〈표 3-30〉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영역 평가결과(종합)

(단위: 개)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정상추진	8	5	8	6
개선필요	0	3	0	2

〈표 3-31〉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 구축'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부처	등급
3-17	건강생활지원센터(주민건강센터) 확충	복지부	정상추진
3-18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	복지부	정상추진
3-19	금연 대책 강화	복지부	정상추진
3-20	음주폐해 예방 및 중독관리 대응체계 강화	복지부	정상추진
3-21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	복지부	개선필요
3-22	환경오염피해 구제 강화	환경부	정상추진
3-23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시·도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복지부	정상추진
3-24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	복지부	정상추진

□ 주요성과

○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

- (주민건강센터 확충) 건강생활지원센터 21개소 확충
 - ('19) 11개소(누적 77개소)→('20) 26개소(누적 103개소)→('21)21개소(누적 124개소)
-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 운영(53개소, 10월~)

○ 건강 위해요인 관리

- (금연구제 정책)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캠페인 적극 추진 및 신종담배에 대한 건강 증진부담금 부과 근거 마련
 -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유사제품 관리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범위를 확대하고('21.8월) 담배의 구분 정의 확대 및 개선을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개정함('21.12월)
- (음주폐해 예방) 법·제도 개선, 음주조장환경 개선 및 절주실천 유도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공포 '21.06.15., 시행 '21.06.30.)으로 주류광고 금지 매체·장소 확대
 - 개정법을 반영한 주류광고 준수사항 안내서 제작·배포, 주류업계 대상 안내·계도 지속 수행

→ 개정법 시행 이후 증가한 주류광고 위반율 감소 및 주류광고 위반사례 시정조치율 100% 달성('21.10. 기준)

- 공익광고 송출, 국민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운영 등의 홍보 활동과 음주폐해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산 등의 교육 활동을 통해 음주폐해예방실천율 43.35% 달성('20년 실적 35.88%)
- (환경오염피해 구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거주가구 1,411개소, 경로당·장애인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345개소 등 총 1,756개소 실내환경 진단·컨설팅 실시, 친환경 벽지·바닥재 교체, 공기청정기 설치 등 실내환경 개선(가구 및 시설 553개소), 환경성질환자 진료 지원(303명)

○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관리체계 구축

-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정신건강복지센터 확대 및 전문인력 충원
 -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7) 243 → ('21) 260 → ('22) 271개소 (+11개소) 확충계획, (신규충원) ('17)370→ ('18)130→ ('19) 290 → ('20)580→ ('21)205 → ('22) 300명 계획, 누적 1,875명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전국확산 실현(마음안심버스, 청년 등 생애주기별 마음건강사업, 청년 정신건강 조기중재센터 등)

〈표 3-32〉 복지부의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시·도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과제의 주요 성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사업사업 참여 시도

연도(시도수)	'19년(1개)	'20년(누적 7개)	'21년(누적 12개)	'22년(누적 17개)
참여 시도	광주	+ 부산, 대전, 경기, 전남, 경북, 제주	+ 인천, 강원, 충남, 전북, 경남	+ 서울, 대구, 울산, 세종, 충북

자료: 보건복지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마음안심버스 전국시도 신규배치 달성) 적극적인 현장의견 수렴·반영, 추경예산(10.5억원) 확보 노력 등을 통해 당초 8개 시도 대형 8대 계획보다 많은 17개 전국 시도 27대 배정완료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이용자수 대폭 확대(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감 해소 적극 대응)
 - 월평균 이용건수 ('20) 16,706건 → ('21) 19,281건, 연간 누적 이용건수 ('20) 200,472건 → ('21) 추계 231,372건(전년대비 12%↑), 야간시간대 이용자 비율 ('20) 62% → ('21) 66%
- (자살예방)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77개소) 추진 및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연계 활성화를 위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 자살예방 상담전화 인력 확충('20년 26명→'21년 57명), 자살예방센터 2022 통일·대북 정책 분야 사회적 합의 형성 관련, 전문가 플랫폼 위탁 용역 과제전담인력 인건비 확보('20년 207명, '21년 260명으로 총 467명)

4.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가. 생애주기별, 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 **(과제구성)** 노인, 장애인, 아동,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확충 등에 관한 8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 **(평가결과)** 8개 과제 중 최종등급 '정상추진' 8개로 평가

○ 2개 과제의 2개 세부항목 개선필요로 평가

- 사업실적 관리 개선 및 사업 성과 반영을 위한 성과지표로의 개선 필요

〈표 3-33〉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영역 평가결과(종합)

(단위: 개)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정상추진	8	8	7	7
개선필요	0	0	1	1

〈표 3-34〉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부처	등급
4-1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통합적 재가서비스 강화	복지부	정상추진
4-2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복지부	정상추진
4-3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	복지부	정상추진
4-4	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복지부	정상추진
4-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강화	여가부	정상추진
4-6	공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복지부	정상추진
4-7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산자부	정상추진
4-8	저소득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	문체부	정상추진

□ 주요성과

○ (노인)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 단기보호서비스 인프라 확대 및 이용 활성화로 재가 수급자 가족의 수발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 위한 주·야간보호서비스에 단기보호 기능 결합한 '단기보호서비스 제공모형'을 개발, 시범사업 실시

-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비중 '20년 73.9%→'21년 75.3% (OECD 평균 75%)

- 256개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이용자 수 지속 증가
 - 2018년 이용자수 176만명에서 2021년 399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
-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 57개소 설치·운영 및 치매안심병원 7개소 지정
-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공공후견사업**’ 전국 확대 시행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시범사업 시행(치매안심마을 2017~2018년, 치매공공후견 2018년) 후 2019년 전국 확대 시행
 - *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664개 마을 조성('21)
 - ** 적절하게 돌봐주는 가족 등이 없는 치매환자에게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21년 말 기준 249명의 치매노인에게 공공후견인 지원)

○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로 사각지대 해소

- 이용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인 서비스 도입을 통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강화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조건을 보다 유연화하여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및 돌봄 지원체계 강화
 - 주간활동서비스: 공동생활가정 등 이용자 및 단기근로자 이용 허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초등학생까지 이용 대상 확대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인 서비스 도입을 통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강화

○ (아동) 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중심 통합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 (보호종료아동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매월 30만원) 지급기간 지속 확대('19년 보호종료 2년 이내 → '20년 보호종료 3년 이내 → '21.8월 보호종료 5년 이내), 주거지원 대상자 확대('19년 7개 시도, 240명 → '20년 10개 시도, 360명 → '21년 10개 시도, 377명), 보호(종료)아동 심리상담 서비스('20년 50명 → '21년 100명 지원) 제공
-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일하는 한부모와 청소년 한부모 등의 안정적 생활 위한 예산 지원 확대, 저소득 한부모·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한부모지원 예산: ('20) 2,615억 원 → ('21) 3,067억 원 → ('22) 4,213억 원
 - 아동양육비 인원: ('20) 13.6만 명 → ('21) 18.7만 명 → ('22) 약 21만 명(추정)
- (아동보호체계 절차 표준화 안전망 확충)시군구별 사례결정위원회 출범('21.6.30)으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자체 책임 공고화
 - 기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전문가 중심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아동의 보호

조치 및 퇴소조치 심의 의무화(개정 아동복지법), 제도시행('21.6.30~) 이후 229개 시군구 전부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완료(100%)

- 위원회를 통해 시설보호보다 가정형 보호 결정을 우선할 수 있고, 아동 상황을 고려한 보호 조치 결정 가능, 보호조치 후 분기별 양육상황점검 수행,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아동 중심의 원가정복귀 추진
- (아동보호체계 안착)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
 - ('20.10월) 334명 배치완료→ ('21.10월) 190명 배치중 → ('22.10월) 191명 배치예정: '20~'22, 최종 715명 배치
 - 아동보호전담요원 1인당 담당아동 : '20년 126명 → '21년 80명 → '22년 59명

○ (취약계층) 에너지 부담완화 및 문화·예술 체험기회 확대

- (에너지바우처 지원확대) 에너지가격 상승세, 실제 전기요금 사용량, 유가 상승 등을 고려, 세대당 평균 지원금액 확대('20년 11.6만원 → '21년 12.7만원(동절기 1.1만원 ↑)), 지원대상 확대*
 - *지원대상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인 외국인을 세대원에 포함,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전면 폐지('21.10월~)로 신규대상자 약 18.7만 세대에 에너지바우처 신규지원(21,796백만원 추정확보)
- (문화향유 기회확대)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 및 수혜 인원 확대*, 제도개선**을 통한 수혜인원 확대('20년 3,289명 → '21년 6,184명, 88.1% 증가) 및 등록시설 추가 확보('20년 887 → '21년 1,612개소, 81.7% 증가)
 - * ('20년) 1인당 9만 원, 175만 명 → ('21년) 10만 원, 197만 명(추경을 통한 예산증액 통해 당초 계획 177만 명보다 20만 명 추가 지원)
 - ** (기존) 12~49세 저소득 장애인 → (개선) 만12~64세 저소득 장애인+만19~64세 비저소득 장애인

나.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 **(과제구성)**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도입 등에 관한 6개의 세부 과제로 구성

□ **(평가결과)** 총 6개 과제 모두 최종등급 '정상추진'으로 평가

○ 1개 과제에서 1개의 세부항목이 개선필요로 평가

- 사업관리에 대한 실적 제시 미흡

〈표 3-35〉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영역 평가결과(종합)

(단위: 개)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정상추진	6	6	5	6
개선필요	0	0	1	0

〈표 3-36〉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부처	등급
4-9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및 모델개발	복지부/행안부	정상추진
4-10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인프라 확충	복지부	정상추진
4-11	병원과 지역 간 협력으로 퇴원·지역연계 강화	복지부	정상추진
4-12	방문의료 제공 및 재가 의료급여 도입	복지부	정상추진
4-13	장애인 종합관정도구 도입 및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복지부	정상추진
4-14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	복지부	정상추진

□ 주요성과

○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델 개발 및 인프라 확충

- 노인, 장애인 등 대상 유형과 관계없이 다양한 종합적 돌봄 수요에 대응하는 통합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9년 6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
 - 지역의 다양한 기관, 중앙의 다양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사업이므로, 협업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16개 선도사업 지자체, 보건·의료·복지·주거 등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 5개 중앙부처)
 - 16개 지자체에서 22,875명에게 1인당 평균 3.7건의 자원을 통합 제공('21.10월)
- 지역별 케어안심주택(주거지원+돌봄) 확대 추진 방향 마련, 주민건강센터 지속 확충('19년 77개소 → '20년 119개소 → '21년 161개소(누적)), 종합재가센터 운영 확대('20년 25개소 → '21년 30개소)

○ 지역사회 중심 보건의료-돌봄·요양 서비스 연계 제공

- 퇴원환자 시기별(급성·회복·유지기) 지역사회 연계 의료·돌봄 서비스 제공 확대를 통해 복귀 지원
 - (급성기 시범사업) 기존 급성기 의료기관 13개소, 재활의료기관 36개소→급성기 의료기관 17개소, 재활의료기관 39개소, 요양병원 53개소로 참여기관 확대로 연계 등이 필요한 환자에게 더 많은 서비스 제공 가능
 - (회복기 시범사업) 회복기(1~6개월)동안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보장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초기에 일상생활로 복귀를 유도, 대상질환 및 지역사회 연계수가 확대방안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지속 검토
 - (유지기) 요양병원 환자지원팀 설치 확대 및 퇴원환자지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육프그

램 고도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제도활성화를 위한 지속 검토

-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신규 추진(‘20.8월~) 및 3차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참여 지역 확대(13개→38개)

○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도입

-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및 단계적 적용범위 확대’라는 기본계획의 3단계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소득·고용서비스 분야 판정체계 마련(‘22년)을 위하여 정책 협의체 구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협업체계 구축
- 뚜렛, 기면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로 탈시설 로드맵 발표 및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행 준비

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과제구성) 국공립 돌봄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사회서비스 제공거점, 인력양성 및 품질관리 강화 등에 관한 6개의 세부과제로 구성

□ (평가결과) 총 6개 과제 모두 최종등급 ‘정상추진’으로 평가

○ 2개 과제의 2개 세부항목에서 개선필요로 평가

-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사업수요 감소로 예산 집행률 저조, 각종 외부 요인으로 인한 계획 대비 공급물량 부족으로 예산 집행률 저조

〈표 3-37〉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영역 평가결과(종합)

(단위: 개)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정상추진	6	4	6	6
개선필요	0	2	0	0

〈표 3-38〉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부처	등급
4-15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복지부	정상추진
4-16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부	정상추진
4-17	주거급여 강화	국토부	정상추진
4-18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복지부	정상추진
4-19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복지부	정상추진
4-20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복지부	정상추진

□ 주요성과

○ 국공립 돌봄시설 및 공공임대주택 지원 확대

- (공공보육 강화) 국공립어린이집을 다양한 방식으로 515개소(신축 48, 매입 12, 리모델링 427, 장기임차 26) 확충하여 공공보육이용률 확대

〈표 3-39〉 복지부의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 과제의 주요 성과

(단위: 개소)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개소 수	654	581	515

자료: 보건복지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공공임대 확대) '18~'21년까지 연평균 14만호를 공급하여, 공공임대주택 70.2만호('18~'22년) 공급 계획 차질 없이 이행 중이고, 누적 공급량으로는 22년까지 70.2만호 초과 달성 전망
- (주거급여 지원 강화)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수준 단계적 상향을 통하여 주거급여 대상 및 보장 수준 강화**

*('19) 중위소득 44%(4인가구 203만원) → ('20) 45%(213.7만원) → ('21) 45%(235.6만원)

** (수급자) '18.12 94만 가구 → '19.12 104만 가구 → '20.12 118.9만 가구 → '21.12 127.3만 가구

〈표 3-40〉 국토교통부의 '주거급여 강화' 과제의 주요 성과

(단위: 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주거급여 월평균 수급액	13.4	15.4	16.8

자료: 국토교통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사회서비스 제공거점, 인력양성 및 품질관리 강화

- (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21.9.24)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 14개소 설치(11개소→14개소),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을 통한 코로나19 돌봄 위기 극복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일자리 6.2만개 신규 발굴

〈표 3-41〉 복지부의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과제의 주요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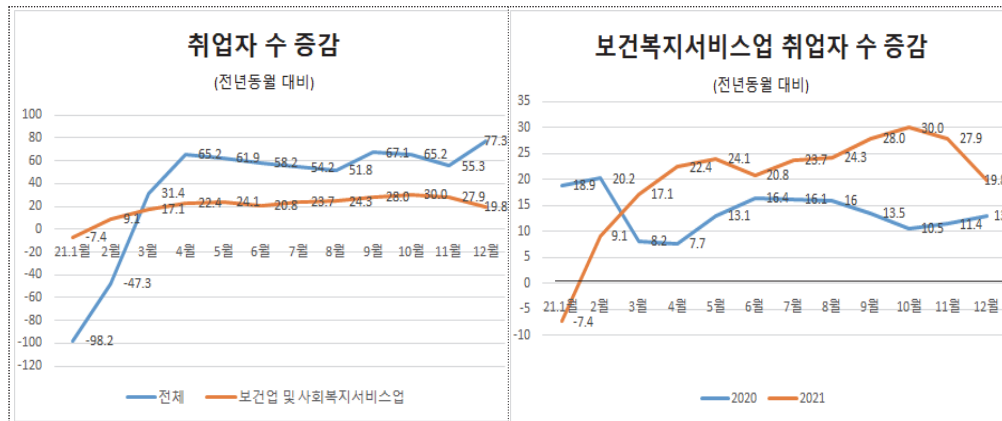
(단위: 만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3.7	9.3	9.0	6.2

자료: 보건복지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21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2,534천명으로 전년 대비 198천명(8.5%) 증가하여 전체 취업자 증가의 53% 차지
- 전반적인 고용 정체에도 불구하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안정적 고용 형태를 보이며 취업 전인 역할

[그림 3-10] 전체 및 보건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



자료: 보건복지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종사자 처우개선) 교대인력 확충으로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대체인력 지원을 통한 종사자 부담완화
- ('20년: 50인 이상 시설만 주52시간제 적용) 종사자 50~299인 시설 197억원, 829명 확충 (장애인거주시설 723명, 정신요양시설 34명, 노숙인시설 72명) → ('21년: 50인 미만 시설로 주52시간제 확대) 종사자 5~49인 시설 376억원, 3,093명(장애인거주 2,423명, 정신요양 308명, 노숙인 40명, 노인양로 246명, 학대피해아동쉼터 76명)
- 대체인력 지원 건수 : ('18)11,134건→('19)22,987건→('20)22,778건→('21)29,057건

5. 추진기반 분야

가. 사회투자 확대

- **(과제구성)**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 강화 추진,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등에 관한 4개 세부과제로 구성
- **(평가결과)** 총4개 과제 중 최종등급 '정상추진' 4개로 평가
 - 적절한 사업추진으로 4개 과제의 모든 세부항목 정상추진

〈표 3-42〉 '사회투자 확대' 영역 평가결과(종합)

(단위: 개)

구분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정상추진	4	4	4	4
개선필요	0	0	0	0

〈표 3-43〉 '사회투자 확대' 영역 평가결과(세부 과제별)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부처	등급
5-1	지역사회 서비스 종합 안내를 위한 읍면동 기능 강화	복지부/행안부	정상추진
5-2	공공센터 간 연계 강화 및 지역 거점기관 구축	복지부	정상추진
5-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보장 빅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복지부	정상추진
5-4	행정 빅데이터 간 연계성 제고	복지부	정상추진

□ 주요성과

○ 사회보장 이용체계의 연계성 강화 추진

-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달팀 설치 총 3,312개소, 12,723명 배치(공무원 11,813명, 민간인력 910명)

〈표 3-44〉 보건복지부-행안부의 '지역사회서비스 종합안내를 위한 읍면동 기능강화' 과제의 주요성과

(단위: 개소, 명, 만건)

구분	'19년	'20년	'21년
전담팀 수(개소)	2,911	3,197	3,312
전담팀 인력배치(명)	10,556	12,633	12,723
찾아가는 복지 상담(만건)	382	396	422
민관복지서비스 연계 지원(만건)	431	433	490

자료: 보건복지부-행안부 추진실적 내부자료

- 읍면동 통합돌봄창구(보건·복지·돌봄 등 통합 접수·상담, 서비스 연계) 강화 등 지역 주도의 사회보장 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주민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회보장 전달체계 효율화

- 10개 시군구 대상 2차년도 전달체계 시범사업 추진

○ 차세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정책 분석의 과학화

- 공적자료를 통한 누락 서비스 안내를 위한 복지멤버십 서비스 '21.9월 도입 후 총 29,6만 가구가 36.4만건의 복지서비스를 새롭게 수혜받는 등의 성과를 달성
- 국내 최초로 범부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의 정책 연구용 데이터 구축 추진으로 향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플랫폼으로서 정책 설계 및 평가 연구의 근거자료를 공동 활용 가능한 체계 마련

제4절 우수과제와 미흡과제

1.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우수 과제

가. 우수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과제

□ 202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아래 총 4개가 우수 과제로 평가

〈표 3-45〉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 등급 과제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부처
1-5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교육부
1-6-2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여가부
1-31	아동수당 확대	복지부
2-12	퇴직연금의 기능강화	고용부

○ 우수 등급 기준: 필수조건 모두 '정상'인 경우 중 사업 우수성이 2개 이상 인정된 경우

- 우수 등급 기준 -

□ 필수조건: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 수준 지표 모두가 '정상'인 경우 중

□ 사업 우수성

○ 주요 성과 인정

- 과제 추진에 따라 나타나는 성과 위주로 작성하며, 시행계획 과제에 국한되지 않고 기본계획 과제 자체와 연관된 사항을 기술한 경우
- 주요 법령 제·개정, 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 과제의 추진실적에 따른 정책성과 및 효과와 기존 문제를 해결한 결과 등을 기술하되, 구체적·객관적인 통계 데이터를 적극 활용
- 정책 성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의도한 변화가 초래된 정도를 기술

○ 사업관리의 적극성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업점검, 협업체계 구축·운영 등 다각적 사업관리를 통해 과제 추진의 적극성이 확인되는 경우
- 사업 환경 변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응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책 마련 및 이해관계자 조정 등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한 경우

○ 외부 지적에 대한 적극적 조치

- 국회, 내·외부 감사, 외부 평가, 언론 등의 지적에 대책 마련 및 추진

○ 성과지표의 대표성, 결과성, 도전성이 모두 인정

- (대표성)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성, 성과지표가 정책내용을 부분이 아닌 포괄적으로 대표하고 구체적인지 여부, 정책내용과 성과지표의 직접 연관성 여부
- (결과성) 성과지표가 결과지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 (도전성) 성과 목표치가 해당 부처의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도전적으로 설정되었는지를 점검

나. 세부 과제별 선정 사유

〈표 3-46〉 세부 과제별 선정 사유

구 분	필수 조건	사업 우수성			
		주요성과	사업관리적극성	외부지적조치	성과지표
대학등록금 부담경감	○	○	○	○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	○	○		○
아동수당 확대	○	○	○	○	
퇴직연금의 기능강화	○	○	○		

□ 대학등록금 부담경감(1-5, 교육부)

- **(사업 목적)** 대학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등을 통한 가계의 교육비 부담 완화
- **(주요 성과)**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 비율 지속적 확대,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에 기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에 대해 가구원 수를 반영하는 소득산정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 제고,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통해 ICL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도출해낸 점을 우수하게 평가
 - 대학생 100.9만명에 33,441억원(1인 평균 331.3만원)의 국가장학금을 지원, 특히 총 재학생 대비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사립대 평균등록금 절반(386만원) 이상 지원(재학생 대비) : ('18) 30.6% → ('19) 31.5% → ('20) 32.1% → ('21) 32.1%
 -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 8.2천명에게 국가장학금 II유형 추가 지원(등록금의 10% 추가지원)*, '21학년도 2학기부터 보호종료아동**을 국가장학금 II유형 우선지원 권장대상에 포함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 '21.1학기 8,210명, 1인 평균 49만원/ 2학기 6,665명, 1인 평균 41만원
 -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되어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 중인 아동 중 만 18세가 되어 아동양육시설을 떠나야 하는 아동
 - 학자금대출금리 인하(1.85%에서 1.7%로 인하),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등 일반대출자와 취약계층을 고루 배려한 상환부담 경감 방안 시행. 상환부담 완화 방안을 확대하는 한편, 상환을 개선을 위해 ICL 장기미상환자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대출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 추진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 및 혜택 확대 근거 마련

○ **(사업관리 적극성)** 교육부, 국세청, 장학재단의 ICL 상시협의체 운영 및 교육부, 금융위, 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체결을 통해 다중채무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업 노력 인정

- 유관기관과의 적극적 협업을 통해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 경감방안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청년채무자의 생활안정 지원
- 통합채무조정 방안 마련('21.11월), 대학원생 ICL 도입방안 마련('21.12월)

○ **(외부 지적 대응)**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가구원 수를 반영하는 소득산정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 제고하는 등의 조치 및 개선 노력 인정

□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 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1-6-2, 여가부)

○ **(사업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 상담·교육·진로·자립·건강 지원 등을 제공하여 건 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주요 성과)**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을 개정 및 시행하여 사 각지대 해소, 인프라 지속적 확대

-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1:1 초기상담을 수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
- 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전동의 절차를 사후동의도 가능토록 학교밖청소년지원법 개정 (3월), 시행(9월)
- 인프라 및 서비스 지원의 지속적 확대
- 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원센터 확대('20년 219개소 → '21년 220개소) 및 다양한 활동이 가 능한 전용공간(학습·상담·직업·진로체험공간) 조성 확대('20년 20개소 → '21년 34개소)
- 검정고시 대비반 운영, 꿈드림멘토단 학습지원, 원격강의·인터넷 수강권 지원, 꿈이음 연 계 강화
- 직업역량강화프로그램(9개 시·도) 및 내일이룸학교(13개 과정) 운영, 건강검진 지원(6,148명)

○ **(사업관리 적극성)** 종사자, 당사자,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 현황 분석에 반영, 이 행점검 및 부처 협의, 법률 개정 추진, 업무 협약 등 적극적 사업 관리 예상치 못한 코 로나19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 지원 강화 및 서비스 다양화 등 지속적·적극적 사업 개선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 지원 강화 및 서비스 다양화 등으로 만족도 향상
- 만족도 조사 결과 : ('20년 92.1점 → '21년 92.4점(0.3점↑))
- 일반국민 대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홍보 강화, 권리보장 및 사회적 인식개선 도모
- 유튜브, TV 광고 등을 통한 학교밖청소년 인식개선 및 지원센터 홍보, 각급 학교에 '학

교 밖 청소년 지원 안내서' 제작·배포(14만부, 교육부 협업) 등

- **(적극적·실질적 성과지표 적용 및 관리)** 성과지표는 학업복귀 및 취업률 측정하는 결과지표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선정 및 적용, 관리하고 있으며, 상향조정된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달성

- 지속적·적극적 사업 개선 노력으로 목표치 초과달성
 -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 ('20)38.5%→('21)41.4%
 - 검정고시 합격률: ('20)10,858명→('21)11,366명
 - 대학 진학: ('20)1,506명→('21)2,166명
 -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훈련을 지원하는 내일이룸학교 훈련생의 취업률 ('20) 48% → ('21) 59.8%(24.6%↑) 자격·학력 취득률('20) 108%→('21) 196%(81.5%↑)

□ 아동수당 확대(1-31, 복지부)

- **(사업 목적)**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
- **(주요 성과)**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급대상 연령 확대 실현함에 따른 아동양육 부담 완화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점에서 우수성 인정
 -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급대상 연령 확대 실현, '22년 아동수당 연령확대(만 7세 → 만 8세 미만 아동)를 위해 아동수당법 개정(12월). '22년 정부 예산안에 8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여 예산 반영
 - ('19) 만 6세 미만 →('20)만 7세 미만→('21)만 7세에서 만 8세 미만인 아동에게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 **(사업관리 적극성 및 외부 지적 대응)** 아동수당 과오지급 사례 발생 등 부정적 수급/집행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247만명에게 매월 10만원 지급. 아동수당 지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산 집행 점검(시기별 공문 시행). 해외체류 아동 환수등록 매뉴얼 제작. 아동수당 지급정지 및 환수 대상 명단을 지자체에 반기별 1회 제공

□ 퇴직연금의 기능강화(2-12, 고용부)

- **(사업 목적)**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퇴직급여제도 적용대상 확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
- **(주요 성과)** 약 10년간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된 것은 본 사업의 큰 성과이자 우수한 점
 - 10년 만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21.4.13)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 후 노후를 폭넓게 보장하여 중층적 고용안전망 체계 구축,

- 공적퇴직연금 서비스(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제공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 **(사업관리 적극성)** 제도 도입 과정에서 협의회 추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역시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수한 점으로 평가

- 퇴직연금발전협의회를 통해 공적 퇴직연금제도(30인 이하 중소기업 기금형) 도입에 따른 민간퇴직연금사업시장 위축 우려에 선제 대응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 등 준비상황 점검,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 및 예산 확보 상황 지속 점검
-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합동 추진단 발대를 통해 온·오프라인 정기회의 및 워크숍 진행 등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업무프로세스 조정 및 하위법령 마련

2.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미흡과제

□ 2021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아래 총 6개 과제가 개선필요 과제로 평가

〈표 3-47〉 개선필요 과제

과제번호	세부 과제명	현황 진단
1-3-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교육부)	- 예산 미집행 및 성과 저조
1-23	출산급여 신설을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고용부)	- 사업환경 변화 등으로 예산집행 부진 및 성과 저조 · 연례적 실적 저조 ※ '19, '20, '21 미흡과제
3-4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복지부)	- 외부지적 대응 등 사업관리에 있어 개선사항 미흡
3-7	국립공공의과대학(원)설립추진(복지부)	- 근거법령 미제정으로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 없음 ·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 '20년, '21년 미흡과제
3-15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복지부)	- 예산집행 부진 및 성과 저조 · 연례적 실적 저조 ※ '19, '20, '21 미흡과제
3-21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복지부)	- 추진실적 이행 미흡 및 성과목표 미달성

□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과제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부처 자체평가 자료와 기타 자료(국회 예결산, 감사원, 언론, 정책 보고서 등)를 통하여 일차 파악한 이후, 사업 담당자들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컨설팅 수행

○ (방향) 과제 수행 부처의 '23년 시행계획 수립, 성과목표 설정 방법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내용) 개선필요 사항에 전문가의 개선요인 진단 및 방안 제시

- 과제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진단을 통한 문제점 도출
- 문제점 도출에 따른 개선요인 도출 및 방안 제시

○ (방법) 성과개선 계획서, 과제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대면(영상) 또는 서면으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설명

- (컨설팅 방법) 개선 사유가 명확한 과제의 경우 서면으로, 문제점 식별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대면으로 선정

〈표 3-48〉 컨설팅 방법

과제명	소관부처	컨설팅 방법 & 사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교육부	대면 컨설팅 ○ 사업 추진 부진의 원인으로 공간확보 문제 및 이해관계자들 간 합의 도출 실패 ○ 본 사업 특성상 이해관계자 간 이견 대립 등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사유임에 따라 근본적인 문제점 식별 필요
출산급여 신설을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고용부	대면 컨설팅 ○ 본 사업의 예산집행 및 성과 저조 원인으로 출산율 저하 등 사회환경 변화를 원인으로 인지 ○ 그러나 최근 육아휴직률의 증가 등을 고려하면 사회환경 변화 외의 추가 문제점 식별 필요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	복지부	서면 컨설팅 ○ 외부지적 대응 등과 관련한 사업관리체계 미비라는 개선 사유가 명확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	복지부	추진실적 없음에 따라 컨설팅 제외 ○ 근거법령 미제정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 장애 친화 검진 기관 확대	복지부	서면 컨설팅 ○ 외부 지적('22년 예산안 검토보고) 등으로 문제점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 ○ 예산집행 부진 및 성과 미달성의 원인 및 개선 사유가 명확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	복지부	서면 컨설팅 ○ 예산 미확보 및 추진기관 미선정에 따른 대책 이행 미흡으로 원인 및 개선 사유가 명확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1-3-1, 교육부)

〈표 3-49〉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최종등급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개선필요	정상추진	개선필요	정상추진	정상추진

○ **(사업 목적)** 온종일 돌봄정책('18.4.)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확충 및 마을돌봄 확충을 통한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확대 추진

○ **(현황 진단)** 예산집행과 사업성과에 있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음에 따라 '개선필요' 등급으로 판정

-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대응하여 초등돌봄교실, 학교돌봄터, 마을돌봄기관을 지속 확충하

고 있으나, 공간 확보 문제, 이해관계자 간 이견 대립 등으로 일부 예산 미집행(시설확충 등 관련 예산 집행률 63%)

- 기제출 시행계획에 따르면 성과목표치는 30.4만명이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목표치 조정, 29.6만으로 하향조정하여 99.7%를 달성

○ **(문제점 진단)** 정밀한 수요 추정을 근거로 한 예산 배분 및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점

- 2018년 국정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할 당시 시도교육청 단위 조사에 근거하여 성과 목표치를 작성함. 이는 단위학교의 실수요와 차이가 있음.
-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하면 20년 이후는 예산 및 목표치 관련 수정이 필요했으나, 현실적으로 여러 복합적 요인으로 인해 쉽지 않았고 실제 집행과 현실의 괴리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 권고사항 1)**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면밀한 수요분석과 다부처사업의 특징을 고려할 때 타 부처 전달체계의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아동 인구의 절대적인 규모와 아동 관련 인프라의 접근성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함.
- 아동 인구가 감소한 지역에서는 단위 학교에서 유휴교실을 확보하기 용이하지만, 아동인구가 증가하거나 밀집한 지역에서는 유휴교실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매년 초등돌봄교실을 설치할 의도가 있는지를 조사(4월)하여 차년도 예산(안)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특성 고려 및 면밀한 수요분석이 없는 상태에서 유휴교실의 총량을 가능성에 기반함으로 당초 유휴교실 확보가 실현 불가능한 목표치였을 수도 있음.
- 향후 이와 같은 사업의 추진 시 수요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가 공급을 계획하는 것이 적절하며, 중기적인 가수요는 매년 집행단계에서 '신청'을 통해 실수요로 전환하여 목표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당초 목표치를 감축 조정하면 실수요를 바탕으로 예산을 감액조정하는 것이 적절함.

○ **(개선 권고사항 2)**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사업 관련 현장 점검 필요

-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취합한 교실 수와 이용 현원을 바탕으로 성과목표 달성을 제시하였으나, 정부24 홈페이지 등에서 제시한 수치와 차이가 있음. 학부모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시설 확충사업에 대한 실질 이용, 이용 현원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이 필요함. 또한 초등돌봄교실 시설확충에 대한 집행 부진의 원인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개선 권고사항 3)** 유관부처를 비롯하여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과 조율을 위한 적극적·지속적 노력 필요

- 한편으로 돌봄노조와 교원단체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돌봄교실 확대 및 예산 집행상의 실적 저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대립으로 인프라 확대에 있어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

했고, 21년도의 경우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원인으로도 작용

- 학교는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돌봄장소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교육부의 적극적·지속적 노력을 통해 조속히 협의를 이루어 돌봄교실 확충 관련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함.

□ 출산급여 신설을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1-23, 고용부)

〈표 3-50〉 출산급여 신설을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최종등급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개선필요	정상추진	개선필요	정상추진	개선필요

주: 2019년, 2020년 개선필요 등급

- **(사업목적)**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일하는 여성’에 대해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출산급여 150만원)하여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 **(현황 진단)**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성과목표 미달성으로 ‘개선필요’ 등급으로 판정
 - 모두 국비로 편성된 '21년 예산의 집행률은 71.5%로 '20년에 비해 30.6% 상승하였다고는 하나, 집행률이 여전히 낮음.
 - 성과지표는 출산급여 수급자 수로, '21년 수급자 수(11,565명)가 목표 인원 대비 69.8%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 **(개선사항)** 낮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목표 미달성의 원인 파악을 통한 예산 및 목표치 조정 권고, 향후 과제 운영에 반영
- **(개선 권고사항 1)** 면밀한 지원 대상 규모 추계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 및 예산 조정이 필요
 - 예산 불용 및 성과 저조의 사유 중 하나로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 및 급격한 출산율 저하 등 사업 환경 변화에 기인한 측면이 있으며, 담당부처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음.
 -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예술인·특수고용직종으로 확대함에 따른 본 과제와의 상충되는 측면뿐 아니라 낮은 출산율 및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지원 대상 규모의 정밀한 추계가 필요
- **(개선 권고사항 2)** 동시에 제도의 본래 취지인 ‘사각지대 해소’ 측면을 적극 고려한 제도 포용성을 넓히는 방향으로의 제도 재설계 필요, 이를 통한 예산 및 목표치 조정 필요
 - 2019년도 사업 신설 당시 낮은 집행률과 성과 저조의 경우 낮은 사업 인지도로 인한 측면 존재, 물론 현재도 이러한 원인으로 인한 결과도 존재하긴 하나 좀 더 근본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함.
 - 초입부터 홍보 부족뿐 아니라 자격요건이 까다로우며, 급여 수준에 비해 높은 지원 문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제도의 과제명이 ‘출산급여 신설을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

소'로 제도의 주목표가 '사각지대 해소'임에도 불구하고 설계 시,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제도 사각지대'를 우선 포괄하고자 한 측면이 있었음. 그러나 현재 변화된 사업 환경으로 2019년 신설 이후 지속적으로 예산 집행률 및 성과 저조한 상황

- 제도의 본래 취지를 고려한다면 예산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예산 조정 및 목표치 조정하는 방안만을 고려하기보다는(물론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에 의한 예산 감액은 불가피하더라도) 제도의 포용성을 넓히는 방향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보호 사각지대 대상을 점차 확대하는 안에 대한 근본적 고민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영세 사업장에서 외적 요인으로 인한 임신전후 퇴직자 등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 포용성을 넓히기 위한 방향으로의 제도 재설계 측면 고려

□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3-4, 복지부)

〈표 3-51〉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 세부지표별 등급

최종등급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개선필요	정상추진	정상추진	개선필요	정상추진

- **(사업 목적)** 신포괄수가제 대상기관 확대,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
- **(현황 진단)** 사업관리에 있어 개선사항 반영 미흡으로 '개선필요' 등급으로 판정
 - 비예산 사업으로 신포괄수가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모형 개선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모형 개선 과정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외부지적 대응과 관련하여 포괄·비포괄 영역 재설정 관련 국정감사에서 지적)과 관련한 외부 지적 대응 관련 내용 누락 등 사업관리에 있어 개선 필요
- **(문제점 진단)** 과제 목표는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으로 '21년까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 및 단계적 확대가 진행될 예정이나 기본계획 종료 시점에 최종적인 결과물이 무엇인지 불분명함.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외부지적 대응, 서비스 질 제고 및 재정 절감 효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 혹은 성과지표가 필요함.
- **(개선사항 1)** 사업의 목표달성 정도를 검토하여 계획 종료시점에 지불제도 개편의 방향에 대한 일차적인 결론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임.
 - **(개선 권고사항 1)**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은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각 제도를 통한 비용 절감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관련 해서 사업시행이 아닌 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지표 설정을 검토할 것을 권고함.

- **(개선 권고사항 2)**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은 재정적인 측면 외에도 환자와 국민의 제도에 대한 인식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도입된 지불제도에 대한 환자와 가족의 인식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본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환자 및 국민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 혹은 협의체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개선 권고사항 3)** 또한 의료기관이 불필요한 서비스는 줄이고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유도했는지,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었는지, 건강결과가 보다 개선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개선사항 2)** 외부 지적대응과 관련해서 포괄·비포괄 영역 재설정이 합당한 근거에 따라 이뤄졌다면 사업 변경 이유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현재 사업이 시범사업임을 고려할 때 다양한 모형을 적용하는 과정이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3-7, 복지부)

〈표 3-52〉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최종등급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개선필요	정상추진	개선필요	개선필요	개선필요

주: 2020년 개선필요 등급

- **(사업 목적)**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양성·공급하고 취약지 등에 배치함으로 보건의료서비스 지역별 격차 해소에 기여
- **(현황 진단)** 근거법령 미제정에 따른 추진실적 미비
 - 의·정 합의('20. 9. 4.)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예정으로 근거법령 미제정으로 집행실적 및 추진실적 없음.
- **(개선 권고사항)** 코로나19 안정화 후 조속한 논의 재개가 필요
 -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나 코로나19라는 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사업 논의 및 진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따로 개선점 및 권고안은 제시하지 않음.
 - 그럼에도 지속적인 법안 쟁점사항 검토 및 수정방향 마련, 국립의전원 설립 관련 이슈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 추진 등 논의 재개에 대비

□ 장애인건강 주치의 도입,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3-15, 복지부)

〈표 3-53〉 장애인건강 주치의 도입,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최종등급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개선필요	정상추진	개선필요	정상추진	개선필요

주: 2019년, 2020년 개선필요 등급

- **(사업 목적)** 장애인건강권법 시행('18.12.)에 따라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친화검진기관 지정 등을 통해 의료 접근성 제고 및 건강권 보장 강화
- **(현황 진단)**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내용과 일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집행실적 부진과 성과 미달성으로 '개선필요'로 판정
 -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률이 12.1%에 불과
 -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산출지표로서, 목표치를 112% 초과 달성하였으나,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의 경우, 공모 저조로 인해 현재 계획된 목표를 미달성('21년 현재 목표 대비 약 25% 이행 수준)
 - 예산집행 부진 및 성과 미달성과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지정 실적이 저조하므로 현실적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 마련 필요' 등의 외부 지적(2022년 예산안 검토보고) 고려 시 불가 피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문제점 진단)** 본 과제의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확대 사업은 예산집행을 저조 및 성과 목표 미달성으로 인하여 개선필요 등급으로 판정된 사업
 -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관련 공모 저조로 인한 예산불용 및 이로 인해 성과목표로 설정한 장애인친화 건강 검진 지정 개소 수 미달성
 -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요건(인력 배치 및 시설 기준 등)과 건강검진기관 경영 수익과의 조화 문제가 성과부진의 한 요인으로 작용
- **(개선사항)**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성과 목표 재조정과 이에 근거한 예산 반영이 필요
 - **(개선 권고사항 1)** 현실적으로 가능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 단가 상향 조정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검진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원비용을 정확히 추산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3년까지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 77개소 지정 목표이나, '21년 말 지정기관은 19개소에 그치고 있음.
 - **(개선 권고사항 2)** 특히 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 및 지역별 현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 얼마만큼의 장애인친화 건강검진기관이 요구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작업을 행하고, 이를 추진 목표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개선 권고사항 3)**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경영 수익 창출에 요구되는 최소 행위량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행 수가의 적절성 검토, 예산 추가 지원 여부 검토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개선 권고사항 4)** 본 사업은 관련 법률에 의한 다소 엄격한 BF기준 수준과 인력 배치(수어 통역사 의무고용 등)를 적용하고 있어 일선 건강검진기관들의 공모신청이 저조한 측

면이 있음. 이에 장애인의 접근성 및 권익보호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현실적 기준 완화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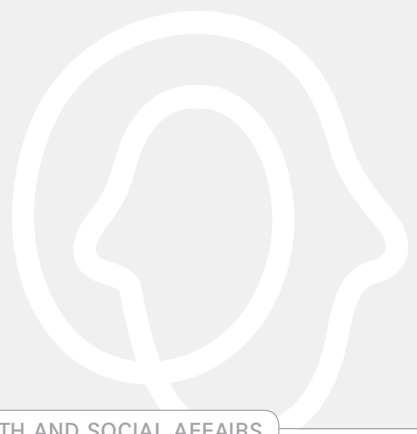
□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3-21, 복지부)

〈표 3-54〉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 과제의 세부지표별 등급

최종등급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집행계획 이행수준	사업관리의 적정성	성과달성수준
개선필요	정상추진	개선필요	정상추진	개선필요

- **(사업 목적)** '22년 우리나라 비만율을 '16년 수준으로 유지
- **(현황 진단)**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실적 이행 미흡 및 성과목표 미달성하여 '개선 필요' 등급으로 판정
 - 과제 내용은 과제 목표에 따라 부합성 높게 구성되어있으며,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작업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나, 일부 과제의 경우 예산 미확보 및 추진기관 미선정에 따라, 대책 이행 미흡
 - 종합적으로 조정, 점검,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대응으로 인해 개최되지 않은 등 이행이 지연되었으며, 2021년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 **(개선사항)** 부처별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비만율 감소 목표 달성에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예산이 미확보된 과제들의 경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의 개별 사업과 뿐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의 협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종합 점검,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정상 개최, 파악한 성과 목표 미달성 요인에 대한 대응 개선
 -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인한 생활습관 변화, 주무관계부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과제 예산 미확보 등을 성과 미달성의 요인으로 파악하고는 있어 향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개선 권고사항 1)** 영양·비만전문위원회의 다양한 운영 방안 필요
 - 성과 개선 진단을 받은 주요 요인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영양·비만전문위원회 미개최였음.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보건위기상황 발생 시 영양·비만전문위원회 운영의 공백 없이 정상 운영할 수 있는 대비책(예: 비대면 회의, 서면 자문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개선 권고사항 2)** 범부처 차원의 협업, 지원
 - 2021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행정 부담을 고려하여 세부과제 수행부처·기관의 과제별 추진 실적, 시행계획 모니터링을 연 1회로 조정하였음. 사업 성과 달성 미흡과 코로나

19 확진자 수 감소를 감안하여 모니터링 횟수를 정상화할 필요 있음. 일부 과제 예산 미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 필요



제4장

기본계획 중간성과점검 및 추진과제별 중간평가

제1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중간성과점검

제2절 세부 과제 목표 중간점검

제4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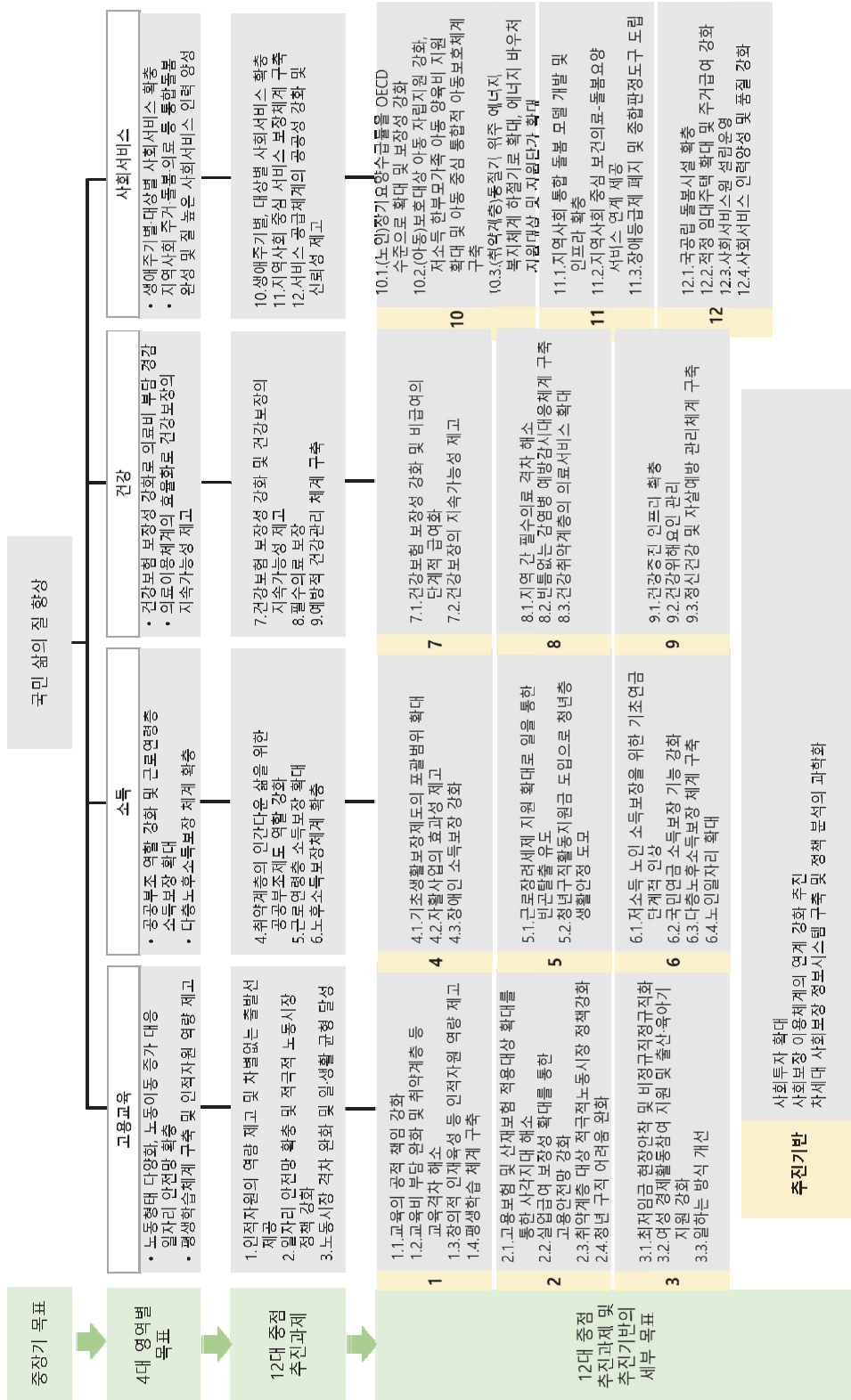
기본계획 중간성과점검 및 추진과제별 중간평가

- 본 장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중간성과점검을 위해 2019년~2021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통해 추진과정과 사회보장기본계획 상 성과지표 중심의 성과 달성도를 살펴봄.
- 다음으로 구체적인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3년간 추진된 중점 추진과제의 목표 달성도를 점검 후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을 살펴봄.

제1절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중간성과점검

-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이에 따라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에서는 4개 핵심영역 중심으로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추진성과 중간점검을 위해 2019년~2021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통해 추진과정에 대한 중간점검 수행 후,
- 사회보장기본계획 상의 중장기 및 4대 핵심분야별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그간 성과('19~현재)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함.
-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성과목표와 성과지표 계층적 분류를 통해 4대 핵심분야별 핵심성과지표 및 주요성과지표를 중심으로 성과목표 달성도를 살펴보고자 함.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중장기 목표, 4대 영역별 목표, 12대 중점 추진과제별 목표는 아래 [그림 4-1]과 같음.
- 각 목표 수준별 성과를 진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는 아래 [그림 4-2]와 같음.

[그림 4-1] 제2차(2019-2023) 사회보장기본계획 목표 계층도



1. 추진과정 중간점검

□ 4대 영역별 목표 및 12대 중점추진과제의 2019년~2021년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2021년 추진실적은 건강 분야가 전체적으로 저조한 평가결과를 보이며, 특히 건강 분야의 ‘필수의료 보장’은 3년 연속으로 매우 저조한 성과를 보임. 또한 사회서비스 분야의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과제들의 경우 미흡한 평가 결과를 보임.

* 3년 연속 종합등급에서 정상추진 이상 등급을 받은 경우 ‘정상추진’, 3년간 종합등급에서 1번의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경우 ‘미흡(1)’, 3년간 종합등급에서 2번 이상의 개선필요 등급을 받은 경우 ‘미흡(2)’

〈표 4-1〉 2019-2021 고용·교육 분야 과제별 평가결과

분야	과제 번호	과제명	2019	2020	2021	2019~2021 과제별 평가결과		
			우수 및 정상추진(%)					
고용 교육	1.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100	100	93.8	정상 추진	미흡 (1)	미흡 (2)
	1-1-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교육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1-2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 보육, 교육투자 확대(복지부)	우수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2	기초학력 보장(교육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3-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교육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개선 필요		○	
	1-3-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3-3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여가부)	우수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4	고교 무상교육 실시(교육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5	대학등록금 부담경감(교육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우수	○		
	1-6-1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 지원, 학교박청소년 지원 강화(교육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6-2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지원, 학교박청소년 지원 강화(여가부)	정상 추진	우수	우수	○		
	1-7	고교학점제 도입(교육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8-1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및 혁신인재 양성(교육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8-2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및 혁신인재 양성(과기정통부)	정상 추진	우수	정상 추진	○		
	1-9	평생학습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교육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10	신중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강화(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11	중소기업 재직자 훈련지원(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분야	과제 번호	과제명	2019	2020	2021	2019-2021 과제별 평가결과		
			우수 및 정상추진(%)					
	2.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100	100	100	정상 추진	미흡 (1)	미흡 (2)
	1-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예술인 고용 보험 적용 확대(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13	산재보험 적용확대 및 보장성 강화(고용부)	우수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14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지급기간 확대, 자 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단계적 도입 (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15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16	고용센터 취업지원기능 강화(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17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1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 대(고용부)	정상 추진	우수	정상 추진	○		
	1-19-1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19-2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산자부)	-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20	온·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고 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100	92.9	92.9	정상 추진	미흡 (1)	미흡 (2)
	1-21	최저임금 현장안착(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2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23	출산급여 신설을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 소(고용부)	정상 추진	개선 필요	개선 필요			○
	1-24-1	여성 경력단절 예방(여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24-2	여성 경력단절 예방(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25	남녀 공동 육아참여 기반 구축(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2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확대 검토(고 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28-1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28-2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여가부)	우수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29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여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30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여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31	아동수당 확대(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우수	○		
	1-32	연간 노동시간 단축(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1-33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표 4-2〉 2019-2021 소득 분야 과제별 평가결과

분야	과제 번호	과제명	2019	2020	2021	2019-2021 과제별 평가결과		
			우수 및 정상추진(%)					
소득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100	92.9	92.9	정상 추진	미흡 (1)	미흡 (2)
	2-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복지부)	정상 추진	우수	정상 추진	○		
	2-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 및 보장성 강화(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2-3	자활성공 보상 강화(복지부)	정상 추진	개선 필요	정상 추진		○	
	2-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확대(복지 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2.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100	100	100	정상 추진	미흡 (1)	미흡 (2)
	2-5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기재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87.5	100	100	정상 추진	미흡 (1)	미흡 (2)
	2-7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2-8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소득 보장(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2-10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2-11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 성 및 사회적 대화 지원(복지부)	개선 필요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2-12	퇴직연금의 기능강화(고용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우수	○		
	2-13	주택연금 활성화(금융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2-14	농업인 노후소득보장강화(농식품부)	정상 추진	우수	정상 추진	○		
2-15	노인 일자리 확대(복지부)	우수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표 4-3〉 2019-2021 건강 분야 과제별 평가결과

분야	과제 번호	과제명	2019	2020	2021	2019-2021 과제별 평가결과		
			우수 및 정상추진(%)					
건강	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		100	100	83.3	정상 추진	미흡 (1)	미흡 (2)
	3-1	치료에 필요한 건강보험 적용 및 관리강화(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2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3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복지부/금융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4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개선 필요		○	
	3-5	일차의료의 기능강화(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2. 필수의료 보장		81.8	63.6	81.8	정상 추진	미흡 (1)	미흡 (2)
	3-6	권역·지역 책임의료체계 마련(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7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복지부)	정상 추진	개선 필요	개선 필요			○
	3-8	지역별 응급이송 체계 구축(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9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10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11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복지부)	정상 추진	개선 필요	정상 추진	○		
	3-12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른 위기대응체계 고도화(복지부/질병청)	개선 필요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13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기반 협력체계 구축(질병청)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14	분만취약지 지원강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원(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15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 장애친화 검진기관 확대(복지부)	개선 필요	개선 필요	개선 필요			○
	3-16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보훈처)	우수	개선 필요	정상 추진		○	
	3.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100	100	87.5	정상 추진	미흡 (1)	미흡 (2)
	3-17	건강생활지원센터(주민건강센터) 확충(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18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19	금연 대책 강화(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20	음주폐해 예방 및 중독관리 대응체계 강화(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21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개선 필요		○	
3-22	환경오염피해 구제 강화(환경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3-23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시·도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복지부)	정상 추진	우수	정상 추진	○			
3-24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표 4-4〉 2019-2021 사회서비스 및 추진기반 분야 과제별 평가결과

분야	과제 번호	과제명	2019	2020	2021	2019-2021 과제별 평가결과		
			우수 및 정상추진(%)					
사회 서비스	1.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100	100	100	정상 추진	미흡 (1)	미흡 (2)
	4-1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통합적 재가서비스 강화(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2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3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4	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복지부)	우수	우수	정상 추진	○		
	4-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강화(여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6	공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체계 강화(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7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산자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8	저소득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문체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2.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66.7	66.7	100	정상 추진	미흡 (1)	미흡 (2)
	4-9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및 모델개 발(복지부/행안부)	정상 추진	개선 필요	정상 추진		○	
	4-10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인프라 확충(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11	병원과 지역 간 협력으로 퇴원·지역연계 강 화(복지부)	개선 필요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12	방문의료 제공 및 재가 의료급여 도입(복지 부)	개선 필요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13	장애인 종합관정도구 도입 및 맞춤형 전달체 계 구축(복지부)	정상 추진	우수	정상 추진	○		
	4-14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돌봄 서비스 제 공(복지부)	정상 추진	개선 필요	정상 추진		○	
	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100	100	100	정상 추진	미흡 (1)	미흡 (2)
	4-15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16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국토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17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국토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18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19	사회서비스 인력양성(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4-20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 선(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추진 기반	1. 사회투자 확대		100	100	100	정상 추진	미흡 (1)	미흡 (2)
	5-1	지역사회 서비스 종합 안내를 위한 읍면동 기능 강화(복지부/행안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5-2	공공센터 간 연계 강화 및 지역 거점기관 구 축(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5-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 회보장 빅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5-4	행정 빅데이터 간 연계성 제고(복지부)	정상 추진	정상 추진	정상 추진	○		

2. 성과달성 중간점검

가. 성과지표 종합점검

□ 목표와 목표 수준별 대표 성과지표들의 계층적 분류도를 고려하여 기본계획 중장기 및 4대 영역별 핵심성과지표 5개를 포함 12대 중점추진과제의 주요 성과지표 66개를 선정, 총 71개의 성과지표를 통해 사회보장 기본계획의 중간성과를 진단하고자 함.

□ 4대 영역별 목표 및 12대 중점추진과제, 그리고 추진기반의 세부성과지표를 통해 본 전체 71개 지표 중에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추진되기 이전보다 개선 혹은 목표 달성된 것으로 나타난 지표는 54개(76.1%), 개선이 필요한 지표는 16개(22.5%), 점검을 유보한 지표 1개

*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이 추진되기 이전보다 개선된 지표 ○, 목표 달성한 지표 ◎, 개선이 필요한 지표 △, 그리고 유보 √으로 표시

○ 고용·교육 분야는 전체 19개 지표 중 기본계획 추진되기 이전보다 개선되거나 목표 달성된 지표 14개(73.7%), 개선 필요한 지표 5개(26.3%)

○ 소득 보장 분야는 전체 13개 지표 중 기본계획 추진되기 이전보다 개선되거나 목표 달성된 지표 12개(92.3%), 개선 필요한 지표 1개(7.7%)

○ 건강 보장 분야는 전체 18개 지표 중 기본계획 추진되기 이전보다 개선되거나 목표 달성된 지표 9개(47.4%), 개선 필요한 지표 8개(47.4%), 유보 1개(5.6%)

○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는 전체 20개 지표 중 기본계획 추진되기 이전보다 개선되거나 목표 달성된 지표 19개(95.0%), 개선 필요한 지표 1개(5.0%)

〈표 4-5〉 고용·교육 보장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2022)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저임금근로자(%)	19.0	17.0	16.0	15.6	18.0	○
평생학습참여율(%)	42.8	43.4	40	30.7	40.4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5.4	28.5	29.8	31.0	40	△
온종일돌봄체계 서비스 수혜인원 (만명)	36	-	42.1	44.3	53	△
고교무상교육실현	기본계획 수립	관계법령 개정	단계적시행 (23학년)	고교 무상교육시행	전년 시행(전학년)	◎
혁신인재(과학기술인재) 양성(천명)	6.5	9.0	10.0	14.0	40(누적)	○
평생교육 바우처(명)	-	10,896	21,271	41,667	45,000	○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2022)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고용보험 피보험자(만명)	1,343	1,386	1,411	1,455	1,500	○
실업급여 지급수준(%)	50	50	50	60	평균임금의 60%	◎
실업급여 지급기간(일)	90-240	90-240	90-240	120-270	120-270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경사노조 : 조속한 도입 및 법제화 합 의	국민취업 지원제도 추진방안 발 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6월)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 취업지원제 도 시행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제도 실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규모(만명)	9	11	29	(사업종료)	38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규모(만명)	15.3	21	25.7	29.7	51	○
연간 노동시간(시간)	1,993	1,967	1,908	1,915	1,800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 자 수(명)	-	4,403	12,342	11,565	8,484	△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17.8	21.1	24.5	26.3	2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명)	3,820	5,660	14,698	16,689	20,621	○
아동수당 만7세 미만 모든아동확대	만 6세 미만 개정안 통과 (18.12)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확 대 시행 (19.9)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 로 대상 연령 확대(22년)	소득 하위 100%	◎

(표 4-6) 소득 보장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상대빈곤율(%)	16.7	16.3	15.3	15.1	15.5	◎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만명)	89	73	-	-	47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천명)	1,744	1,881	2,134	2,360	-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단계적 완화				◎
기초생보 기준선 조정(%)	-	생계 30, 의료40, 주거 44, 교육50 이하	생계 30, 의료40, 주거 45, 교육50 이하	생계 30 의료40 주거 45 교육50 이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4, 교육 50	◎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원)	-	253,750	254,760	300,000	월 30만원	◎
EITC 지원 가구 확대(만 가구)	-	410	432	433	334만 가구	◎
노후 소득보장 대체율(%)	48.3 (17)	43.5	39.0	-	52.0	△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자 수 (만명)	-	156	332	594	665	○
다층노후보장제도 협의체 구성	-	-	1	1	협의체 구성	○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수(만건)	6.0	7.1	8.1	9.2	11.1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강화(연금 보험료 농업인 지원대상 수급자 수, 천명)	448	461	478	495	506	○
노인 일자리 확대(만개)	54	68.4	76.9	83.6	80	◎

〈표 4-7〉 건강 보장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건강수명(세)	72.0 (15)	73.1	-	-	75	○
건강보험 보장률(%)	63.8	64.2	65.3	-	70.0	○
비급여 본인부담(조원)	15.5	16.5	15.6	-	4.8	△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19.9 (17)	15.7	-	-	19.1	◎
권역책임의료기관(개)	-	10	12	15	17	○
지역책임의료기관(개)	-	0	29	35	70	△
국립 공공의과대학(원) 설립 추진	-	-	-	-	운영목표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정률(%)	6.9	24.6	15	39.2	85	△
감염병대응 실무자교육(%)	95.5	98.4	81.8	77.6	88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	시범사업	-	2단계 시범사업	-	'20년 도입	○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의사수(명)	273	361	463	617	700	○
장애인친화 검진기관 확대(개)	8	8	-	-	100	△
지방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개소, 누적)	-	-	-	1	4	△
흡연율(%)	22.4	21.5	20.6	19.3	14.0	○
건강생활지원센터(개소)	66	77	103	124	250	△
비대면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보건소)	-	-	24	53	120	△
전국 정신건강 복지센터 (기초)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명)	43.6	34.2	28	26.0 (잠정)	24	○
지역별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범사업 모델 확산	-	1	7	12	-	○
성인비만율(%)	34.1	34.6	33.8	38.3	34.8	△

〈표 4-8〉 사회서비스 및 추진기반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GDP 대비 사회서비스투자비율(%)	5.7(15)	6.9	7.3	-	7.4	○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률(%)	6.2(재가) 2.7(시설)	6.9(재가) 2.7(시설)	7.4(재가) 2.6(시설)	-	10.0	◎
치매환자관리율(%)	47.4	56.9	61.8	58.2	54.4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인원(명)	-	2506	4335	6366	17,000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인원(명)	-	1965	4123	6241	22,000	○
보호종료아동 사후관리율(%)	-	72.5	74.3	75.9	76.5	○
공공보육이용률(%)	25.2	28.2	32	34.7	40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구수(만가구)	56.5	63.3	67.3	75.9	85.8	○
1인당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액(만원)	7	8	9	10	10	◎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자립생활 유지율(%)	-	55.4	58.3	60.57	-	○
케어안심주택 운영 모형 실증·확산	-	매뉴얼 개발	운영모형 마련	운영모형 실증	4만호	○
지역사회연계 시범사업 추진 (19~20년지표명: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추진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추진 (급성기, 회복기)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추진	2,000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7.1	7.4	8.0	-	9.0	○
공공 임대주택 공급(만호)	14.8	13.9	15	12.3	연평균 13만호	○
주거급여 월평균 수급액(만원)	12.2	13.4	15.4	16.8	17.2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8.6	8.9	9.1	9.5	10.5	○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	시범사업 실시(4개소) 서비스 제공 기관(30개)	사업확대 (11개소) 서비스 제공 기관(108개)	사서원 14개 설립 및 운영 서비스 제공기관 191개 운영	17개 사회서비스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만명)	3.7	9.3	9	6.2	-	○
전담팀 설치(개소)	2,582	2,911	3,197	3,306	3,500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	-	계획 수립 및 본 사업 발주	제도 개선 및 시스템 분석· 설계	복지멤버십 시범운영/ 복지로 전면 개편완료	구축(21), 개통(22)	○

나. 중장기 및 4대 영역별 핵심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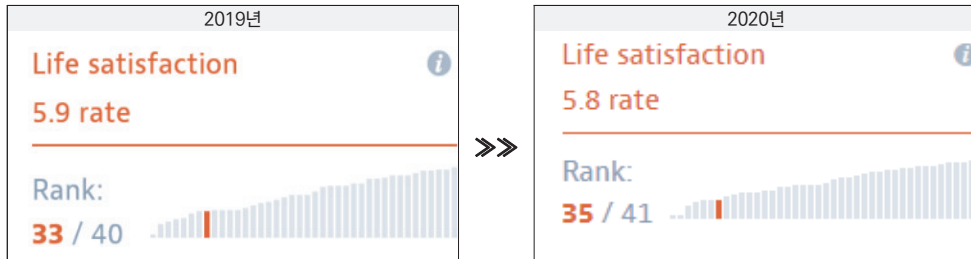
□ 중장기 및 4대 영역별 핵심 지표 성과는 아래와 같음.

〈표 4-9〉 중장기 목표 및 지표

사회보장 중장기 목표		지표명	기본계획 시점	'19	'20	'21	'23년 목표	'40년 목표
4 대 영 역		삶의 만족도	28위 ('17)	33위	35위	-	20위	10위
	고용	저임금근로자 비중(%)	22.3 ('17)	17.0	16.0	15.6	18.0	15.0
	소득	상대빈곤율(%)	17.4 ('17)	16.3	15.3	15.1	15.5	11.3
	건강	건강수명(세)	73 ('16)	73.1	-	-	75	78
	사회 서비스	GDP대비사회서비스 투자(%)	5.7 ('15)	6.9	7.3	-	7.4	10.7

자료: 1) 삶의 만족도: OECD. Better Life Index 中 Life Satisfaction.
 2) 저임금근로자 비중: OECD.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3) 상대빈곤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4) 건강수명: WHO. Healthy life expectancy.
 5) GDP 대비 사회서비스투자비율: OECD. Social expenditure.

[그림 4-3] 중장기 성과지표: 삶의 만족도 지수



자료: OECD, OECD Better Life Index. 검색일자: 2022. 9. 19.

- **(중장기 목표: 삶의 만족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중장기 목표인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균형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측정하는 삶의 만족도 지수는 2017년 OECD 회원국 중 28위였으나 2019년 33위(40개국 중), 2020년 35위(41개국 중)로 하락

* OECD Better Life Index의 경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0-10점 척도로 평가하여 한국인 평균 점수를 측정

- 기본계획상의 목표는 2023년 20위, 2040년 10위를 목표로 설정, 향후 기본계획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성과를 창출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삶의 만족도 지수 특성과 주관적 조사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고용 영역 핵심지표: 저임금근로자 비중)** 고용 영역 핵심지표인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2017년 22.3%였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으로 2019년 17.0%, 2020년 16.0%, 2021년 15.6%로 당초 2023년 목표치였던 18.0%를 조기 달성
- **(소득 영역 핵심지표: 상대빈곤율)** 소득 보장 분야 핵심지표인 상대빈곤율은 2018년 16.7%로 시작해 2019년 16.3%, 2020년 15.3%, 2021년 15.1%로 2023년 목표치인 15.5%를 조기 달성. 이와 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취약계층 지원에 대한 성과
- **(건강 영역 핵심지표: 건강수명)** 건강 보장 분야 핵심지표인 건강수명은 2017년 73세에서 2019년 73.1세로 소폭 증가하긴 했으나 고령화 및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더욱 적극적인 국가 차원의 보건의료 정책 및 건강관리 지원강화 필요

〈표 4-10〉 건강수명 및 기대수명

WHO(건강수명)	70.9(‘10)	73.0(‘16)	73.1(‘19)	-
통계청(건강수명)	65.7(‘12)	64.9(‘16)	64.6(‘18)	66.3(‘20)
통계청(기대수명)	80.9(‘12)	82.4(‘16)	82.7(‘18)	83.5(‘20)

자료: 1) 통계청, 생명표, 국가승인통계 제101035호.

2) WHO, World Health Statistics.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indicator-details/GHO/gho-ghe-hale-healthy-life-expectancy-at-bir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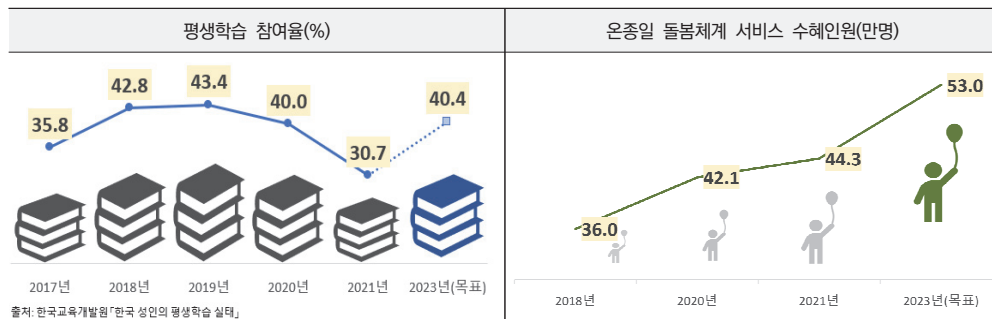
- **(사회서비스 영역 핵심지표: GDP 대비 사회서비스투자 비율)**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핵심지표인 GDP 대비 사회서비스투자 비율은 2015년 5.7%에서 2019년 6.9%, 2020년 7.3%로 2023년 목표치인 7.4%에 근접

다. 4대 영역별 핵심 지표

1) 고용 영역

-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교육·돌봄의 공적책임을 통한 원격수업 등 지속가능한 학습환경 제공과 돌봄기관 확충으로 돌봄 부담 완화
- 교육에 대한 공적책임 강화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초·중고 온라인 개학 및 대학 원격수업 허용을 통해 중단없는 학습환경을 지원, 그러나 코로나19 초기 등교·원격수업 병행 등과 같은 교육방식 관련 문제와 교육 결손·격차 문제 발생
- 평생학습 참여율은 2019년 기본계획 종료시점의 목표치인 40.4%를 초과 달성했었으나, 코로나19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으며 2021년 30.7%로 낮아짐.
-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로 국공립 유치원 및 돌봄기관 확충을 위한 노력, 그러나 낮은 출산율 및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시설 휴관 등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문제와 지역중심 돌봄 체계 구축에서의 이해관계자 대립 등의 문제 발생

[그림 4-4] 고용·교육 보장 분야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목표 성과지표



자료: 1) 평생학습 참여율: 한국교육개발원, (각년도별)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2) 온종일 돌봄체계 서비스 수혜인원: 보건복지부, 추진실적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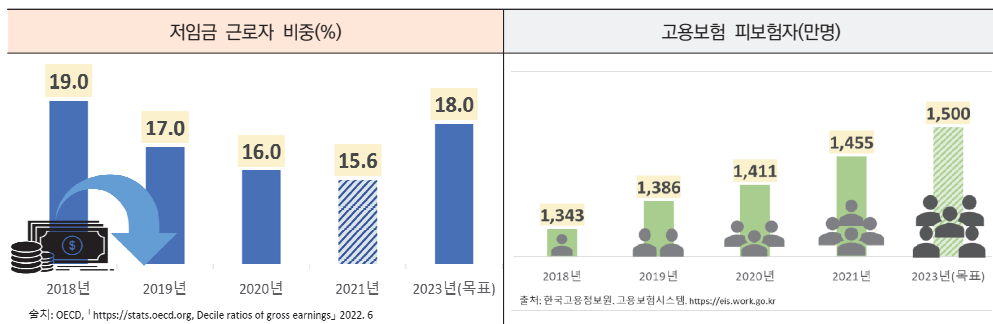
〈표 4-11〉 고용·교육 보장 분야 '인적 자원의 역량 제고 및 차별없는 출발선 제공'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2022)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평생학습참여율(%)	42.8	43.4	40	30.7	40.4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25.4	28.5	29.8	31.0	40	△
온종일돌봄체계 서비스 수혜인원(만명)	36	-	42.1	44.3	53	△
고교무상교육실현	기본계획 수립	관계법령 개정	단계적시행 (2,3학년)	고교 무상교육시행	전년 시행(전학년)	◎
혁신인재(과학기술인재) 양성(천명)	6.5	9.0	10.0	14.0	40(누적)	○
평생교육 바우처(명)	-	10,896	21,271	41,667	45,000	○

□ (일자리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저임금 근로자 비중 감소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 증가를 통한 고용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망 강화

- 코로나 확산 및 종식 불확실성으로 고용시장 불안,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의 어려움, 고용형태 다변화와 같은 고용환경 급변에도 불구하고,
- 고용유지지원금 대폭 확대 및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 피해 최소화과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고용안정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의 취약계층 가입 확대 및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고용안전망 강화

[그림 4-5] 고용·교육 보장 분야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목표 성과지표 달성



자료: 1) 저임금근로자 비중: OECD, (2022.6.). Decile ratios of gross earnings.

2) 고용보험 피보험자: 고용정보원, 고용보험시스템 매년 12월 기준.

〈표 4-12〉 고용·교육 보장 분야 '일자리 안전망 확충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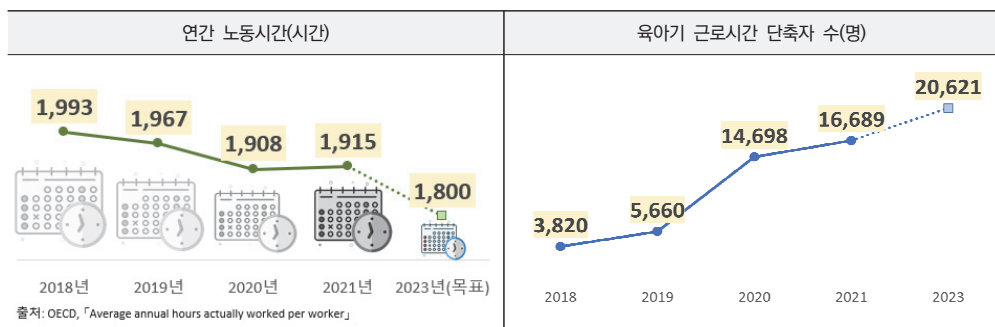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2022)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고용보험 피보험자(만명)	1,343	1,386	1,411	1,455	1,500	○
실업급여 지급수준(%)	50	50	50	60	평균임금의 60%	◎
실업급여 지급기간(일)	90-240	90-240	90-240	120-270	120-270	◎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경사노조 조속한 도입 및 법제화 합 의	국 민 취 업 지 원제도 추진 방안 발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6월)	한국형 실업 부조인 국민 취업지원 제도 시행	관련 법률 제정 추진 & 제도 실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규모(만명)	9	11	29	(사업종료)	38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규모(만명)	15.3	21	25.7	29.7	51	○

□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연간 노동시간 단축과 출산·육아기 지원을 통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 2018년 7월 주당 근로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연간 노동시간 단축('18년 1,993시간→'21년 1,915)과 코로나19와 더불어 유연근무 확산 등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남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등의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추진을 통해 출산·육아기 지원 강화

[그림 4-6] 고용·교육 보장 분야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목표 성과지표 달성



자료: 1) 연간 노동시간: OECD, Labour Force Statistics.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 고용노동부, 추진실적 자료.

〈표 4-13〉 고용·교육 보장 분야 '노동시장 격차 완화 및 일·생활 균형 달성'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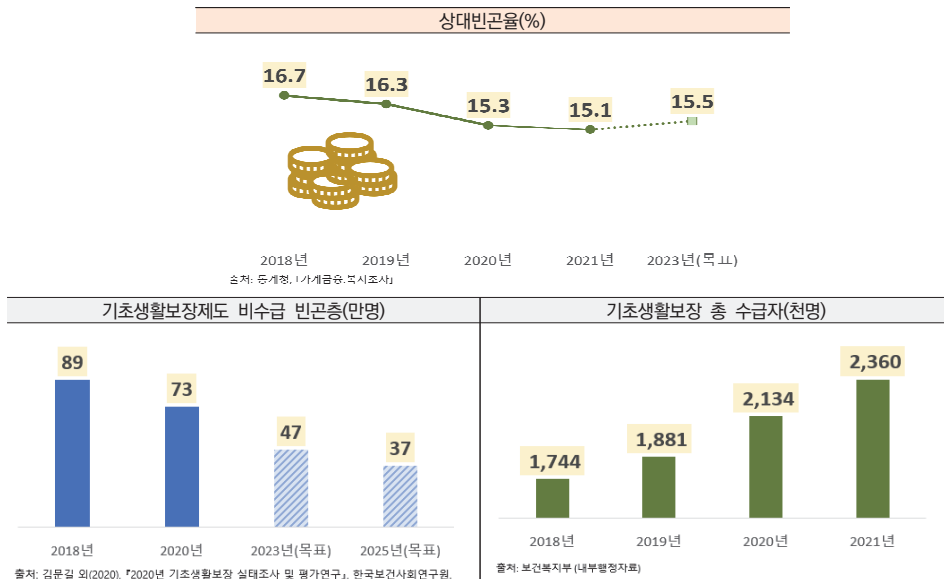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2022)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연간 노동시간(시간)	1,993	1,967	1,908	1,915	1,800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 수(명)	-	4,403	12,342	11,565	8,484	△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17.8	21.1	24.5	26.3	21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명)	3,820	5,660	14,698	16,689	20,621	○
아동수당 만 7세 미만 모든아동확대	만 6세 미만 개장안 통과 (18.12.)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확 대 시행(19.9.)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 로 대상 연령 확대(22년)	소득 하위 100%	◎

2) 소득 보장 영역

□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제도개선(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확대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감소 등 취약계층 지원을 통한 상대빈곤율 감소

○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목표 조기 달성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18년 1,744천명→'21년 2,360천명),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감소('18년 89만명→'19년 73만명)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등 취약계층 지원으로 상대빈곤율 감소

〔그림 4-7〕 소득 보장 분야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목표 성과지표 달성



자료: 1) 상대빈곤율: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 기초생활보장총수급자: 보건복지부, 추진실적 자료.

3)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 김문길 외, (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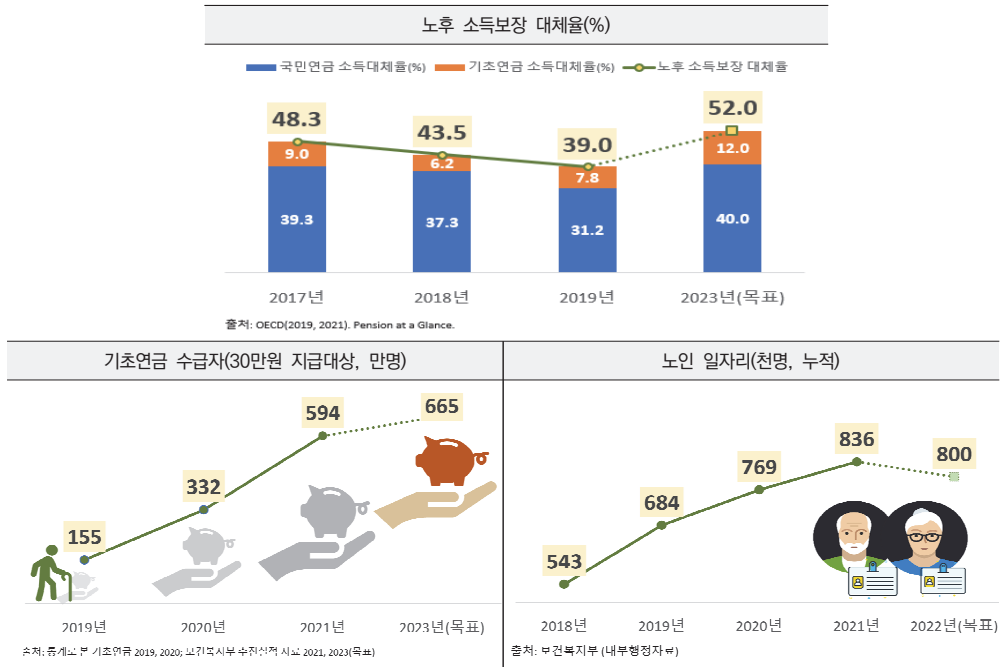
〈표 4-14〉 소득 보장 분야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상대빈곤율(%)	16.7	16.3	15.3	15.1	15.5	◎
기초생활보장제도 비수급 빈곤층(만명)	89	73	-	-	47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천명)	1,744	1,881	2,134	2,360	-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	단계적 완화				◎
기초생보 기준선 조정(%)	-	생계 30, 의료40, 주거 44, 교육50 이하	생계 30, 의료40, 주거 45, 교육50 이하	생계 30, 의료40, 주거 45, 교육50 이하	생계 30, 의료 40, 주거 44, 교육 50	◎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원)	-	253,750	254,700	300,000	월 30만원	◎

□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기초연금 수급자 단계적 확대, 노인일자리의 지속적인 확대, 다층노후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등 설정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함으로 안정적 노후소득 기반 마련. 그러나 노후 소득보장 대체율은 점차 감소 추세

- 근로장려세제(EITC)의 소득·재산 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으로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 저소득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소득하위 70% 어르신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및 노인 일자리의 지속적 확대
- 다층노후보장제도 구축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퇴직연금(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 도입) 기능 강화 및 주택연금 활성화,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및 농지연금 보험료 지원 강화를 통해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그림 4-8] 소득 보장 분야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목표 성과지표 달성



자료: 1) 노후 소득보장 대체율: OECD, Pension at a Glance.
 2) 기초연금 수급자: 통계청 본 기초 연금(2019, 2020), 보건복지부 추진실적자료(2021, 2023(목표)).
 3) 노인일자리: 보건복지부 내부행정자료.

[표 4-15] 소득 보장 분야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및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BITC 지원 가구 확대(만 가구)	-	410	432	433	334만 가구	◎
노후 소득보장 대체율(%)	48.3 (17)	43.5	39.0	-	52.0	△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대상자 수 (만명)	-	156	332	594	665	○
다층노후보장제도 협의체 구성	-	-	1	1	협의체 구성	○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수(만건)	6.0	7.1	8.1	9.2	11.1	○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강화(연금 보험료 농업인 지원대상 수급자 수, 천명)	448	461	478	495	506	○
노인 일자리 확대(만개)	54.0	68.4	76.9	83.6	80	◎

3) 건강 보장 영역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보장) 코로나19 장
기화로 인해 공공의료자원 소진 및 보건의료체계 한계에 부딪힘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

장률 강화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과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및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 등을 통해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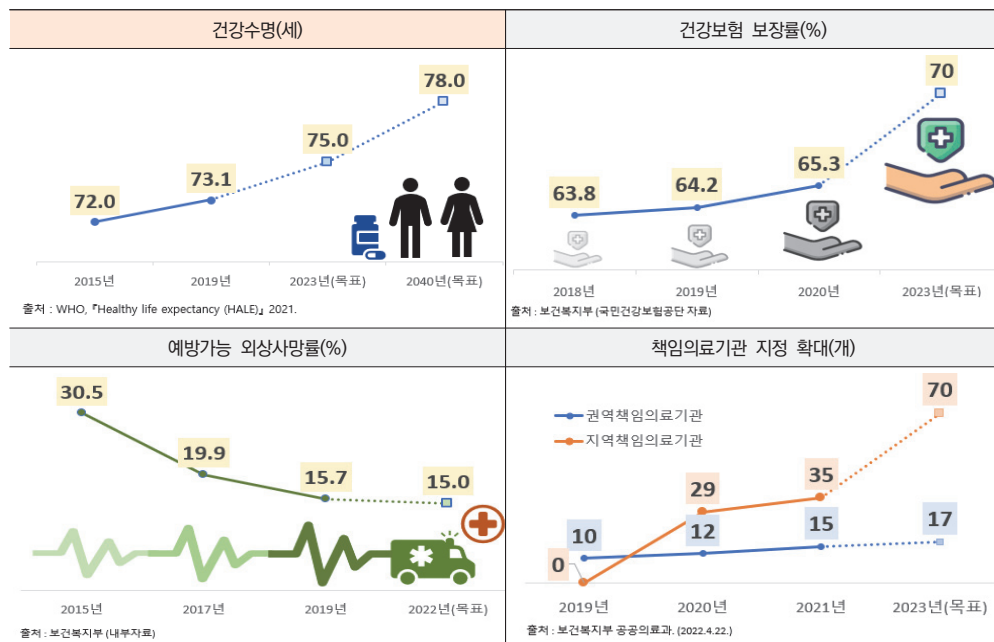
○ 건강 보장 분야는 기본계획 시작 시점인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공공 의료자원 소진 및 보건의료체계 한계에 부딪힘.

- 국립 공공의과대학(원) 설립은 근거법령 미제정으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 예정이며,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의 핵심 부분인 권역외상센터 인력 확보 관련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 그럼에도 범정부 거버넌스 구축으로 방역역량을 극대화하였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 중

○ 향후 건강·의료체계 한계에 따른 대응과 더불어 국가 차원의 건강관리 지원강화 등을 통해 일상회복을 위한 노력 필요

[그림 4-9] 건강 보장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보장' 목표 성과지표 달성



자료: 1) 건강수명: WHO, (2021). Healthy life expectancy (HALE).
 2) 건강보험 보장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3) 예방가능 사망률: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2021년 추진실적).
 4) 책임의료기관 지정 확대: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표 4-16〉 건강 보장 분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와 필수의료 보장'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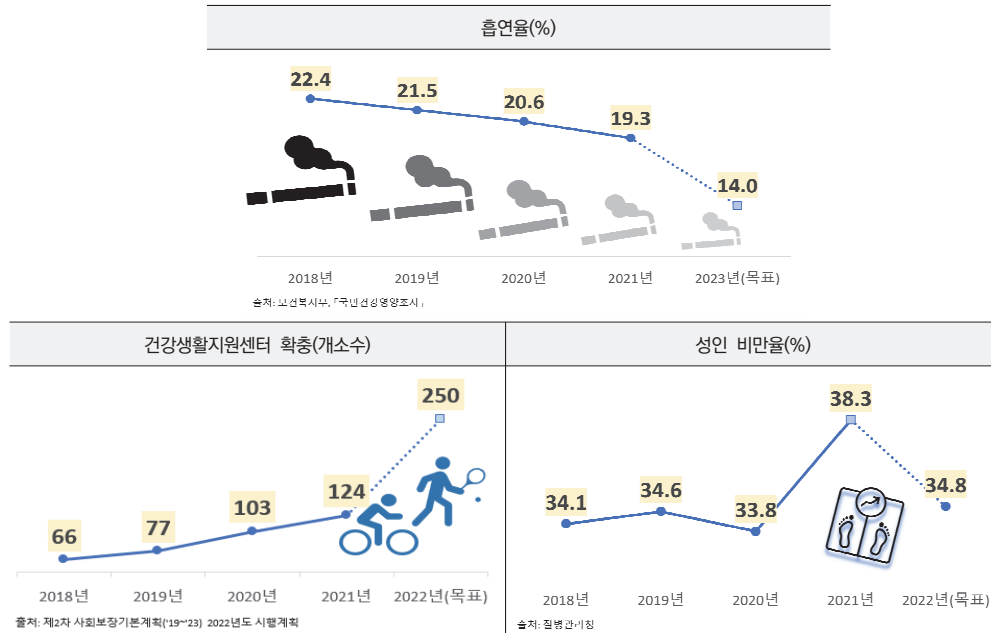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건강수명(세)	72.0 (15)	73.1	-	-	75	○
건강보험 보장률(%)	63.8	64.2	65.3	-	70.0	○
비급여 본인부담(조원)	15.5	16.5	15.6	-	4.8	△
예방가능 외상사망률(%)	19.9 (17)	15.7	-	-	19.1	◎
권역책임의료기관(개)	-	10	12	15	17	○
지역책임의료기관(개)	-	0	29	35	70	△
국립 공공의과대학(원) 설립 추진	-	-	-	-	운영목표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정률(%)	6.9	24.6	15	39.2	85	△
감염병대응 실무자교육(%)	95.5	98.4	81.8	77.6	88	△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	시범사업	-	2단계 시범사업	-	'20년 도입	○
장애인건강주치의 참여 의사수(명)	273	361	463	617	700	○
장애인친화 집진기관 확대(개)	8	8	-	-	100	△
지방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개소, 누적)	-	-	-	1	4	△

□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코로나19로 인한 예방적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관련 투자 부족 및 생활 방식 변화 등의 문제 발생으로 성과가 저조, 그럼에도 금주·금연·비만관리 등을 통한 건강위해요인 관리 및 건강증진 인프라 확충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체계 구축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예방적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관련 투자 부족 등의 문제 발생으로 성과가 저조

○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따른 국민 피로도 증가(우울 위험군 증가 '20.3. 17.5%→'20.9. 22.1%)와 더불어 생활방식 변화로 인한 성과 저조(성인비만율 '18년 34.1%→'21년 38.3%) 등 예방적 건강관리 및 정신건강 투자 등을 통해 일상회복을 위한 건강관리 지원 강화 필요

[그림 4-10] 건강 보장 분야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목표 성과지표 달성



자료: 1) 흡연율: 보건복지부(국민건강영양조사).
 2)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관계부처합동,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3) 성인비만율: 질병관리청.

〈표 4-17〉 건강 보장 분야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흡연율(%)	22.4	21.5	20.6	19.3	14.0	○
건강생활지원센터(개소)	66	77	103	124	250	△
비대면 건강관리 시범사업 확대(보건소)	-	-	24	53	120	△
전국 정신건강 복지센터 (기초)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명)	43.6	34.2	28	26.0 (잠정)	24	○
지역별통합정신건강 증진사업 시범사업 모델 확산	-	1	7	12	-	○
성인비만율(%)	34.1	34.6	33.8	38.3	34.8	△

4) 사회서비스 및 추진기반 영역

□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사회서비스 투자 확대와 더불어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생애주기별·대상별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 돌봄 기반 확대를 통한 서비스 제공

○ 재가서비스 중심으로 장기요양 수급률('17년 8.3%→'20년 10.0%)을 OECD 수준으로 확대,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치매환자관리율 '18년 47.4%→'21년 58.2%) 등 통합적 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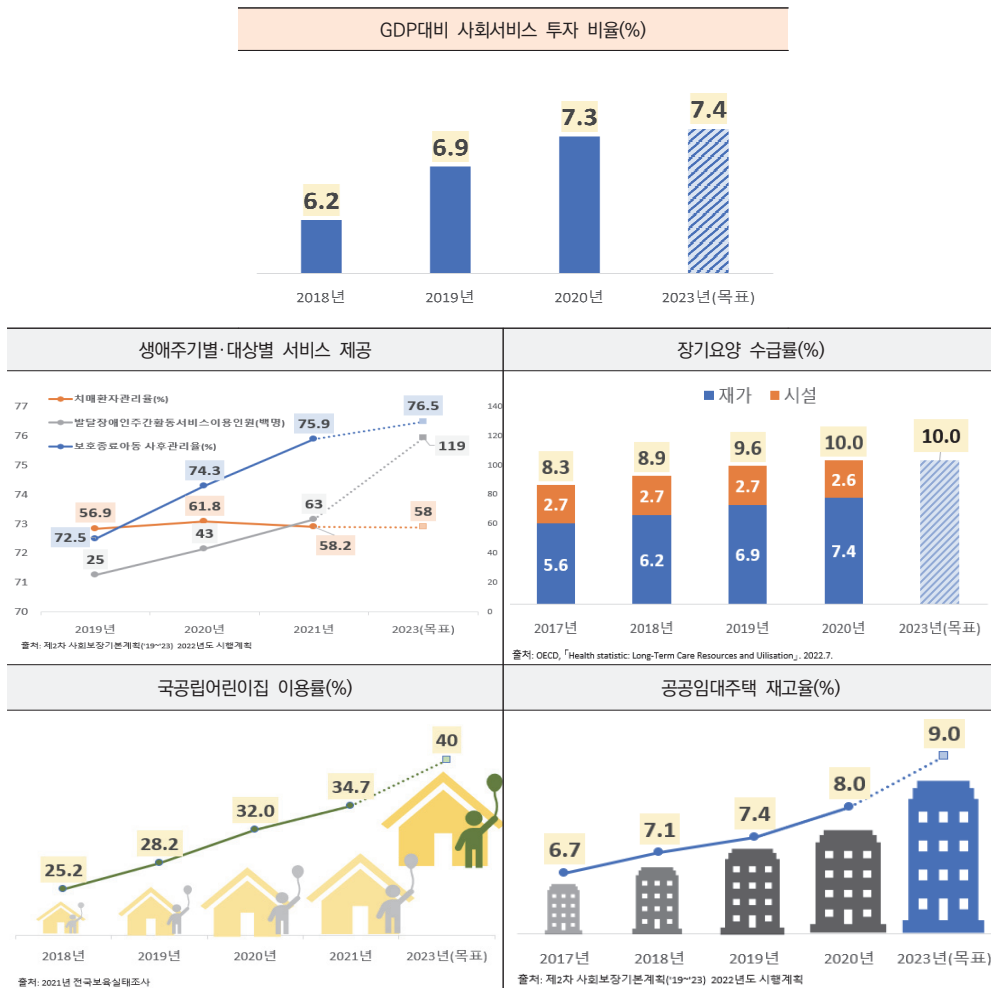
가서비스 및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등의 적극적 정책 추진 중

- 장애등급제 폐지, 활동지원 및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등 수요 중심 지원체계 구축과 보호대상 아동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 강화

□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임대주택 확대를 통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2,696개) 및 다함께 돌봄(601개) 확대 등 돌봄체계 구축과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을 통한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그림 4-11] 사회서비스 분야 목표 성과지표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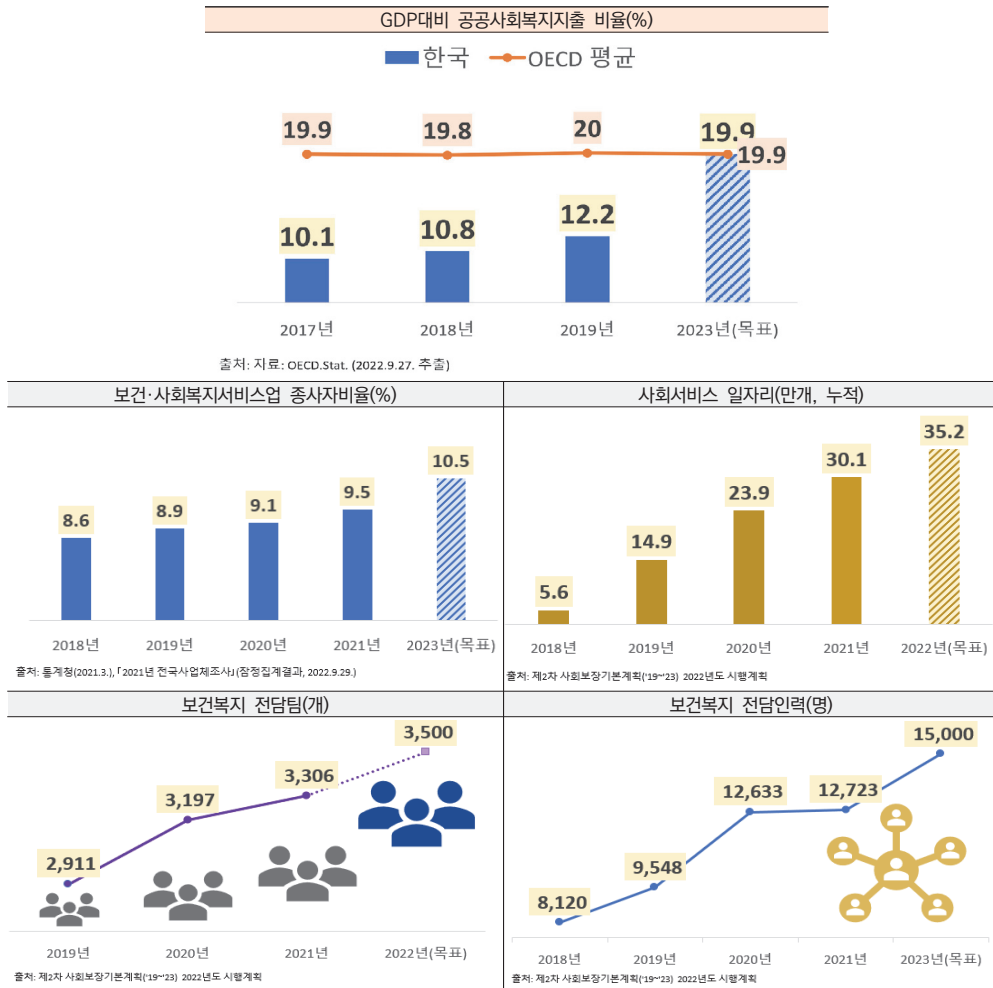
- 자료: 1) GDP대비 투자비율: OECD, Social Expenditure.
 2) 생애주기별·대상별 서비스 제공: 관계부처합동,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3) 장기요양 수급률: OECD, (2022.7). OECD Health Statistics.
 4)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국공립+직장+사회복지법인): 보건복지부, (2021). 2021년 전국보육실태조사.
 5)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보건복지부 내부자료(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2022년 시행계획).

〈표 4-18〉 사회서비스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GDP대비 사회서비스투자비율(%)	6.2	6.9	7.3	-	7.4	○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수급률(%)	6.2(재가) 2.7(시설)	6.9(재가) 2.7(시설)	7.4(재가) 2.6(시설)	-	10.0	◎
치매환자관리율(%)	47.4	56.9	61.8	58.2	54.4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인원(명)	-	2506	4335	6366	17,000	○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인원(명)	-	1965	4123	6241	22,000	○
보호종료아동사후관리율(%)	-	72.5	74.3	75.9	76.5	○
공공보육이용률(%)	25.2	28.2	32	34.7	40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가구수(만가구)	56.5	63.3	67.3	75.9	85.8	○
1인당통합문화이용권지급액(만원)	7	8	9	10	10	◎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통한 자립생활 유지율(%)	-	55.4	58.3	60.57	-	○
케어안심주택 운영 모형 실증·확산	-	매뉴얼 개발	운영모형미연	운영모형 실증	4만호	○
지역사회연계 시범사업 추진 (19~20년 지표명: 퇴원환자 지역사회연계)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추진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추진 (급성기·회복기)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추진	2,000	○
공공임대주택 재고율(%)	7.1	7.4	8.0	-	9.0	○
공공 임대주택 공급(만호)	14.8	13.9	15	12.3	연평균 13만호	○
주거급여 월평균 수급액(만원)	12.2	13.4	15.4	16.8	17.2	○

□ **(추진 기반)** 공공사회복지지출 확대와 더불어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사업 및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전담팀 설치 등 사회서비스 인력 확충 및 규모 확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질 제고

[그림 4-12] 추진기반 분야 목표 성과지표 달성



자료: 1) GDP 대비 사회복지 투자비율: OECD. Social Expenditure.

2)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비율: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잠정집계결과, 22.9.29.).

3)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계부처합동.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4) 보건복지 전담팀 및 전담인력: 관계부처합동.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 2022년도 시행계획.

〈표 4-19〉 추진기반 분야 목표 및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달성

성과지표	2018	2019	2020	2021	2023	달성◎ 개선○ 개선필요△ 유보√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10.8	12.2	-	-	OECD평균 (‘40년)	△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종사자 비율(%)	8.6	8.9	9.1	9.5	10.5	○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	시범사업 실시(4개소) 서비스 제공 기관(30개)	사업확대 (11개소) 서비스 제공 기관(108개)	사서원 14개 설립 및 운영 서비스 제공 기관 191개 운영	17개 사회서 비스원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만명)	3.7	9.3	9	6.2	-	○
전담팀 설치(개소)	2,582	2,911	3,197	3,306	3,500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구축	-	계획 수립 및 본 사업 발주	제도개선 및 시스템 분석· 설계	복지멤버십 시범 운영/ 복지로 전면 개편완료	구축(‘21), 개통(‘22)	○

제2절 세부 과제 목표 중간점검

□ 5년간 분야별 중점 추진 과제 목표의 '23년 달성가능성 정도를 살펴보고, 달성가능성 낮거나 달성은 했으나 개선의 여지가 많은 과제 추진 목표의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분석

〈표 4-20〉 5년간 분야별 추진 일정: 달성가능성 중간점검

	2019	2020	2021	2022	2023	달성 가능성
고용·교육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40% 확충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
	고교 무상교육 실현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CT 등 혁신인재 양성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 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20.5월 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
	아동수당 지급 만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
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완화					○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
	장애인 및 노인기초연금 월최대 30만원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지원			○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노인 일자리 확대					○
건강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추진					○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
	감염병예방법개정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른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본 사업	○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선도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
사회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인프라 확대					△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서비스 기준 마련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공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

1. 고용·교육 분야

가. 추진 목표 달성여부 및 달성가능성

〈표 4-21〉 5년간 분야별 추진 목표 : 고용·교육 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목표 달성 가능성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40% 확충					△ 목표 달성을 저조, 구조적 요인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 외부 요인 및 이해관계자 의견 대립
고교 무상교육 실현					○ '21년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실시로 목표 달성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CT 등 혁신인재 양성					○ 차질 없이 진행 중으로 목표 달성 가능성 높음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추진('20.5월 제정)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 '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목표 달성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 목표 달성, 안정적 지원
아동수당 지급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목표 달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 제도 신설 목표 달성, 그러나 개선의 여지 있음

나. 목표별 달성가능성 및 원인분석

□ (목표) 고교 무상교육 실현

○ (달성 가능성) '21년 말 기준 목표 달성

- 전 학년 고교 무상교육 시행으로, '21년 말 기준 전 학년 고교 무상교육 실시 완료

〈표 4-22〉 고용·교육 분야: 고교 무상교육 실현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고교 무상교육	기본 계획 수립	관계법령 개정	관계법령 개정	100.0	단계적 시행 (2,3학년)	단계적 시행 (2,3학년)	100.0	고교 무상교육 시행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
									100.0
									전면 시행 (전 학년)

□ (목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CT 등 혁신인재 양성

○ (달성 가능성) 목표 달성 가능할 것으로 평가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학기술·ICT 인재양성 인원 '22년까지 누적 4만명 목표로 2019년~2021년까지 누적 34,924명으로 인재 양성 인원 추이 및 달성률 고려 시 목표 달성 가능성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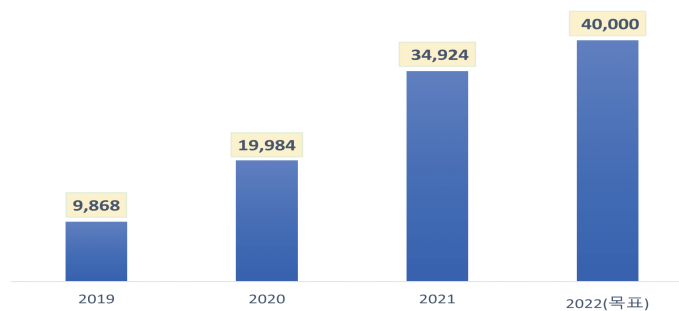
〈표 4-23〉 고용·교육 분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ICT 등 혁신인재 양성

(단위: 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과학기술·ICT 인재양성	8,514	8,000	9,868	123.4	8,500	10,116	119.0	8,500	14,940	175.8	4만명 (누적)

〔그림 4-13〕 과학기술·ICT 인재양성(누적)

(단위: 명)



□ (목표)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 (달성 가능성) '21.1.1. 목표 달성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및 실시

〈표 4-24〉 고용·교육 분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3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국민 취업지원 제도	경사노조: 조속한 도입 및 법제화 합의 (1차'18.8/ 2차'19.3)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방안 발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6월)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21.1.1.)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 (목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 (달성 가능성) 일부 목표 달성 후 사업 종료, 일부 안정적 지원으로 달성

- (청년추가고용장려금)'17~'21년 한시 사업으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업의 청년 근로자수(피보험자수) 증가율 '21년 26% 목표 중 35% 달성으로 목표 달성 후 사업 종료, 지속지원인원에 대해서만 지급

- 과제 진행 동안 지속적인 제도개편 및 물량 확대

- 지원대상(성장유망→전업종), 지원(3인 고용시 1명→30인 미만 1명, 30~99명 2명, 100인 이상 3명 고용시 지원), 지원액(연 667만원 → 연 900만원), 기업당 지원한도(90명→30명), 최소고용유지기간(0개월→6개월),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30~99명 2번째, 100인 이상 3번째 채용자부터 지원) 등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지속 증가 및 가입자에 대한 안정적 지원

〈표 4-25〉 고용·교육 분야: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관련 성과지표

(단위: 만명, %)

구 분	'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청년추가고용지원(만명)	12.8	-	14.1	-	-	10.5	-	-	8.5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업의 전년 대비 청년 고용증가율(%)	18.4	24.4	24.6	100.8	25	36.1	144.4	26.0	35.0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규모(만명)	-	-	25.0	-	-	38.8	-	-	50.7
청년공제 만기(2년) 유지율(%)	60.0	60	62.1	103.5	60 (62.1)	67.3	108.4	62.1	67.4

□ (목표 달성) 아동수당 지급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 (달성 가능성) 달성

-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급대상 연령 확대 실현하여 아동복지 증진

〈표 4-26〉 고용·교육 분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3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아 동 수 당 지급	만 6세 미만 개정안 통과('18.12.)	만 6세 미만	만 7세 미만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대상 연령 확대('22년)	아동수당 지급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

□ (목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설

○ (달성 가능성) 달성

-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5일분을 정부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원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를 신설('19) 함으로 목표 달성하였으나,
- 제도 신설 이후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성과목표 미달성으로 3년 연속 '개선필요' 등급으로 판정

○ **(장애요인 및 해결 방안)** 예산 불용 및 낮은 성과 달성률의 사유(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 및 급격한 출산율 저하 등)가 사업 환경 변화에 기인, 지원 대상 규모 추계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 및 예산 조정을 통한 향후 과제 운영 필요

- 낮은 예산 집행률의 원인 파악 및 향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낮은 출산율 및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지원 대상 규모의 추계 필요

〈표 4-27〉 고용·교육 분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급자 수

(단위: 명,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수급자 수	25,000	4,403	17.6	31,405 (14,339)	12,342	86	16,566	11,565	69.8	8,484

□ (목표)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40% 확충

○ **(달성 가능성)** 목표 달성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국정과제로 당초 '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원률 40% 달성 목표, 그러나 현재까지 목표 달성률 하락 추세

〈표 4-28〉 고용·교육 분야: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 40% 확충 관련 성과지표

(단위: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25.4	29.0	28.5	98.3	34.0	29.8	87.6	40.0	31.0	77.5	40.0

○ **장애 요인 및 해결 방안**

- 연도별 추진실적의 달성률 98.3%, 87.6%, 77.5%로 달성률 하락 추세
-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위해 4년간('18~'21) 3,382학급을 확충(입학가능비율 42.6%)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급당 유아 수 감축으로 인한 학급 정원 감소, 출생률 저하 등 취원율 확대 추진에 애로
 - 2021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신증설 목표 대비 2배 이상 상회한 총 1,030학급 확충 등의 노력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가정 내 돌봄수요 증대 등의 예외적 상황 발생
- (개선사항) 취원율은 학부모 주관적 선호도에 영향받는 지표로, 최근 변화되고 있는 학부모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학급확충 효과가 취원율 증가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방과후 과정 내실화 및 통학 버스 확대 등 서비스 개선 필요

- 양적측면에서의 사업성과가 확인되며 양호하게 관리 되고 있음. 그러나 변화되는 환경 변화 및 수요변화에 대응하여 서비스 질적 측면에서의 성과관리가 중요, 상대적으로 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의 성과관리는 다소 미흡함에 따라 질적측면에서의 사업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기준 지표 발굴 및 관리를 통한 사업관리 필요

□ (목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 (달성 가능성) 일부 사업 추진 어려움 및 사업 환경 변화로 달성 가능성 불확실

- 사업 목표는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실행계획'('18.4.)에 따라 '18년~'22년까지 5년간 돌봄서비스 수혜인원을 53만명(+20만명)으로 확대 추진(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사업), 그러나 일부 사업 추진 어려움 및 사업 환경 변화로 '19년에서 '20년 돌봄서비스 수혜인원 2.2만명 확대에 그침.

	'17년		확 대		'22년
학교돌봄	24만	+	7만 (초등돌봄교실, 3,500실)	⇒	34만
			3만 (활용가능교실, 지자체 협업, 1,500실*)		
마을돌봄	9만	+	10만	⇒	19만
총계	33만		20만		53만명

〈표 4-29〉 고용·교육 분야: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관련 성과지표

(단위: 만명, 개소, 점, %,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돌봄서비스 수혜인원(만명)	36		42.1			44.3					53
초등돌봄교실이용학생수(만명)	26.1	26.8	29	108.2	30.4	25.6	84.2	30.4 (29.6)*	29.5	99.7	31.0
다함께돌봄센터 개소수(개소)	17		173			424			634		
다함께돌봄센터이용자 만족도(점)	-	70	90	128.6	90	90	100.0	92 (90)*	91.6	101.8	90
방과후 아카데미 개소수(개소)						304			332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참여청소년효과 증감율(%)	22.3	22.5	22.6	100.4	22.6	22.7	100.4	19.5	20.0	102.6	20.2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참여 청소년수(명)	10,742	-	11,584		-	12,341		13,145	-		13,400

주: *코로나19 상황 고려 목표치 조정

○ 장애 요인 및 해결 방안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 활동 위축으로 신규 운영기관 확보 어려움, 돌봄교실 내 밀집도 완화 조치 등으로 학교 내 돌봄교실 활용 가능한 가용교실 부족으로 초등돌봄교실 전환 등 신규 확보가 어려운 상황, 또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대립으로 인프라 확대에 있어 당초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에 따라 '21년도의 경우 예산 집행률도 저조
- (돌봄노조) 지자체 돌봄의 위탁 운영 허용시 돌봄 질 저하 및 돌봄종사자의 고용불안 등 야기, 초등돌봄교실의 학교돌봄터 전환에 양적 축소 우려
- (교원단체) 학교돌봄터가 일부 모델에 그치지 않고 예산과 인력 확충을 통해 '지자체 운영 공적 돌봄체계'로 대전환되도록 사업 확대 요구
- 그럼에도 지역사회 기반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 확대로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 코로나19 상황에 긴급돌봄 지원 돌봄공백 방지 노력, 비대면 활동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 지속적으로 추진
- (개선사항) 학교는 아동과 부모 모두에게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돌봄장소로 기본적으로 인프라 확대를 통해 수요자 중심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유관부처를 비롯한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과 조율을 위한 지속적·적극적 노력을 통해 조속히 협의를 이루어야만 돌봄교실 확충 관련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 다함께돌봄센터의 경우 적극적 확충으로 인프라가 개선되었으나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실 등 아동·청소년돌봄 전반에 대한 수요·공급 통합관리, 서비스의 질 관리를 위한 유관 부처 및 기관과의 업무 협의 필요함. 또한, 돌봄 수요에 맞게 대상 확대 및 운영시간 개선,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운영 내실화 및 이용자 만족도는 이미 달성된 바 보다 적극적인 성과목표 설정과 지표 개발이 필요함.

2. 소득 보장 분야

가. 추진 목표 달성여부 및 달성가능성

〈표 4-30〉 5년간 분야별 추진 목표 : 소득 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23 달성 가능성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완화					○ 단계적 완화로 차질 없이 진행 중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 지속적 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
장애인 및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 '21년 목표 달성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 '21년 실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목표 달성, 그러나 개선의 여지 有
노인 일자리 확대					○ 목표 달성

나. 목표별 달성가능성 및 원인분석

□ (목표)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 완화

○ (달성 가능성) 단계적 완화로 목표 달성

-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당초 '22년 시행 예정이었던 모든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조기 완결('21.10월)
- (기초생활보장 산출기준 변경) 기준중위소득 산출 기반을 가계금융복지조사(통계청)로 통계원 변경 및 지급액 단계적 인상(기존 기준 중위소득 값과 가계금융복지조사 중 위소득 값 간의 격차 단계적 해소)

[그림 4-14] 소득 분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현황

		부 양 의 무 자		
		중증장애인 (장애인연금 수급)	노인 (기초연금 수급)	非노인·장애인
수 급 권 자	중증장애인	2017년 11월 완화		2020년 1월 완화
	노인·한부모			2021년 1월 완화
	非 노인·장애인	2019년 1월 완화		2021년 10월 폐지 (당초 2022년)

〈표 4-31〉 소득 분야: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 조정 통한 포괄범위 확대

(단위: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실적	실적	실적	목표
기준중위소득	생계 30 의료40 주거 44 교육50 이하	생계 30 의료40 주거 45 교육50 이하	생계 30 의료40 주거 45 교육50 이하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생계급여 기준선 (현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조정 검토

□ (목표)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 (달성 가능성) 단계적 완화로 차질 없이 진행

- 근로장려세제 지원 대상 및 범위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령 개정 실시하며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지원 체감도 증진,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5년후 달라지는 국민생활' 중 근로장려세제 160만→334만 가구로 지원확대 목표 달성

〈표 4-32〉 소득 분야: EITC 지급 규모

(단위: 조원, 만 가구)

구 분	2019	2020	2021
	실적	실적	실적
지급 규모	4.5	4.47	4.52
지급 인원	410	432	433

- ('19년 지급) 최대 지급액 인상(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등), 재산요건 완화(1.4억원 미만→2억원 미만),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 제도 신설 등 근로장려금 확대·재설계 추진
- ('20년 지급) 점증구간* 최소지급액 상향 조정(3만원→10만원), 홀별이가구 범위 확대(70세 이상 부모 부양 가구→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
- * (단독)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홀별이)700만원 미만 (맞벌이)800만원 미만
- ('21년 지급) 과세관청의 근로장려금 직권신청 근거 마련,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기한 단축,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 * 과세관청의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 → 15일 이내로 단축

□ (목표) 장애인 및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대상 단계적 확대

○ (달성 가능성) 달성

- 장애인 기초급여액 30만원으로 인상 대상을 전체수급자까지 확대('21.1.)
 - 단계적 인상 추진: ('19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20년)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21년) 전체수급자
- 노인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전체 지급대상으로 확대('21.1)
 - ('19.4) 소득하위 20% 수급자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20.1) 소득하위 40% 수급자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 ('21.1) 소득하위 70% 수급자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급

〈표 4-33〉 소득 분야: 장애인 및 노인 기초 연금 월 최대 30만원 단계적 확대

(단위: 조원, 만 가구, %)

구 분	2018년 실적	2019년 실적	2020년 실적	2021년		
				목표치	실적	달성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1인당 월 최대지급액	250,000원	300,000원/ 253,750원	300,000원/ 254,760원	300,000원	300,000원	100%
노인기초연금액 30만원 지급 대상자 수	-	156	325	572	594	103.8

□ **(목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달성 가능성)** 달성

- 국민·기초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괄하는 노후소득보장 범정부 협의체를 '20년부터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음.
- 2020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된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당초 계획인 2019년에 비해 늦었지만, 과업 달성을 어려움을 감안할 경우 협의체 구성을 이루어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 자체는 우수함.

○ (장애요인 및 개선사항) 다층노후소득보장 협의체는 공사연금(국민·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괄하여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각 제도별 역할 정립 등 종합적인 논의하기 위한 사항으로 각 제도별, 관련 부처별로 이해관계, 추진방향 등이 다를 수 있어 논의 및 의견 조율 등에 시간이 소요

○ 또한, 복지부의 법적 권한 부재 등으로 부처를 총괄하거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 한계점 존재

○ 연구기관 및 전문가 중심의 제도 연계 발전방향에 연구 추진 후 관련 성과를 협의체에 서 운영하는 사업내용에 대해 구체성 혹은 목표 제시 부분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음.

○ 향후 시행계획 추진단계에서는 협의체 운영 과정에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와 실제 제도개선으로의 연계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논의 계획이나 목표가 제시될 필요

□ **(목표)** 노인 일자리 확대○ **(달성 가능성)** 달성

- 노인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전과 노인의 사회참여라는 정책목표 하에 '21년까지 80만개 확충 목표로 '21년 83만 6천명으로 목표 달성

〈표 4-34〉 소득 분야: 노인일자리 창출 수

(단위: 천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노인 일자리 창출수	54.4	610	684	112.1	740	769	103.9	800	836	104.5	80만개

3. 건강 보장 분야

가. 추진 목표 달성여부 및 달성가능성

〈표 4-35〉 5년간 분야별 추진 목표: 건강 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23 달성 가능성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추진					○ 단계적으로 추진 중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 지역 필수의료 제공 관련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감염병 예방 법개정	법정감염병분류체계에 따른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 적절한 체계 마련, 추진 중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본사업	○ 시범사업 추진 중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 지자체 사업 추진 어려움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선도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 차질 없이 진행 중

주: 전문가 회의 후 '23 달성 가능성 관련 변경될 수 있음

나. 목표별 달성가능성 및 원인분석

□ (목표)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 추진

○ (달성 가능성) 단계적으로 추진 중

- 국민 부담이 큰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단계적 급여화를 통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비스 오남용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하고 과이용 징후에 대응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 계획 차질 없이 사업 추진 중

〈표 4-36〉 건강 분야: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및 비급여 본인부담

(단위: 조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건강보험 적용	상복부 초음파 뇌·뇌혈관 MRI	하복부·생식기 초음파 흉부MRI	여성생식기 초음파 두경부(안) 초음파	흉부·유방 초음파 심장 초음파	척추 MRI 근골격계 MRI 근골격계 초음파
비급여 본인부담	4.5	4.47	4.52	-	4.8

□ (목표) 권역별·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

○ (달성 가능성) 목표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필수의료 제공 및 연계를 위한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확충으로 당초 목표는 '23년까지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 지역책임의료기관 70여개 지정·육성
- 현재까지 달성된 실적 및 추세를 고려하면 '23년 목표 달성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표 4-37〉 건강 분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누적)

(단위: 개소,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목표
권역	계획수립	12	12	151.9	15	15	100	17	17
지역	계획수립	15	29		35	35		50	70

○ **(개선사항)** 지방비 집행이 사업의 실제 수행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으로 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 지방비도 예산에 따라 잘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 특히, 지방의료원 신축과 관련하여 실제 지역에 필수요를 제공할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이 보다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확보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

- 예년의 경우, 지방비 집행 저조로 인한 원인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올해 또한 지방비 집행액 확인 늦어짐에 따라 지방비 집행액 및 집행률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목표)**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른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 **(달성 가능성)** 차질 없이 추진 중

-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지역의 감염병 위기대응체계를 잘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해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시도별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확대 설치하여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하고 있음.

〈표 4-38〉 건강 분야: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른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단위: 개, %)

구 분	2019			2020			2021			2023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감염병전문병원 지정	1(17)				2			1		
시도감염병관리지원단 수(개, 누적)	11	11	100	13	17	130.8	15	-	-	-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공정률(%)	24.6	24.6	-	34.1	15	-	38.3	39.2	102.3	85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	-	98.4	-	85	81.8	96.2	86	77.6	90.2*	88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운영	-	-	-	-	-	-	2	2	100.0	지역단 위험의 체 운영 (센터별 평균 연4회)

주: *코로나19 지속 발생으로 온라인 교육과 병행하였으나 교육생 대부분이 감염병 관리 담당자로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투입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일부 교육생 미이수 발생하여 계획대비 이수율 감소

□ **(목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달성 가능성)** 달성

-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국내에 최초로 도입, 치과주치의로 확대하여 운영 중인 사업으로, '21년 추진 목표치 초과 달성하며 장애인 건강 향상에 기여
- 현재 3단계 시범사업 진행 중이며 '23년 본사업 추진에 차질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4-39〉 건강 분야: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3
	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시범사업	시범사업			100	2단계 시범사업		100	3단계 시범사업		본사업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의사수	273	350	361	103.1	450	463	102.9	550	617	112.2	700

□ **(목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달성 가능성)** 지자체 사업 추진 어려움으로 인해 목표 달성 불확실

-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으로 '23년 250개소 목표이나 지자체 사업 추진 어려움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 불확실

〈표 4-40〉 건강 분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단위: 개소)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건강생활지원센터	66	77	103	124	250

○ **(장애요인 및 개선사항)** 2023년 250개소 확충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

- 낮은 국비 지원단가로 인한 추가 지방비 소요로 지자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국비지원단가 인상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지속 협의 추진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지속
 - 신축 200만원/m², 개보수 34만원/m², (참고) '21년 공공건축물 신축 평균 단가 269만원/m²

□ **(목표)**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선도 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 **(달성 가능성)** 차질 없이 추진 중

- 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별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사항을 고려해 볼 때 목표 달성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 '17~'20년 사례관리전문인력 확충(1,370명), 전국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완료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관련 '12년~'18년 시범사업 실시 후 확대 추진 중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개발 및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 확충을 통한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를 하는 정신질환자 수 목표를 '19~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달성해 온 것은 우수한 성과

〈표 4-41〉 건강 분야: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단위: 개소,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243('17)	-	-	260	271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개 시·도	1개 시·도	7개 시·도	12개 시·도	17개 시·도 전국확대
사례관리 전문인력 신규충원	130	290	580	205	300
사례관리자 1인당 정신질환자 수	43.6	34.2	28	26(잠정)	25

○ **(장애요인 및 개선사항)** 향후 '22~'24까지 추진할 과제 내용이 지속적인 인력확충이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보 및 운용에서의 안정성 개선을 통한 예산 집행률 제고

-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불용 사유로 인력 채용 지연이 제시되고 있음. 향후 과제에서도 지속적인 인력 확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인력 확보의 안정성 및 인력 운용에서의 개선이 필요

4.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가. 추진 목표 달성여부 및 달성가능성

〈표 4-42〉 5년간 분야별 추진 목표: 사회서비스 분야

2019	2020	2021	2022	2023	'23 달성 가능성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 계획 차질 없이 추진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인프라 확대					△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나 목표치 달성 여부 불확실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서비스 기준 마련					○ 장애인등급제 폐지 후 단계적 적용 확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지속적으로 지원 확대, 사각지대 발굴 노력 필요
공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추진사항 충실 이행, 그러나 개선의 여지 有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 중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 중기적 차원에서 목표 달성 가능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 목표 차질 없이 진행 중

나. 목표별 달성가능성 및 원인분석

□ (목표)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 (달성 가능성) 계획 차질 없이 추진 중

-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을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 계획에 맞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

- 2017년 말부터 구축하기 시작해 치매안심센터 전국 확충('19년 말 기준 256개소 설치 완료) 등 치매 서비스 인프라 구축,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수* 또한 지속 증가

* 이용자수 176만명에서 2021년 399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

- '치매안심마을*' 및 '치매공공후견사업' 전국 확대 시행으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시범사업 시행(치매안심마을 2017~2018년, 치매공공후견** 2018년) 후 2019년 전국 확대 시행, 전국 256개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가 있어도 불편하지 않게 생활할 수 있는 664개 마을 조성('21)

** 적절하게 돌봐주는 가족 등이 없는 치매환자에게 의사결정을 도울 수 있는 성년후견제 이 용 지원('21년 말 기준 249명의 치매노인에게 공공후견인 지원)

- 다만 '21년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설치에 코로나19 발생으로 불가피하게(외부인출입통제) 추진 차질이 있었으나, 코로나19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취약한 노인 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 제약 상황에서 ICT기술과 접목하여 적극적으로 비대면 서비

스 활용 등

□ (목표)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인프라 확대

○ (달성 가능성) 차질 없이 진행 중이나 목표치 달성 여부 불확실

- 이용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대상자 및 급여량 지속적인 확대, 그럼에도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인원의 현재까지 실적 및 추세를 고려하면 '23년 목표치 달성은 불확실

- 외부 지적에 대한 대응(서비스 이용 시간 부족 등)이 우수하며,
- 1인 서비스 도입('21년) 및 가산급여 인상('22년)을 통한 최종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도 강화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조건을 보다 유연화하여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및 돌봄 지원체계 강화하고 있음

* 주간활동서비스: 공동생활가정 등 이용자 및 단기근로자 이용 허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초등학교생까지 이용 대상 확대

〈표 4-43〉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 발달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및 지원 인프라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3
	실적	실적	실적	실적	목표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인원	-	2,506	4,335	6,366	11,900
방과후 돌봄서비스 이용인원	-	1,965	4,123	6,241	22,000

- (장애요인 및 개선사항)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공기관 확충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나 현재 제공기관 부족, 시군구 내 제공기관 확충 필요

□ (목표)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서비스 기준 마련

○ (달성 가능성) 차질 없이 진행 중

- 장애인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하여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함.
- (1단계) 일상생활지원서비스 5종에 대한 종합조사 시행('19.7)
- (2단계) 이동지원서비스에 대한 종합조사 시행('20.10)
- (3단계) 소득·고용지원(19종)에 대한 종합조사 도입 시행
-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및 단계적 적용범위 확대'라는 기본계획의 3단계 추진 과제에 해당하는 소득·고용서비스 분야 판정체계 마련('22년)을 위하여 정책협의체 구

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협업체계 구축 등 계획대로 추진 중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등 중증장애인 소득활동종합조사 시범사업 홍보, 사업안내 등 서비스 정보 제공 관련 한계 존재
-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장애인정질환 확대 검토)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한 장애인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다만 사업 관리 차원에서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뿐 아니라, '전달체계' 개선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누락서비스 발굴 실적 등) 보완을 통한 사업 추진 및 관리 필요

□ (목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 (달성 가능성) 차질 없이 진행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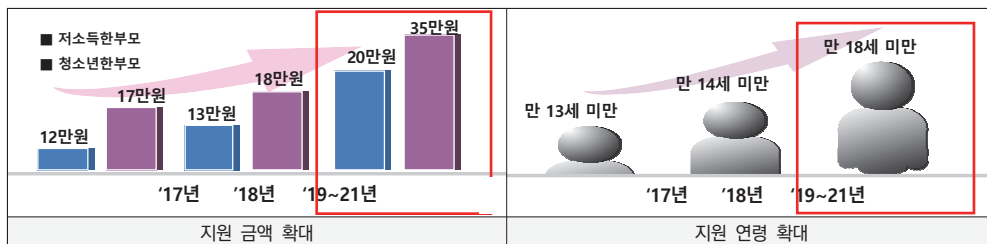
- 지원기준 아동연령 및 부모 연령의 확대, 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표 4-44〉 사회서비스 분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현황

(단위: 억원, 명)

구 분	2020	2021	2022
	실적	실적	목표
한부모지원 예산	2,615	3,067	4,213
아동양육비 인원	13,5817	187,994	약 21만 명(추정)

[그림 4-15] 사회서비스 분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현황



- (개선사항) 다만, 본 사업이 신청주의 기반 사업이므로 사각지대 파악 및 발굴을 위한 사업 관리 방안의 개선 검토를 요함.

-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지표로 수급률(수급자 수/수급대상자)을 사용하여 수급대상자 발굴을 통한 적극적 홍보와 안내할 것을 권고

□ (목표) 공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 (달성 가능성) 공적 아동보호체계 구축 추진사항 충실 이행, 그러나 개선의 여지

- 공공 아동보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개선을 위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적극 수렴, 전담요원 배치 등 중점 추진사항 충실 이행

○ **(문제점 및 개선사항)** 지역별 예산, 보호대상아동 수 등 지역 간 여건 차이가 고려되지 않아 인력배치 목표치 달성이 지연되고 있고,

-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계획을 3개년에 걸쳐 제시하고 단계적 확충을 이행하고 있는 가운데, 21년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율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
- 지자체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보호대상 아동 수 등 지자체별 수요 상황을 확인하여 인력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음.
-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만으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양질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전담인력 배치와 같은 양적 성과지표와 더불어 '학대 등의 보호대상아동 발견율'과 같은 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관리 필요

〈표 4-45〉 사회서비스 분야: 공적 아동보호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관련 성과지표

(단위: %,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적	실적	달성률	실적	달성률	목표	목표
공공아동보호 체계 구축	모든 시군구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설치	학대조사 공무원 및 아동보호 전담요원 배치 (1 단계): 571명/571명	100	아동보호 전담인력 배치(2단계)	93.5	아동보호 전담인력 전국배치 완료 (3단계)	사례결정 위원회 연평균 2회 개최
아동보호전담 요원 1인당 담당아동	-	126		80		59	

□ **(목표)**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 **(달성 가능성)** 차질 없이 추진 중

- 다양한 기관의 협업을 토대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통합돌봄 모델 개발을 위한 선도사업이 계획에 맞춰 추진,
- 지역 및 대상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계·통합적인 서비스를 연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인프라 확충이 계획에 맞춰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접근성이 높은 사회적예방적 돌봄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와 취약지역의 공적 돌봄기관인 종합재가센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표 4-46〉 사회서비스 분야: 지역사회 통합돌봄 인프라 구축

(단위: 개소,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실적	실적	실적	목표
케어안심주택 운영 모형 실증·확산	매뉴얼 개발	운영모형 마련	운영모형 실증	선도지역의 케어안심주택 공급확산
주민건강센터	77(+11)	119(+42)	161(42)	-
종합재가센터	10	25	30	-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자립생활유지율(%)	55.4	58.3	60.57	60

□ (목표)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3만호 공급

○ (달성 가능성) 차질 없이 진행 중

- 적정 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 공급과 관련 중기적 차원에서 연평균 14만호 공급('18~'21년까지 공공임대주택 70.2만호 공급 계획) 목표에 따라 공공임대 주택 연평균 14만호 공급을 수행하고 있음.
- '21년 지자체·관계기관 협의 및 보상 지연 등의 사유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달성률 저조하였으나, 중기적 차원에서 연평균 14만호 공급, 누적 공급량으로 22년까지 70.2만호 공급에는 차질 없을 것으로 판단됨.

〈표 4-47〉 사회서비스 분야: 공공임대주택 연평균 14만호 공급

(단위: 만호,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실적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목표	실적	달성률
공공 임대주택 공급	14.8	13	13.9	106.9	14.1	15	106.4	14.5	12.3	84.8
										연평균 14만호

○ (개선사항) 다만 중기적으로 성과지표 목표 달성이 이뤄지고 있으나 단기적 차원에서도 예산 집행률과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외부 요인의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적정 수요추정에 기반한 예산 배정과 집행 제고 노력 병행 필요

□ (목표)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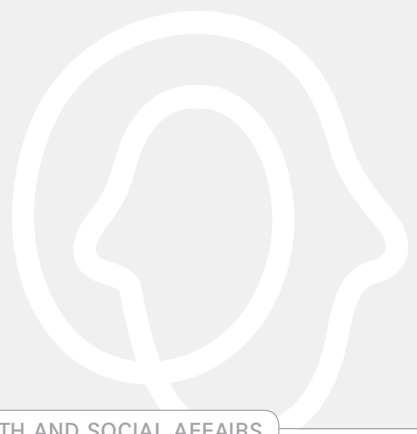
○ (달성 가능성) 차질 없이 진행 중

- 2019년 시범사업 4개소를 시작으로 '20년 11개소로 확대, '21년 신규 3개 시도(울산, 전북, 제주) 설립으로 현재까지 14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완료에 따라 '22년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목표 차질 없이 진행 중

〈표 4-48〉 사회서비스 분야: 17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구 분	2019		2020		2021		2022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사회서비스원 설립 개소수 및 서비스제 공기관 수	시범사업 실시(4개소) 서비스 제공 기관(30개)	시범사업 실시(4개소) 서비스 제공 기관(30개)	사업확대 (11개소) 서비스 제공기관 (120개)	사업확대 (11개소) 서비스 제공기관 (108개)	사서원 14개 설립 및 운영 서비스제공기 관180개운영	사서원 14개 설립 및 운영 서비스제공기 관191개운영	사회서비스 원 설립 확대(14→1 7개 시·도)

○ 22년까지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마무리되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일자리
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제5장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개선방안

제1절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제도

제2절 유사 평가사례

제3절 추진실적 평가 개선방안

제 5 장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제도 개선방안

제1절 사회보장기본계획 평가제도

1.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평가제도

[그림 5-1] 사회보장위원회의 평가제도

초기	<div>추진실적평가</div> <div>매년 이행점검에 대한 평가</div> <div>(중간평가) (종합평가)</div>	<div>기본평가</div> <div>27개 사업군</div> <div>정례적 평가</div>	<div>핵심평가</div> <div>사회적 이슈 및</div> <div>관심도 높은</div> <div>사업(매년 2~3개)</div>
현행	<div>추진실적평가</div> <div>매년 이행점검에 대한 평가</div> <div>(중간평가) (종합평가)</div>	<div>제도 평가</div> <div>중요 쟁점 관련 사업군 중심으로 평가</div> <div>평가 이전 현황 파악 필요한 과제에 대한 연구</div>	

□ 사회보장기본계획의 평가제도는 연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 점검과 제도 평가(초기에는 기본평가, 핵심평가)로 구분하여 평가 추진³⁾

- (추진실적평가)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평가는 세부과제별 사업의 계획, 집행, 성과를 점검하여, 세부과제별로 설정된 추진계획과 성과지표(부처에서 제출)를 바탕으로 연간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모니터링 기능을 함.
- (제도평가) 제도평가는 개별 정책/제도/사업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현황 분석 및 평가를 수행, 사업평가에 가까운 특징을 가졌으나 정책에 대한 효과 및 영향 평가를 필수 요소로 포함하지 않으므로 심층적인 정책 현황 분석 및 진단 기능을 함.
 - 제도평가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쟁점 관련 사업군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최근에는 평가 이전의 연구 기능으로 현황 파악이 필요한 과제 연구를 제도 평가를 통해 수행하기도 함.
- 현재는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평가와 제도평가의 투트랙으로 평가가 운영되고 있으나, 초기에는 추진실적평가, 기본평가, 핵심평가로 평가가 진행됨.
 - (기본평가) 기본평가는 사회보장 정책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기능별·생애주기별 기능(사업군)으로 분류 후, 사업군을 평가대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통평가지표를 적용하여 평가.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기인 5년에 맞추어 전 사업군을 돌아

3) 고재이 외. (2021).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보고서 일부 내용을 활용하여 재정리

가면서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삼음.

- 사회보장위원회(2015)에 제시된 주요 공통평가지표는 사업군의 포괄성(coverage)과 충분성(adequacy), 수급률(take up) 등 기본평가를 위한 공통지표에 따라 사업군 설계, 투입, 집행, 산출 및 성과 등 각 단계에 걸쳐 평가
- (핵심평가) 핵심평가는 사회적 이슈 및 관심도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매년 2~3개를 평가하는 방식
- 그러나 기존의 기본평가와 핵심평가 사이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모호해짐에 따라 현재의 투트랙 방식으로 변경됨.

□ 현행 추진실적 평가의 한계점

- (정책목표와 세부과제의 연계성) 개별 세부과제의 상위 정책 목표, 정책방향, 정책분야와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음. 세부과제와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관점에서의 관리가 미약
 - 세부과제의 추진실적과 상위 정책분야의 성과지표 간의 연동 과정에서 추진실적은 우수하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위 정책분야 성과지표의 변동이 없을 경우 외부 요인을 배제한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체계적 개선방향 도출이 이뤄져야 함.
 - 현재의 세부과제, 상위 정책 목표, 정책 방향 간 지표 자체가 연계성이 떨어지므로 인해 이러한 점검 및 진단 자체가 쉽지 않음.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 지표들로 인해 유기적 연계가 힘들([그림 4-1], [그림 4-2] 참조).
 - 시행계획 수립 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지표들과의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여 내용을 명확히 포함(개별 사업들과 기본계획의 연계성이 시행계획에 명확히 기술)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으나 쉽지 않음.
-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분별 중장기계획과의 관계성)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분별 중장기계획과의 관계 또한 모호함.
 - 현재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분별 중장기계획 간 동일한 지표의 목표 달성 시점이 상이하거나 목표 달성의 연계성이 낮음. 이들 간의 전략(핵심)지표를 기본계획 설정 당시 연동하는 작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범부처 및 다부처 성격이 강한 사회보장정책의 종합적 평가가 이뤄지기 쉽지 않음.
 - 또한 추진실적 평가에서 다부처 과제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다부처 사업의 경우 각각의 과에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 태생적 사업 추진 동력의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임에 따라 다부처 성격이 강한 사회보장정책의 유기적 연계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위원회 평가 역할이 중요
- (중간평가, 종합평가 차이) 추진실적평가는 기본계획의 연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기본계획의 중간연도에는 중간평가, 최종 연도에는 종합평가를 수행. 그

러나 현실적으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사이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별 의미를 가지지 않음.

- 주요 핵심 및 대표 성과지표를 통해 추진 성과를 추가로 점검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가짐.

- (시행계획 성과지표) 시행계획 상 부적합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거나, 무리한 결과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시행계획에 적합한 성과지표는 결과지표보다는 과정 및 산출지표가 적합한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무리한 결과지표 사용
- (평가자료 내용 충실성) 내용의 불충분, 자료 미제출 등의 충실한 평가자료의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이 필요
 - 내용의 불충분, 자료 미제출뿐 아니라 성과지표의 목표 수정이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정보 누락으로 평가 진행 도중 목표 달성도를 수정하여 평가 자료를 재제출, 평가 결과를 수정하는 경우도 존재
- (평가 결과 활용) 평가 결과의 활용에 있어 초기에는 우수 기관 표창이 이뤄졌으나 최근에는 우수 기관 표창과 더불어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수행함으로 환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 그럼에도 사회보장위원회가 부처를 견인하기 위한 수단이 미약하다는 한계를 가지며, 성과 중심의 평가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이 낮음.

제2절 유사 평가사례

1.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 (평가목적) 제4차 성과평가 기본계획('21~'25)을 통해 자율과 책임의 평가를 통한 연구현장의 성과창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
 - 근거법령: 연구성과평가법 제7조, 제8조
- 사업평가, 과제평가, 기관평가로 크게 나누어 진행됨([그림 5-2] 참조)
 - **(사업평가) 소관부처와 혁신본부에서 부처가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평가하며, 사업 추진실적 점검으로 사업개선 및 R&D 예산 배분·조정을 목적으로 함.**
 - (과제평가) 소관부처에서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를 평가하며, R&D과제 성과를 파악하고 연구과정에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기관평가) 부처·연구회 및 혁신본부에서 출연연의 연구개발사업과 기관운영에 대해 각각 자체평가와 상위평가를 진행하며 기관 역할과 책임에 따른 실적 점검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 5-2]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체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a).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정책 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p.12.

○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평가

- (평가대상 및 평가단위) 전체 정부 추진의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를 대상으로 세부사업 평가
- (평가 주기) 평가에 따라 상이하게 운영되며, 중간평가는 3년 주기, 종료평가는 사업 종료년도 다음 해에 진행. 추적평가는 사업이 종료된 후 5년 내외로 평가

○ (평가방식) 수립한 전략계획서를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중심의 정성·정량 평가 진행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경우 자체평가(추진과정, 성과, 향후계획) → 상위평가(적절/부적절)
- **(자체평가) 성과목표 달성도 중심으로 사업의 담당부처가 실시하여** 평가점수에 따라 평가등급을 3등급(우수 85점 이상, 보통 85점 미만 ~ 70점 이상, 미흡 70점 미만)으로 구분

〈표 5-1〉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항목

평가부문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추진과정	①투입, ②과제관리, ③위험관리, ④수혜자, ⑤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입-관리-환류체계 적절성 지표당 10점, 2개에서 4개까지 설정 	20~40점
성과	①질적 우수성, ②성과목표 부합성	성과목표 가중치 적용하고 정성평가	50~70점
환류계획	성과분석과 환류계획의 구체성	성과분석을 통한 개선사항 및 향후계획의 논의성, 구체성을 평가	10점
총합			100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b).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보고서 중간평가/추적평가.

- 자체평가계획을 토대로 추진과정, 성과, 향후계획에 대해 정성평가 진행.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배점한도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며, **결과 관대화 현상의 최소화**를 위해 ‘미흡’ 등급 사업 수가 ‘우수’ 등급 사업 수의 30% 이상 되도록 함.
 - (상위평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 점검으로 부처의 자체평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평가과정·근거·결과의 타당성 점검. 자체평가 등급에 따라 점점수준을 달리하고 ‘부적절’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재평가 후 최종적으로 ‘적절’ 또는 ‘부적절’ 판정**
 - (‘우수’등급 사업) 1차 점검(평가과정·근거·결과의 타당성 점검→‘부적절’ 사업은 부처가 재평가)→2차 점검(최종 ‘적/부’ 확정)
 - (‘보통’등급 사업) 1차 점검(과정 및 결과 검토→‘부적절’사업은 부처 소명)→2차 점검(최종 ‘적/부’ 확정)
 - (전략계획서 도입) '21년 신규사업부터 전략계획서를 도입하면서 자체-상위평가 체계에서 **자체평가 중심으로 전환**됨. 상위평가는 **모니터링 및 점검으로 대체**([그림 5-3] 참조)
- (평가결과 활용) 연구 성과관리 및 활용 등 확산을 위해 NTIS를 통해 평가결과 공개.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심의에 반영하고 **특정평가 후보사업으로 ‘미흡’ 사업 중에서 선정 및 관리**함.
- 성과평가 통합관리시스템(NTIS)에 성과지표 달성도 입력 여부, 목표 달성률 등을 점검하여 목표달성 미흡(지표달성도 2번 이상 미입력, 2년 연속 지표 달성률 60% 이하 등) 사업 확인
 - 자체평가 ‘미흡’, 적절성점검 결과 ‘부적절’, 목표달성 미흡 사업 중 심층평가가 필요한 사업은 특정평가 대상 사업으로 특정평가 실시

[그림 5-3] 국가연구개발 사업평가 현행 및 개선 평가절차

■ 사업평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a).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정책 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p.14.

2. 재정사업 자율평가

- (평가목적) 사업 소관부처의 재정사업에 대해 자율적 평가 및 재정운용 활용(국가재정법 제8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3조)
- (평가체계)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 → 평가결과 공개
- (평가대상 및 평가부문) 예산, 기금이 투입되는 모든 성과관리 대상의 일반재정사업으로 R&D, 재난안전, 균형발전 및 복권기금 사업은 제외됨. 51개 부처청의 단위사업을 평가
 - * 평가 단위가 현재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 단위로 내려갈 예정
- (평가주기) 1년 주기
- (평가방식) 사업 소관부처에서 자율적 수립한 지표를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
 - (평가지표) 사업내용 적정성(10), 집행을 제고 노력(30), 성과목표 달성도(40), 사업 성과의 우수성(10), 제도개선 노력(10), 감점(항목별 최대 5점), 가점(항목별 최대 5점)
 - (배점기준) 지표별 내부 배점 기준은 부처 자율 수립
- (평가결과 산출) 평가지표별 점수를 종합하여 3단계로 구분. '사업수' 또는 '예산규모' 기준으로 상대평가
 - 사업수 기준 부처는 우수 20% 이하, 보통 65% 내외, 미흡 15% 이상으로 하며 예산규모 기준 부처는 우수 20% 이하, 보통 70% 내외, 미흡 10% 이상으로 함.

-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공개,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또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3.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 (평가목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를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하여 국민체감도 제고
- (평가체계)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평가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집단이 참여하여 수행
 - 수행기관 현장 모니터링 → 만족도 조사(취업 도움 정도 등) → 정량지표 평가(사업 유형별 공통지표+특수지표 산출) → 정성지표 평가(자체평가보고서 및 설명회·협의) → 등급 부여 및 평가보고서
- (평가대상 및 평가부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평가기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직접 및 보조금 사업 단위, 사업예산은 25.5조원 규모('20년 사업예산 기준) 대상으로 평가
- (평가주기) 1년 주기
- (평가방식) 사업유형별 평가지표로 정량평가, 실적 점검 및 분석으로는 상대평가, 이후 5단계의 성과등급 부여
 - **(정량평가)** 일자리사업 유형별로 평가지표 제시. 유형은 직접일자리,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고용장려금, 창업지원으로 구분('21년 기준). **사업유형별 정량지표(분야별 공통지표+특수지표), 정성지표(사업의 중요성, 운영성과, 운영의 적절성, 제도개선 노력, 특성화 지표: 평가받는 기관이 제출)**
 - (상대평가) 사업별 성과지표, 만족도 조사 점수, 예산집행률을 동일한 비중으로 반영하여 성과등급을 도출
 - (성과등급) 단독유형의 사업을 제외하고 상대비교가 가능한 사업은 5단계(S, A, B, C, D) 성과등급을 부여함.
- (평가결과 산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 평가대상 사업 구분하여 평가보고서 작성됨. 등급 부여한 사업과 등급 없이 평가보고서만 작성되는 사업으로 구분
 - '21년 사업 수 207개(90.8%)였으며 등급 부여 사업은 169개, 등급 미부여는 38개, 미평가는 21개(9.2%)임.
- (평가결과 활용) 기초평가 결과 공개, 유사 및 중복 사업 또는 성과가 낮은 사업 정비, 예산 편성 시 조정, 사업운영의 개선방안 및 사업관리에 대한 범위 조정

4.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 (평가목적) 중앙부처 및 시도에서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해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정책

사각지대 감소 및 과제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청년의 삶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 기본계획에 따른 청년정책 확대 및 구체화를 목표로 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상호협력 및 보완하고자 함.

○ (평가체계) 「청년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침을 매년 11월 30일까지 통보. 통보받은 지침에 따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과 지자체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

- (평가 시행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청년정책평가단이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을 심의하고 외부전문기관을 분석·평가지원기관으로 선정하여 평가지표 개발, 평가 등 실시

○ (평가대상 및 평가부문) 중앙행정기관(청년정책 기본계획 관련 기관 32개) 및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17개)를 대상으로 과제 단위 평가 진행

- (중앙행정기관) 종합평가와 심층평가 실시. 종합평가는 345개 과제('21년 실적 기준)를 대상으로 평가. 심층평가는 예산규모, 청년과의 직접적 관련성, 영역별 과제 수 분배를 고려하여 10개의 핵심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 심층평가의 경우 과제 평가에서 중요 쟁점 관련 사업군 중심의 평가로 변경 예정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제출한 시도별 최대 5개의 우수과제를 대상으로 평가. '21년 실적 기준 77개 과제 대상으로 진행.

○ (평가주기) 1년 주기

○ (평가방식)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별 중점 과제에 따른 해당 정책 평가

- (중앙행정기관) 종합평가는 평가항목을 청년의 참여·중요성(15%), 청년의 삶·환경 반영도(40%), 사업계획 이행도(45%)로 설정. 이에 따라 기관별 평가자료를 토대로 국무조정실에서 종합평가를 진행함. 60명 내외 외부평가위원(청년 20명, 전문가 40명)을 구성하여 서면평가 후, 부처와 평가위원 간의 대면 질의응답 진행
- (지방자치단체) 시도별 우수과제 제출 후, 국무조정실의 종합평가 실시. 22명 내외 평가위원회(청년 7명, 전문가 15명) 구성하여 서면 및 현장 평가와 대면 질의응답 진행

○ (평가결과 산출)

- (중앙행정기관) 종합평가의 결과는 평가점수 합산하여 우수 90점 이상, 보통 70~90점, 미흡 70점 미만으로 등급을 부여. 심층평가는 평가 과제별 주요 정책성과와 문제점, 개선보완 방향 제시
- (지방자치단체) 위원별로 평가한 점수를 합산해 최우수 2개(광역시 1, 기초1), 우수

3개(광역2, 기초1) 과제 선발

-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홍보 및 청년정책조정위에 보고, 우수과제 포상 및 개선 필요과제에 대해 정책컨설팅 추진

5.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20~'24 기준)

- (평가목적)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실효성 제고와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 (평가체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평가 안내를 통해 평가방식과 지표를 사전 안내함. 평가자문단이 1차평가를 서면평가로 진행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검토 및 결과의 편차를 조정함. 이후 2차 평가를 통해 평가자문단이 본평가를 진행. 해당 결과에 대해 지자체에서 소명자료 제출하고 이를 평가자문단이 검토하여 최종 평가결과 확정
- (평가대상 및 평가부문) 1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교육청)
- (평가주기) 1년 주기
- (평가방식) 5년간('20~'24) 동일한 평가항목 및 지표로 평가하며 평가지표 공개로 시행계획 성과달성에 이행력을 제고
 - (평가지표) 중앙정부의 평가지표는 평가기준을 제시한 정성지표가 대부분이며, 계량화 가능할 경우 정량지표 평가 진행. 지방자치단체는 평가영역을 계획수립의 적절성(3), 이행의 충실성(2), 성과달성도(9)로 구분. 각 영역별 평가지표의 기준으로 정성 및 정량지표 평가
 - 평가지표에 대해 연차별 배점을 달리 적용. 초기에 비해 후기 평가로 갈수록 계획수립 관련 평가영역의 배점은 낮추고 성과달성도의 배점을 높이는 방식
- (평가결과 산출) 각 평가지표별 5단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배점. 배점기준은 영역별 특성을 고려한 기준임. 평가영역별 점수 합산 시 총 100점
- (평가결과 활용) 내년 시행계획 반영을 통한 시행계획 개선, 우수한 결과를 받은 시·도에 인센티브 제공, 지표별 우수한 결과의 시·도 공개,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사례 공유

〈표 5-2〉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20~’24) 중앙정부 평가지표 및 연차별 배점(안)

(단위: 점수)

평가영역	지표유형	2020	2021	2022	2023	2024
1. 계획수립의 적절성		20	20	10	10	10
1-1.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정성지표	10	10	5	5	5
1-2. 사업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	정성지표	10	10	5	5	5
2. 이행의 충실성		30	30	30	30	30
2-1. 추진계획 이행의 충실성	정성지표	15	15	15	15	15
2-2. 예산집행률	정성지표	15	15	15	15	15
3. 성과달성도		50	50	60	60	60
3-1. 성과지표의 타당성	정성지표	15	15	15	15	15
3-2. 성과지표 목표치의 적정성	정량지표	15	15	15	15	15
3-3. 성과지표 목표치의 달성정도	정성지표	20	20	30	30	30
총점		100				

자료: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편람.

〈표 5-3〉 타 평가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목적	사업추진실적 점검으로 사업개선 및 R&D 예산 배분·조정	재정사업 소관부처의 자율적 평가 및 재정운용 활용	일자리 관점에서 평가 및 국민 체감도 제고
대상	정부 추진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추진 부처	예산 및 기금 투입의 모든 성과 관리 대상 일반재정사업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수행기관
단위	부처 세부사업	51개 부처청 단위사업	직접 및 보조금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25.5조원 규모 (24개 부처, 207개 일자리사업)
평가주기	(중간평가) 3년 주기 (종료평가) 사업종료 다음 연도 (추적평가) 사업종료 5년 내외	1년 주기	1년 주기
평가체계 및 절차	소관부처 (피평가자) → 혁신본부 (평가자) 기획 전략계획 수립 → 점검 수행 (중간평가) 자체평가 → 모니터링 종료 (성과관리활용) 계획수립 → 점검 활용 (효과성 분석) 분석보고서 → 점검	부처별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 자체평가 → 평가결과 공개	고용노동부 주관의 평가위원회 및 외부 전문가집단 참여 및 수행 수행기관 현장 모니터링 → 만족도 조사 → 정량지표 평가 → 정성지표 평가 → 등급부여 및 평가보고서
평가방식	(자체평가) ① 추진과정 (투입, 과제관리, 위험관리, 수혜자, 환류) ② 성과 (질적 우수성, 성과목표 부합성) ③ 환류계획 (성과분석, 계획구체성) (상위평가)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 적절 또는 부적절 판정	사업 소관부처의 수립한 세부 평가지표를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확정 (평가지표) 사업내용 적정성(10), 집행률 제고 노력(30), 성과목표 달성도(40), 사업 성과의 우수성(10), 제도개선 노력(10), 감점(항목별 최대 5점), 가점(항목별 최대 5점)	사업유형별 정량지표(분야별 공통 지표+특수지표) , 정성지표(사업의 중요성, 운영성과, 운영의 적절성, 제도개선 노력, 특성화 지표: 평가 받는 기관이 제출), 실적 점검 및 분석(상대평가), 이후 5단계의 성과등급 부여 (정량평가) 사업유형별 지표(5가지) + 사업 집행률 + 만족도

구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상대평가) 사업별 성과지표 + 만족도 + 예산집행률의 동일비중 성과등급* 도출 *성과등급: 상대비교 사업 대상만
평가결과 산출	평가점수에 따라 3개 등급 부여 (우수, 보통, 미흡*) *미흡등급 사업수 = 우수등급 사업수의 30% 이상	평가지표별 점수 종합의 상대평가 (사업수 기준) 우수(20% 이하), 보통(65% 내외), 미흡(15% 이상) (예산규모 기준) 우수(20% 이하), 보통(70% 내외), 미흡(10% 이상)	(평가대상 사업) 평가보고서 및 등급 부여 *성과등급(S, A, B, C, D) (평가대상의 단독유형 사업) 평가보고서 작성
평가결과 활용	평가결과 공개, 예산 심의 반영, (미흡사업관리) 특정평가 후보 사업으로 미흡등급 사업 증 선정 및 관리	평가결과 공개,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또는 제도개선방안 마련	과제별 평가등급 및 기초평가 결과 공개, 예산 감액 및 통폐합, 사업 개선방안 및 관리 범위조정

〈표 5-4〉 타 평가사례: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구분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아동정책 시행계획 평가	
목적		청년 대상 정책 사각지대 감소 및 과제별 개선방안 모색을 통한 청년의 삶 개선 기여		아동정책기본계획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정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	
대상		중앙행정기관(32개), 지방자치단체(17개)		중앙행정기관(15개), 시·도 및 교육청(17개)	
단위		사업(직접·보조금사업)		13개 부처, 144개 아동정책 세부과제(과제평가)	
평가주기		매년		매년	
평가 체계 및 절차		청년정책평가단(전문가 집단) : 평가지표, 평가결과 등 심의 분석·평가지원기관(외부전문기관) :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진행		평가안내(보건복지부·아동권리보장원) → 1차 서면평가(평가자문단) → 검토 및 결과 편차조정(아동권리보장원) → 2차 본평가(평가자문단) → 이의 제기 및 소명(지자체) → 이의제기 검토(평가자문단) → 평가결과 확정(보건복지부)	
평가 방식	평가 항목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종합평가(%) 참여·주도성(15) 삶·환경반영도(40) 사업계획이행도(45) 삶의 질 개선효과 (가점 5%, 정량/정성)	시도별에서 우수과제 선출 제출 후, 평가위원회(청년 7명, 전문가 15명)의 서면 및 현장 평가, 대면 질의응답 진행	정성지표(6), 정량평가(1) 1. 계획수립의 적절성 : 기본계획과의 부합성(정성), 사업내용과 추진전략의 적절성(정성) 2. 이행의 충실성 : 추진계획 이행의 충실성(정성), 예산집행률(정성) 3. 성과달성도 : 성과지표의 타당성(정성), 목표치 적정성(정량), 목표치 달성정도(정성)	정성지표(10), 정량지표(4) 1. 계획수립의 적절성 (3개 지표: 정성지표) 2. 이행의 충실성 (2개 지표: 정성지표) 3. 성과달성도 (9개 지표: 정성5/정량4)
		심층평가 사업의 적절성 및 필요성 집행과정 사업성과			
평가 결과 산출	(종합평가) 우수(90 이상), 보통(70~90), 미흡(70 미만)	최우수 2개(광역1, 기초1) 우수 3개(광역2, 기초1)	(평가지표별 등급 부여)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부여 (평가영역별 점수 합산) - 합산 시 총 100점, 정성평가로 배점구간 있을 시, 정수로 점수 부여		
	(심층평가) 주요 정책성과 및 문제점, 개선보완 방향 제시				
결과 활용		(홍보 및 보고) 평가결과 국민홍보 및 청년정책조정위 보고 (포상 및 컨설팅) 우수과제 포상, 개선 필요과제 정책컨설팅 추진		(시행계획 개선) 내년 시행계획 반영을 통한 시행계획 개선(인센티브 제공) 우수 시·도에 인센티브 제공, (우수사례 확산) 우수 시·도 공개, 사업 추진 및 사례 공유	

제3절 추진실적 평가 개선방안

- 평가제도는 고유의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설계될 수 있음.
 - 재정사업 평가의 경우 각 사업부처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되, 사업의 단기, 중장기 목표를 평가하기 위해 예산 집행, 계획된 목표의 달성여부, 사업 성과 정도 등 3개의 평가항목으로 단순화되어 있으며,
 -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다른 유사 사업들과의 중복성 문제 등 사업 기획 및 설계 단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평가의 경우 과제별 예산 감액 및 통폐합을 위한 상대적 평가 결과 도출을 위해 사업유형별 공통 지표 개발을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는 사업추진실적 점검으로 사업개선과 R&D 예산 배분·조정을 평가 목적으로 함에 따라 사업의 수행단계에서 자체평가를 중심으로 사업 수행단계를 평가, 자체 평가의 적절성 점검 및 모니터링으로서 상위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 **(평가 목적의 명확성)**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제도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여 평가 목적 및 범위 설정을 통한 평가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여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평생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협업과 소통으로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들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기 위해 존재함.
 - 사회보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사회보장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평가제도는 범정부적, 다부처 정책의 성격이 강한 사회보장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평가, 사회보장정책의 전체적인 균형과 조정이 가능한 방향으로의 평가가 중요. 이를 위한 최소한의 거버넌스 구조 및 위상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사회보장기본계획은 부분별 중장기계획과 모호한 관계를 가지며 연계성이 낮음. 그러나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최상위 계획으로 그 위상을 명확히 설정할 근거는 충분히 가지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17조(다른계획과의 관계),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4조(다른 계획과의 관계)에 따르면 기본계획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우선하며 그 계획의 기본이 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함.
 - 현재의 세부 과제별 평가에서 나아가 거시적 차원에서의 사회보장 전반의 균형과 조정이 가능한 평가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 주요 과제의 경우 다수의 평가를 이미 받고 있음에 따라 사회보장위원회의 추진실적 평가에서 이행 점검 등과 같은 평가를 강

화하는 것보다 다부처 성격이 강한 사회보장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의 평가 방식 고민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의 변화가 중요

-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실적평가를 통해 기본계획의 중기적 성과 점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성과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나, 제1차 기본계획은 성과지표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측정하기에 필요한 근거자료가 수집되지 않았고,
- 제2차 기본계획은 개별 세부과제의 상위 정책 목표, 정책방향, 정책분야와의 연계성이 명확하지 않음. 즉 세부과제와 정책 목표와의 연계성 관점에서의 관리가 미약했음. 또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분별 중장기계획과의 관계가 모호
- 현재 수정 사회보장 기본계획 안에서는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최상위 계획으로서 정책 의제 중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부분별 중장기계획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의제 중심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계획 중. 그리고 기본계획의 의제 성과를 측정하는 정책지표와 부분별 중장기계획의 전략 수준 지표를 연동하여 계획 간 연계를 강화하고자 계획 중에 있음.

○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분별 중장기계획과의 관계성 명확히 설정, 연동되어야 하며 사회보장기본계획 내 개별 세부과제의 상위 정책 목표, 정책방향, 정책분야와의 연계성 관점에서의 관리 필요

- 세부과제의 추진실적과 상위 정책분야의 성과지표 간의 연동 과정에서 추진실적은 우수하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상위 정책분야의 성과지표에는 변동이 없으면 외부 요인을 배제한 원인에 대한 진단 및 체계적 개선 방향 도출이 이뤄져야 함.

□ **(자체평가+모니터링)**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은 성과관리에 필요한 자료 수집·축적을 목적으로 한 자체 평가에 중점을 두며 자체 평가에 대한 적절성(적/부)을 점검,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중기적 관점에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시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표 및 성과관리 방안으로의 평가 및 점검 필요

○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에서 개별 과제 평가는 자체평가를 통해 관리(이행 점검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자료 수집·축적에 중점)하고, 전문가 평가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상위 목표와 성과지표 중심의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평가 추진

- 자체평가(추진과정:문제점,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성과:성과지표*, 향후계획) → 모니터링(자체평가의 적절/부적절, 성과지표 중심의 모니터링)

* 사회보장정책의 특성상 시행계획에 적합한 성과지표는 무리한 결과지표보다 오히려 과정 및 산출과정에서의 지표 구축이 주요 정책 영역 내의 보장 수준의 충분성(adequacy), 보장 대상의 정확한 타게팅(targeting), 보장의 형평성(equity) 등을 진단하기 위한 데이터 생산으로서 더 적합할 수 있음.

[그림 5-4]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시행계획 추진실적평가 변경 안

현행	추진실적평가 매년 이행점검에 대한 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제도 평가 중요 쟁점 관련 사업군 중심으로 평가 평가 이전 현황 파악 필요한 과제에 대한 연구
변경안	추진실적평가 매년 이행점검에 대한 자체 평가 (자체 평가에 대한 적절성 점검) ↓ 모니터링 (중간평가) (종합평가)	제도 평가 사회적 이슈 및 관심도 높은 사업 (유사중복/사회환경변화 등 주요쟁점에 따른 선정) + 추진실적평가의 실적부진사업 연동

- 대표적인 유사 평가사례로 앞서 살펴본 과학기술 부문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를 참조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경우 자체평가(추진과정, 성과, 향후계획) → 상위평가(적절/부적절)
- 자체평가 결과에 대한 적절성 점검으로 부처의 자체평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평가과정·근거·결과의 타당성 점검. 자체평가 등급에 따라 점검수준을 달리하고 '부적절'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 주관으로 재평가 후 최종적으로 '적절' 또는 '부적절' 판정

〈표 5-5〉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자체평가 적절성 점검 항목 및 기준

항목	기준	평가방법
자체평가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 • 자체평가 형식요건 준수 여부 • 사업별 종합적 성과분석을 통한 평가 객관성 확보 	적절/부적절
자체평가 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자료의 충실성 • 평가 의견의 구체성·명확성 	
자체평가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급부여의 타당성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b).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보고서 중간평가/추적평가

- **(성과 중심에서 내용 중심으로의 자체평가)** 현재 추진실적 평가와 같이 모든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검토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성과 중심의 평가에 초점이 맞추어진 경우 행정상의 업무 부담뿐 아니라 결국 평가를 위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 과제 수행의 문제점, 장애요인(애로사항), 개선사항, 후속조치 계획 등에 대한 내용 중심으로의 점검이 필요함.
- 현실적으로 매년 시행되는 평가에서 정책 개선 내용까지의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는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을 낮추는 것으로 귀결됨. 사업에 관해 가장 잘 아는 것은 결국 담당부서임에 따라 매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자체평가의 내실화 및 충실성 확보를 우선하여 추진실적의 확인·점검을 통해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장애요인, 그리고 과정 및 산출 수준 성과지표에 관한 정보 구축에 초

점을 두는 것이 적절

- **(자체평가의 충실성 확보)** 평가의 기초는 평가자료 내용의 충실성에 달려있음. 특히 자체평가를 활용한 내용 및 정보 축적, 그리고 이를 통한 모니터링에 있어서 평가자료 내용의 충실성은 더욱 중요한 문제임. 명확하고 엄격한 자체평가 기준 마련을 통해 질 높은 자료 확보를 위한 절차 및 내용의 구체성 등 자체평가를 내실있게 할 수 있는 방안(유인책) 필요

- 부처 자체평가의 충실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나, 현재는 이러한 장치가 미약한 상황임. 충분한 평가자료 수집 없이 자체평가가 이루어지거나, 평가 기준의 올바른 적용 없이 이뤄질 경우 실질적 평가로 보기 어렵고, 현재 이 부분에서 취약한 상태이며 전문가 평가와 비교해도 자체평가 관대화 경향이 높음.
- 과학기술 부문의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는 결과 관대화 현상의 최소화를 위해 '미흡' 등급 사업 수가 '우수' 등급 사업 수의 30% 이상 되도록 함.
- 평가자료로 부처에서 작성한 평가자료를 활용함에 있어 작성한 자료에 대한 근거자료를 첨부자료로 보완 필요. 또한 내용의 불충분, 자료 미제출 등의 충실한 평가자료의 확보를 위한 절차 보완 필요. 자료 충실성 보안을 위해 기존 가용자료(성과보고서 등 관련)를 활용하여 평가 참고하는 안도 있음. 부처에서의 피로감도 있고 실제 평가 객관화, 질적 제고를 위해서도 타 평가 결과 활용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모니터링)** 부처의 자체평가에 대해 현재와 같이 동일하게 재평가하기보다 내용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정보 충실성을 목적으로 부처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과정·근거·결과의 타당성을 적절/부적절 수준으로 점검, 자체평가에서 구축된 정보를 통한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방향으로의 평가. 그리고 중간평가(3년차)와 종합평가(5년차)에서 사업 또는 과제별 개별 평가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목표 또는 정책분야별 성과지표와 매년 구축된 정보 활용을 통한 성과관리 방향으로의 점검

- 추진실적평가는 기본계획의 연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며 기본계획의 중간연도에는 중간평가, 최종 연도에는 종합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중간평가와 종합평가 사이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별 의미를 가지지 않음.
- 주요 핵심 및 대표 성과지표를 통해 추진 성과를 추가로 점검한다는 정도의 차이만 가짐.
-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단년도 시행계획들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성과지표체계 및 이들 지표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추진실적 자체평가 자료, 시행계획, 기본계획의 성과지표들을 활용
- **(종합평가)** 현재 대표 성과지표를 통해 추진 성과를 점검하는 수준의 종합평가가 아닌 평가결과 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평가로 변경. 기본계획의 최종 연도에 사회보장제도라는 측면에서 충분성, 형평성, 보장 대상의 정확한 타게팅 등에 관한 지표 도출을

통해 중기계획 수립의 출발이 되는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 영역은 주요 정책 영역별 보장 수준의 충분성(adequacy), 보장 대상의 정확한 타게팅(targeting), 보장의 형평성(equity) 등에 대한 평가가 중요. 동시에 사회보장제도가 소규모로 파편화되어 도입되어온 경향이 있으므로, 정책 간 관계 분석을 통한 제도의 재구조화 및 효율화시키는 작업이 이뤄져야 함. 이런 측면에서 초기 기본평가에서 활용한 공통평가지표들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자체평가를 통한 자료의 충실성이 보완된다면 연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주요 정책 영역 내의 충분성, 표적화율, 형평성을 진단하기 위한 데이터 생산, 주요 정책 간의 분절화·중첩·중복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임.

○ **(모니터링을 위한 성과지표 관리)** 성과관리 실효성 향상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성과정보 생산,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가 중요.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연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 평가자료, 시행계획, 기본계획의 성과지표들을 활용한 지표의 관리 필요

- 사회보장정책 성과지표는 지나치게 많은 지표들로 인해 유기적 연계가 힘들. 실제 추진실적 중간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성과지표는 개별 사업별 성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유기적으로 통합하여 정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
- 호주의 사례에서 보면 파편적으로 수행되는 지표들을 유기적인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 관점에서 활용.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과지표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성과지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혹은 성과지표 풀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정책 유형별 가이드라인 제공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그렇게 되면 기존 데이터를 저장하는 차원이 아닌, 부서 수준에서는 다양한 지표를 접하고 이해 및 활용함으로 역량을 축적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표를 손쉽게 검색하고 좀 더 종합적 관점에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또한 시행계획 상 부적합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있거나, 무리한 결과지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성과지표는 정책의 최종목표를 염두에 뒀서 가능하면 결과(outcome)와 관련한 성과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나 사회보장정책은 정량지표만으로 실적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무리한 결과 지표, 양적 지표 개발로 인해 오히려 다양한 질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사회보장정책의 특성상 시행계획에 적합한 성과지표는 무리한 결과지표보다 오히려 과정 및 산출과정에서의 지표 구축이 주요 정책 영역 내의 충분성, 표적성, 형평성을 진단하기 위한 데이터 생산으로서 더 적합할 수 있음.



- 고제이, 이아영, 하슬임, 박소은, 안영, 이동진, 유경원, 윤홍식, 황진태, 이재민, 박노옥, 박희대. (2021). 사회보장 재정 위기 감지 및 대응을 위한 분석적 기반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a). 2021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정책 수립 및 성과평가 실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2b).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상위평가 보고서 중간평가/추적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관계부처협동. (2021).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2021년도 시행계획. 관계부처협동.
- 관계부처협동. (2022).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19~'23) 2022년도 시행계획. 관계부처협동.
-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022년(21년 실적) 청년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발표. 국무조정실 보도자료(2022.6.30.).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14266>
- 김문길, 김태완, 여유진, 김미곤, 임완섭, 황도경, 정해식, 오미애, 김기태, 정세정, 이원진, 김성아, 이주미, 신재동, 최준영, 홍성운, 박형준, 윤상용, 김민희, 이길제, 김정훈, 송치호. (2020). 2020년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및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부. (2019).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 아동정책시행계획 평가편람.
- 한국교육개발원. (2022.5). 교육통계연보.



[부록 1]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1-1-1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교육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국공립 유치원 취원을 40%라는 기본계획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2021년 500학급 신증설 목표 설정 - 과제목표와 내용이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고 구체적이고 명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비예산 사업으로 2021년 국공립 유치원 신증설 목표치 대비 2배 이상 상회하는 성과를 도출
	예산 집행실적			
	사업 관리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국공립 취원을 제고를 위한 시도교육청 담당자와의 협의회 개최, 공립유치원 신증설 추진 실적 점검을 통해 적절하게 사업을 관리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과제목표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실질적인 사업추진 성과를 대표하고 있으며, 과거 실적을 고려했을 때 도전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였음 - 연도별 학급증설 목표치를 상회하는 사업추진 성과를 보였으나, 국공립 취원을 목표치인 40%에 미달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가정 내 돌봄수요 증대 등의 예외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추진 판단
	사업 우수성			- 2021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신증설 목표 대비 2배 이상 상회한 총 1030학급 확충 - 소규모 유치원시설의 공립유치원 분원장 활용 등의 제도개선(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 '21.7.)을 통해 학부모 수요 대응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국가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국공립유치원 취원을 40% 달성

을 목표로 하여 매년 국공립유치원 500학급 이상 확충하고 유아대상 방과후 과정 운영 및 통학버스 운영확대 등 유아교육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2021년 성과목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31% 달성, 목표치 40%에 미달하였으나, 전년도 실적 29.8% 대비 1.3%p 상승
-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학급수 목표 2배 이상 초과달성

□ 우수한 점

- 학급 당 유아수 감축, 출생률 저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 등 빠른 취원율 확대 추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신·증설 국공립유치원 학급수 목표치 대비 2배 이상 확대하였고, 성과목표인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전년 대비 1.2%p 상승한 31%를 달성하였음
-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하여 국공립유치원 방과후 학급수 확대 및 광역통학권 이동 지원을 위한 통학버스 운영 확대('20년 대비 82대 증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내실화 지속 추진 필요
 - ⇒ (권고안)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실질적인 취원율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학부모 수요변화(비대면 서비스 선호도 증감 등 고려)에 대응하여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 과제를 지속 추진할 필요
-

1-1-2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등 보육, 교육투자 확대(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유아반 보조/연장보육교사 배치율 27% 달성이라는 과제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교사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과제목표와 내용이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고 구체적이고 명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되었고, 지자체 집행을 관리를 통해 예산 집행을 100% 달성
	예산 집행실적			
	사업 관리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 지침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협업기관 간 역할 배분, 인력 배치 현황 및 집행실적 점검 등 사업을 적정하게 관리하였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대표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고, 장애요인을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으로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음- 2021년 목표치 대비 107.8% 초과 달성하였음
	사업 우수성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어린이집 보조/연장 보육교사 지원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수당 지급을 통해 공보육 서비스 개선을 목적으로 함
- 어린이집의 보조/연장보육교사 수요 대비 지원 인력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연도별 인력 확보 계획을 원활히 이행

□ 우수한 점

- 보조/연장 보육교사 전년 대비 9천명 확대 지원, 보육교사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이용 지원을 위한 대체교사 700명 확충, 연도별 추진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
- 계획된 인력 확보 및 채용을 위하여 장기미종사자 교육비 지원 등 적극적인 사업관리 노력이 인정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보다 도전적인 성과목표치 설정 필요

- 보조/연장보육교사 지원 인원 부족이라는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성과목표 초과달성이 지속
- 2023년 성과목표가 과제목표치(27%)에 미달하는 26.7%로 설정되어 있음

⇒ (권고안) 기본계획 마지막 연도에 과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권고함

1-2	기초학력 보장(교육부)
-----	--------------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본 과제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 추진사항은 집행 계획상 절차와 일정에 따라 이행 - 다만 예산집행 실적과 관련하여 일부 미달성 항목 존재 · 기초학력 관련 특별교부금은 전액 집행 완료 · 국고사업 일부에서 입찰에 따른 불용액 및 튜터 추가 채용 어려움에 따라 집행실적이 부진하여 개선 필요
	예산 집행실적			
	사업 관리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시도교육청 기초학력 담당자 워크숍 등 사업 추진계획, 우수사례 공유 및 협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행 - 기초학력 사업 추진상황 현장점검 및 컨설팅 진행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로 기초학력 향상도 도달 비율을 설정하였고, 이는 실제 달성한 성과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대표성이 인정 - 목표 달성률은 99.4%로 목표치를 근소하게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대면수업 지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노력으로 전년대비 실적보다 개선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사업 우수성			- 수업 내 지원인 기초학력보장 선도·시범학교 확대 및 두드림 학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등 학교 내·외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안전망 체제를 강화 - 「기초학력보장법」 제정으로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 및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라인 튜터 배치, 원격·대면 병행지도 등 사업운영의 노력 인정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 본 과제는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3단계 안전망 체제를 내실화 하였고,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초학력 부족 부분 보정 등 사업운영의 적극성이 인정됨
 - 성과지표와 과제목표간 연계성과 대표성은 인정되나,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
 - 우수한 점
 - 사업 추진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던 「기초학력보장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체계적 근거 마련
 - 전담기관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및 지원 강화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목표치의 적극성 및 도전성 필요
 - ⇒ (권고안) 학교별 기초학력 부족 학생수 및 부족 수준이 등이 매년 달라져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3년 평균치의 목표 설정은 도전성이 다소 부족하여 적극적 목표치 부여 필요
-

1-3-1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교육부)

□ 최종 평가 등급: 개선필요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돌봄 수요 대응,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 강화하기 위해 초등돌봄교실 확충과 지원 인원 확대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 분기별 계획에 따른 사업 집행과 추진실적 확인. 그러나 시설확충 등 관련 예산 집행률(63%)이 낮아 개선 필요
	예산 집행실적			
	사업 관리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현장방문 등을 통한 모니터링, 유관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 지속적 사업관리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기제출 시행계획 따르면 성과목표치는 30.4만명이나 29.6만명으로 하향조정하여 99.7%를 달성 -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목표치 조정 고려(*목표치 조정 근거, 사유 확인), 정상추진 등급 부여
	사업 우수성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초등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 접근성이 높은 학교 기반 인프라 구축
최종 등급				개선필요

□ 총평

- 접근성이 높은 학교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해 초등돌봄 수요에 적극 대응, 인프라 확대를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 협업 등 사업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예산 집행과 사업 성과에 있어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음.

□ 우수한 점

- 학교 기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은 아동과 부모, 정책수요자 측면에서 접근성이 높고, 이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 제공 가능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돌봄노조와 교원단체의 의견 대립으로 인한 돌봄교실 확대 및 예산 집행상의 실적 저조

⇒ (권고안) 유관부처를 비롯하여 돌봄노조와 교원단체, 학부모 등의 의견 수렴과 조율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지속적으로 수행

1-3-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방과후 돌봄 필요 아동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 육아부담 경감 목표에 부합하는 과제 내용임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세부 시행계획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 예산 99.9% 집행
	예산 집행실적			
	사업 관리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담당공무원, 종사자 의견수렴,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지원 계획 마련, 유관부처와 지자체 간 업무 협의 등 지속적·적극적 사업관리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이용자 대상 만족도 기반 목표치 설정, 100% 초과 달성
	사업 우수성			- 7대 영역 40개 항목으로 구성된 지표를 100점 환산하여 만족도 평가. 이용자 대상 매년 90점 이상 만족도를 보고하여 사업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 있으나 그만큼 편향될 수 있으며, 향후 정책성과 측정을 위한 성과지표 개선 필요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다함께돌봄센터 634개소 설치, 운영으로 지역내 공적돌봄 서비스의 공급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하였고, 500세대 이상 주택단지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를 제도화하여 지속적 인프라 확충 및 긴급, 방과후 돌봄 공백 예방 효과 기대

□ 우수한 점

- 담당공무원, 종사자 의견수렴, 인건비 및 운영비 추가지원 계획 마련, 운영시간 연장 시범 사업 마련 등 사업개선을 위한 지속적·적극적 노력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이용자의 만족도를 다영역에서 조사하고 있지만, 90점 이상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으므로 사업 개선을 위한 성과목표 설정과 지표개선 필요

⇒ (권고안) 수요(돌봄필요아동) 대비 공급률(인프라 구축), 500세대 이상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율 등의 새로운 성과목표 설정 권고

1-3-3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여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방과후 돌봄·활동을 필요로 하는 청소년 (초4~중3)을 대상으로 학습지원, 체험활동 지원 등을 통해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하였으나,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신규기관 개소 지연 등으로 예산 불용액 발생(96.4% 집행)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업 현장점검 등 모니터링, 관련 부처와의 협업 등 충실히 이행 *점검결과 상 문제점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없었는지 확인 필요(해당 정보 누락)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목표치 달성률이 102.6%인 것은 (전년대비)목표치를 낮게 설정했기 때문으로 판단. 보다 상향 조정된 목표치 설정,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단,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정상추진 등급 부여
	사업 우수성			- 코로나19로 인한 휴교·휴업 상황에서 비대면 활동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여 방과후 활동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감염병 상황에 대처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지속적인 코로나19 상황에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청소년 대상 공적 돌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돌봄사각지대 해소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하여 정상추진 등급 부여

□ 우수한 점

- 감염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수요자 중심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 노력, 청소년돌봄 인프라 확충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상향 조정된 목표치 설정, 적극적인 사업 추진 필요
⇒ (권고안)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고, 이용자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프로그램 지속 개선
 - 본 사업은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는 청소년(초4~중3)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관련 의견수렴과 점검 과정에 당사자를 참여시킬 것을 권고함

1-4

고교 무상교육 실시(교육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가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부합- '21년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실시 완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 안정적 실시('21.3월) 및 교부금 교부, 현황 점검 등 계획대로 이행- '21년 예산 집행을 100%로 정상추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교육청 무상교육 정상 실시 여부 및 현황 점검, 차년도 예산 편성 현황 등 모니터링 실시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년 2학기부터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 계획에 따라 '21년 3월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시행하여 목표 달성 완료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으로 확대하여 가계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공평한 교육기회 보장과 가계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고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시행하는 사업으로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추진 완료로 기본계획 과제목표 달성 완료
- 향후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및 학교와의 긴밀한 협업 관계 필요

□ 우수한 점

- 국정과제 추진계획('22년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완성) 대비 1년 앞당긴 '21년 고교 전 학년 무상교육 추진 완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1) '25년 이후 지방교육재정 수요 및 여건 등 소요예산 및 재원 확보 방안

대한 면밀한 분석 필요

⇒ (권고안) 학교 유형별 등록금 단가, 미래 학령 인구 수 추정, 자원 조달 방식 등 다각적,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소요 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

○ (개선요인 2) 사업 관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는 무상교육 확대와 제도 도입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관계자 협의 및 시행 현황 모니터링만을 수행해왔음

- 전 학년 무상교육을 달성하였으므로 향후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 및 내실화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시·도교육청, 학교 및 유관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
 - 특히 향후 구체적인 자원 확보 마련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가능성 존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유관기관 간의 협업 체계 강화 필요
-

1-5	대학등록금 부담경감(교육부)
-----	-----------------

□ 최종 평가 등급: 우수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본 과제는 대학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이자 경감 등을 통해 가계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교육기회의 보장에 기여하며 기본계획과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추진사항 모두 집행 계획상 절차와 일정에 따라 이행 - '21년 예산 집행을 99.5%로 정상추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대학원생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지원제도 도입 의견수렴을 통해 지원 요건,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22년부터 해당 제도 도입 - 교육부, 국세청, 장학재단의 ICL 상시협의체 운영 및 교육부, 금융위, 장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협약 체결을 통해 다중채무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는 등 긴밀한 협업 노력 인정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 가구원 수를 반영하는 소득산정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 제고하는 등의 조치 및 개선 노력 인정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학부생 1인당 학비부담 경감액' 실적치 217만원으로 목표치(204만원) 대비 달성률 106.4%로 초과 달성
	사업 우수성			-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에 기여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 및 동결하여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ICL 상환기준소득을 인상하여 청년층의 상환부담 최소화 - '09년 이전 고금리 대출자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 ICL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등 정책 수혜 범위 확대
최종 등급				우수

□ 총평

-
- 본 과제는 대학등록금 및 학자금 대출 이자 경감을 통해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최소화하고 교육기회의 보장에 기여
 - 시장의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2학기 대출금리를 동결하여 가계의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
 - 적시성 있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정책 수혜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고, 다양한 성과를 창출한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
 - 다만 단일지표의 성과지표가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성 과를 대표하기 부족하여 지표 변경 또는 보완이 필요

□ 우수한 점

- 국가장학금의 등록금 절반 이상 수혜 비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부모의 실직·폐업 등 긴급 경제사정 곤란 대학생에게 국가장학금을 추가지원하여 교육기회 보장에 기여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방식에 대해 가구원 수를 반영하는 소득산정체계를 구축하여 지원 대상 선정의 형평성 제고
-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을 통해 ICL 지원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1.85%에서 1.7%로 인하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을 도출해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성과지표가 '학부생 1인당 학비부담 경감액'의 단일지표로 이루어져 있어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사업의 성과를 대표하기 부족
 - ⇒ (권고안) 현재 성과지표와 함께 과제의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용률, 정책 수혜자 만족도, 1인당 국가장학금 학기 평균지원액 등)의 병행 활용 제안
-

1-6-1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교육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확충하여 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 학업중단 숙려제, 학교 내 대안교실 등 운영으로 학교 부적응에 따른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학교 밖 학생의 학력인정 경로를 마련하여 공교육 지원체계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기본계획의 내용에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시행계획 대비 세부 추진 일정 및 내용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됨-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관련 예산집행은 정상적으로 집행 완료(100%)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국립대, 시도교육청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교육지원 관련해서 참여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추진 사항 모니터링을 통해 시범사업의 개선점을 도출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교육지원 사업 관련 성과지표는 '특수학급 확충'으로 목표치 대비 152.4% 초과 달성-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교육지원 사업 관련 성과지표는 '학습지원 시범사업 등록학습자 수'로 목표치 대비 120.9% 초과 달성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학급의 연차적 확충을 통해 장애인의 교육권을 확대하고, 과밀학급 비율을 감소시켜 특수교육의 여건 개선에 기여- 학업중단 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최종 등급				정상 추진

□ 총평

- 사업 계획 및 내용, 추진 계획 이행, 사업관리, 성과 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 특수교육 지원 확대 사업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확충을 통해 장애학생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과밀학급 및 원거리통학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

○ 학업중단 학생 지원 사업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으로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학업 중단 학생이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교육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우수한 점

○ 특수학교 5교 신설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381학급 신·증설을 통해 과밀학급비율 감소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 장애학생의 재능발굴을 위해 예술, 직업교육, 체육 분야에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립대 부설 특수학교(3교) 설립 추진

○ 학업중단 학생 지원 사업은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을 통하여 학업중단 학생 수 감소와 학업에 다시 복귀하는 비율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중단 학생 수: ('19년) 52,261명 → ('20년) 32,027명

-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후 학업복귀율: ('19년) 76.6% → ('20년) 83.5%

□ 개선할 점

○ 특수교육 확충 이행계획 점검 필요

- 특수학교 확충 계획은 '18~22년까지 26교 신설 목표이나 '21년 현재 14교에 머무르고 있어 향후 이행계획에 대한 점검 필요

1-6-2

**특수교육 지원 확대, 학업중단 학생지원, 학교밖 청소년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최종 평가 등급: 우수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9세~24세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발굴, 상담·교육·진로·자립·건강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적정한 사업을 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분기별 시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99.1% 예산 집행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종사자, 당사자,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사업 현황 분석에 반영, 이행점검 및 부처 협의, 법률 개정 추진, 업무 협약 등 적극적 사업 관리 확인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학교 밖 청소년 학업복귀 및 사회진입 비율을 성과지표로, 목표치 38.7%에 대한 초과(107%) 성과 달성
	사업 우수성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복귀 및 사회진출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상향조정된 목표치를 지속적으로 달성하고 있음
최종 등급				우수

□ 총평

- 과제 목표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구성하고 있으며, 상향조정된 목표치의 초과 달성 및 적극적 사업관리 현황을 고려하여 우수 등급 부여

□ 우수한 점

- 의무교육단계(초·중)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도 지원센터로 자동연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사각지대 해소, 인프라의 지속적 확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온·오프라인 지원 강화, 서비스 다양화 등 지속적·적극적 사업 개선 노력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수요자 의견 반영과 참여 기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권고안) 만족도 조사, 청소년 의견수렴 등을 이미 진행하고 있으나 향후 프로그램 개발 등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함

1-7

고교학점제 도입(교육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본 과제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는 기본계획과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수립,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신규 지정 등 시행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 - '21년 예산 집행을 100%로 정상추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고교학점제 기본계획 수립 및 현장 안착을 위한 6개 교원단체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및 선도지구 대상 운영 현황 모니터링 시행 - 교육부, 시도교육청, 연구기관으로 구성된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운영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로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수'를 설정하고 있는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이라는 과제 목표와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부족 - 전년 실적치(732교) 대비 약 2배의 가까운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의 도전성은 인정되며, 목표치 1,400교를 상회한 1,457교로 초과 달성
	사업 우수성			- '25년 전면 적용을 위한 종합 추진계획 및 '22~'24년 단계적 이행계획 수립,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 제도적 기반 완성 - 연구·선도학교 운영 우수사례 홍보 및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학점제 긍정적 경험 확산 노력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본 과제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위한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1년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완료, 근거법령 등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과제 목표 달성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가 전년대비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고교학점제 운영 저변 확대

□ 우수한 점

- '25년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위한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또한 '22년~'24년 단계적 이행계획 수립 및 「초·중등교육법」의 근거 법령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완성
- '21년 전체 고교의 60% 이상이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운영되고 있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도입 기반 조성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1) 현재 성과지표인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수'는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조성이라는 과제 목표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25년 전면도입을 위한 기반 조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필요
 - ⇒ (권고안) '25년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이에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점검해나갈 수 있는 지표 개발 시급
 - 특히, 연구·선도학교 운영에 따른 제도적 문제점 발굴 및 개선사항 수립, 교육과정 개발, 교육공간·시설 등 인프라 구축, 교육과정 개편, 교사 인력 확보 및 교사 연수 계획 등의 구체적 성과목표를 제시하는 방향으로의 지표 개선 필요
 - (개선요인 2)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전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권고안) 농어촌, 소도시 지역에서의 소규모 학교에서의 교과목 선택권 제한 등 교육격차의 심화가 우려되며, 일부 연구·선도학교에서 진로보다는 대입에 유리한 과목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실제 현장에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 발생
 - 따라서 연구·선도학교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 유형화하여 전면 도입까지 적극적인 환류 수행 과정이 필수적
-

1-8-1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및 혁신인재 양성(교육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본 과제는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고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 체제 구축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21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및 국립대학 육성사업 3차년도 연차평가 실시 등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 - '21년 예산 집행을 100%로 정상추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38개 국립대학 대상 국립대학 육성사업 담당자 간담회 및 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실시 - 국립대학 육성사업 사업비 집행 점검 및 컨설팅 등 사업점검 모니터링 시행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로 '국립대학 1인당 학생교육비'를 설정하고 있는바,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 목표와의 연계성과 대표성 부족 - '21년 성과목표 달성률 103.7%로 초과 달성
	사업 우수성			- 기초보호학문 육성, 지역사회 기여 등 국립대학의 역할 강화 - 국립대학 간 기능별·분야별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 수행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본 과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대학의 자율 혁신을 지원하여 국립대학을 지역 교육·연구·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미래형 혁신 인재 양성 체제를 구축하고자 함
- 연차별 국립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컨설팅, 연차평가 등의 사업 추진
- 집행계획대로 이행되었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업점검 모니터링 수행 등 필수적인 사업관리도 이행하고 있어 정상추진으로 평가하였으나, 추후 평가에 대한 적절한 환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계획과 추진실적 내용 적시 필요

□ 우수한 점

-
- 국립대학 간 네트워크 및 유관기관 간 상생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성과 창출을 통해 지역의 교육 거점 역할을 수행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필요
 - 현재 성과지표인 '국립대학 1인당 학생교육비'는 고등교육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라는 과제 목표와의 연계성과 대표성이 부족
 - 즉, 해당지표의 달성 정도가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의미하지 않으며, 예산투입에 따라 단순 도출될 수 있는 양적 지표
 - ⇒ (권고안) 국립대학의 공공성 및 경쟁력 강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지표 개발
 - 민간 R&D 투자 수입 규모, 국립대학 학생의 취업률 등의 지표 또는 국립대학 육성 사업 수혜자 만족도 등 수요자 관점의 질적 지표
 - 자율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립대학의 노력 대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 개발 노력 필요
-

1-8-2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및 혁신인재 양성(과기정통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본 과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학기술·ICT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21년 시행계획에 따라 모든 사업 정상추진 - '21년 예산 집행률 100%로 정상추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각 세부사업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개선방안에 활용하고 차년도 사업운영에 반영 - 세부사업별 현장 평가, 사업점검 등을 수행하여 사업점검 및 운영현황 관리 - 이노베이션아카데미 사업은 47개 기업·기관과 MOU체결을 통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교육생의 진로, 취업을 지원 - DB산업육성 사업은 11개 운영기관 사업협약을 통해 효율적인 교육훈련 추진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인 '과학기술·ICT 인재양성'의 실적치는 14,940명으로 초과 달성(달성률 176%) - 실적치가 '18년 8,514명에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3개년 평균이 9,500명임을 감안했을 때 목표치를 8,500명으로 설정한 것은 목표의 도전성이 부족
	사업 우수성			-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로 일자리 창출 -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과학기술·ICT 역량을 갖춘 미래형 핵심 인재 양성 - SW중심 교육 강화를 위한 대학차원의 혁신적 학제 개편 실시 및 SW중심 대학 2단계 사업추진을 위한 개편방안 마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본 과제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현장에서 요구하는 과학기술·ICT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제고에 기여

□ 우수한 점

○ 이공계 전문기술연수 및 박사후연구원 지원 확대로 일자리창출

- 이공계기술연수 '21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우수' 등급
- 박사후연구원 지원 150명, 배출인력 91명 중 취업자 84명 (취업률 92%)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현재 성과지표인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인원수'에 대한 개선 필요

⇒ (권고안)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된 인원수'는 과학기술·ICT 인재양성을 지원하는 본 과제의 목표를 단순하게 측정한 양적 지표로,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질적 지표 개발이 필요

즉, 해당 사업들을 통해 산업현장에 기여하는 인재가 얼마나 창출되고 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프로그램 배출 인원 대비 해당분야 취(창)업자 수' 등의 지표로 개선 필요

1-9

평생학습 인프라 및 프로그램 확충(교육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과제는 (1) K-MOOC 운영, (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4) 학점은행제 운영 등을 통해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및 교육기회의 보장에 기여하며 기본계획과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사항 모두 집행 계획상 절차와 일정에 따라 이행 - '21년 예산 집행을 100%로 정상추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OOC 운영 사업은 대학에서 제출한 연차점검 보고서를 기반으로 강좌운영 관리(정성), 강좌운영 성과(정량)를 평가하는 등의 사업관리 수행,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추진하여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등 모니터링 수행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지원을 위해 한국장학재단과 협업,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을 위한 금융사 협업 등 협업 체계 마련 - K-MOOC 운영 사업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차년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노력 인정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K-MOOC 운영 : 'K-MOOC 수강신청 누적 건수'는 121.4% 초과 달성 - (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설 수' 지표는 101.9%로 초과 달성하였으나, 단순 프로그램 개설 수는 '문해교육 기회 보장' 지표의 대표성이 충분하지 않아 향후 지표개선 필요 - (3)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는 목표치(75점) 대비 103%로 초과 달성 - (4) 학점은행제 운영: '학점은행제를 통한 성인학습자의 학위취득 비율'로서 달성률 99.7%로 정상추진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MOOC 강좌로 4차산업혁명, AI 등의 신규분야 우수 신규강좌 개발 등 콘텐츠 다양화 및 양적 확대 - K-MOOC 학점은행제 운영 및 참여 활성화 - 시도문해교육센터 특성화 사업 신규 추진으로, 지역 문해교육 수요 대응 강화

최종 등급	정상추진
-------	------

□ 총평

- 본 과제는 (1) K-MOOC 운영, (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4) 학점은행제 운영 등을 통해 평생학습 체계 구축 및 교육기회의 보장에 기여하며 기본계획과 부합
- K-MOOC 운영 사업은 양질의 교양강좌를 개발 및 ICT, AI 등 신기술분야의 신규강좌를 개발하여 콘텐츠 다양화하여 수강신청 누적건수 성과지표 초과 달성
-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해학습자를 지원, 평생교육 바우처 발급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여 바우처 발급 확산에 기여

□ 우수한 점

- ICT, AI 등 신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련 신규강좌를 개발·보급하여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전국민 미래 평생학습체계 구축에 기여
- 시도문해교육센터 연계 특성화 사업 신규 추진으로 지역 문해교육 수요 대응 강화
* 전국 168개 지자체, 426개 문해교육기관, 1,770개 프로그램 지원
- K-MOOC 학점은행제 운영 및 참여 활성화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각 사업별 성과지표의 대표성 및 목표의 도전성이 부족
⇒ (권고안) 각 사업별 성과지표의 적절성 및 목표의 도전성 개선·보완 필요
 - (1) K-MOOC 운영 사업의 경우, 'K-MOOC 수강신청 누적건수'와 더불어, 학습자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율(학습시간, 이수결과 등) 제고를 위한 노력과 이를 측정할 수 있는 보완적 지표 개발 필요
 - (2)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역시 단순 '프로그램 개설 수'는 문해교육 기회 보장이라는 과제목표를 대표하기에는 부족하며, '문해교육 수혜자 수', '학력인정 문해교육 참여율', '성인문해교육 학력취득률' 등 질적 성과지표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표 개선 요구
 - (3)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의 경우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만족도 지표를 활용하고 있는바, 이용자 만족도만으로는 바우처 사업의 확산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향후 사업의 확산성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로의 개선 필요

1-10

신중년 생애경력설계서비스 강화 (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 목표는 인구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에 대비한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 방향과 연계되어 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있음- 사업근거와 사업 대상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경과 및 내용 또한 적정하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었음- 예산 100% 집행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절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개선에 활용하고자 함- 이에 상반기, 하반기 두차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정기협의회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관리의 적정성 확인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을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를 초과 달성, 서비스 참여자 수 성과지표의 경우 성과목표인 4만명 대비 실제 서비스 참여자 수는 37,984명으로 성과 달성률은 95% 달성- 적극적으로 설정한 지표 목표치와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면 '20년 코로나19로 인한 목표달성률 66.7% 대비 대폭 개선되는 성과로 볼 수 있음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근의 경제사회 환경 변화를 고려하면 중장년층의 생애경력지원 및 취업 지원을 통한 노후 준비를 위한 사전적 지원 중요-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시간·장소적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운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산출지표뿐 아니라 이용자의 취업률이라는 결과지표 관리를 통해 생애경력 서비스뿐 아니라 재취업·창업 등 취업성과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성과제고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 '21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진행
 - 성과지표 중 일부 성과지표의 경우 목표치를 기준으로 성과 달성률이 95%이나 지속된 코로나19 상황과 '20년 대비 적극적으로 설정한 지표 목표치를 고려하면 사업 성과 적정

□ 우수한 점

-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에 따라 중소기업 중장년층 근로자 등 시간·장소적 제약으로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았던 신중년들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임
- 성과지표에 있어 산출지표뿐 아니라 결과지표를 신설 관리함에 따라 서비스 내실화에 기여

□ 개선할 점

- 중장년층의 경우 이질적 특성이 매우 강한 집단 중 하나로 다양한 이들의 욕구 및 수요 반영을 위해 실제 현장 의견 수렴 과정에서 실무자뿐 아니라 이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식이나 절차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신규지표인 '서비스 참여자 취업률'의 목표치 설정에 있어 매년 5% 상향은 무리가 있어 보임. 좀 더 객관적이며 합리적인 목표치 설정 기준 마련이 필요
 - 중장년층의 경우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제공에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전염병 재유행 가능성, 코로나19 이후 일상의 많은 부분이 변화됨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업성과 제고 마련은 지속적으로 필요해 보임. 또한 이러한 온라인·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강화는 시간·장소 제약으로 참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등의 근로자들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의 접근성도 더욱 높일 수 있음
-

1-11

중소기업 재직자훈련 지원(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본 과제는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및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를 통한 평생학습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평생학습 체계 구축이라는 기본계획의 내용과도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중소기업 훈련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주훈련 개편방안' 마련·시행 등 추진사항 모두 집행계획에 따라 이행 - '21년 예산 집행을 99.9%로 정상추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연중 34건의 사업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역특화형 참여요건을 완화하는 등 사업점검의 적극성 인정 - 연간 37회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협업기관 간 TF 운영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로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율'과 '사업주 훈련 참여자 만족도'를 설정 -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율' 지표의 경우 '20년에는 실적이 감소(8.5%→8.2%)하였으나 오히려 전년실적대비 1.7%p 상향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여 목표의 도전성이 인정됨. - 실적은 9.0%로 목표치(9.5%)를 달성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여 전년대비 실적치가 0.8%p 상승하였으므로 정상추진으로 인정 - '사업주 훈련 참여자 만족도' 지표는 100.9%로 목표 달성
	사업 우수성			- 중소기업 훈련 활성화를 위한 '사업주 훈련 개편방안' 마련·시행 -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지원을 통한 기업의 고용유지 부담 경감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본 과제는 사업주가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및 직업훈련 인프라 확대를 통한 평생 학습개발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평생학습 체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임
 - '21년 추진사항 모두 세부 추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예산 집행률도 계획대로 추진되었음
- 사업관리를 위해 연중 34건의 모니터링을 통한 문제점 발굴과 개선, 연간 37회의 이해관계자 수렴 등을 실시
- 성과지표로 설정한 '중소기업 자체훈련 참여율'의 경우,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영향이 지속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여 전년대비 실적치를 크게 개선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

□ 우수한 점

- 중소기업 훈련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주훈련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을 이루어내고, 기업의 훈련 참여율을 제고시킨 점은 매우 긍정적
- 코로나19, 산업구조 변화로 인한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고용상 위기가 발생한 기업의 고용유지에 기여
- 디지털·신기술 훈련 확대를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산업환경 변화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에 기여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최소훈련시간 완화, 원격훈련 규제 완화, 중소기업 컨설팅 강화 등 제도 질적 내실화를 위한 모니터링 필요
 - ⇒ (권고안) 제도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지표설정을 통해 성과를 측정하고 다시 환류되어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현장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
-

1-1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특고 및 프리랜서 예술인으로 확대, 보험료 지원을 통한 자영업자 가입 활성화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전국민 대상 고용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에 부합- 사업의 추진경과 또한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을 개정, 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및 전산망 추진 등 관리기반 마련, 노·사·정부·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자영업자 연구회를 구성 운영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보험 제도개선 TF 운영, 이해관계자 간담회, 유관부처 협업 등 추진-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추진상황 모니터링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목표치를 달성. 다만 본 사업 결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는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성과지표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인, 특고 고용보험 적용 확대로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예술인·고용보험 적용 이후 지속적인 홍보·교육 및 모니터링으로 가입자 수 확대
 - 특고 고용보험 시행 전후 2개월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집중홍보기간 운영
 - 고용보험 신고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장 담당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 ⇒ 예술인 시행 1년 만에 10.7만명 가입, 특고 12개 직종은 시행 6개월만에 57.7만명 가입으로 성공적으로 안착

□ 우수한 점

-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체계를 개선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초석 마련

□ 개선할 점

- 현 성과지표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목표치 산정방식 구체화 필요
 - 현 목표치는 기존 임금근로자 피보험자 수의 증가 추세치와 본 사업의 결과로 적용된 피보험자 수가 혼재된 수치임.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예술인의 피보험자 수 목표치를 구분하여 본 사업 추진의 효과가 성과목표 달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산정방식 보완 필요
 - 고용보험 적용확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주기적 노력과 중장기적 방안 마련 필요
 - 현재도 '21.9월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 강화 등을 포함한 재정건전화방안 등을 발표·시행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임금근로자에 비해 이직과 실직이 잦은 특고·예술인들 특성을 고려한 고용보험제도 설계 등 보완방안 마련해 나가고 있음. 그럼에도 재정 건전성을 위한 주기적인 노력과 중장기적인 방안 마련은 필요
-

1-13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적용제외사유를 제한하여 실질적 적용을 강화하는 등 '일자리안전망 확충' 측면에서 기본계획과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2021년 분기별로 수립된 시행계획에 따라 관련 연구용역 완료, 산재보험 관련 법령 개정 및 적용이 정상적으로 시행됨 -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집행실적은 해당없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관련 이해관계자 대상 간담회 개최, 확대 적용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 현황 모니터링 실시, 제도 개선 필요 부문에 대한 외부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적절히 사업관리 추진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확대 및 제도 개선을 통한 보장성 강화 등은 산재보험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21년 7월부터 IT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 유통배송기사 등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입법예고 실시 등 성과목표 달성
	사업 우수성			-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 제한 및 고위험·저소득 특고 6개 업종에 대한 보험료 한시적 경감 등을 통해 특고종사자에 대한 실질적 산재보험 적용 강화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21년 7월부터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적용이 시행되었고, '21년 하반기에는 유통배송기사, 택배·지간선 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를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확대하기 위한 입법예고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적용대상으로 확대하고자 함으로써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 우수한 점

- 산재보험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을 '21년 15개로 확대하였고, 산재보험 적용제외신청 사유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실질적 산재보험 적용 특고종사자를 대폭

확대하였음

- (특고종사자 실적용자 수) 신청사유 엄격 제한 후 18만명 → 75만명 (57만명 ↑)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를 통한 일자리안전망 및 사회안전망 강화가 본 사업의 목표임에 따라 적용대상 범위 확대에 따른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권고안) 향후에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산재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연구 및 선제적 방안 마련을 통한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

1-14

실업급여의 지급 수준 · 지급기간 확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단계적 도입 (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 확대 및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방안 도입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21년 시행계획에 따라 실업급여 집행 모니터링, 제도개선 의견수렴 및 시행, 중장기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연구기반을 구축하는 등 정상추진됨 - 예산 집행률은 95.5%이나 실업급여의 수요예측 측면 고려시 정상추진으로 판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제도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협업체계 구축, 실업급여 집행 관련 모니터링 등 다각도로 사업을 추진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의 '21년 목표치 초과 달성
	사업 우수성			- '19년 제도개선 결과로 최근 부(-)의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시점에서 실업급여의 고용안전망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19년 10월부터 적용된 실업급여 지급 기간 연장 및 지급 수준 상향조정으로 부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는 고용안전망으로써의 실업급여 역할이 강화됨. 추진상황에 대한 현장모니터링, 지방관서 의견수렴 등 제도 개선을 위한 다각적 시도가 이루어짐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함

□ 우수한 점

- 실업급여의 보장성 강화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시기에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에 기여함
-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적용이 7월부터 시행되면서, 실업급여의 고용안전망 역할 강화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본 사업 시행계획에서 과제목표는 '실업급여 지급수준 및 지급기간 개선 추진'과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도입 방안 중장기 추진'으로 되어 있으나, 추진계획은 첫 번째 목표를 중점으로 구성됨

⇒ (권고안) 후자의 경우, 관련 이해당사자의 견해 차이가 크고 최근 도입된 국민취업 지원제도와의 연계성 검토 등으로 중장기적 추진과제 성격이 강하여 연차 별 계획수립이 어렵다면, 그간의 추진현황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과제목표와 추진계획 간의 조정이 필요해 보임

1-15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여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는 본 사업의 목적은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부합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 분기별 세부추진실적 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전체 예산의 17.9%가 불용액으로 발생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2021년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제도 시행에 따라 현장에서 제기되는 여러 의견을 다양한 창구를 통하여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자격 요건 등에 제기된 개선점에 대하여 법령 및 시행령을 신속하게 개정하는 노력을 기울임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목표인 취업지원인원은 목표치의 13.7%가 미달하여 향후 대상 인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 제도 임에도 다양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통하여 대중 인지도가 높아졌음 - 제도 참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점 역시 주요 성과로 판단됨
	사업 우수성			- 구직촉진수당의 도입과 집행으로 기존 고용안전망에서 누락되었던 집단에 대한 생계비용을 지원하고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취업 역량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이라는 목표하에서 취약계층의 생계 및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안전망으로 자리 잡게 됨
- 예산의 불용액 및 목표 인원 미달 등이 발생하였으나, 제도 첫해인 만큼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적절히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였으며, 제도의 안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에 성과가 있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하였음

□ 우수한 점

-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제기되는 현장 지적에 발 빠르게 대응함
 - 지역 고용센터에 대한 사업점검이나, 옴브즈만,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다양한 모니터링 창구를 활용하여 의견수렴을 하고 있음
 - I 유형 선발형 청년 취업경험의 요건폐지나, 소득 기준 확대, 자립준비청년, 구직단념청년, 영세사업자에 대한 요건 확대 등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법 또는 시행령 개정으로 대응하였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1) 예산 불용 및 사업목표량 미달
 - 도입 첫 해인 만큼 실제 참여 수준 및 예산의 집행에 대한 오차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향후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계획과 집행이 필요함
 - ⇒ (권고안) I 유형과 II유형 참여자 수에 대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II유형 집행 불용액 비율 34.4%), 민간위탁비 집행 잔액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기관 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위탁 기본금 및 성공금 현실화 등이 검토될 필요 있음
 - (개선요인 2) 질적 성과지표 검토 필요
 - 현재 사업성과 목표는 취업지원인원의 수로 설정하고 있으나, 취업성공패키지 운영 당시에도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인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던 만큼,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에 대한 성과지표 역시 검토될 필요 있음
 - ⇒ (권고안) 취업지원서비스의 질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 검토
-

1-16

고용센터 취업지원기능 강화(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고용센터의 취업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인적자원의 역량 제고라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분기별 이행계획 목표에 따라 사업이 운영된 것으로 보이나 3/4분기에 계획한 머신기반러닝 일자리매칭 시스템이 직무+역량기반 훈련·자격·일자리 등의 종합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설명 필요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사업관리를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등이 적절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임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목표한 성과에 미달하는 달성률을 나타냈으나, 2020년부터 이어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환경의 악화 및 실업급여 대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상황이 감안 될 필요 있음
	사업 우수성			- 코로나19로 인하여 변화한 고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취약 업종(여행업)에 맞춘 취업지원서비스가 이뤄짐. - 고용센터의 수를 101개에서 174개소로 63개소 확대 운영하여 고용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고용센터 취업지원기능 강화라는 목표는 인적자원의 역량 제고라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부합하며, 사업의 집행 및 관리에 있어서 계획한 바가 시행되었음
- 성과목표치를 일부 미달하기는 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고용환경에 따른 불가피성을 감안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취약 업종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 우수한 점

-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비대면 서비스 제공 인프라를 구축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취약
업종 지원이 이뤄짐
- 고용센터의 확대 운영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성과지표 개선 필요
 - 현재 성과 지표는 일자리의 질적인 고려를 위하여 250만 원 이상 일자리 취업 인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실제 사업의 내용은 기반 구축과 관련한 내용으로, 실제 사업 내용을 반영할 수 있는 성과지표 검토 필요
 - 현행 성과지표를 유지할 경우 물가 상승이나 최저임금 등 실질임금 변화를 고려할 때 250만 원의 기준선에 대한 검토도 필요
 - 2022~2023년 목표치에서 서비스 취업실적이 40%가량 급증하도록('21: 31,164→'22: 43,758) 목표를 설정한 배경에 대한 설명 필요함. 전체 취업실적 중 양질의 일자리 취업 실적(250만 원 이상 일자리)을 대비하여 본다면, 2021년 25.2%에서 2022년과 2023년에는 20.7%로 하향 조정되는 결과임
 - ⇒ (권고안) 평균임금 등을 고려하여 기준선 조정하고, 서비스 수혜자 등 성과 목표치를 현실적으로 수정
-

1-17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실업자와 재직자 모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하는 본 사업의 목적과 내용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역량 제고라는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함. 다만 연도별 이행계획의 구체화 필요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 각 분기별 국민내일배움 카드 발급 및 참여 지원이 이뤄졌으며, K-digital training 해커톤 개최 및 231개 K-digital training 훈련 과정 확보, 85개 K-digital credit 훈련 과정을 선정이 이뤄짐 - 다만, 예산에 대한 불용액이 13.0%(9억원) 발생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모니터링 사업 등을 실시하였으며, 훈련의 실효성 지적 등에 대하여 대응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목표로 설정한 훈련참여자 수를 167.3% 초과달성하였음. 훈련참여자 수는 훈련 지원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의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으나, 주요 개선 요구 사항 중 훈련의 실효성 지적이 있었던 만큼 훈련 참여자의 만족도와 같은 질적 지표에 대한 고려 필요
	사업 우수성			- 2021년 한 해 동안 100만 명이 넘는 훈련참여자 수를 기록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예산의 불용액이 13.0% 가량 발생하였으나,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부합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통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2021년 한 해 동안 1,054천 명이 훈련에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제도의 포괄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 우수한 점

- 훈련 참여 대상자 확대를 통하여 훈련참여자 수가 직전년도에 비하여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개선할 점

○ 훈련의 질적 개선사항에 대한 검토 필요

- 현재 이행 계획의 목표는 내일배움카드의 확대 지원으로 국한되고 있으나, 국회,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은 주로 훈련의 실효성에 관한 지적이 있었음

⇒ (권고안) 훈련의 질적 제고를 위한 이행 목표 수립 및 성과 지표 검토

1-18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청년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안전성 강화와 중소·중견 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한 제도로 사업의 목표와 내용이 일자리 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어,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부합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분기별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배정된 예산도 일부 집행잔여액을 제외하고 정상 집행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사업추진 시 업무 담당자와의 간담회와 사업모니터링 및 집행점검을 통하여 사업을 적절히 관리하였으며,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언론보도를 통하여 제기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하고자 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기업의 청년 근로자 비중과 청년채움공제 참여자의 2년 이상 고용 유지율 모두 목표를 초과하여 달성함
	사업 우수성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두 사업 모두 청년의 장기근속에 기여하고 있음. 다만, 대기업·중소기업간 임금격차 완화 효과는 검증이 필요한 부분임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청년일자리 확대와 고용유지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제도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확대 모두 목표한 성과를 초과 달성하였고 현장 및 언론을 통하여 제기
된 코로나19로 인한 납입중지나, 직장 내 괴롭힘 등 부당대우의 발생 등에 관한 문제점
에 대하여 지도 점검 및 제도 개선 등으로 적절히 대응하였음
- 본 제도 참여자의 근속 유지 등을 통하여 참여자의 경력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
으며, 참여 기업의 경우 생산성 향상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

□ 우수한 점

- 청년의 고용기회(청년추가고용장려금)와 자산형성(청년내일채움공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근속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서도 긍정적인 영

향을 주는 사업이며, 목표한 사업량과 성과를 모두 달성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참여 사업장의 전반적인 모니터링 강화

- 청년채움공제 사업에서 직장 내 부당 대우에도 불구하고 중도해지 시 만기공제금을 받을 수 없어 버티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따라 가입 시 부당대우 금지 협약이나, 전담 상담창구를 마련하였음
 - 연 1회 부당대우 집중 점검기간 마련, 부당대우 발생 시 해당 사업장은 근무환경개선 컨설팅 대상 기업 명단에 포함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이유로 한 부당대우 발생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강화
-

1-19-1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노사민정의 타협을 통하여 상생형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는 본 사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과 이행계획이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부합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각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을 목표한 바와 같이 달성하였으며, 배정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노사민정의 타협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협업기관과의 협업, 모니터링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음 -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을 위한 방향 수립이 적절하게 이뤄짐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컨설팅 지원대상 중에서 실제 상생협약체결률을 성과지표로 보고 있으며, 누적 실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이러한 성과지표를 달성하였음. - 본 사업의 특성상 상생협약체결 실적을 누적적으로 관리하는 성과지표가 적절하다고 생각은 되나, 향후 사업 누적 시 성과 목표의 방향성에 대한 고려 필요함
	사업 우수성			- 당해 9개 지역의 컨설팅 이행 자체가 주요한 실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상생협약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차년도 등 향후 협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 성과의 측면에서 확장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상생형 일자리를 위한 컨설팅 수행을 통하여 향후 지역별로 적합한 일자리 창출 모델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더불어 컨설팅의 결과가 해당 년도에서만 성과로 전환되지 않고, 차년도 등 이후 협약체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성과 추이를 주목할 수 있는 사업임

- 주요한 지적사항 중 상생협약 체결 지역의 자동차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7개소 중 6개

지역이 자동차), 실제 2021년의 컨설팅의 진행은 다양한 산업을 포괄하고 있어 향후 보다 다양한 산업으로 확산이 가능함.

☐ 우수한 점

- 컨설팅 수행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역이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가 확대될 여지가 큼

☐ 개선할 점

- 특별한 의견 없음
-

1-19-2

상생형 일자리 모델 확산(산업통상자원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노사민정의 타협을 통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사업비용을 제공하는 본 사업의 목적과 사업 내용과 이행계획이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부합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각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을 목표한 바와 같이 달성하였으며, 배정된 예산을 적절히 집행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지역의 노사민정의 타협을 통한 상생형 일자리 컨설팅을 목적으로 하므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며, 협업기관과의 협업, 모니터링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발굴 및 선정을 성과지표로 보고 있으며, 2021년에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다만, 본 사업에서 주요 사업비는 실제 지역 상생 일자리에 대한 투자 비용(경형SUV 부품화 지원)에 책정되어 있는 만큼 본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투자에 대한 적절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함
	사업 우수성			-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에 대한 인식 확산 등을 위한 홍보활동이 적극적으로 이뤄졌으며, 광주, 밀양, 횡성, 군산, 부산, 구미형 일자리의 프로젝트를 최종 선정하여 9,081억원 투자 및 1,305명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노사민정의 타협을 통하여 상생형 지역일자리를 창출하고 사업모델을 구상하는 본 사업의 목표와 세부 내용은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부합하며, 각 분기별 세부 시행계획 및 예산을 목표한 바와 같이 적절히 집행하였음
- 경형 SUV 부품 사업화 지원과 같이 실제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 및 유지를 위한 사업 비용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및 성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우수한 점

- 컨설팅 수행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역이 누적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성과가 확대될 여지가 큼

☐ 개선할 점

- 현재 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비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 체계 마련이 필요함
⇒ (권고안) 사업비 대비 지역일자리 유지나 산업 효과를 성과목표에 포함
-

1-20

온 오프라인 청년센터를 통한 정보제공(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청년의 청년정책 참여를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공간을 제공하거나,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의 고용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어 사회보장기본계획의 목표에 부합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분기별로 계획한 과업이 대체로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의 경우 16.4%(13억 원)의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으나, 온라인 청년센터의 경우 100%가 집행되었으며, 오프라인 청년센터에 한해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온라인 청년센터의 고객만족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 청년센터는 반기별 사업 현장 점검이 이뤄짐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온라인 청년센터 고객만족도와 오프라인 청년센터의 연간 프로그램 참여자 수 모두 목표치를 상회하는 성과를 달성함
	사업 우수성			- 고용 관련 정보 이외에 여러 부처에 있는 청년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청년정책의 통합적인 창구로 기능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청년정책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층에게 상담 및 취업역량 강화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부합하며, 분기별로 계획한 과업이 성실히 이행됨. 예산의 경우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나, 오프라인 청년센터의 자치단체 보조금 집행 잔액이라는 점을 감안하였음

□ 우수한 점

- 정책 정보 제공 이외에도 카톡 상담 등 청년층에 익숙한 채널을 통하여 68,312건의 개별 상담이 진행되었으며, 전화나 게시판에 포함하여 총 84,471건의 상담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성과로 보임

□ 개선할 점

-
- (개선요인) 온라인 청년센터의 청년공간 One-stop 예약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였으나, 현재는 청년공간에 대한 설명 및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공간 정보의 입력 시기가 1년 이상 경과하여 코로나19 등에 따른 운영 등이 적절하게 업데이트 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 중
 - ⇒ (권고안) 업데이트 주기 단축 또는 청년정책 오픈 API 구축 등 실시간 연계 정보 제공 노력 필요
-

1-21

최저임금 현장안착 (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최저임금 관련 홍보, 지도, 상담, 구제지원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시장 격차 완화, 저임금근로자 감소를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21년 분기별 시행계획에 따라 충실히 사업이 추진됨 - 예산 집행률 100%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합리적 최저임금 수준 결정 지원을 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행, 노무관리지도 실시 및 청소년근로자권익센터를 통한 최저임금 현장안착 상황 모니터링 실시 등 적절한 방식으로 사업관리 진행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사업성과지표인 사업장 점검·지도 실적은 목표치(12,000개소)의 92.2%이나,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정상추진으로 판단
	사업 우수성			-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위해 실생활과 밀접한 매체를 활용한 정책 캠페인 실시,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 안내, 상담 및 구제지원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에 기여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노사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심층연구 등을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노력
- 결정된 최저임금의 현장안착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 건수 감소, 최저임금 미만 비율(고용형태별실태근로조사 기준) 감소

□ 우수한 점

- 사업성과지표로 설정되어 있는 지도·감독 사업장수는 현장방문을 통해 가능한 것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21년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지도를 실시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현행 사업 성과지표는 사업내용 중 하나(노무관리지도 실시)를 반영하는 결과지표로 '최저임금 현장안착'이라는 과제명 고려시 해당 지표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지 검토 필요
 - ⇒ (권고안) 최저임금 미지급 신고건수, 위반적발건수, 최저임금 미만율 등 보조적 지표 추가 검토
-

1-22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공공부문 대상 상사·지속, 생명·안전 업무를 중심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함으로써 '노동시장 격차 완화'라는 사회보장기본계획에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전반적으로 '21년 시행계획의 분기별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 - 비예산 사업으로 예산집행실적은 해당없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갈등, 애로사항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컨설팅 지원, 정규직 전환 후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과정 실시 등 전환 전·후 과정에 적절한 사업관리 추진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21년 정규직 전환 총인원은 20.3만명으로 '21년 목표치(20.5만명)를 100% 달성하지 못했으나, 해당 수치는 본 사업의 최종 목표치로 '22년에 달성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정상추진으로 판단
	사업 우수성			-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문제점 등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원만한 정규직 전환 지원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대체로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목표인원(20.5만명)을 달성할 것으로 판단
 - 고용안정 측면에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있으나, 정규직 전환의 공정성 문제, 전환 후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 등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

□ 우수한 점

-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갈등에 대한 컨설팅 지원,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 등을 통해 원만한 전환과정을 끌어내고자 노력

□ 개선할 점

-
- (개선요인) 정규직 전환 이후 합리적 차이를 반영하는 고용의 질적 측면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 필요
 - ⇒ (권고안) 합리적 인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의견수렴 등 지속적인 논의 추진
-

1-23

출산급여 신설을 통한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개선필요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임 - 구체적인 사업 근거 및 대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행계획 역시 명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 모두 국비로 편성된 '21년 예산의 집행률은 71.5%로 '20년에 비해 30.6% 상승하였다고는 하나, 집행률이 여전히 낮음. 그러나 예산 불용의 사유(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상황 악화 및 급격한 출산율 저하)가 사업 환경 변화에 기인한 것이고, 담당부처 역시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향후 이에 따른 예산 조정을 권고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출산급여 업무담당자의 의견 수렴, 고용보험시스템을 통한 사업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업을 관리함 - 단, 국회 결산심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예산 집행을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개선 필요	- 성과지표는 출산급여 수급자 수로, '21년 수급자 수(11,565명)가 목표 인원 대비 69.8%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그러나 이는 예산 불용 사유에서 나타나듯이, 사업 환경의 변화에 기인함 - 성과지표는 과제 내용을 포괄하는 산출지표로 적절하나, 목표치의 경우 예산과 마찬가지로 향후 조정이 필요함
	사업 우수성			- 출산율 감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고용 악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 등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제고하고자 노력함
최종 등급				개선필요

□ 총평

- 본 과제는 일·생활균형을 달성하기 위해 모성보호 사각지대인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목적과 내용이 기본계획의 취지에 적합하고 사업의 관리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짐

- 그러나 낮은 예산 집행률과 성과목표 미달성의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과제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점

-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제도 홍보
 - 모성보호알리미서비스에 출산급여 제도 안내, 임신·출산기 여성에 대한 안내 문자 발송 등

□ 개선할 점

- 낮은 예산 집행률의 원인 파악 및 향후 개선 방안 마련
 - ⇒ 낮은 출산율 및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한 지원 대상 규모의 추계가 필요함
 -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 파악 및 향후 개선 방안 마련
 - ⇒ 관련 분야 전문가의 지원 대상 규모 추계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

1-24-1

여성 경력단절 예방 [여성가족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재직여성과 기업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임 - 명확한 사업 근거 및 대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이행계획 역시 구체적임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21년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각각 50%이고, 모두 집행되었음 - 해당 예산은 사업에 대한 설명회 개최,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홍보캠페인 진행 등에 투입되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재직여성, 기업 관계자 및 수행기관의 의견수렴, 시스템을 통한 사업 모니터링, 지자체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적절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단, 기업 관계자가 참여한 경우는 개선방안 논의 1건뿐으로, 과제 취지에 적합하도록 기업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는 경력단절예방 상담·컨설팅 참여자 수로 과제의 내용에 부합하는 지표이며, '21년 목표치는 '20년 대비 3% 높게 설정된 13.6천명으로 목표를 달성함
	사업 우수성			- '22년부터 광역특화형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재취업'에서 '고용 유지'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요구(여가위)에 대응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본 과제는 낮은 여성고용률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재직여성 및 기업에게 상담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목적과 내용이 기본계획의 취지에 적합하고 사업의 관리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짐

- 사업내용은 주로 재직여성, 운영기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나 홍보캠페인, 간담회 등으로 구성되는데, 주요 이해관계자라고 할 수 있는 기업 관계자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점

-
- '22년 광역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을 시범운영함으로써 경력단절 원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경력단절 지원체계를 확충하고 예방팀을 신설하여 인력을 배치함
 - (광역특화형 경력단절예방지원사업) 여성의 생애주기별 다빈도 경력단절 원인 해소를 위한 맞춤형·원스톱 경력단절예방사업 운영(1개소)
 - (지원체계 확충) '20년 60개소 → '21년 75개소, 예방팀 7개소 신설 및 팀당 3명 인력 배치

□ 개선할 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돌봄 수요 증가, 근로조건 악화 등으로 경력단절 위기의 여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 22년 시범 운영중인 광역특화형 지원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사업 운영의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을 권고함
 - 재직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
 - ⇒ 기업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프로그램 운영 및 행사 추진을 권고함
-

1-24-2

여성 경력단절 예방 (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목표로 하며, 시행계획 별 추진실적이 구체적인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21년 예산은 100% 국비로 모두 집행되었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고용보험시스템, 일가정양립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업이 관리되고 있음 - 세부 추진실적에 따라 다수의 고시 및 법령 개정이 이루어짐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 직장어린이집 개소 수, 대체인력지원금 지급실적으로 과제의 각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지표임 - '21년 목표치는 최근 3년간 평균 실적을 반영하여 설정되었음 - 2개 지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 수, 직장어린이집 개소 수)는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인 것으로 보임
	사업 우수성			- '21.11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임신 중 여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을 허용하여, 임신근로자 모성 보호를 강화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본 과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 직장어린이집 지원, 대체인력 지원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그 목적과 내용이 기본계획의 취지에 적합함

- 예산은 모두 집행되었으나 3개 성과지표 중 2개 지표가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는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의 영향인 것으로 파악됨

□ 우수한 점

- 남녀고용평등법을 비롯한 법령개정을 통해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육아휴직 지원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함
 - 임신 중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

□ 개선할 점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발생하는지 파악하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집행실적에 대한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수급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할 것을 권고함
-

1-25

남녀 공동 육아참여 기반 구축 (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및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강화 등을 통해 남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며, 이는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21년 예산은 100% 국비로 모두 집행되었고, 계획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세부 추진실적에 따르면 보도자료 배포 등을 통한 홍보가 주요 실적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잠재적인 사업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다 적극적인 홍보 사업이 필요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는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로 측정되며 과제의 각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지표임 - '21년 목표치는 26.5%이나 실적은 26.3%로 미달성이나 목표대비 99.3% 달성함 -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여,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사업 우수성			- 남녀 공동 육아참여 기반 구축을 위해,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사업 실적 분석 등에 관한 보도자료 배포를 추진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본 과제는 남녀 공동 육아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 목적과 내용이 기본계획의 취지에 적합함
 - 예산은 모두 집행되었으나 성과지표 달성률이 99.3%로 미달성임

□우수한 점

-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는 육아휴직 지원 확대와 함께 기본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한 과제임
 -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 증가 추이와 저출산 고령사회 로드맵 상 발표한 중장기적

목표치를 감안하여 성과목표치를 설정함

□ 개선할 점

-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성과지표도 설정하여 목표치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19년, '20년과 달리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유를 파악하여, 향후 사업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 수급자(남성육아휴직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수급자) 및 기업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파악할 것을 권고함
-

1-2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확대 검토(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 각 부문에 여성노동자 및 관리자 비율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임- 구체적인 사업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역시 명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 국비로 편성된 '21년 예산의 집행률은 98%로, AA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AA 대상 사업장의 성별 임금격차 발표, 기업제출 임금 및 현황 자료 분석 등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계, 노동계, 여성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AA 대상 사업장에 대한 사업점검, 지방관서 및 노사발전재단, AA전문위원회와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업을 관리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는 AA 사업장의 여성고용비율과 여성관리자비율로, '21년 실적(37.78%, 21.30%)이 목표치(38.03%, 22.20%)에 조금씩 미치지 못함- 성과지표는 과제 내용을 포괄하는 산출지표로 적정하나, '21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과 함께 목표치가 현실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설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A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AA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AA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완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본 과제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제 목적과 내용이 기본계획의 취지에 적합하고 사업의 관리 또한 적절하게 이루어짐
- 그러나 성과목표 미달성의 원인을 파악하여, 향후 과제 운영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점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
- AA 전문가 TF 구성 및 운영
 - 관련 연구용역 추진 및 완료

□ 개선할 점

○ 성과목표 미달성 원인 파악 및 향후 개선방안 마련

⇒ 성과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전년도 증가분의 10%로 설정하였으나, 담당부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여성고용비율 및 여성관리자비율은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산업 및 기업규모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1-28-1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 (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폴리텍 여성재취업과정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구체적인 사업 근거 및 대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명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두 국비로 편성된 '21년 예산은 모두 집행되었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체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운영 개선방안을 도출함- 유관기관을 통해 교육생을 모집하는 등 협업체계 또한 성공적으로 구축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는 경력단절여성 훈련수료인원과 취업률로, '21년 실적치(1,195명, 58.1%)가 목표치를 일부 달성(1,200명, 58.0%)함.- 성과지표는 과제 내용을 포괄하는 산출 및 결과지표로 적정함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지표인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훈련일정 조정, 비대면 훈련 실시 등으로 성과달성을 위해 노력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본 과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폴리텍 여성재취업과정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과제 목적과 내용이 기본계획의 취지에 적합하고 사업의 관리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짐
- 일부 성과목표가 미달성이나, 결과지표인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코로나19 등 변동성 높은 훈련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

□ 우수한 점

- 민간혁신 훈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함

-
- K-Digital Training의 일환인 민간혁신 훈련기관 스마트교육플랫폼을 활용하여, 훈련생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훈련 만족도를 제고함

□ 개선할 점

- 주간에 가사 및 아이 돌봄으로 인해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력단절여성의 상황에 적합한 교육 훈련 방식 마련이 필요함
 - ⇒ 온라인 강의, 야간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 훈련 방식의 다양화를 권고함
-

1-28-2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재취업지원 [여성가족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새일센터 운영을 통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 구체적인 사업 근거 및 대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명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21년 예산(지방비 30%)은 모두 집행되었고,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분기별, 월별 계획에 따라 새일센터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부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경력단절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는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의 상용직 비율로, '21년 실적치(69.4%)가 목표치(67.8%)를 초과달성함 - 설정된 성과지표는 질 좋은 일자리 비율로 볼 수 있어, 과제 내용을 포괄하는 결과지표로 적정함
	사업 우수성			- 각부처의 여성 전문인력 양성 기능과 여가부의 취업지원 서비스 기능을 통합 제공하는 다부처 협업 취업지원서비스 신규 도입으로, 선순환 구조의 일자리 서비스를 구축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본 과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과제 목적과 내용이 기본계획의 취지에 적합하고 사업의 관리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짐
- 일부 성과목표가 미달성이나, 결과지표인 취업률을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코로나19 등 변동성 높은 훈련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함

□ 우수한 점

- 훈련 및 인턴사업 참여요건 완화, 비대면 교육 및 상담 서비스 본격 전환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직접일자리 확대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경력단절 여성

에게 일경험, 정규채용, 직장 적응 기회를 제공함

- 지원인원 확대 : ('20) 6천2백명 → ('21) 7천8백명 → ('21 추경) 9천8백명

□ 개선할 점

-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로 연계될 가능성이 큼
 - ⇒ 미래유망직종, 신기술·고부가가치 직종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훈련 과정 개발이 필요함
-

1-29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돌보미 확충 및 정부지원 확대를 통해, 아동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구체적인 사업 근거 및 대상을 제시하고 있으며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명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예산 중 국비는 모두 집행되었고 지방비는 아직 집계중임- 연구용역 및 지침 개정, 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업 모니터링이 이루어 졌으며, 협업기관간 역할 배분 및 회의 개최를 통해 협업체계를 구축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는 아이돌보미 수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률(서비스 신청가구 중 이용가구 비율)로, '21년 실적(25,712, 91.0%)은 목표치(29,433, 90.0%)를 일부 달성함- 설정된 성과지표는 아이돌보미 전체 규모와 미충족 서비스 수요를 가능할 수 있는 지표로 적정함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년수준의 아이돌보미 수준을 유지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본 과제는 아동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아이돌보미서비스를 운영하고 확대하는 사업으로, 과제 목적과 내용이 기본계획의 취지에 적합하고 사업의 관리 또한 적정하게 이루어짐
 - 일부 성과목표가 미달성이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임

□ 우수한 점

- 아이돌봄서비스 시스템의 적극적 개선을 통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정보접

근성을 강화함

- 모바일앱, 간편결제서비스(돌봄페이), 자동상담 챗봇, 실시간 소통채널 도입

□ 개선할 점

- 성과지표 중 하나인 서비스 수요 충족률이 '21년 91.0%로 성과목표치 보다는 높지만 100%에 미치지 못해 아직까지 충족되지 않은 수요가 있음
 - ⇒ 향후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함
-

1-30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 [여성가족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아동육아부담을 경감하고 돌봄 친화적인 사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명확하고,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이 구체적임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예산(지방비 52%)의 97.6%가 집행되었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음- 코로나19 확산으로 공동육아나눔터가 폐쇄되고 긴급돌봄으로 대체 운영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의 의견 수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긴급돌봄 운영 공동육아나눔터 모니터링, 민간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이 계획에 따라 추진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는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인원으로, '21년 목표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조했던 '20년 실적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됨- 비대면 운영 활성화로 목표대비 248% 달성함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상황 속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돌봄 취약가구에게 온라인 학습지원 및 급간식 제공 등 긴급 돌봄 및 비대면 프로그램을 실시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본 과제는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운영을 통해 아동 양육부담을 완화하여 여성의 경제 활동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그 목적과 내용이 기본계획의 취지에 적합함
 - 공동육아나눔터는 “돌봄인력+CCTV 모니터링”으로 운영되는 시설돌봄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사회 돌봄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임

□ 우수한 점

-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사업운영방식을 전환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함
 - 이용인원 ('19) 1,440,768 → ('20) 509,378 → ('21) 1,329,535

□ 개선할 점

-
- 공동육아나눔터는 설치비를 지원하지 않아 공동주택 등 공간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 민관협력 및 관련 부처와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공간 발굴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함
-

1-31

아동수당 확대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우수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제도 도입 이후, 소득기준 폐지, 지급대상연령 확대('21.12월 법개정 만7세 미만->8세 미만)를 통해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아동의 기본권리와 복지증진이라는 기본계획 목표와 내용에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연도별 이행 계획 이행을 위한 법 개정 및 예산 확보 - 2021년도 예산 집행을 100%로 계획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및 수급 관리 정상 이행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시기별 공문 지행을 통한 지자체 예산 집행 점검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목표치(73점) 100% 달성
	사업 우수성			- 2022년 아동수당 연령 확대를 위한 법개정('21.12.) 및 2022년 정부 예산 확보 완료
최종 등급				우수

□ 총평

○ 아동수당 지급을 통한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하고 아동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제도 도입 이래 지속적인 지급대상 확대를 실현하고 있으며, 연도별 이행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음

□ 우수한 점

○ 사업집행관리 적절성

- 2021년 만 7세미만 아동 247만명 매월 10만원 지급
- 시기별 공문 시행을 통해 지자체 예산 집행 점검(집행률 100% 달성)
- 아동수당 과오지급 방지를 위한 조치완료(지급정지 및 환수 명단 반기별 지자체 제공)

○ 아동수당 지급대상 연령 확대를 통한 아동양육 부담 완화 및 아동복지 증진에 기여

-
- 2021년 12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2022년부터 만 8세 미만까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및 이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와 지급준비 완료
 - 제도 도입 이후 매년 지급대상 연령 확대를 계속 실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수성을 인정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사업 성과지표 적절성 검토 및 보완

- 성과지표가 아동수당 만족도 1개로 설정되어 있음
- 아동수당과 같이 현금지원 제도의 경우 지급 단가의 현재가치가 보존되지 않을 경우 수혜자 만족도는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임

⇒ (권고안)

- 향후 제도개선 시 현행법 제4조(지급 대상 및 지급액)에 명목금액 1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는 조항을 물가상승률 또는 임금상승률과 연동시켜 지급단가의 현재가치를 별도의 법개정 없이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정 추진 노력
 - 추가적으로 만족도라는 정성지표 이외 아동수당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완화 수준을 측정하여 관리할 수 있는 지표를 발굴하여 보완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

1-32

연간 노동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일과 삶의 균형 달성 측면에서 장시간 근로환경 개선은 매우 중요한 과제로, 연간 노동시간 단축은 사회보장기본계획과도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21년 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주52시간제의 현장안착 지원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지원이 지연없이 정상추진됨 - 예산 집행률은 91.4%(불용액 규모 6억원)로 연차별로 예산 집행을 지속적으로 감소. 다만, '21년부터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여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주52시간제 등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 시행, 제도 적용 과정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및 협업체계 구축 등 적극적으로 사업관리 추진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개선 필요	- '21년 목표치는 1,920시간이었으나 조사자료에 기반한 '21년 연간근로시간은 1,952시간으로 나타남
	사업 우수성			- '21년 성과지표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주52시간제 현장안착 지원,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확대 및 지원 등으로 2018년 이후 연간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주52시간 초과근로자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17) 15.1 → (‘19) 9.7 → (‘21) 6.8 (통계청, 경찰분석)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해 노사 간의 견해차가 큰 만큼 지속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제도 적용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등 충실히 사업 추진

□ 우수한 점

-
- 성과지표 기준으로는 '21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주52시간제 전면 적용(5인 이상 규모) 및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확대('21년 30인 이상 규모, '22년 5인 이상 규모) 등을 통해 '18년 이후 연간 근로시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사업체노동력조사, ('17) 2,014시간 → ('18) 1,986시간 → ('19) 1,976시간 → ('20) 1,952시간 → ('21) 1,952시간
 - 또한, 주52시간제의 현장안착 노력으로 주52시간 초과근로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17) 15.1 → ('19) 9.7 → ('21) 6.8 (통계청, 경찰분석)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21년 4월 탄력근로제 등 주52시간제 보완입법의 시행으로 주52시간제 적용 어려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21년 하반기부터 주52시간제가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에도 전면 도입되면서, 여전히 준비가 부족하거나 제도 적용의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판단
 - ⇒ (권고안) 지속적으로 현장의 애로사항 파악 및 보완방안 모색 필요
-

1-33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 (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의 근무혁신과 일·생활 균형 캠페인을 통해 일하는 방식 및 문화를 개선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21년 시행계획에 따라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사업 시행 - 일·생활 균형 캠페인: '21년 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참여기업 발굴하여 시행 - 예산 집행을 100%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근무혁신 참여기업의 근로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의 의견수렴, 근무혁신 이행 종료 후 모니터링 실시 등 다각도로 사업관리 추진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와 일·생활 균형 캠페인 모두 설정된 성과지표의 '21년 목표치 초과 달성
	사업 우수성			-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목표치를 상회하는 기업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일·생활 균형 고용문화 확산에 기여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연차별로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과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 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함으로써, 일·생활 균형을 위한 고용문화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 다만,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의 경우, 참여신청 기업수가 하반기가 집중되어 있어 상반기 참여 활성화를 위한 추가 홍보가 필요해 보임

□ 우수한 점

- 코로나19로 근무혁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상황 악화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목표치를 초과하는 기업 참여를 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개선할 점

-
- (개선요인) 근무혁신 인센티브제는 참여기업에 대해 이행결과 점검, 근로자대상 만족도 조사, 사후관리 등을 실시하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의 경우 우수사례 포상 및 확산 등의 사후적 사업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일하는 방식 및 문화 개선'에 있어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들이 기업에 도입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제도 및 프로그램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되고 있는지도 중요함
 - ⇒ (권고안) 근무혁신 인센티브제의 경우 근로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실제 기업내 확산정도 및 프로그램 활용도가 파악되고 있을 수 있어, 추후 관련 내용을 함께 제시해주거나, 혹은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기업을 포함하여 실질적인 확산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중기(3년 또는 5년) 단위로 실시할 필요성 검토
-

2-1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과제목표가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비수급빈곤층의 축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이러한 기본계획 달성에 핵심적인 사항임 - 과제내용의 경우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해당과제는 시행계획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음 - 예산의 경우 100% 집행률을 나타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통한 의견수렴과 담당공무원 및 국민 대상의 모니터링 수행, 사회보장정보원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등과의 협의 체계 등 사업관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었음 - 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경우 담당공무원 뿐만 아니라 복지 수요자의 의견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해당 실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향후 이에 대한 내용을 기재할 필요가 있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가 대표성을 가지며 실적 역시 전년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2021년 목표치가 2020년 507천명에서 2021년 269천명으로, 매우 소극적으로 이뤄져 이에 대한 추가적 설명 또는 향후 목표치 설정에 있어 적절한 반영이 필요
	사업 우수성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조기 완결과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범위 확대(국기초 제도 수행 이후 2021년 12월 기준 최다 지원 수행)등 취약계층의 소득보장 강화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해당 과제는 제2차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향후 5년간 중점 추진과제의 소득 보장 분야 중 “1.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공공부조제도 역할 강화”의 핵심적 수단으로, 그 계획(과제 목적 및 내용)이 적정하게 수립·추진되었으며, 사업관리도 적정하게 이루어짐. 또한 사업 추진을 계획보다 빠르게 수행하였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포괄범위를

확대시킴

- 하지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있어 수요자 측면의 의견수렴과 성과지표 측면에서 2021년 목표치가 설정에 대한 근거가 보다 명확히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점

- 기초생활보장제도 포괄범위 확대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발생시켜, 사각지대 축소의 주요 기제로 작용
- 시군구 담당 공무원 대상 모니터링 및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한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인 사업점검 활동이 이뤄짐

□ 개선할 점

- 2021년 목표치가 설정이 2020년 등 과거에 비해 소극적으로 책정됨
 - ⇒ 성과지표 측면에서 2021년 목표치가 실적에 비해 낮게 책정된 사유를 보다 명확히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있어 주요 당사자인 정책 수요자에 대한 의견수렴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 정책수요자에 대한 의견수렴 활동 필요함. 단, 이러한 의견수렴 활동은 다양한 인식 및 실태조사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실적이 있으면 제시 필요
-

2-2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기준 완화 및 보장성 강화(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과제목표가 기본계획에 제시되어 있는 주요 과제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됨(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제외) - 과제내용의 경우도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사업기간의 경우 개별급여(맞춤형 급여)로 개편된 시점을 제시하는 것이 더 타당(2015.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적용)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적정하게 과제가 추진됨 - 비예산 사업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소위원회 개최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 및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모니터링, 협업체계, 외부지적 대응이 적절히 추진 및 수행되었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개선 필요	- 기준중위소득 산출 가구 기준 변경 검토에 대한 성과목표 지표는 제시되어 있지만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성과지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음 ☞ 해당 성과지표가 없는 이유가 있다면 해당 이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사업 우수성			- 가구균등화 지수의 단계적 현실화를 통해 1인 및 2인 가구 지원 수준 제고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해당 과제는 제2차 기본계획의 소득 보장 분야 중 기준중위소득 산출 가구 기준 변경 및 보유재산 기준 완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선 조정 검토에 해당되는 과제임
 - 비예산 과제로 제도개선을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연구 등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본 과제의 핵심적 수단임. 따라서 단순한 산출적 측면이 아닌 제도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결과지표로서 성과지표를 제시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음
 - 과제 목표에 해당하는 항목들을 포괄하거나 각 항목에 대한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필요

□ 우수한 점

- 가구균등화지수 개편으로 1인 및 2인 가구 지원 수준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짐. 또한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인 과제 점검 및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수행되어져 왔음

□ 개선할 점

- 보유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성과지표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 기준중위소득 산출 가구 기준 변경 검토에 대한 성과목표 지표는 제시되어 있지만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성과지표는 제시되어 있지 않는데, 향후에는 해당 지표를 제시하거나, 만약 제시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해당 이유를 제시
-

2-3

자활성공 보상 강화(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과제목표와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높음. - 과제내용의 경우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해당과제는 시행계획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음 - 예산 집행률은 100%로 나타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체계의 운영 그리고 협업체계 구축 및 외부지적 사항 대응이 적절히 이뤄졌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개선 필요	- 성과지표는 대표성 및 결과지표로서의 성격을 가지지만, 2021년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률은 72%에 불과함(참고로 성과지표명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코로나19로 인한 자립여건 악화 등을 고려해 볼 때 성과지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이 고려됨. 하지만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한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도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코로나19가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해당 프로그램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필요
	사업 우수성			- 외부 지적사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을 광범위하게 실시하였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해당 과제는 제2차 기본계획 소득보장 분야에서 제시된, 자활사업의 효과성 제고의 핵심적 수단임
 - 시행계획대로 사업의 집행이 수행되었으며, 집행도 적절한 수준에서 적절히 이뤄졌으나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

□ 우수한 점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체계의 작동, 외부 지적사항의 대응 등 사업 집행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

□ 개선할 점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률이 72%에 불과하며, 최근 3년간 성과목표 달성도와 비교해 볼 때도 가장 낮은 수준임
 - ⇒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사업수행의 제약을 감안해도, 성과지표의 목표달성을 이루지 못한 다른 사업들과 비교해서 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향후 성과지표 제시에 있어서는 성과지표 달성 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행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및 확대(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 목표 및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으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본계획에 부합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18년 25만원으로 인상, '19~21년 단계적으로 30만원 인상을 추진하여, 기존 목표를 조기 달성함 - 관련 법령 및 고시 개정, 선정기준액 마련, 수급자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등 전반적으로 시행계획에 제시한 내용과 일정을 정상적으로 추진함 - 국고보조금 조정을 통해, '21년 국고보조금 예산(8,213억) 100% 정상적으로 집행 완료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미수급 권리구제 대상자 및 연령도래자 일제 정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법정수급률 70% 초과 달성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정책전문가 회의, 간담회 등), 사업 모니터링(급여 집행실적 및 수급률 상시 점검 등), 협업체계구축(정부 부처 및 국회 협의) 등의 사업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당면한 문제점을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사전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장애인지초급여 1인당 월 최대 지급액)를 100% 달성하여 정상추진됨
	사업 우수성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인상을 통해 장애인가구의 빈곤완화 및 소득 개선에 기여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을 통한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라는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사업 목표와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시행계획에 제시한 추진 내용과 일정을 계획대로 시행함

-
- 사전 설정된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다양한 사업관리 및 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우수한 점

- '19년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인상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고, '21년에 기초급여액 인상을 전체 수급자까지 확대 완료하여 기존 목표를 조기 달성함
-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 미수급 권리구제 대상자 및 연령도래자 일제정비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법정수급률 70% 초과 달성함

□ 개선할 점

- 특별한 의견 없음
-

2-5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확대 [기획재정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저소득층)에게 근로유인을 제공하면서 세금환급을 통해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확대는 근로연령층 소득보장체계 확충 측면에서 사회보장기본계획과 부합- 다만, 제도 개선 방안의 경우 연도별 이행계획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제도의 궁극적 목표 달성을 위한 연차별 구체적 계획 내용 파악이 어려움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시행계획의 일정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음- 비예산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정신청·수령 모니터링 등 적절한 사업관리 추진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목표치의 98% 달성함. 자격요건을 갖춘 가구에 대한 세금환급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특성상 정상추진으로 판단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격요건 중 소득기준금액 인상 등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법령 개정 완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제도 개선을 통해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장려금 신청 심사 기간을 단축하여 반기 근로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조기 지급함으로써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지원 체감도를 증진
 - 다만, 연차별 이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볼 때, 근로장려세제가 도입된 지 10년 이상되었는데, 제도의 궁극적 목표(근로유인, 소득지원을 통한 빈곤탈출 유도)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집행되고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의 논의가 다루어지지 않음

□ 우수한 점

-
- 근로장려세제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법령 개정 추진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본 사업명을 고려할 때, 현재 사업성과지표는 근로장려세제의 '지원 확대' 측면에 중점을 두고 선정된 것으로 판단됨. 다만, 근로장려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제도의 기본 목표(근로빈곤층 근로유인, 소득지원을 통해 빈곤탈출 유도) 달성을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가 근로장려세제의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및 논의 필요

⇒ (권고안)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논의 기반을 위한 연구 추진 등 검토

2-7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며, 과제목표와 기본계획과의 연관성이 높음. - 과제내용의 경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해당과제는 시행계획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음 - 예산 집행률은 국비는 99.9%, 지방비는 100%로 나타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추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음. 다만 외부 지적 대응은 다소 모호하게 제시되었음 - 모니터링의 경우 포괄적 차원의 제도개선 함의를 위해 공급자 측면의 모니터링도 필요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률이 103.8%로 나타남
	사업 우수성			- 선정기준액의 지속적 인상을 통한 수급률 제고 및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 안내 등을 통한 불완전 수급 측면의 사각지대 해소가 예상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해당 과제는 제2차 기본계획 소득보장 분야에서 제시된,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에 대한 핵심적 수단임
 - 선정기준액의 지속적 인상과 함께 2021년이 경우 최근 3년 중 가장 높은 선정기준액 인상을 나타냄
 - 계획 및 집행 역시 적정하게 수행됐지만, 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현재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요자와 함께 서비스 공급자 측면의 모니터링도 필요

□ 우수한 점

- 저소득 노인에 대한 소득보장에 대한 가장 직접적으로 효과성을 미칠 수 있는 기초연금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보장수준이 제고되었음
 - 수급희망이력관리 대상자 안내 등을 통해 제도수혜 자격이 있지만 신청하지 않아 제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불완전 수급 측면의 사각지대 해소가 예상됨

□ 개선할 점

- 현 성과지표도 정량적 성격의 지표지만 보다 효과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음
 - ⇒ 향후 성과지표는 현재의 적용범위 측면의 지표와 함께 기초연금의 보장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 역시 활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8

국민연금 급여제도 개선을 통한 실질적 소득보장
강화(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목표와 내용이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고 명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2021년 시행계획 상 추진내용과 일정이 차질 없이 이행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사업관리실적 및 보완설명 자료를 통해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노령연금 연기 횟수 제한 폐지, 소재불명자 연금지급정지 규정 법제화
	사업 우수성			-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과제목표와 내용이 기본계획 목적에 부합하며, 집행계획의 이행수준이 양호하며 사업 성과 또한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사업관리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함

□ 우수한 점

- 특기 사항 없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1) 추진실적 평가자료 작성 시 상세 정보 기재 및 보완 필요
 - 사업관리 적정성 평가 요소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대하여 제출된 평가 자료에는 사업관리주체들로만 구성된 급여제도개선추진단 운영 실적만 기재되어 있고, 국민연금심의회를 통해 다양한 인구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내용을 누락하였음
 - ⇒ (권고안) 사업관리 실적 자료 작성 시, 급여제도개선추진단 운영 실적 이외 국민연금심의회 및 제도발전위원회를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내용과 운영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개선필요 2) 보완적 성과지표 발굴 및 제시

- 현재 성과지표로 설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은 제도개선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지표이지만, 과제목표인 소득보장강화를 대표한다고 보기 어려움

⇒ (권고안) 법 또는 하위 규정 개정에 따른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보완적 성과지표를 발굴하고 목표치를 설정하여 현행지표와 함께 제시할 필요

2-10

국민연금기금의 장기 수익률 제고(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목표와 내용이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고 명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비예산 사업으로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성, 안정성 제고를 위한 투자다변화와 책임투자 강화 목적 달성을 위한 2021년 세부 추진계획 이행 양호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 의 적정성	정상 추진	- 2021년 시행계획 추진에 있어 관계 법령과 절차에 따라 사업관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투자다변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 달성을 대표하기 위해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성과지표로 제시 -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고려하여 설정된 2021년도 목표치 42.6% 대비 2.7%p 초과달성
	사업 우수성			-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과제목표와 내용이 기본계획과 연관성이 높으며, 2021년 성과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 연도별 시행계획 상 세부추진 과제의 구성항목이 많고, 각각이 의미하는 범위가 크다는 점에서 각 세부추진과제 항목별 추진실적, 사업관리 및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평가 자료의 내용과 구성을 보완할 필요

□ 우수한 점

- 특기 사항 없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보완적 성과지표의 설정 및 관리 검토
- 현재 성과지표로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도별 목표치를 계속 확대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음
- 동 지표가 기금투자 다변화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임은 분명하지만, 반드시 과

제목표인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제고를 의미하는 바는 아닐 수 있음

⇒ (권고안) 과제목표 달성을 대표할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투자에 따른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보완적 지표를 발굴, 현행 지표와 함께 제시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2-11

다층노후소득보장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성 및 사회적 대화 지원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목표와 과제내용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연계되어 있으며, 명료성 높게 제시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세부 추진계획은 시행계획에 맞춰 이행되었으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 - 다만 1/4분기 추진실적의 경우 2020년으로 작성되어 있어, 2021년 내용으로 수정·보완될 필요가 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관계부처 및 관련 연구기관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도연구기관별 실무회의를 통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짐 - 협업체계가 적절하게 마련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협의체 운영 실적 목표를 달성함
	사업 우수성			-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례적인 범정부 논의체계 마련 및 운영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집행 및 사업관리가 적정하게 수행되어, 목표한 성과를 원활하게 달성함
 - 2020년 협의체 구성 후 2021년 효율적인 협업체계를 통해 연구기관 등의 실무회의와 정부기관의 협의체 개최가 시행계획에 맞춰 정례적으로 이루어짐

□ 우수한 점

- 계획-집행-성과의 모든 측면에서 사업을 충실하게 수행함
 - 실무협의체 운영,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심층분석 등 제도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논의 추진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성과지표
 - 2020년 성과지표는 협의체 구성, 2021년 성과지표는 협의체 운영(1 개최 실적)임
 - ⇒ (권고안) 향후 성과지표는 보다 적극적으로 설정하여 개최 실적 수 확대 또는 제도
정립방안 마련 등 성과 중심으로 개선 필요

2-12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 (고용노동부)

□ 최종 평가 등급: 우수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목표와 과제내용은 기본계획 내용과 연계되어 있으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세부 추진계획을 원활히 이행하여 법 개정이 이루어짐 - 법 통과에 따라 제도 정착 및 시행을 위한 단계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예산사업으로 추진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법 개정 및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을 실시함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을 위한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의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기관 간 역할 배분 등을 추진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및 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이라는 성과를 달성
	사업 우수성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 퇴직연금 기능 강화
최종 등급				우수

□ 총평

- 사업계획이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집행이 세부 추진계획에 맞춰 적정하게 이루어짐
 - 법 개정 완료 후 제도의 정착 및 원활한 시행을 위한 단계적인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수한 점

- 약 10년간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이
완료된 것은 본 사업의 큰 성과이자 우수한 점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제도 도입 과정에서 협의회 추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 해
소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진 점 역시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우
수한 점임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추가 성과달성을 위한 노력 확대 지속

- 퇴직연금의 연금기능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및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국회 통과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

⇒ (권고안) 언론 홍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조성

2-13

주택연금 활성화 (금융위원회)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목표와 과제내용은 기본계획 내용과 연계되어 있으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시행령 개정시행 및 관련 상품 출시가 상반기 중에 추진되어 세부 추진실적에 맞춰 수행됨 - 비예산사업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개선 필요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은 연례 혹은 통상 업무로만 제시되어 있어, 세부 추진계획의 사업관리를 위해 개선 필요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 목표 초과달성
	사업 우수성			-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누적 가입자 수 및 연간 연금지급액 지속 확대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구체적인 계획 하에 사업의 집행, 사업관리 등이 충실히 이루어져, 목표한 사업성과를 달성함
 - 다만 사업관리 계획 및 실적 점검은 본 사업목표와 내용에 맞춰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수정·보완될 필요

□ 우수한 점

-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충실하게 이루어져, 누적 가입자 수 및 연간 연금지급액이 지속 확대되고 있음
-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여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한 신탁방지 주택연금 허용 및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 도입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사업관리
 - 세부 추진계획에 맞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모니터링이 아닌 연례 혹은 통상 업무로 제시되어 있음
- ⇒ (권고안) 세부 추진계획에 보다 초점을 맞춰 신탁방지 주택연금 허용 및 주택연금 압류방지 통장 도입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체화

2-14

농업인 노후소득보장강화 (농림축산식품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목표 및 과제내용이 기본계획 내용과 연계성 있게 구성되었으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세부 추진계획을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예산 집행률 100% 달성(추경 포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연금 관련 관계기관,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어업인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지원 농어업인, 농지연금 실행부서 대상 모니터링 등을 통해 사업관리를 추진 - 협업기관간 역할 배분과 협의 등 협업체계 구축 - 외부지적사항에 적극 대응하여 제도 개선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연금보험료 농어업인 지원대상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목표 초과 달성(101.9%) - 농지연금 누적가입건 수는 목표 미달성(95.4%) 이나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을 감안한다면 높은 성과임
	사업 우수성			-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이 명확하며, 집행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됨
 - 국민연금, 농지연금 등 제도별 계획과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우수한 점

- 사업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제도개선이 신속하게 추진됨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사업점검을 위한 모니터링, 협업체계 구축, 외부 지적사항 대응이 활발하게 추진됨
-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적극적인 사업관리를 통해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을 강화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성과지표

- 2020년 과제내용에 적합하게 과제명이 변경(농지연금 보장성 강화 →농업인 노후소득보장강화)되면서, 성과지표는 '농업인국민연금가입률(%)'에 '농지연금 가입실적(건)'을 추가한 바 있음

- 그러나 2021년 국민연금 관련 성과지표는 신규지표가 아니라고 제시하며, '농업인 국민연금가입률(%)'에서 '연금보험료 농업인 지원대상 수급자 수(천명)'로 변경됨

⇒ (권고안) 국민연금 관련 성과지표의 변경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나 근거를 제시할 것을 권고. 또한 제시된 2022년 지표설정 사유, 측정산식 등에서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이력자 대비 국민연금 수급자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성하여 측정방식에 대한 설명이 제시된 성과지표와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수정 필요

2-15

노인 일자리 확대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저소득 노인의 소득보전과 노인의 사회참여라는 정책목표는 노후소득보장체계 확충이라는 기본계획에 부합- 사업근거와 사업 대상이 명확하며 사업의 추진경과 및 내용 또한 적정하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예산도 정상 집행되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양한 이해관계자(전문가, 수행기관, 지자체공무원 등) 의견수렴, 모니터링, 외부 지적사항(중도탈락자 다수 발생)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해 사업개선에 활용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치를 100% 이상 초과 달성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일자리 발굴을 통한 최근 노인 특성 반영한 일자리 확대와 신청제한 개선으로 참여기회 확대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21년 세부계획에 따라 사업 정상 추진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대응 등을 통해 사업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우수한 점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 외부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 대응 등 사업관리의 적극성이 인정됨
-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에 대비한 신규 일자리 발굴 및 지속적인 확대

□ 개선할 점

- 일자리 질적 측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외부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됨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질적 측면 관리를 위한 지표 개발을 통해 사업의 내실화를 기여할 필요

요가 있음

- 노인일자리의 지속적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가치정립 필요
 - 현재 노인일자리의 확대에 따른 수행기관 부담이 과제 장애 요인으로 나타남.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의 참여노인이 수행기관의 상시근로자로 산정되어 수행기관에 장애인 의무 고용, 고용보험료율 상향 등 파생적 부담 발생. 베이비붐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 등 노인일자리사업 지속적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참여노인을 어떻게 볼 것인지 등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한 가치정립이 필요한 시점
-

3-1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 및 관리강화 [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회보장 강화의 정책 목표와 부합하는 과제임- 사업 추진근거와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 주체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된 일정대로 비급여의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었음- 비예산 사업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월별 의료이용량 모니터링을 통해 과의료 이용을 점검하고 조치하는 등 사업관리는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계획한 흉부, 유방,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실시됨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험 적용대상 서비스의 증가로, 국민의료비 부담이 경감함- 서비스 오남용 및 재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대응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집행계획 이행 및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시행되었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므로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 우수한 점

- 적정 수준의 검사를 유도하기 위해 이용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원인 파악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근거에 기반한 건강보험 적용 계획 수립 및 환자 및 가입자 단체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관리
- ⇒ (권고안)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에 맞게 과제가 추진될 수 있도록 의료적 필수성 및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적용계획을 수립하고 환자 및 가입자 단체의 지속적인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함

3-2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본인부담상한제 합리적 개선 및 재난적 의료비 지원 강화를 통하여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근거와 사업대상, 사업주체, 시행방법 등이 구체적임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음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예산 집행률은 99.8%로 계획대로 예산을 집행함’. 본인부담상한제’는 비예산사업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 심의위원회, 요양 기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함 - 분기별로 예산집행 현황과 사업실적을 모니터링하고, 협업기관 간 실무회의를 수시로 개최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개선 필요	- ‘재난적 의료비 지원 보장률’을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사전에 계획한 목표치를 근접하게 달성함 - 다만 본인부담상한제는 전체 국민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바, 성과지표 또한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질환자에서 최소 중위소득 100% 이하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 추가로 공단부담금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성과지표를 개선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나 공단부담금을 제외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의 성과는 포괄하지 못하게 됨 - 또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지원받는 소득계층(기초·차상위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에 따라 실적치가 달라지게 됨
	사업 우수성			- 지원기준완화 및 지원비율 상향 조정, 의료기관 직접 청구 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단축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직접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집행계획 이행 및 사업관리가 적정하게 시행되었고 성과지표를 근접하게 달성하였으므로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다만 의료비 부담의 형평성 제고라는 사업의 목표를 잘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우수한 점

- 지원기준완화 및 지원비율 상향 조정, 의료기관 직접 청구 기한을 퇴원 7일 전에서 3일 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저소득층의 직접의료비 지출로 인한 부담을 완화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성과지표의 연관성 및 대표성 보완 필요
 - 공단부담금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성과지표 수정을 계획하고 있으나 공단부담금을 제외할 경우 본인부담상한제의 성과는 포괄하지 못하게 되며 -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지원받는 소득계층(기초·차상위 및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율에 따라 실적치가 달라지게 됨
 - 현행 성과지표는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질환자를 대상으로 성과지표를 산출하고 있으나 전체 대상집단을 포함하도록 성과지표의 개선이 필요함
 - ⇒ (권고안) 지속적으로 공단부담금을 포함하여 성과지표를 산출하고(만약 제외할 경우 본인부담 상한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별도 지표 추가 필요) 중위소득 100% 이하 전체 국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3-3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 [복지부, 금융위]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연계 등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관리·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연도별 이행계획, 추진근거와 추진경과, 사업대상, 추진주체 등이 제시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세부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구체화되어 있음. - 이해관계자 여론 모니터링 실적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가 정해진 일정에 맞게 개최되었고 실손보험료 조정방안이 협의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분석을 정교화하기 위해 일정을 늘려서 진행하였으나 연내 추진된 점을 감안해 정상추진으로 간주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였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함 - 공사보험연계법 소관 상임위 미결정 상태에서 폐기 위기가 지적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을 각각 개정해 연계 근거 마련을 추진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공사의료보험 연계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으나 국회에 제출하였기에 성과달성으로 간주함
	사업 우수성			-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국민 의료비 부담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손보험을 관리·개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사업으로 사업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목표한 공사의료보험 연계 관련법
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 우수한 점

-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해 사업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목표치를 달성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국민 의료비 부담 적정화 도모라는 기본계획의 목표에 맞게 과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권고안) 공·사보험 연계 개선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성과 달성 관련 지속 모니터링 권고

3-4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추진(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개선필요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도입 추진하는 것으로 신포괄수가제 대상기관 확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등 과제목표가 명확하며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음- 다만 기초자료구축→기초자료 검증→개선모형 도출 단계로 추진되는데 1/4분기와 3/4분기에 신포괄수가 모형 기초자료 구축이 중복되어 있어 사업진행과정이 불명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이행계획 주요 내용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개선 및 단계적 확대에 포괄, 비포괄 영역을 재설정하고 조정계수 유형분류 지표와 정책가산 평가지표를 개선하는 등 '22년 신포괄수가 개선 모형 마련 작업이 일정대로 집행되었으며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비예산사업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기관 및 시범사업 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의가 중요한 사업으로 신포괄협의체를 운영하고 시범사업 참여기관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 외부지적 대응과 관련하여 포괄, 비포괄 영역 재설정 관련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 있으나 해당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 개선필요로 판단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포괄수가제 모형의 '22년 적용을 검토하였기에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개선필요

□ 총평

- 신포괄수가제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시범사업 모형 개선이 계획대로 추진되었으나 모형 개선 과정에서 국정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한 외부 지적 대응 관련 내용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에서 '개선필요'로 판단함

□ 우수한 점

- 사업 우수성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없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성과 달성 수준에 있어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권고안) 사업의 단계적 확대 측면에서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이 필요함

3-5

일차의료의 기능 강화 [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보장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만성질환자 대상 포괄적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과제목표가 명확하며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음 -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근거, 추진경과, 사업기간 및 사업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내용으로 설계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음 - 예산 집행률 100%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됨
	예산 집행실적			
집행 적정성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획했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참여의원에 대한 모니터링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범사업 참여 환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사업개선사항에 대해 시범사업 참여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함 - 통합추진단을 운영하고 서비스 제공인력 역량 강화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사업추진주체 간 주례회의(10회), 쟁점논의회의(5회) 진행 등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상추진으로 간주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모형 참여 의료기관 비율'을 지표로 설정하였는데 본 사업은 포괄적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이라는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으로, 참여 의료기관의 비율도 중요하지만 참여 환자 수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 - '21년 시행계획에서는 2020년 실적치가 31%로 제시된 바 있으나 추진 실적 자료에서 2020년 실적치가 19.5%로 제시되어 있음. 만약 2020년 실적치가 31%였다면 과거 실적치 추세를 감안 시 '21년 목표치 30%는 소극적인 목표치임. - 다만, 본 사업이 시범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 참여 의료기관의 확대가 중요하다는 점, '21년 47.3%를 달성하여 '20년 실적치와 비교하더라도 달성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정상추진으로 간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환자교육자료를

	개선하였고 지역의 사업 담당자인 보건소 담당자와의 점검을 통해 사업을 개선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본 사업은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포괄적 예방 및 관리서비스를 제공 등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목표치에 맞게 참여 의료기관 확대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 우수한 점

- 일차의료의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제공체계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 의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환자 의견 수렴 및 현장 인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제기되는 문제를 해소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일차의료기관의 기능강화라는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성과 지표 마련 및 사업점검 필요
 - ⇒ (권고안1) 현행 성과지표는 '만성질환관리 통합서비스 모형 참여 의료기관 비율'로 설정되어 있으나 사업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도록 전체 등록환자 및 서비스 유형별 참여 환자 규모가 성과지표로 함께 고려되어야 함. 또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이라는 점에서 결과지표로 만성질환자의 주요 건강성과 지표(예 ; 당화혈색소 관리 비율) 및 만족도 등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 (권고안2) 참여 환자 규모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시 문제 파악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참여의원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함

3-6

권역·지역 책임의료체계 마련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권역, 지역별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지역 내 필수의료 협력사업을 확대 추진, 의료자원 부족지역의 공공병원 기능보강 등을 통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세부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사업 추진 완료 - 예산 전액 집행 완료(100%)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사업지침 및 신규 책임의료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안 마련 시 지자체, 책임의료기관 의견수렴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및 개선에 활용 - 사업 지원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을 통해 협력체계 모형 개발 및 협의체 구축 관련 지속 독려 및 지원 제공, 반기별 사업 추진현황 점검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기존 책임의료기관 지정 계획 목표 달성('21년 권역15개소, 지역 5개소)
	사업 우수성			-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업의 계획 및 집행이 적정하게 수립, 진행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
 -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통한 해당 지역에 대한 필수의료 제공으로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는 적정하며 이를 위해 연차별 권역 및 지역 책임의료
기관 지정 개소수도 목표대로 진행하고 있음

□ 우수한 점

- 사업 우수성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없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지방비 집행액 및 집행률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예년의 경우, 지방비 집행 저조로 인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며, 올해 또한 지방비 집행액 확인 늦어짐

⇒ (권고안) 지방비 예산의 집행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여야 할 것임

○ (개선요인) 성과지표 보완이 필요. 현재 '책임의료기관 지정 수(누적)' 등 필수의료 제공의 투입요소에 대한 지표만 파악. 실제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지표를 기 확충한 지역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음

3-7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추진(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개선필요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치 법안 통과를 전제로 연차별 설립 추진 일정과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정책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 의·정 합의('20. 9. 4.)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예정으로 근거법령 미제정에 따른 집행실적 없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개선 필요	- 의·정 합의('20. 9. 4.)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예정으로 근거법령 미제정에 따른 집행실적 없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개선 필요	- 의·정 합의('20. 9. 4.)에 따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 예정으로 근거법령 미제정에 따른 집행실적 없음
	사업 우수성			-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개선필요

□ 총평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음. 하지만, 의·정합의('20.9.4)내용에 따라 세부 사업 추진은 코로나 안정화 이후 진행될 예정으로 최종 등급은 '개선필요'로 판단

- 코로나19 안정화 후 조속한 논의 재개가 필요

□ 우수한 점

- 사업 우수성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없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나 코로나19라는 외부적 환경요인에 따라 사업 논의 및 진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따로 개선점 및 권고안은 제시하지 않음

3-8

지역별 응급이송 체계 구축(보건복지부-소방청)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지역별 중증응급환자 적정 이송을 위한 지역 시범사업(지역별 이송지침 마련 등) 정상 진행 중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 사업계획 절차에 따라 사업을 세부 추진하였으나 의사, 간호사 인력부족, 연구용역 미체결에 따른 예산 불용액이 43.4억원(집행률 93.2%)발생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현재 강원, 인천, 제주지역 이송지침 마련 시범사업 진행 중으로 연차별 목표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권역외상센터 구축으로 외상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감소 중임 * ('15) 30.5% → ('17) 19.9% → ('19) 15.7% - 권역외상센터 구축으로 성과지표를 단기간에 개선하고 있으며 향후 개선이 기대됨
	사업 우수성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타당하게 제시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사업관리
가 적정하며 성과를 잘 달성하고 있음. 다만, 20년에 이어 21년에도 인력과 관련한 예
산 불용분이 발생하고 있음. 인력 채용과 관련한 부분은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에 핵
심적인 부분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음

□ 우수한 점

- 성과지표를 단기간(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15년 30.5% -> 15.7%) 개선하고 있으며
권역외상센터 구축으로 향후에도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우수인력 확보방안 마련
⇒ (권고안) 외상학 전문의로 인력 및 간호사 임용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야 성과가 보다 더 적절하게 개선될 것
- (개선요인)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관련 연구용역 계약 미체결
⇒ (권고안) 관련 연구용역 요청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계약 추진
- (개선요인) 응급이송 체계에 따른 적절한 지표 추가 마련
⇒ (권고안) 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뿐만 아니라 심뇌혈관질환 사망도 같이 볼 필요가
있으며 전단계에서 이송시간 등도 같이 살펴볼 필요성이 존재

3-9

응급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의료의 질적 개선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종별 역할 명확화, 기능 재정립 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정상 진행 중- 사업근거나 추진경과, 기간, 대상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였고 사업내용을 잘 구성한 것으로 판단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급의료기관 평가지표 개선 후 평가를 시행하고, 지역 내 응급 책임진료체계 구축 연구도 수행 완료하는 등 사업계획 절차에 따라 사업을 세부 추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 집행률은 96.6%(불용액 10억원)로 수용할만한 수준으로 판단하여 정상추진으로 평가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 및 협업체계 운영을 통해 사업을 적절하게 관리한 것으로 판단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성과 목표로 응급실 과밀화지수를 제시하고 개선된 결과를 달성함(목표치 101.2%, 실적 87.5%)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성과 목표 초과달성 하였으며 응급의료체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필요에 대한 반응성 제고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타당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세부사업 추진 및 예산 내용도 잘 집행하였음. 그리고 사업 추진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 등 여러 방안을 적용하여 사업을 적절하게 관리하였음

□ 우수한 점

- 응급실 과밀화지수 성과지표를 115.7% 수준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응급의료체계가 적극적으로 사회적 필요에 반응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리하였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1) 22년 성과목표치가 다시 퇴행(87.5% ->95.8%)

⇒ (권고안) 21년 성과 실적치를 고려하여 목표치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만일 21년 수치가 이례적인 내용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 심도 깊은 평가 후 성과목표를 유지할 수도 있겠음

○ (개선요인2) 질환별 네트워크 당직체계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선안 마련이 지연되고 있음

⇒ (권고안) 이에 대한 전략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10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외상환자에게 응급수술 등 최적의 치료를 항상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전문 치료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내용으로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 감소의 사업목적과 정합성이 있음- 사업 근거나 추진 경과, 기간, 대상을 구체적으로 잘 제시하였고 사업내용을 잘 구성한 것으로 판단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절차에 따라 사업을 세부 추진하였으나 의사, 간호사 인력부족, 연구용역 미체결에 따른 예산 불용액이 43.4억원(집행률 93.2%)발생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증외상 진료현장의 열악한 여건 개선을 위해 중증외상 진료체계 개선대책('18.3월) 지속 추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 개정(6월)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권역외상센터 구축으로 외상환자 중 적절한 시간 내에 처치를 받았으면 생존할 수 있는 '예방 가능한 외상사망률'*이 감소 중임 <p>* ('15) 30.5% → ('17) 19.9% → ('19) 15.7%</p>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성과 목표 초과달성 하였고 향후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타당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세부사업을 잘 추진하였음. 그리고 사업 추진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지침 개정 등 적절한 사업관리 방안도 진행하였음. 다만, 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집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여 사업성과가 더 잘 개선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점

- 성과지표를 단기간(예방가능한 외상사망률 15년 30.5% -> 15.7%) 개선하고 있으며 향후 더 개선을 기대해볼 수 있겠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22년 성과목표치를 제시할 필요성

⇒ (권고안) 22년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 (개선요인) 우수인력 확보방안 마련

⇒ (권고안) 외상학 전문의료 인력 및 간호사 임용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성과가 보다 더 적절하게 개선될 것

3-11

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중앙-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체계 구축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안 발의 완료('21.10월) * 개정안 마련을 위해 전문가 및 의원실 협의 및 의견수렴 진행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사업계획 절차에 따라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예산도 정상적으로 집행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기준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 권역심뇌센터의 수행사업에 대해 외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환류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심뇌혈관질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개정 추진 중
	사업 우수성			-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타당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세부사업 추진 및 예산 내용도 잘 집행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 추진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면서 적절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수한 점

- 해당 사항 없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심뇌혈관질환 안전망 구축에 따른 건강결과 개선에 대한 지표가 제시되지 않고, 사업 추진, 법안마련 등의 정책적 산출 목표만 제시되고 있음
⇒ (권고안) 지역별 개선이 필요한 심뇌혈관 관련 건강결과지표를 제시하거나 혹은 과정지표를 고민하여 제시할 필요

3-12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에 따른 위기대응체계 고도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중앙 및 지자체 감염병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고, 이의 이행을 위한 사업근거, 추진경과, 기간 및 대상이 잘 계획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사업계획 절차에 따라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예산도 대체적으로 잘 집행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 협업체계를 통해 사업을 적정하게 관리하였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동 구축, 질병대응 센터 운영 등 관리체계 구성을 진행하고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을 시행하였음. 다만 실무자 교육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였음
	사업 우수성			-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고,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감염병 대응인력 교육 등에 대한 세부사업 추진 및 예산 내용도 잘 집행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 추진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면서 적절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수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감염병대응 실무자 교육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함
 ⇒ (권고안) 코로나로 현장의 실무진이 피로감을 호소하는 상황이긴 하나 가능한 실무자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할 필요

3-13

한국형 원헬스(One Health) 기반 협력체계 구축(질병관리청)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다부처 공동 감염병 감시, 예방, 대응체계 마련’을 목표로 하여 기본계획과 과제목표간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근거, 사업기간 및 대상이 잘 제시되어 있음. 다만, 목표 지표를 보다 적절한 지표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코로나19로 다소 변경이 있으나 대체로사업계획 절차에 따라 계획된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었음 - 회의비 불용에 따라 예산 집행률은 85.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소액인 점을 감안하였음 - 다만, 연도별 주요 추진실적에 세부추진실적 내용(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역학조사 및 지원도 반영하거나 반대로 삭제하는 것도 고려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및 학계)의 의견을 주기적으로 적극 수렴하여 진행하고, 과제 수행기관의 분기별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 실시 - 원헬스 차원에서 특히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하여 유기적인 운영체계 마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사업 우수성			-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고, 사람-동물-환경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원헬스' 차원에서 정책 포럼 운영 등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코로나로 대면회의가 제한되어 일부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하면서 적절하게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우수한 점

○ 해당사항 없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성과지표 개선 필요

⇒ (권고안) 현재 지표인 역학조사를 통한 원인병원체 규명률은 원헬스의 대표 지표로
적절해 보이지 않음. 해당 지표에 대한 삭제를 권고함

3-14

**분만 취약지 지원강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지원 (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분만취약지 지원을 강화하고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정·지원하는 것으로 과제목표가 명확하며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음-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근거, 추진경과, 사업기간 및 사업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내용으로 설계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은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내용과 일정에 따라 추진되었으나 지원 시설이 49개소로 당초 계획했던 52개소에는 미달하였으나 지원 지자체가 없는 문제로 판단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중증 소아 단기 입원 병동 확대(1개소)는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보강 예산으로 활용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계획했던 1개소에서 확대하여 5개소를 지원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한 사업 개선, 사업비 집행현황 및 사업 진행 상황을 계획대로 모니터링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만취약가임인구율, 소아청소년과의료이용취약인구율을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표는 정책내용을 포괄하며 목표 달성 정도를 잘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두 지표 모두 목표치 대비 실적인 100% 이상임- 다만 목표치가 '20년 실적치와 동일하거나 높아서 충분히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기능강화 사업,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지원이 적절하게 이행됨에 따라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 우수한 점

- 사업 우수성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없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검토 필요

⇒ (권고안) 목표치가 전년도 실적치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악화되는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3-15

장애인 건강 주치의 도입, 장애인화 검진기관 확대(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개선필요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과제로 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이 높음- 기본계획 수행을 위한 사업근거, 추진경과, 사업대상 및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률이 12.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상임위 ‘22년 예산안 검토 지적(연례적으로 지정 실적이 저조하므로 현실적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 마련)을 감안 시 예산 불용사유(공모 저조)를 외부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및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장애인 단체, 유관 기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협업기관 간 역할 배분과 의견수렴 마련 등 사업관리가 적정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건강주치의 참여 수’는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있는 산출지표로서, 목표치를 112% 초과 달성하였으나,-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사업의 경우, 공모 저조로 인해 현재 계획된 목표를 미달성(‘21년 현재 목표 대비 약 25% 이행 수준)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개선필요

□ 총평

○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내용과 일정에 따라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예산집행

실적 부진과 성과 미달성을 고려하여 '개선필요'로 판단함

-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사업과 관련하여 예산 집행률 12.1%에 불과
- 23년까지 장애인화 건강검진기관 77개소 지정 목표이나, '21년 말 지정기관은 19개소에 그치고 있음

○ 예산집행 부진 및 성과 미달성과 관련하여, '연례적으로 지정 실적이 저조하므로 현실적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 마련 필요' 등의 외부 지적(2022년 예산안 검토보고) 고려 시 불가피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우수한 점

- 사업 우수성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없음

□ 개선할 점

- 외부 지적사항(2022년 예산안 검토보고)과 관련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현실적으로 가능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을 마련하고, 지원단가 상향 조정 등 이해관계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검진기관 지정에 필요한 지원비용을 정확히 추산하여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계획 마련 후 이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추진 일정 및 성과 목표 재조정 필요
-

3-16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 [보훈처]

□ 최종 평가 등급: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확대'의 일환으로 국가유공자의 의료·요양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으로 과제목표가 명확하며 기본계획 내용과 연관됨-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근거, 추진경과, 사업기간 및 사업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과제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내용으로 설계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인건비 불용액의 규모가 큰 편이나,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추진절차에 따라 계획한 사업이 연내 추진되었으므로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용자, 민원인, 복지인력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과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수행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는 의료서비스는 보훈병원 재활센터 확충 공정률,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공정률, 심리재활서비스 이용자수, 보훈요양서비스는 보훈요양원 건립 공정률 및 요양서비스 만족도, 보훈재가복지서비스는 재가복지 서비스 종합지수로 정책내용을 포괄하고 구체적이나 사업 공정률 지표는 성과지표보다는 집행실적에 가까움- 대부분 지표의 '21년 목표치는 적절하게 설정되었으나 다만 재가복지서비스 종합지수 목표는 '20년보다 낮게 설정되어 도전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대부분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나 재활센터확충공정률 실적은 66.6%로 '21년 시행계획 목표치 73% 미치지 못함 예산 조정 및 공사 추진방안 논의 등 행정기간이 소요되면서 대구 재활센터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가 '23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임.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제도를 추진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긴급긴요지원 제도 도입 등 대책을 마련함- 보훈요양원 건립 현장 인근 주민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보훈섬김이 성희롱 문제에 방문 방식 개선 및 대상자 예방교육 등 적극 대처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

□ 총평

- 사업목적 및 내용이 적정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적정한 사업관리가 이뤄졌음

□ 우수한 점

-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라는 사업 목표와 부합하게 복지사각지대에 적극 대응하였으며 사업 수행 과정 중 발생한 예기치 않은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성과지표에 대한 검토 필요
 - 보훈병원재활센터 확충 공정률, 중앙보훈병원 치과병원 증축 공정률, 보훈요양원 건립 공정률은 성과지표보다는 집행실적에 가까운 지표임
- ⇒ (권고안) 국가유공자 의료·요양서비스 확대라는 사업 목적 달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 설정이 필요하므로, 건립사업 완료 이후 이용자 만족도, 이용률 등의 지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3-17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컨설팅은 과제 목표와의 부합성이 높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계획한 세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 집행률 100%를 달성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 과정, 모니터링, 협업체계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를 100% 달성함
	사업 우수성			-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과제 목표와 내용간 부합성이 높고, 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진행되었고,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여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 우수한 점

- 센터 개소수를 확충하는 것과 더불어 컨설팅을 실시하여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고 있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빈도와 주기성이 파악되지 않아 의견수렴이 일회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2023년 250개소 확충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함. 자체 평가에서 언급한 낮은 국비 지원단가로 인한 추가 지방비 소요로 지자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에 동의함

⇒ (권고안) 국비지원단가 인상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과정에서의 지속 협의 추진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한 지역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 지속

3-18

방문건강관리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 목표에 따라 과제 내용이 구성되어있으며, 과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계획한 세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 집행을 100%를 달성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와의 의견 수렴 과정, 모니터링, 협업체계가 구성 및 운영되고 있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개선 필요	- 성과 달성도가 100%를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사업 우수성			-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과제의 목표와 내용 간 부합성이 높고 계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 세부 추진 사업의 내용은 실제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대한 수행이 아닌 지침 개정, 성과 분석, 설명회 개최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이들 사업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도 정상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보임
- 성과 달성 수준은 80%에 불과하나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의 대응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진행하는 보건소 인력이 동원된 것을 고려해 볼 때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된 상황에서는 사업 성과를 무리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 우수한 점

○ 특이사항 없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은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빈도와 주기성이 파악되지 않아 의

견수렴이 일회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 성과와 관련하여 부서에서 제안한 디지털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보건소 개소 수는 체계를 구축하는 차원에서는 적절한 성과 지표로 인식함. 하지만 전반적인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한 고민도 추가적으로 필요해 보임
 - ⇒ (권고안) 적극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구조 운영 및 성과 지표 개발·모니터링
 -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에서는 성과 관리를 위한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도 필요
-

3-19

금연 대책 강화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 목표에 따라 과제 내용이 구성되어있으며, 과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계획한 세부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예산 집행을 역시 100%를 달성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위원회, 모니터링, 협업기관 간 협업이 주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언론보도의 지적 사항을 사업에 반영하는 등 사업관리는 적절하게 진행되었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2021년 청소년 흡연율은 4.5%로 목표 대비 초과 달성, 담배반출량도 98.5% 성과 달성 수준은 양호
	사업 우수성			- 신종담배에 대한 건강증진부담금 부과근거 마련 - 참여형 캠페인 추진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과제 내용은 과제 목표에 부합하도록 구성되어있으며,사업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 성과 목표는 100% 달성하지 못하였으나, 전반적인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담배반출량 목표 역시 98.5% 달성도를 보여 성과 달성 수준은 양호함

□ 우수한 점

○ 부처간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 금연 대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종담배에 대한 건강증진 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홍보 캠페인을 참여형 캠페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우수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 자체 평가에서 제안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국가 금연지원 서비스 이용자 감소

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함

- 성과목표 중 하나로 공급 지표인 담배반출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중요하나, 과제 이행 부서가 담배반출량을 관리(혹은 통제)하는 기전에 참여(혹은 협업)하는 지에 대한 내용이 파악되지 않음
 - ⇒ (권고안) 자체 평가에서 제안한 비대면 금연지원서비스 강화를 통한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과제 개선 계획에 동의함
 -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부처 간 협업 강화 필요
-

3-20

음주폐해 예방 및 중독관리 대응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 내용은 과제 목표에 부합하게 설정되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 세부 사업이 일부 지연 추진되기는 하였으나, 계획한 사업들이 모두 진행되었음 - 예산 집행률은 94%로 예산집행 미이행 기준인 97%를 충족하지 못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전문가, 주류업계, 광고업계, 미디어,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 수렴이 진행되었음 - 모니터링 역시 음주폐해예방사업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진행되고, 중독관리 대응 체계에 대한 모니터링이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음. - 의견수렴, 모니터링 과정에서 파악된 개선 사안이 사업 추진에 반영되었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음주폐해예방 홍보 성과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록자 수 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사업 우수성			-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예산 집행률이 이행 판단기준인 97%에 미치지 못하나 과제 목표와 내용 간 부합성이 높고, 계획한 세부 사업들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관리 역시 적정하게 진행되고 있어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 우수한 점

- 음주폐해예방 법제도 개선 성과를 보였으며, 개정법을 반영한 음주조장환경 개선 및 절주실천 유도가 진행된 점은 우수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 하나의 과제 안에 두 개의 사업에 대한 추진 실적이 제시되고 있으나, 각 사업이 추

진실적에 포함된 내용의 구체성에 차이가 존재함. 두 개 사업의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적 취합 및 제시 필요

⇒ (권고안) 중독관리대응체계 강화 사업 모니터링 강화

3-21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개선필요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비만관리 종합대책 이행 목표에 따라 부처별 대책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과제는 부합성이 높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 과제의 세부 추진 계획이 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진 계획 점검, 추진 실적 공유, 장애요인 점검 및 예산확보 현황 공유인데, 2/4분기와 3/4분기의 경우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위원회 개최가 연기된 것으로 보여 추진 계획에 따른 이행이 지연된 것으로 보임 - 예산 집행률은 100%를 달성하였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부처별 세부과제 추진 실적을 점검 및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있어 사업관리는 적정하게 진행되었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개선 필요	- 부처별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기는 하나 성과가 21년의 경우 증가하여 목표치를 부분 달성함. 다만 부처별 종합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개선 과제 도출 필요
	사업 우수성			- 특이사항 없음
최종 등급				개선필요

□ 총평

- 과제 내용은 과제 목표에 따라 부합성 높게 구성되어있으며, 부처의 이행사항을 점검하는 작업은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예산 집행률은 100%를 보임
- 하지만 종합적으로 조정, 점검,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대응으로 인해 개최가 되지 않은 등 이행이 지연되었으며, 2021년 비만율이 증가하면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하였음. 이에 '개선 필요'를 최종 등급으로 부여함
- 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코로나19 유행 확산으로 인한 생활습관 변화, 주무관계부처,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과제 예산 미확보 등을 성과 미달성의 요인으로 파악하고는 있어 향후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우수한 점

○ 사업 우수성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없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 부처별 과제별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비만을 감소 목표 달성에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예산이 미확보된 과제들의 경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부처의 개별 사업과 뿐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의 협업,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권고안) 종합 점검, 조정을 위한 위원회의 정상 개최, 파악한 성과 목표 미달성 요인에 대한 대응 개선

3-22

환경오염피해 구제 강화 (환경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환경성질환으로부터 환경오염에 취약한 사회취약계층 보호 목표하에 진행된 거주가구 및 이용시설 실내 환경 진단 및 개선은 부합성이 높음
	과제내용			- 질환으로부터의 보호 목표하에 진행된 환경성질환을 경험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대상 진료 지원, 협업병원 확대 과제 내용 역시 부합성이 높음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사업은 시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예산 집행률도 100%로 집행이 완료되었음
	예산 집행실적			
성과 우수성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지자체를 비롯한 협업기관 간 의견수렴이 진행되었음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목표한 예방사업 개선 가구 고품팡이 저감률은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세부 과제 내용별 성과들이 제시되어 있음
사업 우수성				- 해당 사업 없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과제 목표에 따라 과제 내용들이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며, 계획한 바에 따라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음. 이해관계자 간 의견수렴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여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 우수한 점

- 시설개선 사업을 통한 실내환경 유해인자 감소의 성과를 보인 것은 우수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 고품팡이 저감율 외 실내환경 유해인자 6종 중 환경안전관리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고품팡이 이를 대표적으로 설정한 것에 동의하며, 해당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한 바 22년도 목표치를 적극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환경 진단 및 컨설팅, 실내환경 개선을

추진한 개소수에 비해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에 참여한 가구수는 150가구에 불과하여,
성과 모니터링을 위한 측정 가구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

⇒ (권고안) 성과 목표치 상향 및 사업 모니터링 대상 가구수 확대

3-23

지역별 정신건강인프라 확충, 시·도사업모델 개발 및 지원(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을 통한 인프라 확충,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통한 시·도 사업모델 개발은 사업 목적에 따른 적절한 과제 내용임
	과제내용			- 또한 화성시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기반 자립지원사업을 하는 것 역시 지역 단위의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과제의 목표에 상당히 부합함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 과제는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예산은 93% 집행률을 보여 개선이 필요해 보임
	예산 집행실적			- 예산 불용 사유가 주로 인력 채용 지연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향후 '22~'24까지 추진할 과제 내용이 지속적인 인력확충이므로 예산 집행수준 제고를 위한 안정적 인력 확보 및 운용에 대한 과제 필요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사업관리를 위해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종사자, 전문가, 지자체 등)와의 의견 수렴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졌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인프라 확충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성과 지표를 달성한 것은 우수함
	사업 우수성			- 마음안심버스 전국 시도 신규 배치 달성은 인프라 확충 관련 사업의 성과로 보임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예산 집행률이 93%로 '미이행' 기준인 97% 미만이기는 하나, 인력 확충을 통한 지역별 정신건강 인프라 확충 목표가 달성되었으며,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및 자립지원 사업을 통해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 추진사항을 고려해 볼 때, 동 사업은 '정상 추진'으로 평가함

□ 우수한 점

- 지자체 특성을 고려한 사업을 개발 및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 확충을 통한 사례관리자 1인당 사례관리를 하는 정신질환자 수의 목표를 달성한 것은 우수한 성과로 보임
 - 지자체, 현장 실무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 것 역시 우수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 예산 집행률이 낮은 것과 관련하여 불용 사유로 인력 채용 지연이 제시되고 있음. 향후 과제에서도 지속적인 인력 확충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인력 확보의 안정성 및 인력 운용에서의 개선이 필요
 - ⇒ (권고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보 및 운용에서의 안정성 개선을 통한 예산 집행률 제고
-

3-24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 내용이 적절하게 구성되어있음.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확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고위험군에 대한 서비스가 강화되었음. 생명지킴이 양성 과제의 경우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관리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양성된 생명지킴이가 자살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체계로 연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제 목표와의 부합성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집행계획에 따른 이행 수준이 높음. 일정대로 정상 추진되었으며, 예산의 집행률은 98%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사업 추진을 위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광역 시도 단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 실적 평가, 지자체 사업 현장 방문 등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진행되었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자살사망자 감소에의 성과, 집중관리를 받고 있는 자살시도자 등 고위험군의 사례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볼 때, 사업성과 달성 수준은 높음
	사업 우수성			-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가 보이는 것은 사업의 성과로 볼 수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자살위험 증가에 대한 우려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우수하다고 평가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자살시도자, 자살유족 등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업은 계획과 내용의 부합성이 높고, 집행이 일정, 예산, 사업관리 차원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목표한 성과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정상 추진'으로 평가함

□ 우수한 점

- 자살사망자 감소 성과 달성 및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자살위험 증가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 등 대응을 사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수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 자살 고위험군 집중 관리 목표치 달성 및 자살사망자 감소의 성과는 분명하게 드러남. 하지만 제출 자료에서 제시된 것처럼 사업의 목표는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통해 자살을 예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의 성과 목표치는 등록관리를 받는 사람들의 자살사망이 얼마나 감소했는지에 대한 성과가 추가적으로 추적되는 것이 필요
-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시범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 및 평가하여 시범사업의 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필요

⇒ (권고안) 사업의 성과 목표 추가 설정 및 세부 사업의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체계 구축

4-1

장기요양 보장성 강화 및 통합적 재가서비스 강화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목표와 과제내용은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으며, 구체적이고 명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세부 추진계획에 맞춰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예산 집행률은 100%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개선 필요	-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시범사업 모니터링, 협업체계 등이 충실하게 수행되어 사업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다만 시범사업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업실적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관리할 필요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 목표를 초과 달성(104%)하며 우수하나, 향후 보다 도전적인 목표치 설정 필요 - 당초 시행계획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75%이나, 자체 실적평가에서 72.0%로 하향 수정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확인 필요
	사업 우수성			- 세부 추진계획에 맞춰 사업 진행과 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져 목표한 성과 이상을 달성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업목표와 사업내용이 명확하며, 집행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됨
 - 시범사업의 실시와 모니터링, 평가, 환류 등이 계획에 맞춰 적극적으로 추진됨

□ 우수한 점

- 사업성과에 있어 목표 성과 이상을 달성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1) 성과지표
 - 장기요양재가서비스 비중(%)을 성과지표로 설정

⇒ (권고안) 재가서비스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장기요양수급률의 변화를 성과지표로 추가하여 관리

○ (개선요인 2) 성과지표 목표치

- 최근 3년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비중 평균 이상을 목표치로 설정하여 목표 초과달성 중. 그러나 2021년 목표치 72.0%는 2020년 실적치 73.9% 보다 낮아 소극적인 설정치임

⇒ (권고안) 목표치를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할 필요. 충분히 달성가능한 소극적인 수준이 아닌 전년도 증가율 혹은 최근 3개년 평균 증가율 등을 감안한 보다 과감한 목표치의 설정과 달성 노력 추진

4-2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목표와 과제내용의 기본계획 연계성이 높고, 구체적이고 명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세부 시행계획에 맞춰 충실하게 추진되었으며, 예산 집행률 100% 달성 - 다만 공립요양병원 치매전문병동 설치는 코로나19 발생으로 불가피하게(외부인출입통제) 추진 차질이 있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 협업기간 역할 협업은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며, 정상적으로 추진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달성률은 101.2%이나, 목표치(57.5%)가 전년도에 비해 낮은 등 소극적으로 설정된 경향 - 당초 시행계획의 성과지표 목표치는 62%이나, 자체 실적평가에서 57.5%로 하향 수정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확인 필요
	사업 우수성			- 사업 계획에 맞춰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 치매환자관리율 목표 달성 - 특히 코로나19에 유연하게 대응한 적극적인 사업관리 우수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업목표가 명확하고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집행 및 사업관리가 적정하게 수행
됨

- 치매 관련 인프라 확충 및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치매의료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사
업의 내실화를 지속

□ 우수한 점

○ 치매 인프라의 확충과 서비스 내실화 등을 통해 치매의 국가 책임제 실현

-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유연한 사업 대응(ICT기술 활용한 서비스 비대면화 추진)을 통
해 치매환자관리율의 성과 목표는 이미 기본계획상 2022년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성과지표 목표치

- 2021년 목표치는 57.5%로 2020년 실적의 61.8%, 2019년 실적의 56.9%보다 낮은 수준. 또한 최근 3년간 치매환자관리율은 증가 추세

⇒ (권고안) 2021년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 이하로 설정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그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거나 최근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도전적으로 상향 설정

4-3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서비스 확대(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 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후 활동 지원)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과제로, 성인기 발달장애인에게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과 학령기 발달장애인에게 ‘방과후 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본 과제는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사회 참여활동 향상과 돌봄지원을 강화한다는 기본계획에 부합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한 목표 및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및 절차를 고도화하였으며, 예산 집행률은 100%로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함- 전년도 제도 개선 관련 연구 및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최종증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1인 서비스 도입)을 강화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를 수행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협업체계 관리 등은 전반적으로 계획 대비 정상적으로 수행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는 사업의 성과를 포괄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목표치의 101% 초과 달성함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주간활동) ‘20년 434억원 → ‘21년 913억원 **(방과후활동) ‘20년 331억원 → ‘21년 446억원- 최종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인 서비스 도입을 통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강화- 서비스 이용 대상자 조건을 보다 유연화함으로써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및 돌봄 보장 강화
최종 등급				정상 추진

□ 총평

○ 사업 계획 및 내용, 추진 계획 이행, 사업관리, 성과 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정상추

진으로 평가함

- 시범사업 결과 및 관련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최중증 발달 장애인 지원강화,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이 우수함

□ 우수한 점

- 이용자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주간활동서비스: ('20년) 434억원 → ('21년) 913억원
 - 방과후활동서비스: ('20년) 331억원 → ('21년) 446억원
-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인 서비스 도입을 통한 주간활동서비스 지원강화
- 서비스 이용 대상자 조건을 보다 유연화하여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이용 대상 확대 및 돌봄 지원체계 강화
 - 주간활동서비스: 공동생활가정 등 이용자 및 단기근로자 이용 허용
 - 방과후활동서비스: 초등학생까지 이용 대상 확대

□ 개선할 점

- 현행 성과지표(주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는 주간활동서비스 영역에만 한정되어 있음. 이에 방과후활동서비스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 보완이 필요함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자 수, 방과후활동서비스 이용률 등)
-

4-4

보호아동 자립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대상 자립체험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자립수당, 주거지원, 자립정보 제공 방법 다양화 등 과제목표에 부합하는 사업내용을 구성하고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코로나19로 인해 자립지원 종사자 교육이 지연 실시되었으나 하반기에 시행되었고, 이외 분기별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들이 시행되었음.
	예산 집행실적			- 요보호아동 자립지원 예산을 100% 집행하지 못함;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시 행사 등을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안 계획이 필요함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전문가, 당사자 간담회 등을 자립지원에 대한 의견수렴, 건의사항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전년도대비 상향 조정하여 목표치를 설정하였고, 목표치 대비 100%의 성과를 달성함
	사업 우수성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수당, 주거지원, 사례관리, 프로그램 등 필요한 영역에 다양한 사업을 구성하고 있음 -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적극적임. 특히, 자립수당과 주거지원 사업 대상의 연차별 확대, 정보접근성 제고의 노력 등 사업 확대를 위한 지속적 노력을 확인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보호아동과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이라는 과제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임. 무엇보다 사업 집행에 있어 당사자와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개선을 위한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대상자 확대 및 정보 제공의 다양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 우수한 점

-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에 필요한 경제, 주거, 심리정서 등 다양한 영역을 지

원하기 위한 사업을 구성하고 있음. 특히 자립수당과 주거지원의 대상을 연차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옴

- 분기별 계획대로 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상향 설정된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하고자 노력하는 점이 우수함

□ 개선할 점

- (예산 집행률) 예산 집행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로 예산을 100% 사용하지 못함

⇒ (권고안) 감염병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행사 온라인 개최 등과 같은 대안 계획을 수립할 것을 권고함

4-5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목표에 따라 사업내용을 구성, 추진하고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분기별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예산 또한 99.9% 집행으로 정상 이행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부처와의 방문 협의 등 사업관리 실적 및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을 확인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개선 필요	- 사업대상자의 만족도 기반, 전년 대비 상향 조정된 목표치를 설정하고 100% 달성함. - 성과지표로서 대상자 만족도 조사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사업 우수성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도모 측면에서 우수. 단,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대안 모색 필요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업 목적 및 내용, 집행 계획 이행, 사업관리 등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추진하여 '정상 추진'으로 최종 등급을 부여함

□ 우수한 점

- 지원기준 아동연령 및 부모 연령의 확대, 금액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21년도에는 청년 한부모 추가아동양육비 지원과 지원단가 인상, 청소년한부모 지원 대상 포함 등 대상자를 지속 확대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신청주의 기반, 대상자 자격기준 세분화 등으로 대상자 선정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이 있음

-
- ⇒ (권고안) 수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해 성과지표로 수급률을 사용할 것을 권고함
- '수급자 수/수급대상자'를 사용하여 성과지표로 관리하고, 수급대상자 대상 발굴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필요함
-

4-6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체계 강화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보호가 필요한 아동 지원을 위한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 목표에 부합하게 과제내용이 구성되어 있으며, 이행계획이 구체적이며 이행수준 또한 적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분기별 시행계획에 따라 이행되고 있으며, 예산도 100% 집행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기초를 포함하여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보호체계 운영 및 인력 배치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등 사업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짐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사례결정위원회 100% 설치함.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는 목표치의 93.5%를 달성하여 100%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종 목표치(715명)를 설정하고 지속적 추가 배치 계획을 가지고 있음
	사업 우수성			- 그동안 부재했던 보호대상아동지원을 위한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제도, 인력, 체계 마련의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 조화 및 모니터링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중앙정부차원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목표와 계획에 따라 사업이 이행되고 있으며, 예산도 100% 집행함. 단, 아동보호전담 인력 배치 목표 달성률이 93.5%에 그쳐 '정상추진' 으로 등급 부여

□ 우수한 점

-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동보호체계 운영 및 인력 배치 관련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지자체의 위원회 운영 지원 등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 계획을 3개년에 걸쳐 제시하고 단계적 확충을 이

행하고 있는 가운데, 21년도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함.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율 달성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권고안) 지자체별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할 필요성이 있으며, 무엇보다 보호대상 아동 수 등 지자체별 수요 상황을 확인하여 인력 배치를 할 필요성이 있음

○ (개선요인) 공공아동보호체계 구축만으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 역할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양질의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움

⇒ (권고안) 전담인력 배치와 같은 양적 성과지표와 더불어 '학대 등의 보호대상아동 발견율'과 같은 질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적용할 것을 권고함

4-7

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 목표와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며,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해당 과제의 시행계획은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음 - 예산 집행률은 100%로 나타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모니터링 그리고 협업체계가 적절하게 이뤄졌으며, 외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차원의 대응이 이뤄졌음(에너지 바우처 지급구간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 - 다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정책 수혜자 측면은 제시되지 않았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이 108.9%로 나타남
	사업 우수성			- 최근 4년 동안 지속적인 적용범위 확대(바우처 수급자수 증가)가 나타났으며, 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홍보 및 안내 활동 수행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해당 과제는 제2차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에서 제시된,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보장수준을 제고하는 사업임
 - 적용범위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음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책 수혜자에 대한 의견수렴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우수한 점

- 지속적인 적용범위 확대(바우처 수급자수 증가)와 함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는 각종 활동(콜센터, 대국민포털, 현장인력 활용 안내 등)이 이뤄지고 있음

□ 개선할 점

○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 필요

- ⇒ 정책 수혜자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현 성과지표를 보완하여 바우처의 사용률을 알 수 있는 추가적 지표('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 수 대비 에너지바우처 이용 비율' 등) 검토 필요
-

4-8

저소득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문체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 목표와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며, 그 내용이 명확하고 상세히 제시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해당 과제는 시행계획에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음 - 예산 집행률은 국비는 89.8%, 지방비는 90.3%로 나타났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문화 및 체육 활동의 제약을 생각할 때 해당과제 집행계획 이행수준은 '정상추진'으로 판단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3개의 이용권 모두에서 적절하게 이뤄짐(통합문화이용권의 경우 정책 수혜자와 공급자 양측 모두에게 의견수렴이 이뤄짐). 그리고 협업체계가 적절하게 수행되었으며, 외부 지적사항(국정감사)에 대한 제도개선도 3개의 이용권 모두에서 이뤄졌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통합문화 이용권, 스포츠강좌 이용권) 달성률을 살펴보면, 통합문화 이용권은 111.3%, 스포츠강좌이용권은 108.6%로 나타남
	사업 우수성			- 적용범위 측면의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통합문화 이용권의 경우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해당 과제는 제2차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에서 제시된, 생애주기별·대상별 사회서비스 확충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문화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액 상향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통합문화 이용권 수혜자 수와 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용범위의 확대가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모니터링, 외부 지적 사항 대응 등 사업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음
- 단, 예산집행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수혜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실제 바우처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우수한 점

- 지속적인 적용범위 확대(3개 이용권의 수혜자수 증가)와 함께 사업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음. 통합문화 이용권의 경우 정책 수요자와 공급자 양측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있음

□ 개선할 점

- 해당 제도의 수혜자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이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이용권 이용에 대한 현황을 현재의 성과지표로는 파악할 수 없음
⇒ 현재 성과지표를 보완하여 이용권의 사용률을 알 수 있는 추가적 지표 검토 필요
-

4-9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 및 모델개발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목표와 과제내용의 기본계획 연계성이 높고, 전반적으로 과제계획이 명료하고 구체적임- 다만 이행계획은 연도별로 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충실하게 집행하였음. 다만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이 지연되고 있으나, 이는 법적 기반 마련의 깊은 난이도 등을 고려할 경우 불가피한 것으로 세부 추진계획 집행은 적정- 연구사업의 기간 연장으로 예산 집행을 99.7%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개선 필요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 달성률은 120%를 기록하였으나, 목표치가 전년도와 같은 등 지표가 소극적으로 설정됨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한 모델개발이 차질없이 진행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구체적인 계획 하에 사업의 집행, 사업관리 등이 충실히 수행되어, 사업성과를 달성
 - '19년 6월부터 16개 시군구에서 선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 삶의 질 개선과 재정절감 등의 효과성이 확인됨

□ 우수한 점

- 지역의 다양한 기관, 중앙의 다양한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사업이므로, 협업체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추진
 - 16개 선도사업 지자체, 보건·의료·복지·주거 등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부, 행안부, 국

토부, 농식품부, 교육부 등 5개 중앙 부처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1) 사업관리 실적

- 사업관리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의 주요결과나 문제점 등에 대한 실적이 명확하지 않음

⇒ (권고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결과가 어떻게 사업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

○ (개선요인 2) 성과지표 목표치

- 사업기간 중 성과지표 목표치는 50.0%로 동일하게 설정하였으나, 2019년 실적의 55.4%, 2020년 실적의 58.3%, 2021년 실적의 60.0%로 최근 3년 모두 목표치를 상회함

⇒ (권고안) 최근 2년간 상향 경향 등을 반영하여, 향후 성과지표 목표치는 보다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추진 노력 필요

4-10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 인프라 확충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목표와 과제내용이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고, 인프라별 사업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세부 추진실적은 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충실히 이행됨 - 예산은 연구용역기간 연장으로 일부 미집행이 있으나, 총 예산 집행률은 99.8%를 기록하며 정상 추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통합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인프라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도출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하는 등 사업관리가 적극적으로 수행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2020년 마련된 케어안심주택 운영 모형의 실증이 이루어짐 - 성과지표는 케어안심주택 운영 모형 실증 1개로 측정하여, 사업내용 중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에 대한 성과 측정 부재
	사업 우수성			- 통합 돌봄 인프라별 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 성과를 달성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업계획이 명료하고 구체적이며, 집행이 세부 추진계획에 맞춰 적절하게 이루어짐
 - 케어안심주택은 운영 모형 실증 후 확산단계에 있으며, 주민건강센터('21년 42개소
확충으로 누적 161개소)와 종합재가센터('21년 30개소 운영)는 지속적인 확충 추진

□ 우수한 점

- 통합 돌봄 인프라별 사업 추진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 인프라 확충 목표 성과(운영모
형 실증)를 달성
 - 16개 선도 지자체의 케어안심주택 공급 사례 창출 및 확대 운영 추진유형 등 '22년
운영 모형 확산을 위한 방향 마련

-
-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 협업체계 구축 등 사업관리 실적이 우수함
 - 통합 돌봄 인프라별 사업관리 충실히 수행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1) 성과지표 추가

- 주민건강센터 인프라 확충에 대한 성과지표 부재
- ⇒ (권고안) 확충 계획을 고려하여 누적 확충 수, 혹은 궁극적인 성과인 센터 이용 만족도 등을 성과지표로 추가하여 관리

○ (개선요인 2) 성과지표 목표치

- 2022년과 2023년의 목표치는 선도지역 케어안심주택 공급 확산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정량적인 목표치 부재
 - ⇒ (권고안) 확산 규모에 대한 정량적인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 추진할 것을 권고
-

4-11

병원과 지역 간 협력으로 퇴원·지역연계 강화(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환자의 '일상생활 및 지역사회로의 조기 복귀'가 가능하도록 병원과 지역이 협력하여 퇴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사회의 자원과 연계를 지원하는 것으로 과제목표가 명확하며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음-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환자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원내용 등이 적정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성기', '회복기' 사업이 시행계획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됨- 비예산 사업임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가자문회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급성기 대상 기관을 확대함- 청구현황 등 모니터링을 통해 참여기관 확대 등 개선사항을 반영함- 심평원, 공단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운영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목표한 성과를 달성함. 다만 목표치 설정에 대한 검토는 필요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기관 및 대상질환 확대, 홍보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 환자 대상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지원내용 등이 적정하며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함

□ 우수한 점

- 대상기관 및 대상질환 확대, 홍보 등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시행함

□ 개선할 점

-
- 성과지표 보완 및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검토 필요
 - 급성기, 유지기, 회복기의 각 단계별로 서비스를 제공받은 비율을 모니터링하고 만족도 조사와 함께 지역사회 복귀율 등 사업 결과를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운영할 필요
 -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에 있어 목표치 설정 기준 및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

4-12

방문의료 제공 및 재가 의료급여 도입(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의료 시범사업과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사회 기반의 보건·의료·돌봄 서비스의 통합 제공체계 구축이라는 기본계획의 과제 목표와 연관성이 높음- 추진경과, 사업기간, 사업대상, 사업주체와 시행방법이 구체적으로 기술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의 방문진료 시범사업, 의과 방문진료 확대, 3차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이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추진 절차와 일정에 따라 진행되어 지연이 발생하지 않음- 방문진료 사업은 비예산 사업이며 3차 재가의료급여 예산은 100% 집행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문의료 및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업개선에 활용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지표는 '방문의료 참여 한의원 수',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수'로 정책 내용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산출지표이나 의과 방문진료에 대한 성과지표는 제시되지 않음- 두가지 지표 모두 '21년 목표한 성과를 초과 달성하여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행계획 수립 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 협업체계를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이를 차질없이 이행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지역사회 기반의 보건-의료-돌봄 서비스 통합 제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목적 및 내용이 적정하고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대로 사업이 집행, 관리되었으며 성과지표를 초과달성하여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 우수한 점

- 사업관리 계획을 시행계획에서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고 차질없이 이행함

□ 개선할 점

-
- (개선요인) 의과 방문진료 성과지표 배제 및 산출지표로 성과지표 구성
 - ⇒ (권고안) 의과 방문진료 성과지표를 포함하고 정책 성과로 인해 궁극적으로 의도한 변화가 초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결과지표를 이용하여 성과를 평가할 것을 권고함
-

4-13

장애인 종합판정도구 도입 및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기준을 마련한다는 기본계획과 연관성이 높음- 과제 목표 및 내용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고, 사업 내용은 이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추진실적은 사업의 전체적인 추진일정 및 외부 지적사항 대응(장애인정질환 확대 검토)에 따라 적절하게 진행되었으며,- 예산 집행률은 100%로 시행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행 성과지표는 일상생활지원영역의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건수'로 목표치 대비 96.8%를 달성함- 성과지표 미달성 사유가 코로나19 유행으로 대면조사 지연 등으로 인한 차질에서 발생한 것을 감안할 때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다고 판단됨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욕구와 환경을 반영한 새로운 장애인 서비스지원 기준과 판정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협력체계 모색- 뚜렛, 기면증,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 사업 목적 및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고, 추진 계획 이행, 성과목표 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정상추진으로 평가함
 - 외부 지적사항(장애인정질환 확대 검토)에 대한 대응이 우수하며, 성과지표의 보완을 권고함

□ 우수한 점

-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및 단계적 적용범위 확대'라는 기본계획의 3단계 추진과제에 해당하는 소득·고용서비스 분야 판정체계 마련('22년)을 위하여 정책협의체 구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협업체계 구축 등 사업관리의 적극성이 인정됨
-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사항(장애인정질환 확대 검토)에 대한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한 장애인정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복지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개선할 점

- 현행 성과지표는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에만 한정되어 있고, '전달체계' 부문에 관한 성과지표가 부재함. 따라서 전달체계 개선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 보완이 바람직함(누락서비스 발굴 실적 등)
-

4-14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통합 돌봄서비스 제공(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이 욕구와 상황에 맞는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주도형 정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기본계획의 내용과 부합-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사업 대상 및 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절한 사업 내용으로 설계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사업 추진은 전반적으로 시행계획에 정해진 절차 및 일정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시범사업 예산 집행률은 100%로 정상적으로 추진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사회통합돌봄 시범사업 이행 점검 및 장애인거주시설 현장 점검을 위한 수시 모니터링 실시-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과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관협의체, 간담회 등을 운영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에 상정된 성과지표는 선도사업 지역(대구남구, 제주시)의 '자립지원계획수립 장애인 수'로 되어있으며, 목표치 대비 달성률은 100%- 중앙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설립,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발표와 시범사업 이행 준비 등 지역사회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수행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거주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의지로 탈시설 로드맵 발표 및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행 준비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과제 목표 및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기본계획과 연관성이 높음
- '21년 수행된 세부 사업은 '19년부터 진행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의 연속성 상에 있으며, 추진 계획에 따라 사업관리와 성과 달성이 적정하게 이루어져 정상 추진으로 평가함

□ 우수한 점

-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로드맵 발표('21.8), 중앙지역사회전환지원센터 설립,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이행 준비 등 지역사회 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자립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강구
- '22년 새로운 중점 추진 사업(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준비를 위해 유관 부처 및 기관 협업체계 구축, 민관협의체 구성, 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짐

□ 개선할 점

- 외부 지적내용(장애인 부모들의 시설보호 공백에 대한 우려 및 기존 시설들의 운영 불안정성에 따른 반발)을 반영하여, 거주시설 장애인의 성공적인 지역사회 전환방안을 마련하고,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물적·인적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4-15

국공립 돌봄시설 확충(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이라는 구체적인 과제목표를 설정하고, 연차별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과제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음- 과제목표가 기본계획의 목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고 구체적인임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매칭비 감액에 따른 사업수요 감소로 예산 집행을 87.9%로 연례적인 불용이 발생하였고, 국공립 보육시설 목표치에 미달하는 시설확충 실적을 보이고 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 외부 지적 대응 등 사업관리 실적 추진 완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장기화 대응을 위한 지자체 수요변화에 따른 신규설치 신청 수요 감소라는 불가피한 사유를 고려했을 때, 목표치 대비 93.6% 성과달성률은 정상추진이 가능한 수준으로 인정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공립 장기 임차사업 추진을 통해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도모 및 비용효과적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노력- 지자체 협력 모색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현장조사 실시- 취약지역 공보육 책무성 제고 목적에서 농어촌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우선전환을 위한 제도 개선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행계획 이행이 다소 미흡하지만,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고, 다양한 사업관리 노력과 성과를 인정하여 정상추진 판단

□ 우수한 점

- 민간어린이집과의 상생도모 비용효과적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내역사업으로 장기 임차사업 추진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최근 3년 연속 불용발생, 적정 예산편성 및 관리 필요

⇒ (권고안) 코로나19 만성화(재확산, 변이 등)로 인한 비대면 보육수요 증가와 더불어 대내외 경기위험요인 및 재정여건 변화에 따른 지자체의 확충 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계획을 수립하여 관리할 필요

○ (개선요인) 추가 성과지표 및 달성률 제시

⇒ (권고안)

- 2019년과 2020년 추진실적 평가에서 계속 지적된 바와 같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 이외 공공보육 이용률을 사업성과지표로 추가 설정하고 그 실적을 제시할 필요

- 현재 성과계획서 상 '국공립어린이집 이용아동비율'이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 수와 함께 성과지표로 제시되고 있음

4-16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 목표와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며, 과제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개선 필요	- 해당 과제의 시행계획은 추진일정에 따라 진행됨 - 예산 집행률은 88.3%로 나타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 외부 지적 사항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지자체 및 지방공사와의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진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률이 84%로 나타났지만 각종 외부 요인의 부정적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중기 차원에서는 연평균 14만호에 대한 공급을 수행하고 있음
	사업 우수성			- 중기적 차원에서 기본계획 목표에 따른 공공임대 주택 공급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차원의 안정성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해당 과제는 제2차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의 일환으로 공공임대 주택 공급 추진 내용을 담고 있는 사업임

-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차원의 안정성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2021년의 경우 외부환경의 부정적 영향으로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과 예산 집행률이 저조

□ 우수한 점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성 강화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과제로 중기적 (2018~2021) 차원에서는 공공임대 주택 연평균 14만호를 공급하고 있음

□ 개선할 점

- 중기적으로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이 이뤄지고 있지만, 단기적 차원에서도 예산 집행을
과 성과지표의 목표 달성을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
-

4-17

주거급여 강화(국토교통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과제 목표와 내용이 기본계획과 부합하며, 과제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해당 사업은 과제 시행계획에 따라 일정이 진행되었음 - 예산 집행률은 100%로 나타남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사업점검, 협업체계와 외부 지적사항이 대응이 적절하게 이뤄졌음 - 다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정책 수혜자 부문은 제시되지 않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성과지표 목표 달성률은 첫 번째 성과지표인 주거급여 월평균 수급액이 105%로, 두 번째 성과지표인 자가가구 주택개량만족도는 104.3%로 나타남
	사업 우수성			- 기준 중위소득의 상향을 통해 지속적인 지원대상 확대 및 보장수준의 제고를 통한 주거보장의 강화가 이뤄짐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해당 과제는 제2차 기본계획 사회서비스 보장 분야에서 제시된,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공공성 강화 및 신뢰성 제고 일환으로 주거급여 보장수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18~'21년도의 지원수준과 수혜자 규모를 볼 때 지속적인 보장수준과 지원대상 확대가 이뤄짐
 - 사업관리가 측면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의견수렴 측면의 보완 필요

□ 우수한 점

- 지속적인 적용범위 및 보장수준의 확대가 이뤄져 저소득층의 주거보장이 강화되었음

또한 성과지표를 두 개의 지표를 제시하여 주거급여와 수선유지보수 모두에 대해 접근한 것은 적절한 접근방법임

□ 개선할 점

- 사업관리가 측면에서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으나,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통합적 제도개선 합의 도출을 위한 의견수렴 개선(추가적 수렴) 필요
 -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서 서비스 공급자와 함께 제도 수혜자에 대한 의견수렴도 수행할 필요가 있음
-

4-18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향상 및 일자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는 목표는 기본계획의 중점 추진과제에 부합하는 사업임- 2022년까지는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확대하고, 이후에는 운영 내실화 및 사업 확대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구체적인 연도별 이행계획이 명확하게 수립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치,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지원단 설치, 지역사회복지사업 평가지표 개선 등이 적절하게 이행되었음-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계획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고, 실제 사업 개선에 활용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외부 지적사항에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까지 14개 지역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운영한다는 목표를 100% 달성하였음- 2021년 기준 사회서비스원 산하에 서비스 제공기관 191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180개를 운영한다는 기존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방역위기가 지속되면서,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음.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는 등 감염병 확산에 적절히 대응하였음- 민간 기피시설 수탁, 민간시설 지원 등 공공과 민간의 상생발전 도모에 기여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과제목표에 부합하게 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 세부 집행계획이 정상추진 되었으며, 사업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립 수, 사회서비스원 산하 서비스 제공기관 수 목표를 달성하

였음

□ 우수한 점

-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립, 사회서비스원 산하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의 기존 목표치를 달성하였음
- 방역위기에 대응하여 긴급돌봄지원단을 설치, 운영하였음
-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2022년까지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마무리되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일자리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함
 - ⇒ (권고안) 서비스 질 개선, 일자리 질 개선 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목표가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개선요인)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다르게, 민간기피, 평가저조 등 고난이도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서비스원 특성이 고려되어야 함
 - ⇒ (권고안)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추가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가 요구됨
-

4-19

사회서비스 인력양성(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및 공공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공공부문에 양질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는 목표는 기본계획의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에 부합함- 2022년까지 34만명 일자리를 창출한 이후의 연도별 이행계획 수립이 요구됨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서비스일자리 조기집행을 추진하였고, 신규 사회서비스 일자리 수요조사 및 미래 유망 사회서비스 일자리 발굴을 추진하는 등 사업이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모니터링 및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관리 계획이 적절하게 마련되어 있고, 사업 개선에 활용되고 있음- 일자리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질적인 측면의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외부 지적사항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6.2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함. 당초 목표치인 6.3만개에는 미치지 못했지만(달성률 99.1%), 코로나19가 지속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부 서비스 수요가 제한되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조건이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년부터 시작된 방역위기에 대응하여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는 데 기여하였음-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의 53%를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 안정에 기여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과제목표에 부합하게 시행계획이 수립되었고, 사업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음
-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신규 사회서비스 발굴 등의 2021년 실행계획이 적절히 수행되었음

-
- 창출된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목표치에 미달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인한 방역위기, 서비스 수요 감소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점

- 노동시장 침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의 어려운 조건에서도 목표치에 근접한 일자리 창출 성과를 달성함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증가가 전체 취업자 증가의 53%를 차지하는 등 노동시장 안정에도 기여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창출된 일자리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한 지표 개선이 요구됨
 - ⇒ (권고안) 창출된 일자리의 고용안정, 임금수준, 근로시간 등을 반영하는 지표를 추가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4-20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시간 단축, 휴게시간 보장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임-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향은 기본계획과 명확하게 연계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주52시간 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응하여 사회복지시설 교대인력 채용을 모니터링했으며, 대체인력 지원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등 사업이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었음- 국비와 지방비 모두 배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의견과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하였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음- 의견수렴 결과를 2022년 대체인력지원사업 지침에 반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기초하여 2022년 교대인력 지원예산을 추가 확보함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교대인력 확충률은 94.6%로, 제시된 목표치 97.1% 및 2020년 실적 96.6%보다 낮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위기 상황이라는 점, 현장방문과 모니터링을 통해 채용요건을 완화하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질평가 제도 개선으로 동일기관 중복평가를 줄이고, 품질평가 대상을 확대함- 주52시간 상한제 적용 확대 등 관련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함- 종사자 가이드라인 준수율을 높이고, 사회복지시설 간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예산을 확보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2021년의

시행계획이 대체로 충실하게 수행되었음

- 교대인력 충원을 성과지표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것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위기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우수한 점

- 평가제도 개선, 현장평가 강화, 컨설팅 운영 등 사회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품질관리 전담기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 사회복지시설의 교대인력을 확충하고, 대체인력을 파견하여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함
-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 및 시설 간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사회서비스 품질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부재하고, 근로시간 및 교대인력 지원 외의 종사자 처우 관련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음
 - ⇒ (권고안)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다른 지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5-1

지역사회 서비스 종합 안내를 위한 읍면동 기능 강화(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읍면동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지역사회 보건·복지서비스 행정 기반을 강화하는 사업임- 과제목표와 내용이 기본계획의 지역사회 중심 서비스 보장체계 구축 추진과제와 분명하게 연계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의 분기별 시행계획에 따라 업무 매뉴얼 배포, 교육, 컨설팅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음- 예산집행실적은 해당없음(예산사업 아님)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기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기준 3,312개소에 보건·복지 전담팀을 설치하여 목표치(3,300개소)를 초과 달성하였음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조건에서도 보건·복지 전담팀 신설을 차질 없이 추진함- 주민생활과 밀착한 적극적 행정서비스 시행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총평

- 수립된 시행계획을 충실하게 수행하였고, 보건·복지 전담팀 설립 목표를 초과 달성하였음
- 정기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통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문제점 해소 및 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우수한 점

- 2022년까지 전체 읍면동에 보건·복지 전담팀을 설치하는 계획과 함께, 기본형에서 확장형으로의 전환, 농어촌특성화형 전환을 계획하는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개선을 추진함

-
- 전담팀 설치 수, 전담인력 배치 규모 성과에 더해서, 찾아가는 상담, 민관복지서비스 연계·제공, 사례관리 대상, 민간자원 개발·지원 등의 서비스 운영실적을 같이 보고함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인 개선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를 포함할 필요가 있음
 - ⇒ (권고안) 해당 지역의 사각지대 해소 정도, 서비스 만족도 등의 지표 도입을 검토
 - (개선요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전담팀 인력확충에 어려움을 호소함
 - ⇒ (권고안) 전담팀 설치에 따른 필요인력 확충을 위해 지자체의 협조가 요구됨
-

5-2

공공센터 간 연계 강화 및 지역 거점기관 구축(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전달체계를 효율화하여 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임- 과제목표가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고, 연도별 이행계획이 단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부 시행계획에 따라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었음- 배정된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였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의견과 모니터링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사업을 개선하였고, 관계 기관과의 협업체계가 적절하게 구축되어 있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과제(시범사업 평가 및 컨설팅 연구)를 통해서 10가지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도출함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시범사업 지역 추가, 2차년도 시범사업 추진, 연구과제 수행 등의 사업을 적절하게 집행하였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방역위기 상황에서 비대면 서비스와 영상회의, 소규모 간담회를 활용하며 적절하게 대응하였음

□ 우수한 점

- 연구 수행을 통해서 기존 시범사업의 성과를 파악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도출하였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연구에서 도출한 개선 과제의 후속 조치가 요구됨
⇒ (권고안) 10가지 개선과제가 주민의 실질적인 복지체감도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도입이 필요함

5-3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사회보장 빅데이터 관리 기능 강화 및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고, 부처·지자체의 업무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본계획과 연계성이 높음- 과제목표와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1년 세부 시행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었음- 잔금 계약기간 미도래 및 계약 낙찰 차액 외에는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참여단을, 모니터링을 위해 통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였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멤버십 지침 마련, 복지멤버십 운영 및 복지로 개통 등의 제시된 목표를 모두 달성하였음
	사업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9월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를 도입하여 추가 신규 수급 안내, 누락 서비스 발견, 민간지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2022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본 개통에 앞서, 2021년 9월 기존 수급자를 대상으로 선 개통을 완료했고, 관련해서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을 개편했으며, 본 개통을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는 등 사업이 적절하게 추진되고 있음
-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국민참여단 운영, 시스템 개통 전후 통합상황실 운영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우수한 점

- 시스템 1차 개통에 앞서 「사회보장급여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맞춤형 급여안내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음
- 2021년 9월 1차 개통 후, 112만 가구에 수급 가능한 복지사업을 안내하였고, 이 중

29.6만 가구가 신규로 복지서비스를 수급받는 등 복지체감도 향상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음

- 같은 시기에 복지포털 「복지로」의 홈페이지 및 앱을 전면 개편하여 1차 개통한 시스템의 접근성을 개선하였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전체 시스템 개통 후에는 복지체감도 향상 및 사각지대 해소 관련 지표를 중심으로 성과지표 조정이 필요함

⇒ (권고안) 시스템을 활용한 서비스 제공 정도, 수급률 개선 정도, 민간 서비스 연계 정도 등을 활용하여 성과지표 도입 검토

5-4

행정 빅데이터 간 연계성 제고(보건복지부)

□ 최종 평가 등급: 정상추진

구분	실적항목	평가지표명	등급	항목별 점검결과
계획 적정성	과제목표	사업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	정상 추진	- 근거 중심의 사회보장 정책 수립 및 개선을 위해 행정 빅데이터 간 연계성을 높이는 과제목표는 기본계획에 부합함 - 과제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음
	과제내용			
집행 적정성	세부 추진실적	집행계획 이행수준	정상 추진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일부 연구과제가 미추진되었으나, 사회보장기본법 개정('21. 12)으로 데이터셋 구축 추진 일정이 변경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어 정상추진으로 판단함 -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되었음
	예산 집행실적			
	사업관리 실적	사업관리의 적정성	정상 추진	- 이해관계자 수요조사를 통해 연구과제 주제를 선정하고, 부처 간 협력 및 역할 배분을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였음 - 데이터 결합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외부 지적에 적절히 대응하였음
성과 우수성	사업성과	성과 달성수준	정상 추진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및 하위법령 정비로 통해서 20개 기관, 800여개 항목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를 수집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정책 기획 및 평가 데이터 활용건수 목표(6건)를 달성하였음
	사업 우수성			-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포럼을 운영하며 행정데이터 활용을 위한 중점추진 과제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음 - 분석센터를 신설하여 데이터 관리 및 상시적인 분석 환경을 마련하였음
최종 등급				정상추진

□ 총평

- 정책 연구를 목적으로 범부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을 추진하는 과제로, 향후 근거 기반 사회보장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될 것임
-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행정데이터 활용건수 등의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였음

□ 우수한 점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수집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적절한 연구주제를 발굴하여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상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센터를 신설하였음

□ 개선할 점

○ (개선요인) 개인정보 식별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축된 행정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함

⇒ (권고안) 행정데이터 분석센터에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조건으로 다양한 연구과제에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